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결과

□ 수상단체 목록

훈격	단체명		사 례 명
대 통 령 상 (4)	충남	논산	軍·官·民 협업으로 천억원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보하고!
	대구	본청	재정혁신 및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제주	본청	수백억 원 대 체납 골프장 징수 묘책
	전남	진도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
국 무 총 리 상 (4)	경기	본청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에서 생태의 숲으로
	충북	보은	농심(農心)을 헤아려, 보물을 찾다.
	인천	본청	新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재정 절감을 이룬다
장 관 상 (27)	전북	남원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부산	본청	전국 첫 직무발명 특허 적용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리 강화 및 예산 절감 달성
	울산	본청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경기	부천시	민관 협업 국책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전남	강진군	이웃지자체 물 함께쓴다 '지역상생 첫 모델' 탄생
	전남	보성군	숲속의 도시 보성만들기, 제거 수목 활용으로 예산절감 '톡톡'
	경북	경주시	국내 최초 『열풍 이용 건조생산 시스템』도입 저렴한 "경주산 건조" 보급
	경북	경산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PCR 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

훈격	단체명		사 례 명
	경북	문경시	방치 폐기물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인천	중구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충남	서천군	"서천형 주민참여예산"과 어우러지는 "서천형 예산효율화"
	충남	본청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활용으로 20억원이상 예산절감
	전남	순천시	사해행위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경기	수원시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경북	구미시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옵션 추적조사
	서울	강남구	중과배제도 감면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1조원 세수가 보여요
	부산	금정구	토지 95프로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산	사하구	(전국최초)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
	인천	계양구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울산	울주군	위탁자 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체납 징수
	세종	본청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함께! 영치는 스마트하게!
	서울	송파구	NH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경기	용인시	숨어 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증대 UP!
	대전	동구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대구	동구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을 찾아오다(적극행정 지키미)
	경북	안동시	"전국 최초!! 지방정부 주도,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중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경북	영주시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후생복지물 "영주사랑복지물" 구축

[논산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 벤치마킹 사례는 “○○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 례 명	軍·官·民 협업으로 천억원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보하고!
기 관 명	충청남도 논산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예산실 지방행정7급 강명숙

< 요약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미사용 방치로 주변 미관 저해하는 軍부지 및 철도부지, 하천부지 증가
⇒ 소통이 어려운 軍·官·民 협업으로 유휴 국공유지 활용방안 모색
- 시민 편의시설 7개 사업 추진 : 논산시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탐정호 하천부지 꽃단지 조성, 연무 행복마을 공원(쉼터) 조성 등
- 軍·官·民 유기적 협조 및 무상협약, 업무협의를 통해 방치된 국공유지 활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 ⇒ **1,000억원 예산 절감**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논 산 시 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軍·官·民 협업으로 천억원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보하고!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잡초등으로 주변 경관 저해하는 軍부지 및 철도부지, 하천부지등 국유지 장기간 방치 및 미사용 - 체육생활시설, 공원등에 대한 주민수요가 많으나, 높은 공시지가로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 지역내 軍·官·民이 협업하여 도시경관 정비 및 시민편익 시설 확충 ○ 추진기간: 2021. 1. ~ 2023. 12. ○ 총사업비: 100억원 ○ 사업내용: 시민 체육시설 3개소, 주차장 1,153면, 유채 꽃단지 조성, 주민 및 면회객을 위한 공원 및 쉼터 조성
②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1. ~ 22. 5: 軍 부지 ⇒ 육군훈련소 협의(3회) ○ '21. 10. ~ 22. 5: 철도부지 ⇒ 철도청 협의(3회) ○ '21. 12. ~ 22. 4: 하천부지 ⇒ 금강유역환경청 협의(5회) ○ '20. 10. ~ 22. 10: 관광단지 ⇒ 새마을단체 협업(3회)
③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훈련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협약 해지 통보: '중단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官·民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 분쟁해결 공동협의회(1, 2차) 개최 및 합동현지답사 ⇒ 공사재개 결정 ○ 안전문제로 시설물 선로 근접부지 조성에 대해 철도청 의견: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청과 주민 현장방문하여 선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합의 완료 ○ 무분별한 하천지역 조성으로 금강유역환경청 의견: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청평가과, 논산시 합동 현장 점검 ⇒ 하천침용 관련 협의완료 ○ 꽃단지 조성시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 참여 유도로 인건비 절감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軍, 공공기관 방치 국유지를 협업체계 구축하여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 유휴부지 활용 : 예산 절감액 290억 - 대규모 하천부지 활용: 예산 절감액 450억 - 빈집철거 나대지 활용 : 예산 절감액 250억 ○ 시민편익 시설을 조성하며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인 자율 참여 유도(민간단체 참여인원 350명)
⑤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유휴부지 활용으로 총 1,000억원 예산절감 ○ 軍·官·民 협업으로 국유지 활용하여 시민 편의시설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軍·官·民 지속적인 협의로 미사용 軍 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 ⇒ 주민 산책로 및 면회객 공원(쉼터) 조성 ②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로 방치된 하천을 활용 ⇒ 시민생활체육공간 4개소 조성 ③ 빈집철거로 방치된 나대지를 발굴 토지주와 지속적 협의 ⇒ 공영주차장 90개소 조성<1,153면> ④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인건비절감 관광지(꽃단지) 조성 ⇒ 탐정호 관광객(年평균 9만여명) 증가

軍·官·民 협업으로 천억원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보하고!

1. 과제 선정 내용

- 국유지 활용 위해 소통이 어려운 軍·官·民 협업 필요
 - 軍 부지(육군훈련소, 국방부), 철도부지(철도청), 하천부지(환경청)
- 국토의 약 25%가 국유지로 지차체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논산시 국유지 : 논산시 토지의 15%
- 주변 경관 저해 미사용 국유지 장기간 방치
 - 軍 부지(연무읍), 철도부지(강경읍), 하천부지(부적면 등)
- 미사용 국유지 활용방안으로 시민편의 시설 설치 계획 수립
 - 주민·면회객을 위한 쉼터, 시민 체육시설, 주차장, 관광자원 등



- ❶ 軍·官·民 협업을 통한 국유지 활용으로 시민편의 시설 확보
- ❷ 맞춤형 유휴부지 활용으로 예산절감(총 1,000억원)
- ❸ 군인·면회객 위한 쉼터공간 조성으로 힐링국방도시 이미지 구축
- ❹ 탐정호 주변 연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문제원인 분석

- 미사용으로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로 인해 주변 경관 저해
 - 버려진 쓰레기, 잡초 등으로 장기간 방치 및 미사용
 - 경관 저해 국유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요구 증가
 - 높은 공시지가로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 사전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 소요
- 방치된 국유지 활용을 위해 軍·官·民의 원활한 협업 절실
 - 육군훈련소 : 軍 부지 확보 어려움 및 비협조
 - 철 도 청 : 선로운영 지장 초래 사유로 관련기관 부정적
 - 환 경 청 : 무분별한 하천점용 지역으로 사업추진 부정적
 - 지 역 주 민 : 철거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설득



軍·官·民 간 원활하고 합리적인 협의로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방안 마련 및 실행

○ 軍·官·民 협업을 통해 국유지 활용 방안 마련

- 지속적 협의로 미사용 軍 부지 무상사용 협약 완료
-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로 방치된 하천부지 점용 허가 완료
- 도심지 밀집지역 철거 나대지 토지주와 지속적 협의
- 꽃단지 조성으로 매년 인건비 부담 부분 새마을회 등 단체 자발적 참여로 해결



“국유재산, 효율향상, 상호증진”

육 군 훈 련 소



논 산 시

2022년부터 「임시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수신: 논산시청(산림공원과장)
(경유)

제목: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 실무토의 및 공동협의회 개편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관련근거

가.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21. 8. 17)

제 2조 조건부 이행일치

②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로 영구시설을 설치할 계획되며, **정당부지에 간부숙소 및 복지인양 건물 등 국방부(육군훈련소)계획에 관한 육군훈련소에서 논산시청에 이를 행치를 통보할 경우 논산시는 서서연건 보충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23년 BTL 사업 대상부대(시설) 선정을 위한 협정확인 계획(육. 복지정책과-615)

2. 육군훈련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위 관련근거에 따라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연무 행복마을 쉼터 해당 부지에 큰 주거시설이 예정되어 있어 논산시에 이용 행치를 통보합니다.

가. 연무 행복마을 쉼터 부지 사용 계획

1) 육군훈련소 간부 명성 인양 증가를 위해 주거시설의 절대적 부족 현상 발생
 * ’21년 후반기 ~ ’22년 전반기에 260여명의 간부 추가 명성

2) 연무 행복마을 쉼터 부지 대규모 큰 주거시설 신축 검토 중(BTL 기준간부 숙소 680여 세대, 육신간부 200여 호실)

가) BTL 기준간부 숙소 사업 추진일정

구분	’23년 대상부대 선정	메타리당성 면적 신청 및 일몰	’23년 검토역 확정 및 계약인양
일정	’22년 3월말	’22년 5월-8월	’22년 9월-12월

나) 육신간부 숙소 : ’23년 신축을 위한 육군본부 예산반영 후 ’23년 예산 심의 예정(예산 통과 시 ’23년도부터 신축 가능)

수신: 육군훈련소장
(경유)

제목: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 실무토의 및 공동협의회 개편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육군훈련소*****2276(2022. 3. 25.)호 「연무 행복마을 쉼터 관련 회신문」에 대한 검토결과 육군훈련소 측 실무토의 요청에 동의하며,

3. 일정 및 공동협의회 구성 계획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양측이 사전 조율하여 실무토의 및 공동협의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토의 일시(안) : 2022. 3. 30.(수) 13:30 ~

나. 실무토의 장소(안) : 논산시 행복도시국장실

다. 공동협의회 개최 일시(안) : 2022. 3. 31.(목) 13:30 ~

라. 공동협의회 회장 : 행복도시국장, 육군훈련소 인사처장

마. 공동협의회 위원 : 논산시, 육군훈련소 각 3명 위촉

4. 공동협의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측 실무토의 시 협의 후 결정함을 제안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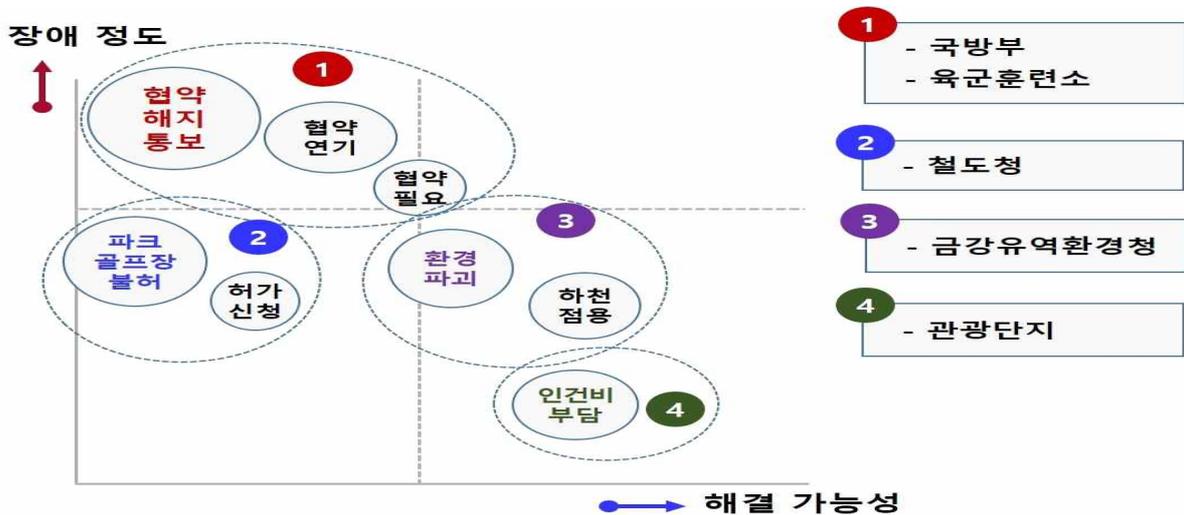
○ 시민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확보: 7개소

- 논산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100,000m²/ 야구장, 축구장 등)
- 강경 파크골프장 조성(40,000m²/ 파크골프장 36홀 등)
- 강경 생활체육공원 조성(4,000m²/ 트랙, 야외운동기구 등)
- 원도심 스포츠 파크 조성(100,000m²/ 파크골프장 등)
- 빈집 나대지 임차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38,000m²/ 주차공간 등)
- 탑정호 하천부지 꽃단지 조성(30,000m²/ 유채꽃단지 등)
-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69,282m²/ 잔디광장, 산책로 등)

4. 장애극복

○ 국유지 활용 협의 관련기관의 비협조 및 의견차 발생

- 軍 부 지: '국방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협약 해지 통보
- 철도부지: '철도청' 안전문제로 시설물 선로 근접부지 조성 부정의견
- 하천부지: '환경청' 무분별한 하천지역 조성으로 부정의견
- 관광단지: 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매년 인건비 부담



1 국 방 부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협약 분쟁해결 공동협의회 개최(2회) '공사 재개 결정'



2 철도청 현장방문 조사 실시 선로은행에 지장 없는 '체육공원조성으로 합의 완료'

연세 : 서울세 / 체육진흥과 (2022-10-06 13:03:23)

결과보고서

주무관	행정지원	지방협력	지방협력		
이명자	주상환	이영재	이영재		
함소					

영미 인천역 <광명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철도 부지은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가별 도로당(대선 동구) 측으로 24일(목)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건 명 : 광명동 파크골프장 조성용 부지 은행지 협의
2. 출 장 지 : 대선 동구 행정청, 국악동
3. 날 기 : 2022. 10. 24.(목)
4. 방 문 자 : 김재현, 이영재, 이영재, 이영재
5. 협의 내용 : 철도부지 은행 조성(파크골프장) 협정을 위한 안전시설 협의
- 시설안전 협의를 위한 추가 방문 시설 검토
- 철도부지 은행 이용에 대한 협의사항 확인

도시관리과지자체협력과-12073 3/2



3 환경청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하천점용 협의 완료'

연세 : 안양세 / 체육진흥과 (2022-10-06 13:02:18)

결과보고서

주무관	환경팀장	지방협력	지방협력		
이명자	김재현	이영재	이영재		
함소					

영미 인천역 「시민생태복원사업」의 원활한 협조절차 이행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태화로 417)에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건 명 : 시민생태복원사업 조성용 부지 은행지 협의
2. 출 장 지 :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태화로 417)
3. 날 기 : 2022. 10. 18(목)
4. 방 문 자 : 김재현, 이영재, 이영재, 이영재
5. 협의 내용 : 환경청 이용계획과 일치한 환경청 평가과 확인

보고자 지방시설서기 이영재
논산시장 귀하

도시관리과지자체협력과-1259 3/2



4 관광단지 논산시 새마을회 참여 '인건비 부담 완화'

연세 : 좌장세 / 국제행정과 (2022-10-06-01:27)

결과보고서

주무관	국제행정	마을지원	마을지원		
주재승	이연준	이연준	이연준		
함소					

논산시 관광단지 조성에 참고하기 위해 부여군 코스모스 꽃단지를 견학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 2022. 9. 29.(목) 14:00 ~ 18:00
2. 출 장 소 :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부여읍 내부로 72)
3. 출 장 자 : 마을지원팀장 이연준 등 3명
4. 내 용 : 부여군 코스모스 단지 견학
5. 업무조치계획 및 보고자 의견 : 가. 부여와 논산의 관광지를 비교할 때, 논산이 매우 광범하여 생산상태에 위치한 지역을 방문, 나. 논산의 코스모스가 왕복 견학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하지 못했으므로 10월 초까지 수미를 지켜본 후, 유채 파종작업을 진행할 예정, 다. 당초 설치계획인 반지, 그리고 등 조형물은 꽃단지 조성에 관련된 수 설치를 재검토할 예정

별첨 사진대지 1부, 문.

도시관리과지자체협력과-5662 3/2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소통이 어려운 군관민 협업으로 맞춤형 국공유지 활용
 - 軍 유휴부지 활용으로 주민·군인·면회객을 위한 문화·휴식·힐링의 공간 조성 재창출
 - 대규모 하천부지 활용한 토지 매입비 절감 시민건강증진 기여
 - 나대지 활용으로 공영주차장 건립하여 시민과 상생
- 軍·官·民 협업과 소통을 통한 재정부담 대폭 완화(총 1,000억원)

	조성 前	조성 後
철도청과 환경청 협의 - 토지매입비 절감 380억 - 시민 건강증진 기여 ① 논산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100,000m ² ② 강경 파크골프장 조성 40,000m ² ③ 강경 생활 체육공원 조성 4,000m ² ④ 원도심 스포츠 파크 조성 100,000m ²	강경읍 황산리 일원 	
국방부와 훈련소 협의 - 쉼터조성매입비 절감 290억 - 시민 건강증진 기여 ⑤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 69,282m ²	연무읍 안심리 일원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 단지조성 인건비 절감 70억 - 관광자원 연계 관광유치 ⑥ 탐정호 하천부지 꽃단지 조성 30,000m ²	부적면 탐정리 일원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 주차공간 조성비 절감 250억 - 시민 주차 불편 최소화 ⑦ 빈집 나대지 임차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 38,000m ²	논산시 내동 일원 	

논산시-육군훈련소,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 '합심' 약속

2021-08-19 15:32



[아시아일보/이승민 기자] 논산시와 육군훈련소가 시민과 훈련장병 및 가족, 훈련소 방문객을 위한 문화휴식·힐링공간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육군훈련소와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다짐했다.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은 시와 육군훈련소가 연간 13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이 방문하는 연무읍에 쉼터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청년 훈련병들과 이들의 가족 및 연무읍민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시와 육군훈련소는 연무행복마을 쉼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약 6만5000평에 이르는 국유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광장, 산책로는 물론 이동식 화장실·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수목 정리작업, 주차장 정비 등 기존 시설 정비를 통해 자연과 심이 어우러진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건 육군훈련소장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 온 청년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방위의 소명을 다 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장병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항상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의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육군훈련소,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에 '합심' 약속

A 김명근 기자 · 2021.08.19 17:32



논산시청 전경

(논산=국제뉴스) 김명근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육군훈련소와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다짐했다.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은 시와 육군훈련소가 연간 130만 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이 방문하는 연무읍에 쉼터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청년 훈련병들과 이들의 가족 및 연무읍민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시와 육군훈련소는 연무행복마을 쉼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약 6만5천 평에 이르는 국유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광장, 산책로는 물론 이동식 화장실·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수목 정리작업, 주차장 정비 등 기존 시설 정비를 통해 자연과 심이 어우러진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건 육군훈련소장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 온 청년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방위의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장병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항상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hobihotd@hannal.net

논산시, 탐정호 일원 10만㎡ 규모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이길표 기자 입력 2022-01-25 15:34 | 수정 2022-01-26 15:11



▲ 안호 논산시장권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1월 주요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탐정호 일원에 10만㎡ 규모의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안호 논산시장권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1월 주요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시는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탐정호 일원의 하천부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비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도 단축할 방침이다.

시민생활체육시설에는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풋살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첫 삽을 뜬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읍북복합문화센터도 올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한다.

이들 센터는 시민이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호 시장권대행은 "논산 발전을 위한 선도적 시책 발굴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 대전 > 충남

논산시 탐정리 유채꽃 단지 관광객 몰려... "주말 장관 이룰 것"

부적면 탐정리 일원 약 1만 평 규모

(논산=뉴스1) 김년희 기자 | 2022-05-13 11:04 호교



논산시 부적면 탐정리 일원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를 지난 11일 촬영한 모습이다.

충남 논산시는 최근 유채꽃으로 뒤덮인 논산천 둔지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적면 탐정리 일원에 약 1만 평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지역 랜드마크인 출렁다리 탐정호와 함께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면 만개한 유채꽃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례명 : 재정혁신 및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대구광역시 ○ 추진기간 : '22. 7. ~ '26. 6. ○ 사업내용 : 재정혁신 및 공공기관 구조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혁신)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확대 등 4대 혁신전략 추진으로 획기적인 채무감축 - (공공기관 구조혁신)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18개 공공기관 → 11개로 통폐합 추진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6. 10. : 재정혁신 기본계획 보고(시장직 인수위) ○ '22. 7. 13. : 민선8기 재정혁신 추진계획 방침 결정(시장) ○ '22. 7. 29. :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조례 개정 ○ '22. 9. ~ 10. : 기금, 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 정비 ○ '22. 9. ~ 10. : 통합 공공기관 출범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조사업 감축에 따른 단체반발 극복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고용승계 불안 해결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만 운용,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기금 17개 중 8개, 특별회계 12개 중 3개 폐지)로 회계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채무감축 재원확보 ○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추진 ○ 선심성, 관행적 지출 제거 및 투자사업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마련 및 이자 손실 감축 ○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비율 확대(기존 30% → 40%)로 안정적인 채무상환 자금 조성 ○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조직 효율화 및 예산절감 달성 (지방공기업 4개 → 3개, 출자·출연기관 14개 → 8개)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금융기관채 1,100억원 조기상환 ○ 기금, 특별회계 폐지를 통해 추가재원 2,400억원 마련 ○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적립비율 확대로 560억원 확보 ○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47억원 절감

재정혁신 및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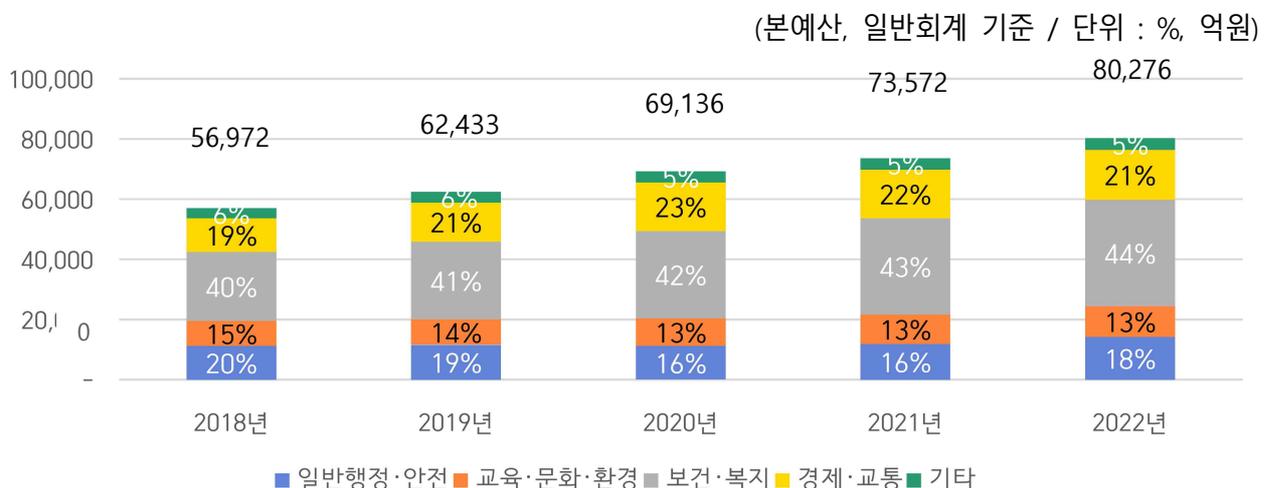
1. 과제 선정 내용

- 민선8기 첫 시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한 푼의 시민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
- 최근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400억원 이상 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이 발생
- 이러한 채무 증가세의 장기화는 향후 미래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
- 이에 시는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재정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
- 또한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혁신을 통해 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추진

2. 문제원인 분석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분야 수요 증가로 전체 예산에서 경직성 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연도별 세출현황 (2018 ~ 2022년) >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서대구역 개발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의 추진으로 재원 여력 악화 및 지방채 발행 증가
 -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6,602억), 엑스코 제2전시장 개관·증축(2,792억),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1,075억), 서대구역 개발 및 광장조성(1,574억) 등
- 특히, 지난 2년여간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방역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한 수요 증대는 급속한 채무 증가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1회추경)
합 계		313 (시 213)	3,516 (시 1,292)	3,642 (시 1,789)	2,870 (시 1,962)
방역	격리자 생활지원비	-	305 (시 200)	450 (시 100)	967 (시 387)
	긴급복지 지원	113 (시 13)	1,329 (시 255)	313 (시 35)	173 (시 19)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전 생활치료센터 방역물품 등)	-	118	446 (시 410)	261 (시 231)
경제	대구행복페이	-	332 (시 93)	1,301 (시 397)	963 (시 831)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	260	395 (시 360)	10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0	242	227	230
	공공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100	930 (시 124)	510 (시 260)	176 (시 164)

※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제외(총 4회 ; 시비 6,366억원)

< 대구시 채무 현황 >



3. 방안 마련 및 실행

재정혁신

①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 추진목표

- 17개의 기금 중 8개의 기금 폐지,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3개의 기타특별회계 폐지 등을 통해 가용재원 2,391억원* 확보

* 기금 가용재원 2,085억원, 기타특별회계 가용재원 306억원

□ 필요성

- 기금 및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발생
 - ※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 이동 지원사업(하이패스 단말기 무상보급)
 - 체육진흥기금 : 체육복지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의 불투명성, 방만·비효율적 문제 발생

□ 폐지방안

1. 기금

- (운용현황) 17개 9,524억원('22년 1회 추경 기준, 통합계정 6,243억 제외)
- (폐지기준) 법정·의무설치기금, 잉여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제외한 8개 기금 폐지

구분	법정의무(5)	법정재량(3)	자체(9)	
기금명	도시주거환경정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개발기금	사회복지지급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재해구호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		메타서타기금	

2. 기타특별회계

- (예산규모) 12개 1조 5,699억원(22년 1회 추경 기준, 공기업특별회계 5,633억 제외)
 - (폐지기준)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한 기타특별회계 3개 폐지, 법정 특별회계 및 목적세 재원* 운용이 필요한 특별회계는 중장기 검토
- *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구 분	법정의무(4)	목적 재원(4)	자체(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산업단지	도시철도사업
	광역교통시설	재정비축진	중소기업육성기금
	소 방	수질개선	기반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사업	경부고속철도변정비

② 공유재산 매각

□ 추진목표

-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가용재원 2,000억원 이상 확보

□ 전체 재산현황(21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적(천㎡)	동 수	연면적(천㎡)
계	30,676	75,176	912	2,285
행정재산	29,417	74,794	902	2,283
일반재산	1,259	382	10	2

□ 추진계획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자산을 비롯한 불필요한 보유자산 처분에 대하여 재정점검단 및 재산관리부서 검토

- 검토결과 매각 대상 재산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매각추진

3 지출구조조정

□ 추진목표

- 선심성·관행적 지출 제거 및 기존 투자계획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채무감축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

□ 추진계획

-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 2022년 실적 >	< 임기내 목표 >
14억원 확보	862억원 확보

 -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의 추진실적 및 필요성 검토 후 일몰 적용

< 한시적 신규·확대 사업 현황 >

('22년 1회 추경 기준 / 단위 : 억원)

계	코로나 대응 소요*	장기미집행 공원	정책사업**	비고
4,174	1,278	1,349	1,547	

-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 2022년 실적 >	< 임기내 목표 >
260억원 확보	2,023억원 확보

 - (구·군 보조) 합리적인 보조율 인하 및 재량 보조사업 10% 감축
 - (교육재정보조) 비법정 교육재정 보조사업 10% 감축
 - (민간보조금) 법정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보조금 규모 30% 감축

*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미흡 및 유사 중복 사업, 성과 미흡 사업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보조금 지원 배제

- (공기관 위탁·출연금) 사업규모 조정 및 출연금 규모 재검토

< 보조·위탁사업·출연금 현황 >

('22년 1회 추경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구·군보조	교육재정보조	민간보조금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출연금
계	33,325	5,627	4,309	5,465	600
의무(보조)	29,358	4,737	2,802	1,099	26
재량(자체)	3,967	890	1,507	4,366	574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 | | | |
|--|------------------------------------|------------------------------------|
| | < 2022년 실적 >
214억원
확보 | < 임기내 목표 >
3,110억원
확보 |
|--|------------------------------------|------------------------------------|

- 50억원 이상 대규모 SOC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 연도별 SOC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8년(최종)	'19년(최종)	'20년(최종)	'21년(최종)	'22년(1회추경)
SOC사업	3,754	4,270	5,677	4,921	4,104
보조	1,987	2,098	1,670	2,423	1,922
자체	1,767	2,172	4,007	2,498	2,182

- 공모사업 사전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시비 매칭비 감축

* '22년 비R&D 공모사업 사전심사 : 17건, 총사업비 5,989억원(국 4,378, 시 977, 기타 634)

- 경상경비 10% 의무절감
- | | | |
|--|--------------------------------|-------------------------------|
| | < 2022년 실적 >
12억원 확보 | < 임기내 목표 >
160억원 확보 |
|--|--------------------------------|-------------------------------|

-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절감
-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절감
-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각종 회의 운영수당 절감
- 의례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연구용역비 삭감 등

4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확대

□ 추진목표

- 잉여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으로 '26년까지 부채비율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한자릿수) 달성

□ 추진계획

-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적립전출 비율 확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적립전출금 비율을 30% → 40%로 확대하여 지방채 상환 확대(4년간 총 4,005억원)

공공기관 구조혁신

□ 추진목표

-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 추진방향

- 유사한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 ①업무간에 시너지를 줄 수 있거나, ②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나, ③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우 기관 통폐합 추진
-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며,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인력들은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업무에 재배치

□ 기대효과

- 조직 통폐합으로 중복되는 기능 및 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연간 4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 * 임원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 절감되는 재원은 대구 미래 50년 준비와 시민복지 증진에 활용

<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현황 >

• 지방공기업 (4개 → 3개), 출자출연기관 (14개 → 8개) 통·폐합

※ 현행유지 : 엑스코,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4. 장애극복

- 각종 보조사업 감축 및 폐지에 따른 수혜단체 반발
 -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부서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 그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단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논리 발굴
 - 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 및 보조율을 제시함으로써 예산 누수 방지 및 보조사업 내실화를 유도
- 공유재산 매각추진에 따른 지역민 반발
 - 30여년 간 방치되어오던 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자 그간 무상으로 부지를 이용해 오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발생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대체 매각부지 발굴 및 선정 등 대안 제시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승계 준수
 -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시장의 알박기 인사 등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이자부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채무 1,100억원 조기상환('22년 제2회 추경 및 '23년 본예산 편성)
 -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연 38억원 정도 이자비용 절감
- 기금, 특별회계 폐지를 통해 지방채 상환 및 현안 사업 재투자 자원 2,400억원 마련('22년 제3회 추경 편성)
- 건축재정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및 재구조화를 통해 '23년 본예산 '지방채 발행 zero' 편성
-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적립전출금 비율확대를 통해 채무상환 자원 560억원 확보('23년 본예산 편성)
- 공공기관 통폐합 및 개편 완료, 개정 조례 공포('22. 7. 29.)
-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47억원 절감
-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1억 2,000만원으로 제한, 기관장 퇴직 시 퇴직금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수백억 원 대 체납 골프장 징수 요책!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정담당관실 문동익

< 요약 >

- 10년 이상 장기 체납 골프장 체납액 262억 원 징수
 - 지하수 시설물 압류 및 단수 조치, 골프장 부지 전수 조사 공매 추진
 - 법원 회생 계획 미이행 골프장 매출채권 압류 체납액 징수
 - 현금 결재 유도 골프장 사업장 수색 등 가능한 방법 총동원 체납액 징수
 - * 골프장 체납액 추이: ('19) 187 → ('20) 247 → ('21) 242 → **(22.9) 14억 원 ('21 대비 94.2% 징수)**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조정을 통한 지방세 81억 원 세수 확충
 - (건축물) 0.75% → 4%, (토지) 체육용지 3% → 4%, 원형보전지 0.2% 분리과세 → 0.2~0.4% 별도합산과세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수백억 원 대 체납 골프장 징수 모책!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1. 1. ~ 현재 ○ 추진성과 : 체납액 262억 원 징수, 세율조정 81억 원 징수 ○ 사업내용 : 장기 체납 골프장 체납액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지하수시설 단수·사업장 수색·증권 압류 조치 - 골프장 부지 전수 조사를 통한 골프장 공매 처분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5. 6. 골프장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공매 처분 계획 ○ ' 21. 5. 14. 지하수 시설 압류 (B 골프장) ○ '21. 5.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의회) ○ '21. 7. 29. 도-골프업계 관계자 회의 개최(도지사권행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특수로 골프장 요금 인상, 체납액 납부 등 당부 ○ '21. 6. 24. 공매 의뢰 (C 골프장 6필지) ○ '21. 11 ~ 12월 지하수 시설 압류(A·B 골프장) ○ '21. 11.~12월 골프장 부지 공매 예고(A·B 골프장) ○ '21. 12월 골프장 부지 공매 의뢰(A·B 골프장) ○ '21. 12. 3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세율특례 종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부서 직원 연찬을 통한 징수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자체 체납액을 활용 체납처분으로 신탁사 체납 징수 ○ 골프장 지하수시설 단수 및 공매 처분 등 징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시설물 단수 조치로 골프장 압박 - 골프장 토지 실태조사를 통해 공매 가능 토지 조사 및 실행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시설물 최초 압류 및 단수 조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2개소에 대한 지하수 시설 2개에 대해 각각 단수 ○ 골프장 과세대장과 현장 조사를 통한 공매 물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코스 외 토지, 체육육지, 임야 등에 대해 실태조사 ○ 매출채권·공탁금·증권 등 모든 가능한 징수 방법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 절차 미 이행 골프장 매출채권 압류, 채권 조사 추심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체납액 262억 원 징수 ('21 82, '22.9 180억 원) ○ '22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증가율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14.5%P 증가, 전국 -0.5%P 감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87 (2022.08.18. 시행) * '21 지방세 징수율 최하위, '22년 징수율 증가율 전국 최고 ○ 재산세 세율 조정으로 81억 원의 세수 확충

수백억 원 대 체납 골프장 징수 묘책

① 지하수 단수·골프장 매각 등 체납액 262억 원 징수 ② 세율 조정 81억 원 징수

1. 과제 선정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세수 증대

- 2006년 종전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구 유입 증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지방세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 2013~2016년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19.2%가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 9%의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체납률도 3%대로 낮아져 안정적 재정운영의 밑거름이 되었다.

나). 전국 최하위 징수율, 전국 최고 체납률

- 하지만, 최근 3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최하위이며, 이에 따른 지방세 체납률은 전국 최상위로 지방세 징수 부진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가장 시급히 해소할 과제였다.

«전국 대비 지방세 징수율·체납률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징수율	전국	93.9%	94.3%	94.9%	95.4%	96.1%	96.6%
	제주	96.1%	96.1%	95.4%	95.0%	94.8%	94.9%
	(순위)	(5)	(7)	(9)	(15)	(17)	(17)
체납률	전국	5.1%	4.7%	4.1%	3.7%	3.1%	2.9%
	제주	3.2%	3.2%	3.9%	4.6%	4.8%	4.6%
	(순위)	(11)	(11)	(9)	(2)	(1)	(1)

- 이러한 지방세 징수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및 골프장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과제로 선정하였다.

2. 문제 원인 분석

가). 지방세 징수율 저조, 체납률 증가의 원인 분석

-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 원인으로 부동산 호황기 이후 폐업된 법인에 대한 감면 목적 미사용 부동산 취득세 추징분 발생, 법인 지방소득세 추징분 발생 등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였다.
- 또한, 고착화된 골프장 재산세 체납액의 장기화 현상은 체납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도입하여 실효된 선순위 민사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 제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택수색 등 증가한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다.
- 하지만, “고질적인 골프장 체납액 징수 방안”은 해소해야 할 주요 과제였다.

나). 징수율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된 골프장 체납액

- 제주도에 30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 6개소가 재산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데 최고 10년간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도 있었다.
- 골프장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43.1%에서 최하 23.6%를 점유하여 “징수율 최하위, 체납률 최상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연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체납 골프장	5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5개소	4개소
골프장 체납액(A)	198	145	187	247	242	193
전체 체납액(B)	459	481	594	735	806	817
점유율(B/A)	43.1	30.1	31.5	33.6	30.1	23.6

다). 골프장의 장기 체납 원인 분석

《골프장 자체 원인》

- 골프장 조성 자금 확보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하여 초기 자본을 확보하여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골프장 수의 증가, 골프 인구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 금액 하락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증가로 이어졌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 골프장은 자금난 등으로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시스템의 원인》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2021. 1. 1.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게 과세되고 신탁 부동산 압류 외에 다른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 체납 골프장 6개소 중 3개소가 신탁 부동산으로 체납액은 242억 원에 달하며, 최장 10년, 단기 4년간 체납하고 있으며 부동산 압류 외에는 다른 조치가 불가능하다.
-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회생 채권으로 신고한 지방세 체납액을 3년간 균등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간 3년간은 강제징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라). 골프장 세제 지원 효과 분석

- 코로나19 영향으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 골프장을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골프요금 인상, 지방세 체납, 이용 불편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 도내 골프장 내장객 (2019) 209만 1,504명 → (2020) 238만 4,802명 증14% → (2021) 289만 8,742명 증21.6% → (2022.7월) 169만2501명 증2.8% (전년 동월 대비)

- 이에 따라, 도의회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21.5.)하였고, 도지사권한대행 주제로 “도-골프업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21.7.)해 골프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세제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점검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가). 장기 체납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연찬

- 골프장 장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세정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 골프장 카트 매각, 기계장비(잔디 깎기 등) 매각, 지하수 시설 압류, 골프장 공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중 지하수 압류를 통한 단수 조치와 신탁 골프장 부지 공매 방법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정했다.
- 골프장 자체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하수 시설물 압류로 단수 조치를 하고, 다음 단계로 신탁사 체납액으로 골프장 부지 공매 처분을 하는 투트랙 징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지하수 시설물 압류로 단수 조치

- 골프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물이다. 제주 골프장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잔디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 3개 골프장은 지하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A 골프장은 지하수 3기(음용1, 비음용2), B골프장은 4기(음용1, 비음용3), C골프장은 3기(음용1, 비음용2)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음용 지하수 시설을 압류하여 물 공급을 차단하면 압박 요인이 될 거라 판단하였다.

다). 골프장 부지 공매

- 체납 골프장의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한 결과 지목이 '체육용지' 외에 '임야', '목장용지'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골프장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하여 사실상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골프장 내 토지와 골프장 외 토지로 구분한 후 각각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매 계획을 세웠다.

라) 법인 회생 변제 계획 미이행 매출채권 압류 해제 거부

- 체납액 변제 없이 회생 절차 종결하여 변제계획은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유지하고 변제기에 추심하여 자금 흐름을 압박하기로 했다.

4. 장애극복

가). 지하수 시설물 압류 봉인

- (장애요인)

- 지하수 시설물 압류는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를 잠그게 되므로 시설 노후 및 착오 작동으로 모터의 파손 등으로 손해 배상이 따를 수 있었다.
- 관련부서(물정책과)에서는 지하수 시설물 착오 작동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으로 압류 조치에 부담이 되었다.

- (극복)

- 골프장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여 작동 모터·전기시설 등 지하수 시설 구조물을 사전 답사하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하수 시설물을 압류 및 봉인하여 단수 조치하였다.

- (조치)

- 지하수 시설물을 보유한 3개소 중 2개소 대해서 지하수 시설물 1기를 각각 압류하였고, 일정기간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지하수 시설물 추가 압류를 예고하였다.(A·B 골프장)
- 지하수 시설물 1기 압류 이후 골프장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금융권 대출 및 투자 지연 등의 이유로 체납액 납부 진척이 없어 지하수 1기를 추가 압류하여 압박에 나섰다.(A·B 골프장 추가 단수)

나). 골프장 부지 공매 처분

- (장애요인)

- (1) 골프장 토지 이용 실태조사에 골프장 비협조, 광범위한 토지의 조사로 토지의 경계 불명확, 60~80억 원의 체납액으로 1천억 원 가치의 부동산 공매 등의 부담이 있었다.
- (2) A 골프장의 경우 코스 외 토지 공매 의뢰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공매 실익 없음으로 공매 중지 결정하기도 하였다.

- (3) B 골프장의 경우: 알박기, 입찰 직전 이의신청으로 공매방해
 - i) 전체 부지 공매 중 개인(회장) 명의 신탁 체납액 납부
 - 1필지 압류 해제로 공매 재검토(알박기식 방해)
 - ii) 공매 공고 후 입찰기일 직전 이의신청서 제출
 - 공사 중인 콘도미니엄·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이 감정 평가액에 미반영 (노골적인 공매 방해)
- (4) C 골프장의 경우: 코스 외 공매 가능한 토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공매 낙찰 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극복)

- (1) 재산세 과세대장과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골프장 토지 조사 순위를 정하여 현장 실태조사 결과 체육용지와 체육용지 외 토지(임야, 목장용지)로 나누어 매각 가능 순위를 정하였다.
 - 우선 체육용지 외의 토지 매각하고, 전체 부지 공매가 필요한 경우 전체 부지 공매를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다. (2021. 5. 6. 「골프장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공매 처분 계획」)
- (2) A 골프장의 경우: 지하수 시설 단수에도 체납액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매각은 근저당권자에 막혀있었다. “골프장 공매 처분 계획”에 따라 전체 부지에 대한 공매를 검토하였다.
- (3) B 골프장의 경우: 공매 방해에 대한 검토
 - i) 골프장 분리 매각 협의 (관련부서)
 - 알박기식 공매 방해에 대해 개인(회장) 소유 토지가 속한 9홀을 제외하여 27홀 중 18홀만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ii) 이의신청에 신속한 판단으로 재공매 결정
 - 공사 중인 콘도미니엄과 리모델링 클럽하우스 비용은 골프장 비용으로 신탁사 공매가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 (4) C 골프장의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골프 코스 외 지역에 체육용지가 골프장 운영과 관련 없는 토지로 도로와 접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매를 진행하였다.

- (조치)

- A 골프장의 경우: 코스 외 부지 공매 불가로 골프장 전체 부지 공매를 결정하였다.(‘21. 12. 2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B 골프장의 경우
 - i)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27홀 중 18홀만 분리 매각 결정
 - 공매 취득자에게 골프장 개발사업 허가와 체육시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아 공매 지속 추진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21. 12. 1.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ii) 이의신청은 수용 불가 결정하여 공매 재공고 속행
- C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 용지 중 골프장 미사용 토지에 대해 도로와 접한 토지 중심으로 6필지를 공매 의뢰.(‘21. 6. 24. 공매 의뢰)

다). D 골프장 회생 변제 계획 미이행으로 매출채권 압류·추심

- (장애요인) 회생절차 종결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해제 요구
 - 법원 회생 계획에 의해 체납액 7,761백만 원을 3년 균등 변제 하여야 하나 1차년도 1,000백만 원 납부 후 변제 미이행(2020. 1. 31. 회생절차 종결, 회생채권 82.92% 변제)
 - 회생계획(3년 균등 납부)에 따른 조세채무 변제 미이행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체납처분의 범위에 대해 쟁점 발생
- (극복) 회생 법원 담당 재판부 판사에 질의(‘21. 5. 13.)
 - 회생 종결된 경우 압류는 가능하나, 변제기간이 미 도래한 변제금은 추심할 수 없다는 회생 담당 판사의 답변을 받음
- (조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제 요구를 거부 추심 징수
 - 압류를 유지하여 2차년도 변제기에 매출채권 4,174백만 원을 추심을 통해 징수(‘21. 10. ~ 11.)
 - 3차년도분 2,587백만 원은 매출채권 장기 압류로 골프장 운영 자금 압박으로 자진납부(‘22. 1. 13)하여 전액 징수하게 됨.

라). 현금 납부 요구 제보 사업장 수색 현금 압류

- (장애요인) B골프장은 이용요금 현금 결제 요구 제보
 -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이용요금을 현금결제만 요구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 제보
- (조치) 동법인은 모 법인 회생 진행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최소화 하고 의도적인 현금 매출이 예상
 - 월요일 오전 사업장을 긴급 수색하여 금고를 개봉한 결과 현금 153백만 원을 발견하였으나 신탁사 체납액은 징수할 수 없어 해당 골프장 체납액 46백만 원만 현금 징수함.

5.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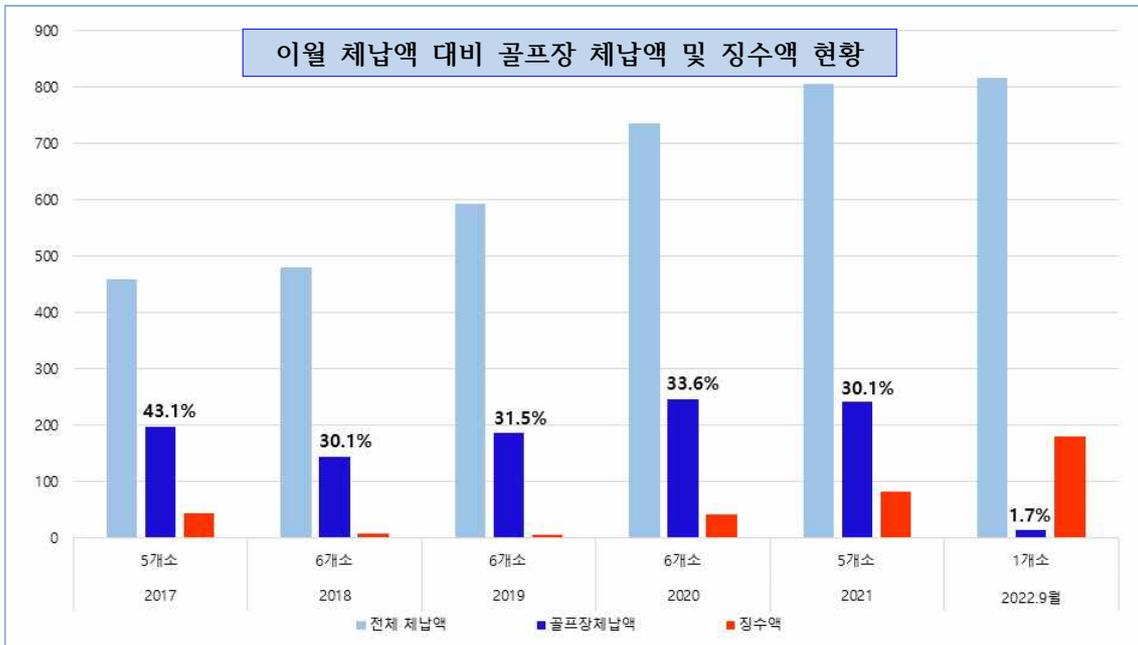
○ 장기 골프장 체납액 262억 원 징수 세수증대 효과

《골프장 실태조사를 통한 공매·매출채권 압류 징수》

- A 골프장은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170억 원을 차입하여 50억 원을 납부하고 16억 원은 2년 분납 조건으로 공매를 보류하였다.
- B 골프장의 경우 개인(회장)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체납액 96억 원을 납부, 공매를 중지하였다.
- C 골프장의 경우 공매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 당일 체납액과 체납 처분비 18억 원을 전액 납부하고 공매를 중지하였다.
- D 골프장은 법원 회생에 의해 3년간 체납액을 균등 변제 미이행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변제기일에 체납액의 1/3만큼 추심하는 방법으로 6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지하수 시설물 압류 봉인 극약 처방》

- 제주 골프장은 지하수 단수로 물을 차단하는 것은 골프장으로는 큰 압박 요인이 되었으며,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은 컸다.
- 이외에도 골프장 수색을 통한 현금 징수, 예금·증권·공탁금 등 가능한 징수 방안을 동원했다.



○ '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전국 1위 상승률 달성

- 제주는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최하위, 체납률 최상위로 전국에서 가장 부진한 자치단체였다.
- 장기 체납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징수 효과로 "'22년 상반기 시도별 이월체납액 징수 현황"에서 제주는 전년 동기대비 118억 원·14.5%P의 징수율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전국 1위의 성적을 올렸다.

○ 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 중단, 세율 조정으로 81억 원 세수 증대

- 지방세법 상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4%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 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 감면으로 인한 세제지원 목적이 일정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없애 올해부터 체육시설용지는 종전 세율 3%에서 4%로 인상했다.
- 또한, 원형보전지는 0.2% 분리과세에서 0.2~0.4%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건축물 분은 0.75%에서 4%로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81억 원의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였다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세입확대와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징수 환경 변화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을 출범하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업무를 정착시켰고, 종전 체납자의 단순 재산 압류에서 벗어나 실효된 민사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범칙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하며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살려 효율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체납자에 대해 도(세정담당관)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2022년 6월부터 도 본청·사업소로 분산된 체납액을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 향후, 행정시의 세외수입 체납액도 도 본청(세정담당관)으로 이관해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1

골프장 체납액 징수 관련 언론보도 현황

날짜	언론사	보도내용
2021.5.25.	조선일보	현금만 받는 골프장 찾아가, 제주도 체납 지방세 4600만원 징수
2021.5.27.	세계일보	호황인데도 세금 체납 골프장에. 제주도, 카드압류, 지하수 봉인 등 추진
2021.6.3.	제주일보	코로나 호황에도 세금 안 낸 골프장에 칼 빼든 제주도
2021.7.15.	뉴제주일보	지방세 체납 골프장, 지하수, 부동산 초강수에 두 손 드나
2021.12.1.	연합뉴스	제주도, 지방세 장기 체납 골프장 공매 처분 초강수
2021.12.27.	제주의소리	돈 없다더니 18억원 납부, 제주 골프장 1곳 또 공매
2021.12.30.	조선일보	"돈 없다" 세금 안내던 제주 골프장, 공매 들어가나 '칼납부'
2022.3.28.	세계일보	채무 규모만 800억원 대, 제주도, 체납 골프장 강제 매각 '초강수'
2022.7.14.	제주도민일보	지방세 체납 골프장과의 전쟁, '부지 공매' 등 강력 처분
2022.7.14.	중앙일보	체납 버티다 178억 허겁지겁 냈다.. 제주 골프장 투항시킨 조치
2022.7.14.	국민일보	"골프장, 호황에도 체납?". 제주도, 물 끊기 등으로 178억 징수
2022.7.14.	연합뉴스	수십억원 세금 체납 제주 골프장들, 부지 공매처분에 백기 투항
2022.7.14.	제주MBC	수백억 지방세 체납 골프장들, 강력처분에 납부
2022.7.15.	뉴시스	수십억대 세금 체납 골프장 문제 해결한 제주도 묘책은?
2022.7.21.	BBS NEWS	원훈철 팀장"코로나19로 호황 맞은 제주 골프장들,, 조세 정의 세우고자 강력한 체납금 징수"
2022.9.25.	아시아경제	배짱 영업 제주도 골프장에 '재산세 폭탄' -"혜택 받는 만큼 지역사회 기여해야"...지하수 시설 압류도

사업장 수색 · 지하수 단수



골프장 실태조사



방송 보도



신문 보도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 전체 강제 매각·체납 초강력 대응
 김경행 기자 | © 승인 2021.07.14

서귀포시지역 골프장 100억원 이상 체납, 전체 부지 124만㎡ 공매처분 의뢰
 제주도 '정상화 더딤' 기다려...특차 유지 통한 경영 정상화, 재정 확충 방침
 도내 골프장 체납 현재 197억원, 부분 매각, 지하수시설 단수 등 조강령 다룸

체납 버티다 178억 허겁지겁 냈다...제주 골프장 투항시킨 조치
 중앙일보 | 입력 2022.07.14 16:15 업데이트 2022.07.14 16:30

천연재 기자 최정일 기자

수십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제주 골프장들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조치에 '백기'를 들었다.

뉴스주일보 2021년 06월 04일 (금) 1면 01면

지하수 봉인·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철퇴'

프로야구 선수 역대 최고 효율세에도 도내 골프장 5곳 220여 개남·여년 반씩 봉인 단행...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 이상... 지하수 단수 조치... 부동산 공매... 178억 원 납부... 178억 원 허겁지겁 냈다... 제주 골프장 투항시킨 조치

[전남 진도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u>세외수입 운영 혁신</u>
사 례 명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
기 관 명	전라남도 진도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회계과 윤선미
< 요약 >	
<p>○ 공공자금 입출금 시차에 따른 유휴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금리 현황과 경제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 수급 현황 일일 데이터 관리 및 면밀한 분석으로 자금 수요를 예측하여 <p>○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경상적세외수입의 50%) 이상을 달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사례</p>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진도군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유희 공공자금을 활용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극대화로 세외수입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② 추진 경과	○ '21. 3. 3 : 2021년 공공자금 운영계획 보고(군수) ○ '22. 2. 24 : 2022년 공공자금 운영계획 보고(군수) ○ '22. 7. 28 : 2022년 공공자금 운영현황 보고(군수) ○ 매주 1회 : 공공자금과 관련 금리현황과 경제동향 주간 보고(군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2019년 7월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0.50%) 시대 도래 ⇒ 자금 수급 현황 분석과 금리 변동현황에 적극 대응하여 이자수입 증대방안 마련
④ 우수사례 내용	○ 공공자금 운용의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 설정 ○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마련 - 공공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자금 운영 현황 분석 보고 - 자금의 탄력적·효율적 관리로 지출 자금 적기지원 - 국내외 경제동향 파악과 금리변동에 적극 대응 - 금리 하락시에는 장기로, 고금리를 찾아서 - 금리 상승시에는 단기로 짧게
⑤ 성과	○ 2021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6억원 달성 ○ 20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43억원 달성예상 ※ 이자수입 40억원 : 경상적세외수입의 50%, 총 세외수입의 19% ('21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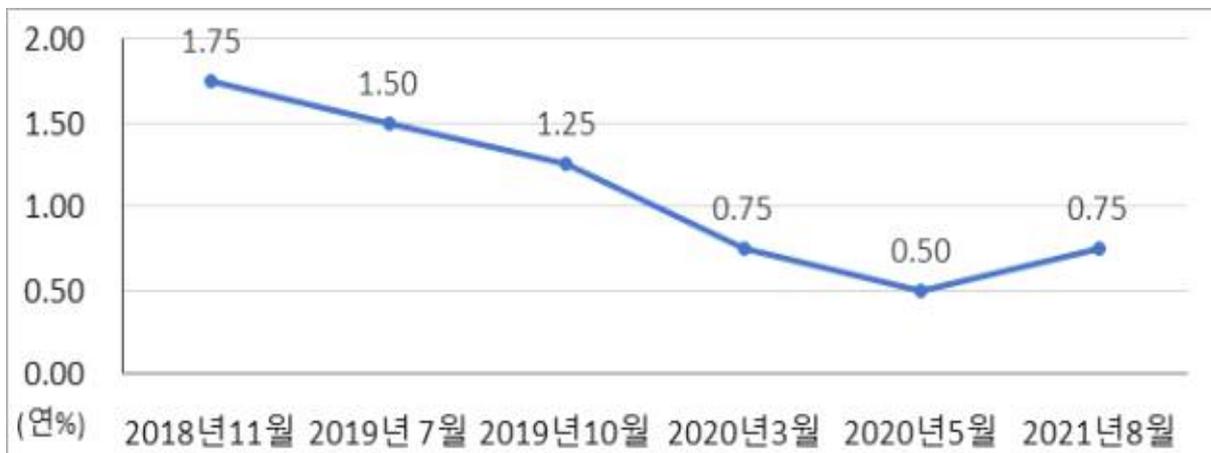
1. 과제 선정 내용

- 진도군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305억원으로 세입은 지방교부세 2,083억원(48.38%), 보조금 1,477억원(34.31%), 지방세 수입 154억원(3.57%), 세외수입 214억원(4.98%) 자체 재원은 총 368억원(8.55%)으로 열악한 실정임
- 교부금, 보조금 등 세입은 대체로 월별로 분산되어 입금되며, 세출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등에 지출되나 세입과 동시에 지출되지 않아 공공자금 입·출금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시차 발생으로 생긴 유휴 공공자금을 금리변동 등을 분석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문제원인 분석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1월 1.75%에서 인하되기 시작하여 2020년 5월 0.50%로 초저금리가 되어 15개월간 유지되었으며, 낮은 금리는 공공자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 이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에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 운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공공자금 운용의 기본방침은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휴자금 활용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다.
- 진도군은 공공자금 운용의 추진방향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중 자금의 종합적 관리, 지출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 금리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2021년도 30억원, 2022년 2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다.

첫째, 공공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자금 운영 현황 분석 보고

- 전년도 자금 수급현황 분석과 운영결과를 토대로 연초에 「공공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자금 운용 방안을 수립하고
- 일별 순세입 및 순세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주별, 월별 자금 현황을 분석하고 연간 자금 수급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
-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이 포함된 「공공자금 주간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제 금리 현황과 전망을 참고하고 공공자금 예금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공공자금 운영계획」과 「공공자금 주간 운영현황」은 군수께 매주 보고하여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높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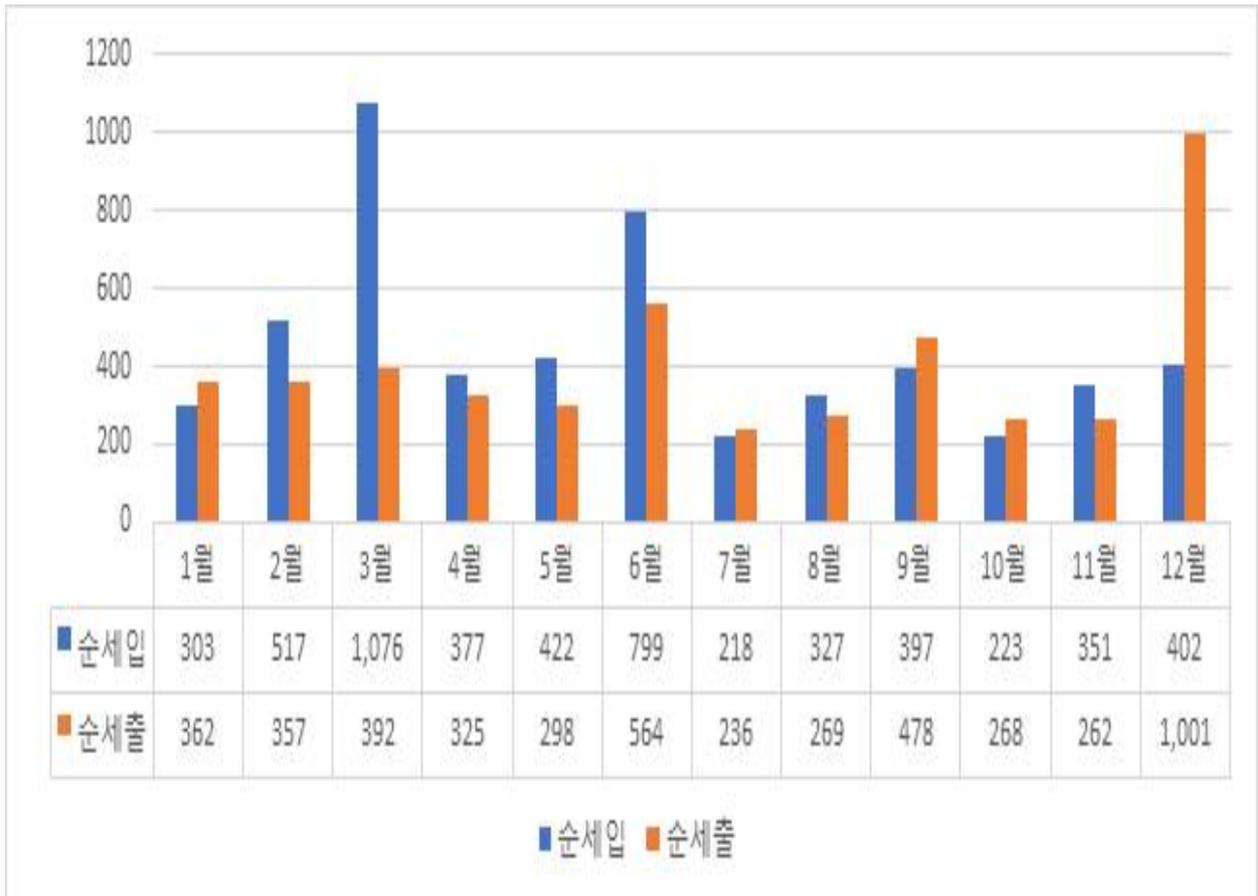
둘째, 자금의 탄력적·효율적 관리로 지출 자금 적기지원

- 연초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 계획과 일별 순세입·세출 데이터를 이용한 주간·연간 데이터 분석으로 자금 수요를 예측하여 지출 준비금을 적정 유지하고 유휴자금은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음

- 자금 수급 현황 데이터 분석으로 자금 수요에 맞는 분산 예치와 10억원 이상 지출은 자금 배정시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감소를 막을 수 있었다.

● 2021년도 순세입·세출 현황

(단위: 억원)



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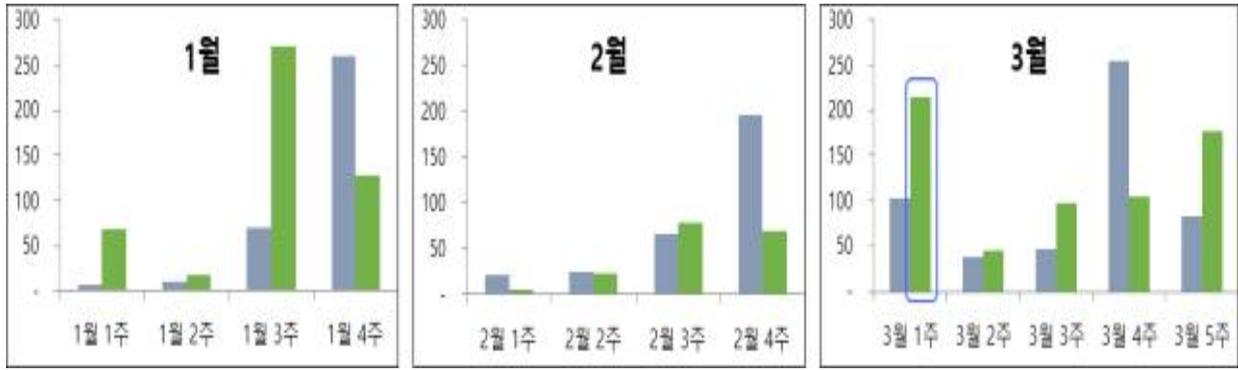
-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영향으로 상반기에 집중 (국고보조금 61% 상반기 교부)
- 세출은 대체로 균등하게 지출되나, 6월, 9월,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
- 1월과 하반기(7월, 9월, 10월, 12월)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

[지출준비금]

1월 200억원(교부금 입금전), 6월 600억원(상반기 마무리)
 9월 500억원(추석), 12월 1,000억원(연말) 필요

◎ 2022년 월별·주별 순세입·세출 현황

■ 순세입 ■ 순세출 (단위: 억원)



월간 분석

- 월 초 세입, 세출 모두 소폭이나 3, 4주에 큰 폭으로 증가
- 대체로 월 후반에 보조금 입금,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으로 세입 증가
- ※ 특이사항: (3월1주) 어촌뉴딜사업 110억원 지출
 ⇨ 지출금액 10억원 이상은 자금배정시 협의하여 지출

[지출준비금]

- 월 3회 이상 분산 만기 설정
 - 5일 전후, 15일 전후(보수지급 등), 25일 이전(기초수급비, 월말 기타) 준비

셋째, 국내외 경제동향 파악과 금리변동에 적극 대응

국내외 물가, 환율 등 경제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한국은행,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변동과 향후 전망을 참고하여 유희 공공자금을 장·단기 정기예금, 보통예금, 신탁 등으로 구분 운영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이끌었다.

◎ 「공공자금 주간 운영현황」 중 “주간 동향”

〈2022년 8월 4주〉

- 한국은행 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 단행(8.25.)
 - ⇨ 기준금리 : 2.25% → 2.50% (↑0.25%)
 - ⇨ 소비자 물가(6%), 환율(1,332원) 방어 등을 고려
- 현재 미국 금리와 동일 ⇨ 한국 2.50%, 미국 2.50%
- 향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 연속 금리 인상이 예상됨
 이에 맞춰 한국은행도 인상이 검토 될 것임

〈2022년 9월 1주〉

-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 강조(*잭슨홀미팅)
⇒ 9월 기준금리 0.5% ~ 0.75% 인상 가능 *잭슨홀미팅: 경제정책 심포지엄
- 달러 강세 지속(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 환율 1362.6원(9.2.기준) ※ 2009년 4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 소폭 감소 : ↑5.7% (7월 ↑6.3%)

넷째, 금리 하락시에는 장기로, 고금리를 찾아서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금리(0.5%)가 유지되자 2019년 상반기 2년 만기로 가입된 예금액 810억원(군 금고 이율 1.65%)을 지속 유지하여 2021년 상반기에 26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 또한 2017년 군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가산금리(0.50%)가 더해져 수시입출식 보통예금의 금리가 0.70%로 1년 만기 정기예금(0.55%)보다 높아 2021년 9월 군 금고 금리 인상시까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었다.
- 이와 함께 유희자금 50% 이내에서 고금리 신탁상품에 장·단기 분산 가입하여 지출 자금 적기 지원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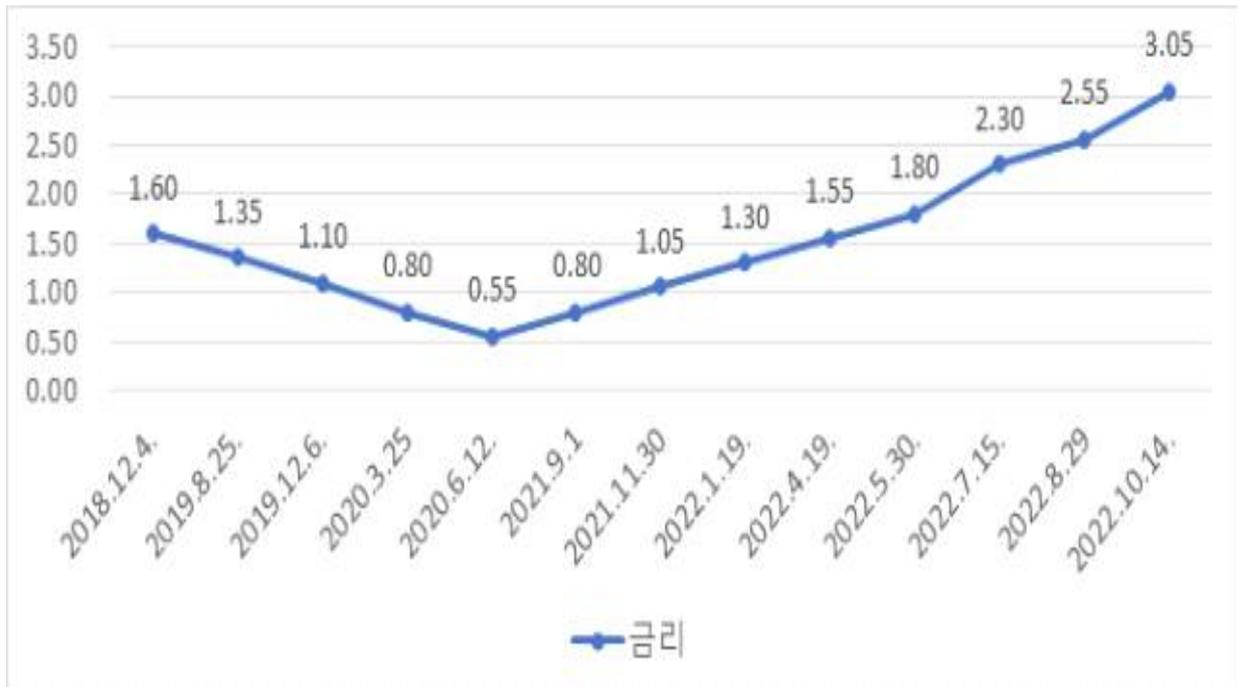
다섯째, 금리 상승시에는 단기로 짧게

-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여 2022년 10월에는 빅스텝(0.5%)가 인상되어 3.00%가 되었으며,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향후 지속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유희 공공자금을 1개월, 3개월 등 단기로 예금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였다.

- 또한 예금 가입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을 참고하여 군 금고 금리 변동시기를 예측한 후 가입 시점 및 기간 조정에 참고하였다.

● 군 금고 금리변동 현황

* 금리: 정기예금(1년만기)



● 장·단기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비교(예시)

[가입조건: 금액 100억원, 기간 1년, 가입일 '21.9.29.]

○ 장기(1년)으로 가입한 경우

$$100\text{억원} \times 1\text{년 } 0.8\% \text{ ('21.9.29.~'22.9.29.)} = 80\text{백만원}$$

○ 단기(3월 이내)로 가입한 경우

$$(100\text{억원} \times 3\text{월 } 0.65\%) + (100\text{억원} \times 1\text{월 } 0.75\%) + (100\text{억원} \times 3\text{월 } 1.10\%)$$

'21.9.29.~12.29. '21.12.29.~'22.1.29. '22.1.29.~4.29.

$$(100\text{억원} \times 3\text{월 } 1.35\%) + (100\text{억원} \times 1\text{월 } 1.90\%) + (100\text{억원} \times 1\text{월 } 2.15\%)$$

'22.4.29.~7.29. '22.7.29.~'22.8.29. '22.8.29.~9.29.

$$= 117\text{백만원}$$

○ 단기로 가입한 경우 이자수입 **37백만원(47%) 증가**

4. 성 과

- 2021년 당초 이자수입 목표액은 30억원으로 2019년 2년 만기 정기예금에 따른 26억원과 초저금리로 인한 추가 4억원을 예상 하였으나 금리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고금리 신탁예금 연계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010년 이후 최대인 40.6억원을 달성**
- 2022년에는 저금리로 20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하였으나 경제여건 변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2022년 10월 현재 28.7억원**으로 목표액 달성과 연말에는 43억원이 예상되어 2년 연속 높은 이자수입 증대 효과 거양

※ 향후 예상이자수입: 가입중 12.1억원, 추가가입예상 2.2억원

이자수입 40.65억원은 진도군 **경상적세외수입 79.31억원의 50%**이며, **총 세외수입 214.31억원의 19%**로 전년대비 113% 증가에 가장 큰 몫 차지

*2021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전남 시군 이자수입과 비교해 보면 시 평균 27.56억보다 높으며, 진도군과 예산이 비슷한 군(5천억원이하) 평균 11.37억보다 3.5배 높은 이자수입을 올렸음

※ 전남 시군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교

(단위: 억원)



* 시군 누리집 참고: '21년도 세입결산 기준('21년도 결산서 부재 시군(6) '20년 기준) 세입결산 목별(공공예금이자수입) 내용 부재 시군(3) 제외

- 끝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는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금융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여건 등을 신속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거양

●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도 자료

⇒ 전남매일, 광주타임즈, 광주일보, 한성일보 등 21건 언론 보도

漢城日報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009면 지역

진도군, 공공예금 이자 수입 '역대 최고'

일반회계 이자 수입 40억원, 최근 3년간 평균 이자 수입 대비 67% 증가



진도군이 올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년 동안 평균 이자 수입 24억원보다 67% 증가한 4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계속된 예금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고 금액이다.

군은 이자 수입이 증가한 이유로 세입·세출 자료를 기초로 자금 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자금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했다.

특히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 하는 등 전략적 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 극대화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확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미지 기자 heibo@naver.com

광주타임즈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007면 지역

진도군, 공공예금 이자 수입 '역대 최고'

40억 기록, 최근 3년 평균比 67% ↑...전략적 자금 운영 성과

진도군이 올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년 동안 평균 이자 수입 24억원보다 67% 증가한 4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계속된 예금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고 금액이다.

군은 이자 수입이 증가한 이유로 세입·세출 자료를 기초로 자금 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자금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했다.

특히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 하는 등 전략적 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 극대화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확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영진 기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 사업목적 : 외국인 맞춤형 체납징수체계 마련 ○ 사업규모 : 외국인 체납자 135,342명, 체납액 230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현재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4월 : 전국최초 외국인 통역 기간제근로자 채용 ○ '21. 5월 : 전국최초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가입현황 조회 압류 - (조회기관) 삼성화재, 한국산업인력공단 ※ 귀국비용보험(외국인 본인) : 증거금 성격으로 항공권 등에 귀국비용 목적으로 포함 가입 ※ 출국만기보험(고용주 가입) : 퇴직금 성격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일부 불입한 후 출국시 반환 ○ '21. 9월~10월 : 외국어 안내문·독촉장 등 발송 및 납부홍보 - 외국인 지원시설(쉼터, 복지센터)에 리플렛 배포 및 배너 설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200만명 시대...‘깜깜이’ 외국인 지방세 세금체납 관리 체계 부족(김주영, 홍성국 국회의원 등 다수) ↳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 소재 파악 곤란 및 출국이 자유로운 점 등으로 인해 체납의 관리가 어려워 (세정일보 ' 22.10.11.) ○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납부의식 결여 ↳ 외국어 통역 상담을 통한 언어장벽 해소 ○ 외국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관리체계 미비 ↳ 맞춤형 홍보강화 등 외국인 체납 관련 효율적인 정리대책 구축 ○ 시·군별 외국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역량 차이 발생 ↳ 표준 매뉴얼(외국어 안내문 등) 제작으로 효율적·통일적 업무 추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유일 <u>외국어 가능자 채용</u>(19명)으로 통역상담 등 언어장벽 해소 (외국어 안내문 및 외국어 독촉장 발송) ○ 외국인 지원시설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유도 및 납세의식 개선 ○ 광역지자체 최초 <u>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u> 및 추심 ○ 외국인 체납자 비자 연장 제한 내실화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액 : 61억원(47,203명) ○ 실태조사 : 거소지 방문(26,120명), 전화상담(7,223명)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4,634명 325백만원), 징수(1,359명 93백만원) ○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 강화 : 리플렛 22천매, 배너 76개 설치 등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1. 과제 선정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200만명 시대... ‘깜깜이’ 외국인 지방세 세금체납 관리 체계 부족(김주영, 홍성국 국회의원 등 다수)

☞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 소재 파악 곤란 및 출국이 자유로운 점 등으로 인해 체납의 관리가 어려워 (세정일보 '22.10.11.)

☆ 경기도 외국인 거주현황 593,367명(전국1,680,454명의 35.5%, '20년 6월기준)

2. 문제 원인분석

○ 시·군별 외국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역량 차이 발생

☞ 道 역할론 대두 (도·시군 협업체계 마련 절실)

○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납부의식 결여

☞ 외국인 체납자 특성 배제로 비효율성 초래 및 홍보 부족

○ 조세 사각지대에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체계 미비

☞ 통역상담 등 외국인 체납 징수 인프라 부재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관심유발]** 내국인과 같은 획일적 체납징수 방식을 탈피하고 외국인과 소통으로 관심을 유발하여 ① 언어장벽 해소 ② 납세의식 향상 ③ 징수율 제고

☞ (배경) 외국인 대부분 지방세에 대한 인지도 및 접촉기회가 낮아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다수

(Step1) 무관심

(Step2) 대책

(Step3) 관심유발

(Step4) 성과

세정일보

국세청 관세청 세무업계
세금제도 기업뉴스 사회
경제일반 정치·국회 법원

정부, '외국인 소득 10조 규모'인대
외국인 세금체납 문제 '깜깜'

내외국인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정조준

외국인 지방세·세이수입
총 230억원

체납액
총 230억원

체납자
총 13만5천여 명

대책 ① 탈북자·결혼이민자 체납관리단 채용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대책 ②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조사 및 처분
대책 ③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대책 ④ 78개 외국인 센터 등에 세금 납부 리플렛 등 홍보 확대

外国人应知的关于滞纳金的取费信息

外国人应知的关于滞纳金的取费信息

外国人应知的关于滞纳金的取费信息

外国人应知的关于滞纳金的取费信息

시흥시 외국인 체납 상담창구

문화일보 '출국·언어 불통' 외국인 체납자 상대로 세금 61억 원 징수

박성훈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했거나 말이 통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외국인을 상대로 총 61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 사진출처 : 폭스바겐 Funtheory.com(피아노 계단), 세정일보, 문화일보, 시흥시

○ **(터닝 포인트)** 글로벌 시대 다양한 국적의 납세자 등장에 발맞추어 독창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체계의 초석(礎石) 마련

2021년 이전	구 분	2021년 이후
해당없음	통역 상담.실태조사	국내 유일.최초 귀화자 등 19명 채용 외국인 체납자 통역 상담.실태조사
내국인 체납자와 구분 없이 관리	외국인 체납관리	별도관리 실시
미구축	데이터.통계	데이터.통계 구축
2~3시군 선별적 제작.배포	표준 외국어 안내문	道 표준외국어 안내문 시달 31개 시군 제작.배포
해당없음	외국인 거점시설 홍보 (구전효과 유도)	표준 외국어 리플렛 22,000매 제작.배포 표준 외국어 배너 76개 제작.설치
해당없음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추심	광역지자체 최초 실시 (325백만원 압류, 93백만원 추심)
출입국관리사무소 형식적 관리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배너 설치 등 협업을 통한 업무 내실화
해당없음	파급효과	경북.서울, 경기도 벤치마킹

○ **(국내 최초·유일)** 결혼이민자·탈북자 등 채용으로 언어장벽 해소



통역상담 창구(시흥시)

통역상담 창구(오산시)

외국어 안내문 전달(안산시)

※ 시흥시 등 9개 시·군 총 19명 채용(중국어10, 영어7, 베트남1, 일본어1)
☞ 전화상담(7,223명), 거소지 방문(26,120명), 외국어 안내문(93,934명)

○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 각 시·군 담당공무원 및 보험사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31개 시·군 외국인 체납자 취합 후 道에서 일괄 조회 의뢰

-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 전용보험 압류에 따라 보험사 담당자 및 법무팀 장기간 설득에 애로

※ 초기 업무협의 과정에서 他 광역지자체 통합 조회 사례가 없어 설득에 어려움

< 외국인 전용보험 >

○ 개요

- E-9(비전문취업:단순노동), H-2(방문취업:동포)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본인과 고용주 의무 가입 ※ 2004년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함께 도입

○ 근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 종류

상품판매처	종 류	압류 및 추심 가능여부
삼성화재 (컨소시엄 계약) 휴면보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국만기 보험*	가 능
	귀국비용 보험**	가 능
	상 해 보 험	불 가

* 출국만기보험 : 일종의 퇴직금 성격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8.3% 불입

** 귀국비용보험 : 증거금 성격으로 항공권 등 귀국 비용목적으로 약 40~60만원 불입

○ 조회결과

(단위:명/백만원)

구 분	소 계		귀국비용		출국비용		휴면보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적발금액	21,308	56,694	9,668	4,416	10,910	51,929	730	349
압류대상금액	12,405	1,021	9,668	425	2,007	328	730	268

- **(구전효과)** 외국인들의 교류가 잦은 외국인 쉼터, 외국인 복지센터 현황 조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지방세에 대한 정보 전파유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배너 설치(부천시) 외국인 복지센터 배너 설치(용인시) 고양 출장소 배너 설치(고양시) 이주민센터 홈페이지 홍보(수원시)

※ 외국인 센터 등에 외국어 리플렛(22,000매) 제작·배부, 배너(76개) 설치

4. 장애극복

- 시군별 외국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역량 차이 발생
 - 매월 담당자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 토론 및 대안 마련
 - 표준매뉴얼, 표준 외국어 안내문 제작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각 시군에서 업무매뉴얼에 기초, 안내문(93,934명) 및 독촉장(76,699명) 발송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추진에 따른 애로 사항 발생
 -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 전용보험 압류에 따라 보험사 담당자 및 법무팀 장기간 설득에 애로
 - 초기 업무협의 과정에서 타 광역지자체 통합 조회 사례가 없어 설득에 어려움

- 각 시군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유기적 업무체계 부족
 -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제한 제도 관심 확대 필요
 - 배너 및 리플렛 설치 등 적극적 협업 확대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주요성과

구분	추진내역
맞춤형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최초 외국인 가능자 채용으로 통역상담 등을 통한 언어장벽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자 등 기간제근로자 총19명 (중국어 10, 영어 7, 베트남어 1, 일본어 1)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현행화 및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지 방문 실태조사(26,120명), 부동산·차량 등 압류(9,502백만원 상당) ○ 행정역량 집중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가능자 체납액 징수(61억원), 출국자무재산자 등 결손처분(55억원)
전용보험 체납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조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쏘 체납자 135,342명(이월체납액 230억원, 세외수입 포함) 전수조사 ○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압류 및 추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325백만원(4,643명) 압류 및 93백만원(1,168명) 징수·추심 ○ 휴면보험 압류 및 자진납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270백만원(733명) 압류 및 3백만원(40명) 자진납부 유도
거점시설 홍보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리플렛 21,838매 제작 및 배포, 배너 76개 설치 ○ 체납처분 前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독촉장 등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21만건), 독촉장(15만건), 문자(19천건), 전화상담(14천건)
비자연장 제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 제한 ○ 실효적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과제)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련 통계 자료 미비



시흥시 외국인 지방세 상담창구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수원시 이주민센터 홈페이지 홍보



고양시 출입국사무소 홍보배너

○ 파급효과

- (나비효과) 경상북도와 서울시에서 경기도 벤치마킹 후 실무 적용

구 분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언론보도	2021.8.25. (서울경제 등)	2021.10.6. (뉴스1 등)	2021.11.8. (뉴스1 등)
헤드라인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원 정조준	세금 안 내는 외국인 ↑... ‘경북’ 도 골머리	서울 거주 외국인 2명 중 1명 세금 미납... 체납액 173억원
보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등 채용으로 실태조사 강화 · 외국인 쉼터 등 홍보확대 ·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체계 강화 · 홍보매체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금 안내문 제작 및 홍보강화 ·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체계 강화 ·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나비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등 통역상담원 채용은 경기도에서만 국내 최초·유일 운영 · 외국인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 광역지자체 최초 압류 및 추심 실시 · 경상북도, 서울시 모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①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② 외국어 안내문 등 홍보확대 ③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체계 강화 등 벤치마킹을 통해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활용 		

- (언론보도) 총 484건

- (2021.8.25.) KBS 9시 뉴스 등 253개 언론사 <추진계획 보도>
- (2022.2.21.) 문화일보 등 231개 언론사 <추진성과 보도>

- (시 사 점) 창조적인 경기도형 외국인 체납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및 징수기법 공유로 경기도 이미지 향상과 공정과세 실현에 이바지

6. 기타사항

- 결혼이민자·탈북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능기부 유도를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부여



※ 결혼 이민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고민했었는데, 중국어 체납상담 일을 제공해준 경기도와 시흥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한 양질의 취업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시흥시 조○○, 女, 37세, 결혼이민자(중국)】

【 외국인 체납액 징수사례 】

사례1 전국최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통한 체납액 징수

- 외국인(중국) B씨는 오산시에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재중 오산시 체납관리단이 거소지로 방문하여 부착한 중국어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산시 중국어 전용 통역 상담전화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부과내역 등에 대해 모국어로 자세한 안내를 받음
 - ※ 중국의 경우, 자동차세 세목 자체가 없고, 차량이 폐차·말소되면 각종 과태료가 무효가 됨
 - ↳ B씨는 2년 동안 체납된 자동차세 등 57만원을 전액 완납 < 오산시 >

사례2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 외국인(스리랑카) C씨는 김포시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채, 2016.1월 출국하여, 김포시에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中 경기도에서 통보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조회결과에서 C씨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출국만기보험 348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압류와 추심 진행
 - ↳ 김포시는 C씨 출국만기보험 200만원 추심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에 충당 < 김포시 >

사례3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및 맞춤형 체납처분

- 한국 입국 10년차 조선족 중국인 A씨의 경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천만원을 체납하였음, 실태조사 결과 중국어 학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처분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중국으로 송금하여 체납처분 불가, 이에 학원 매출채권 압류예고를 하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여, 수원시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하였고, 체납자는 용인시 소재 체납자 부인의 아파트 납세담보 제공 수용
 - ↳ 체납자 아내 소유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 허가 후 분납을 통해 1천5백만원 징수 < 수원시 >

사례4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 외국인(베트남) D씨는 작년 10월에 국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를 방문한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고양시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확인되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 ↳ D씨는 즉시 고양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의 체납액과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체납액 45만원을 즉시 납부 < 고양시 >

[경북 의성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쓰레기산에서 생태의 숲으로
기 관 명	경상북도 의성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의성군 환경과 권현수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폐기물의 투입 대비 효율적인 처리○ 방치지역에 전처리시설 설치 및 정밀 선별공법을 적용하여 실시간 선별 및 재가공을 통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대폭절감○ 절감한 재원과 국비확보 등을 통하여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 훼손된 지역생태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의성군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쓰레기산에서 생태의 숲으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042-1 ○ 추진기간 : 2019. ~ 2023. ○ 사 업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285억원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85억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처리 -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소화하여 절감한 재원을 생태 복원에 투입 - 오염지 사후관리를 위한 자연생태 복원 및 다목적 자연생태 네트워크 조성
② 추진 경과	<p><방치폐기물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1. : 폐기물처리 예산 건의(환경부) 화재 지속발생 및 사면붕괴(화재 진화수) ○'19. 1~3. : 화재진화작업(의성군 재난관리기금) ○'19. 5. : 폐기물처리 전담TF팀(2명) 구성(의성군) ○'19. 6. :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시작 우수관로 및 저류조 설치(2,500m³) ○'19. 6~. : 1~2차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21. 2. :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완료(208천톤) <p><생태축복원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9. : 2022년도 환경부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선정 ○'21. 12. : 기본계획 및 설계비 650백만원 예산편성 ○ ~'22. 12. : 생태축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23. 1 ~. : 생태축복원사업 착수

<p>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폐기물의 선별 및 파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 : 고품폐기물 반출, 일부 소각 - 불연성 : 매립 또는 재활용(2차 선별) ○ 주민과 함께 해결해가는 민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로 진행상황 실시간 공유 - 지역주민 건강검진 실시 및 주변 환경영향조사 시행 ○ 망가진 생태의 복원을 위한 계획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감한 대집행비용과, 국비확보 등을 통해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사업 구상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안전한 처리 ○ 현장 선별작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절감 : 23,46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량 : 208천톤 (폐합성수지, 폐목재, 건폐 등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소요예산액 520,000백만원 (208천톤 * 250천원/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비 단가 : 소각 250천원/톤, 매립 300천원/톤 ▷ 현장에 직접 선별시설(6기) 및 가공라인(2개) 설치, 폐기 물을 실시간으로 선별·재가공하여 처리비용 대폭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행정대집행 비용 : 28,539,196,440원 (137천원/톤) ★ 예산절감액 : 23,460,803,560원 ○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다인) 사용여부 법률 적극 검토 (환경부 반영 → 불법폐기물의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반입허용) ○ 폐기물로 훼손된 자리에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생태자원과 연결하여 생태체험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오염된 불모지가 생태의 장으로 거듭나는 효율적 재정운용의 사례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행정대집행비용 총 23,461백만원 예산 절감 ○ 절감한 재원으로 생태축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85억원 (국비59억/지방비26억)의 사업비를 확보 ○ 22년 사업비 650백만원을 편성하여 생태축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완료예정 ○ 방치폐기물로 인해 훼손된 지역생태계가 복원되고 2400t톤의 탄소 감축효과가 나타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

쓰레기산에서 생태의 숲으로

1. 과제 선정 내용

- CNN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슈가 된 “의성 쓰레기산”은 거대한 양의 폐기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 이에,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의무가 발생, 현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함으로 254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였고, 나아가 생태축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여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응의 모범사례로서 선정함.

2. 문제원인 분석

가.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치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발생

-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등의 대외적 여건의 영향으로 폐기물 중간활용업을 중단하고 허용량 초과하여 불법반입/방치

나.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필요

- 소요예산액 : 520,000백만원 (208천톤 * 250천원/톤)
 - 폐 기 물 량 : 208천톤
 - 폐기물성상 : 폐합성수지, 폐목재, 건폐 등 혼합(화재로 상태불량)
* 처리 단가 : 소각 250천원/톤, 매립 300천원/톤
- 처리비용 절감 방안 필요
 -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엔 상당한 비용 규모
 - 많은 양의 폐기물 야적으로 진출입 및 작업부지 부족

다. 주변 주민 악취 및 생활 민원 지속발생

라.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후 오염지 사후관리 필요성

3. 방안 마련 및 실행

가. 방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추진 결정

나. 행정대집행의 추진비용 절감 방안

① 고품연료 공급처 확보

- 환경부에서 시멘트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처 확보

② 혼합폐기물의 전처리 작업 실시

- 외부반출시 재방치 우려로 현장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③ 선별된 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재활용

다. 대집행 처리 이후 오염지 사후관리 및 생태복원 필요

- 생태축복원사업 구상 및 국비사업 공모

4. 장애극복

가. 현장 전처리시설 직접 설치 운영으로 비용 절감

○ 혼합폐기물의 선별 및 파쇄 작업

- 가연성 : 고품폐기물 반출, 일부 소각
- 불연성 : 매립 또는 재활용(2차 선별)

나. 주민과 함께 해결해가는 민원 대응

- 주기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로 진행상황 실시간 공유
- 지역주민 건강검진 실시 및 주변 환경영향조사 시행

다. 망가진 생태의 복원을 위한 계획 구체화

- 절감한 대집행비용과, 국비확보 등을 통해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태축복원사업 구상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방치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일으키던 208천톤의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



○ 적극적인 폐기물처리로 예산절감

-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내 시설 설치하고, 특허받은 선별기를 활용 정밀하게 폐기물을 선별·재가공하여 비용 최소화
- 정밀선별을 통해 71%는 시멘트보조연료,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

* 비용 비교



구 분	의성군 실적	일반 반출처리	절감액
폐기물량	208천톤		
처리단가	137,208원/톤	250,000원/톤	
소요예산	28,539,196,440원	52,000,000,000원	23,460,803,560 원

○ 자원순환경제의 창출 사례

- 자원순환경제란? : 배출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계속 활용함으로써, 신규자원의 투입과 배출이 최소화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 방치폐기물 처리 시 보여준 전처리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의 정밀 선별 및 재활용 기술은 자원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서 적용

○ 훼손된 지역생태계의 회복 첫단추

- 방치폐기물('단밀 쓰레기산') 처리현장이 환경부의 2022년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기본계획 설계비 650백만원 반영)
 -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도시 생태축이 단절·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
- 2022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 향후 생태서식습지, 생태계류, 탄소저감숲, 곤충서식지, 생태교육장 등 생태체험 단지를 조성(2400t톤의 탄소 감축효과 전망)
-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수변공원, 낙단보, 숲길 탐방로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 예정



[그림] 기본계획안(마스터플랜)

→ 위와 같이 방치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역의 환경시설에 대한 행정점검의 미흡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조치와 복원 등의 대처 방식은 타시군의 향후 발생할 유사 상황에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역할

[충북 보은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신규수입원 발굴
사 례 명	농심(農心)을 헤아려, 보물을 찾다.
기 관 명	충청북도 보은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설지숙,

< 요약 >

- 기존 일괄 관행적으로 추진 된 농기계 임대 및 연계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사업 기획
- 현재 인구의 변화(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의 입국제한으로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농현장 중심의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집중 순회 수리 서비스 확대로 지속 가능 한 농업 대안 마련
- 임대농기계 문제점을 보완한 농업행정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폐자원(폐고철 및 폐배터리)을 활용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통한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
-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여 사업이며 보은군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충청북도 보은군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농심(農心)을 헤아려, 보물을 찾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충북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 추진기간 : 계속사업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사업을 보완·추진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와 농가 생산비 절감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보고서" 영향 ⇒ 문제점 파악 / 보완 가능 한 연계 사업 확인 ○ '21. 2. 15. : 농기계 순회 수리 사업 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 ⇒ 문제인식 ○ '21. 5. 24. : 보은 농협 연계 "농기계 보유(면세유류관리대장)"자료 공유 ⇒ 사업대상자의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 ○ '21. 10. 22. : '22년도 내방·순회수리 시 농업인 확인을 위한 홍보물게시 ○ '22. 2. 3. : 읍면 농기계 내방·순회수리 폐배터리 반납 홍보 ○ '22. 2. 9. :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 및 집중 순회수리 사업 계획 보고 ○ '22. 3. 추진경과 반영 농기계 임대 연계(임대, 일손, 대행 사업 본격 추진)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내방 수리보조금 활용 시 폐배터리 반납 조건 부정적 인식개선 ○ 농기계등록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한 농업인 반발을 유관기관의 협조로 해결 ○ 기존 고령농·여성농 등으로 한정된 사업대상자 요건 확대 ○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자원 수거 통한 농업·농촌의 환경정비 및 농업인의 인식개선 ○ 폐고철 및 폐배터리 신규 세외수입 창출(26,000천원) ○ 팀원들간 완벽한 호흡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베스트팀 선정)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이후 사업의 농업인 11%↑ 만족도 증대(71% → 82%) ○ '22년 수납액(157백만원)이 전년(184백만원) 대비 83% 세입 증대('22. 9.) ○ 농업인의 자가 정비기술 능력 배양 및 농가 경영비 절감 (민간업체활용보다 약35%저렴) ○ 농업인의 군정 신뢰도 향상 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 영농지원 및 폐자원 발굴을 통한 수입 증대 방안

- 농심(農心)을 헤아려, 보물을 찾다.-

1. 과제 선정 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농촌 삶의 질은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은 코로나19와 함께 1차적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분야에 인력 부족을 가중화 시키고 있음(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 일손부족 대응으로 농촌의 “노동력 절감·생산성 향상” 모색

- 농촌의 일손부족을 기계화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량을 극대화 시키고 농가소득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연계 추진하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찾아가는 농기계 집중 순회수리 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난 50년간 농업인구는 10분의 1로 감소, 고령화율은 10배 증가**

▣ 농업인구 / 고령화 비율 : 1970년(44.7% / 4.9%) → 2020년(4.4→46.6%)

◆ **농촌의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1.2%로 감소 현상 지속(통계청, '20)**

▣ 40세미만 경영주 : ('00) 6.6% → ('10) 2.8% → ('15) 1.3% → ('20) 1.2%

2. 현황 및 문제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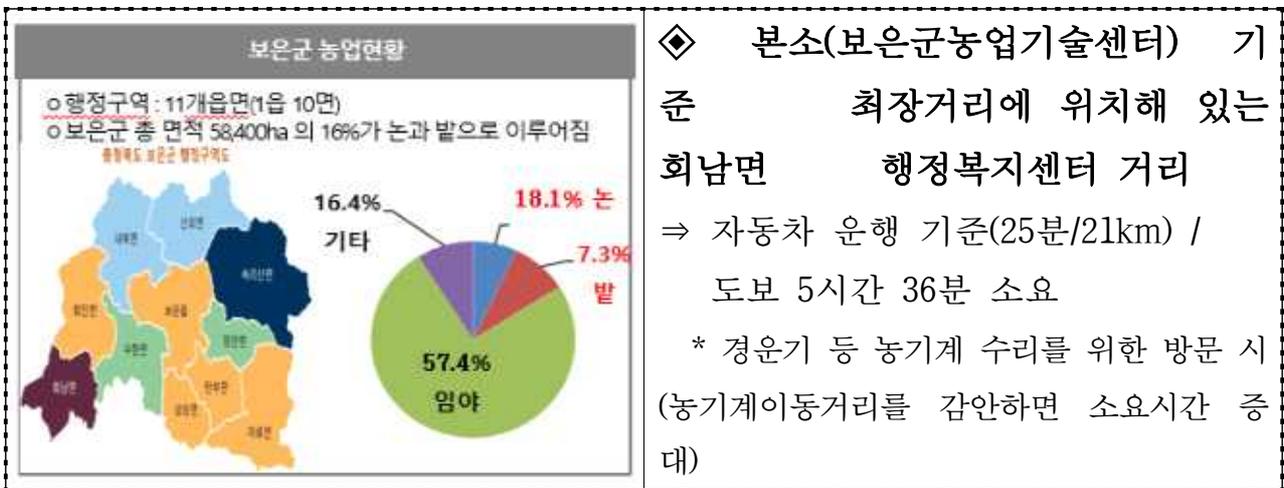
□ 농업경영 현실화를 위해 농업인의 니즈(NEEDS) 파악

- 보은군 농업에 닥친 현실은 농부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보은군에서는 농업경영의 현실화를 위해 농업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
-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 기존 사업대상은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농, 독거여성농업인 위주 농작업 대행 (경운·정지, 이앙, 수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좀 더 폭넓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영농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 지원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은읍에 위치하여 11개 읍·면을 관할하여 내방수리 및 순회 수리등의 수리민원에 대처하고 있지만 본소 및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이 있는 농가주를 위해서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



- 또한 내방·순회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고철·폐부품이 자원으로 재활용 되지 않고 방치 되는 사례가 많음.

3. 방안 마련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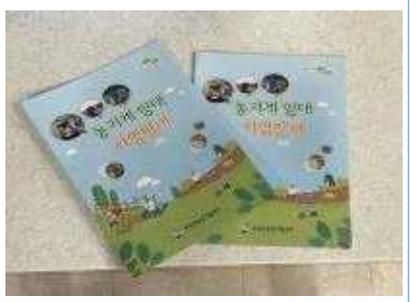
□ 일손지원 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농기계 사업 확대”

○ 효자 톡톡 !!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

- (제도개선) 2020년도 이전에는 사업 대상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추진 하였으나 이제는 추가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재난, 재해를 입은 자와 병원 입원자, 장애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
- (이상기후대응) 2021년도에는 가뭄 및 폭우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인해 수확이 어려운 밭작물(보리/율무 등)을 기준으로 연령 및 소유 농지의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농작업을 추진.

※ 이상기후 대응 농작업 지원 : 밭작물('20) 8.2ha → ('21) 12.5ha

		
<p>모내기 농작업 대행 현장</p>	<p>농기계 관련 사업 안내책자</p>	<p>농협 면세유 관리대장 자료공유 공간</p>

○ 전문성 UP & 만족도 GOOD 찾아가는 농기계 집중 순회 수리 운영

- 농기계 이동 수리 및 관리에 시간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집중 순회 수리 확대와 안전기술교육을 병행 추진.
- (문제해결) 순회수리는 기존의 계획 이외에 농한기 및 농번기 읍·면·마을별로 수리일정을 확대 편성하여 농업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또는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출장수리를 진행받음으로써 거리상의 불편해소 및 적기 영농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역량향상) '22년도는 기 운영 된 센터 내 농기계 순회수리기사 이외에 외부 농기계 전문가 초빙하여(전문 정비기업) 농업인, 여성 농업인, 귀농인 등에게 농기계 안전사용과 자가 정비기술을 연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봄.

※ 지역별 순회수리 -> 마을별 "집중 순회수리로 확대 편성 진행"

- ▶ ('20) 109회 204개마을 →('21/확대) 124회 228개마을 → ('22. 8.) 100회 175개마을 진행 완료
- ▶ 「'22 하반기 52회 84개 마을 완료 시 156회 264개 마을 추진 → 전년도 대비 24% 확대」



농기계 교육 및 집중 순회 수리 현장



폐자원 수거(고철 및 폐배터리)

4. 장애요인 극복

○ 폐자원 반납 의무 조건 부정적 인식 개선

- 내방 및 순회 수리과정에서 수거되는 농기계 고철·폐부품은 윤활유 등 기름 성분이 많고, 그중 폐배터리의 경우 황산을 함유하고 있어 농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수거 관리 돼야 하지만 무상지원 및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수리 보조사업 진행 시에는 폐자원을 반납하는 조건을 공문, 지역신문,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에게 홍보 하며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수거율을 높였음.

○ 사업대상자 선정 확대 실시

- 민간 농작업 대행업체보다 저렴한 대행료와 기계 운송료 덕에 대상자 확대나 요건을 완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취지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넓혀 소규모 농가, 재난, 재해를 입은 농가, 입원환자,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음.

○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 농업인 수리보조금 확인 시 대상 농민들에게 농기계 보유현황을 농기계등록증으로 우선 확인토록하고 있으나, 고령의 농민들이 분실 등의 사유로 대상확인 업무추진 시 어려움을 겪어 농협에 “면세유 관리대장” 명단을 요청받아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였음.

○ **전문인력 확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정규인력 외 수시로 인력을 채용(2명) 및 농한기 농기계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수리는 물론 교육의 전문성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만족도 향상시킴.

5. 성과 및 맺음말

○ **사업 진행시 생기는 티끌 수입원 증대**

- 21년말 수납액(184백만원) 대비 72%(157백만원) 세입징수(22년 9월말 기준)
- 지역쇠퇴가 진행되는 보은군에서는 각종 사업 진행시에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해서 작게 발생하는 수입원도 챙기는 것이 자주재원 확충과 자생력 강화에 바람직함.



○ **농민체감 군정 신뢰도 업그레이드(upgrade)**

-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요사업이 농민들의 인력부족에 대한 농부들의 타는듯한 마음을 해결하여 군정의 성과를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신뢰도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함.

○ **확대 운영에 따른 농업인 만족도 제고**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보고서에 농기계임대 사업에 대한 보은군 농민들의 사업 이용자 만족도에 따르면 작년 대비 71%에서 82%가 “신속 편리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음.

○ 보은군 결초보은 베스트팀 선정

- 농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보은군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농기계지원팀이 2021년도 **베스트팀**으로 선정 되었음.
- 농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부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는 담당 공무원의 끊임없는 열정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성취도 또한 높이고 있음.

○ 맺음말

-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방세는 재원에 한계가 있고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세입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고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 우리군에서는 고령과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 포기 등의 대안으로 다양한 임대·농기계 연계사업을 개선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세외수입을 발굴 함은 물론 농가의 적기 영농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한 세외수입 발굴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참고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보고서(‘18~ ‘21)

[인천광역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례명	新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재정 절감을 이룬다! - 공유 플랫폼 활용으로 시민대학 건립비용 등 출연금 598억원 절감 -
기관명	인천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당자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장진희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생교육팀장 이시영

〈 요약 〉 새로운 사고의 발상! 인천시민라이프칼리지 구축으로 교육분야 재정 절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다

-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요구 수요에 발맞춘 '시민대학' 운영 필요
-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자체캠퍼스 건립 및 운영비(출연금) 지출은 지자체 재정 부담 야기
 - 관련(유사) 시설 건립비용 : 서울시 동남권시민대학 캠퍼스 건립(166억), 인천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73억), 인천 미추홀도서관 건립비용(214억)
 - 시설 관리비, 인건비 추계* : 14억(시설 관리비 7억, 인건비 7억-15명 기준)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운영예산 참고 추계
- '인천시민라이프칼리지'라는 시민대학의 새로운 모델 구축 건립비용 절감 : **총 598억원**
 - 건립비용 584억원 상당, 운영비용 14억원 등 총 598억원 절감
 - 대학의 인프라(강의실, 부대시설 등)를 시민대학 캠퍼스로 활용 (8개 대학, 6개 캠퍼스)
 - 관내 대학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시민라이프칼리지' 구축 기반 조성
 - 예산 절감 효과 : **584억원 상당(73억 × 8개 캠퍼스 : 자체캠퍼스 확보시 필요 예산)**
 - 향후 예상 예산절감 효과 : 직영에 따른 **시설 관리비 및 인건비 매년 14억원** 규모 절감
 - *서울시 동남권시민대학 캠퍼스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 기준
 - 시민대학 캠퍼스 영역을 민간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시민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확립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 .

인천광역시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新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재정 절감을 이룬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인천광역시 전역 ○ 추진기간 : 2022. 4. ~ 2022. 12. ○ 사 업 비 : 2,475백만원 ○ 사업내용 : 인천시민대학 기반 구축, 대학캠퍼스 운영, 시민력 학습강화, 학습자 모집 및 홍보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6.~12. : 인천시민대학 체계 및 운영모델 수립 연구 수행, 대학 및 기관 MOU 체결, 인천시민대학 비전 선포식 ○ '22. 1. 27. : 인천시민대학 기본 계획 보고 및 사업 본격화 ○ '22. 4. 21. :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출범식 ○ '22. 4. ~ : 인천시민대학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운영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1)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경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연구 결과로 사업타당성 확보 ○ (장애2) 대학 캠퍼스의 전면 개방에 따른 거부감(대학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한 관내 8개 대학과의 MOU 체결로 시민라이프칼리지 사업 기반 마련(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 (장애3) 한정된 관내 대학 수로 인한 사업 확장성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을 넘어 민간·공공기관 캠퍼스 확보로 인천시 전체가 시민라이프칼리지가 되는 환경 조성 (대학 8개, 공공기관 4개, 민간 5개)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시민대학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지속 추진 ○ '인천시민라이프칼리지' 모델 구축에 따른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캠퍼스 활용에 따른 자체캠퍼스 건립비용 절감(1UP) ⇒ 캠퍼스 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 절감 효과 (2UP) ⇒ 대학의 문을 열어 '누구나 시민 대학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3UP)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대학 대비 운영비 32억원 절감으로 市 재정 운영 효율성에 기여 ○ 대학 캠퍼스 활용에 따른 자체캠퍼스 건립비용 584억 이상 절감 ○ 평생교육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핵심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시 단위의 거점시설 확보 ○ 평생교육 인식 제고,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

新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재정 절감을 이룬다!

- 공유 플랫폼 활용으로 시민대학 건립비용 등 출연금 598억원 절감 -

1. 과제 선정 내용

- 유네스코 평생학습원(2020)은 2050년까지 평생학습문화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미래중심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 평생학습 공유재 확립 등의 주요 메시지와 행동방침을 제시함.
- 인천의 경우, '시민대학'이란 명칭의 사업은 대학·공공·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또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시민들의 학습이력 및 성과 관리는 기관마다 분절되어 지속 가능한 시민역량 강화가 어려웠음.

S 강점	W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의 균형적 발전 정책 강화 • 역량있는 평생교육 우수 인력 보유 •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한 기관 보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절, 편중된 평생교육 기관 • 평생교육관련 행·재정적 지원 부족 • 다양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위한 생활 밀착형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 지역혁신 사회참여를 위한 대학과 기관의 역할 강화 • 인천 관내 대학과의 우호적, 협력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 • 인천 관내 대학의 평생교육 전문성 부족 • 인구 유동성이 많은 지역, 정주의식 부족
O 기회	T 위협

- 또한 시민대학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간접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시민대학을 직접 운영하며 인천시 300만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대학 사업을 운영하려면 행·재정적 부담이 큼 ➡ 자체캠퍼스 건립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 (598억원)
- 이에 우리시는 시간 소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천 시민들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인천 관내 대학의 캠퍼스를 인천시의 공공재로 활용, 인천 시민에게 개방하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함.

2. 문제원인 분석

- **(환경적 요인)**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지식 향상을 위한 일과 학습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학습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인천평생교육 현황 및 개선방향」을 분석한 연구¹⁾에 따르면 우리시는 군·구 사이의 교육, 교통, 문화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편차가 있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군·구별 시설 및 인프라, 학습프로그램 등에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시차원의 평생교육 유기적 협조 체계 및 지역·기관 연계 협력 부족,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시민요구)** 인천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²⁾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요구,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평생교육 수업료도 평균 1~5만원 범위에서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업료를 지불하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 조사 결과》

문 항	응 답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495명(42.2%)
취업이나 승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193명(16.5%)

1) 인천평생교육진흥원·한양대학교(2020).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2) 김명량 외(2021). 인천시민대학 체계 및 운영모델 수립 연구 ITLE-R-2021-01.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3. 방안 마련 및 실행

① 평생교육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체제 정비

- 인천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TF구성 활동('20. 7.~'20. 12. 19명), 관련 조례 개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천인재 평생교육진흥원(구 인천인재육성재단)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기능 강화로 인천시민대학 사업 토대 마련

② 평생교육 정책연구를 통한 타당성 확보, 연구-사업 조직 체계화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정책연구실('21. 6.), 시민대학부 조직 구성('22. 1.)으로 인천시민대학 방안 실행을 위한 조직 체계 수립
- 국내 시민대학 기관현황 분석, 인천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인천시민 요구조사, 시민대학 추진체계, 시민대학 교육체계 등으로 인천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 인천시민대학 LMS를 활용 지속적인 학습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수행

③ MOU-사업설명회-적극홍보-대학협업체계 구축의 체계적 사업 운영

- 시교육청, 시의회, 대학교, 교통공사 등 2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인천 내 대학과의 협의회 및 교육과정개발 워킹그룹 가동으로 지역-대학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지난 1년 간 적극적 홍보 결과 SBS뉴스, KBS라디오, 지방신문 등에 200여 건의 인천시민대학 우수 성과 소개, 그 외 SNS를 통한 홍보 254,583회, 인천전역 옥외 광고 등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④ 주기적인 시민요구 수렴 및 대학과 지역 협의체 운영

- 학기별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견 직접수렴
- 평생교육운영위원회(연2회), 인천시민대학 발전위원회 시민대학 협의회(연2회), 교육과정위원회(연2회), 시민대학 실무자 간담회 등 대학과 지역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전문가, 사업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마련

⑤ 시민학습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선순환 체계 구축

- 인천 어진인(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 및 학습경험을 갖춘 시민학습 명장) 28명 선발 및 활동 지원으로 시민학습역량 강화
- 명예시민 학위 수여로 시민의 학습의지를 고취하고, 시민 교수 인 증체계 구축 및 강사 활동 지원으로 평생학습 선순환 체계 구축

구 분	명예시민학사	명예시민석사	명예시민박사
자격요건	시민대학 학습자	학사 취득자	석사 취득자
이수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인천시민대학관련 사진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진흥원 - 대학 MOU</p> <p>인천 인천뉴스</p> <p>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민대학, 수강 신청 폭증...첫날 강좌 70% 마감</p> <p>승인 2022-04-05 17:09</p> <p>이민우 imw@kyeonggi.com 기자페이지 ></p> <p>(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시민대학(시민라이프칼리지 캠퍼스)에 수강신청 첫날부터 많은 시민이 몰리고 있다.</p> <p>5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만든 인천시민대학 6개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1천명의 시민학생을 모집 중이다.</p> <p>지난 4일 수강신청 첫날 모두 54개 강좌 중 70%가 마감한 상태다. 특히 시민대학 강좌 중 인문철학·문화예술·세계시민 등 인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 대부분이 조기 마감됐다. 이에 따른 전체 지원율은 90%에 육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민라이프칼리지 출범식</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타임즈</p> <p>HOME - 세계로 연결뉴스 - 인천</p> <p>시민라이프칼리지, 사례발표와 벤치마킹 등 전국 각지에서 관심 끊이지 않아</p> <p>우량원 ■ 기사작성 : 2022-07-07 08:42:12</p> <p>울산·경주·경남·부산 등 지역 연계 시민대학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인천에 관심 보여</p>  <p>▲ 김철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서울에서 열린 전국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와 국가평생교육연</p>
<p>관련 보도(1)</p>	<p>관련 보도(2)</p>

4. 장애극복

○ (장애요인 1)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경험 부재

- 우리 시 '시민대학' 체계 사례 부재, 선도적 추진에 따른 행·재정 문제 해결 난항

☞ 평생교육 국·내외 사례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등 인천시민 대학 체계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자체 연구 실시³⁾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한 행·재정 문제 타결

☞ 대학 캠퍼스의 교육시설(강의실, 휴게실, 도서관, 식당 등) 무료 개방과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성인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장애요인 2) 캠퍼스 전면 개방에 따른 대학측의 거부감 및 성인 대상 친화적 환경 조성의 어려움

- 학생 안전과 시설물 관리,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던 캠퍼스 전면 개방에 대한 대학측의 거부감

- 인천시 유·초·중·고 학생은 39만 명, 인천시민은 29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대상 교육 복지 방안은 미흡

☞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관내 8개 대학과 MOU 체결, 시민 라이프칼리지 사업 기반 마련(인식 개선), 시민대학 총장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개최(총5회) 등 대학측의 거부감 해소에 주력

☞ 양질의 대학 캠퍼스 교육시설 활용으로 성인 친화적 교육복지 제공

○ (장애요인 3) 한정된 관내 대학 수로 인한 사업 확장성의 한계

- 관내 대학은 8개교 (대학 3, 교육대학 1, 전문대학 3, 기능대학 1)에 불과해 대학을 연계한 평생교육 사업 확장이 어려움.

☞ 대학을 넘어 민간·공공기관 캠퍼스 확보로 인천시 전체가 시민 라이프칼리지가 되는 환경 조성

3)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1.12.). 인천시민대학 체계 및 운영모델 수립 연구

☞ 지역균형을 고려한 민간 및 군·구 캠퍼스 유치를 토대로 인천시민 대학을 통한 인천 내 평생교육의 공급과 수요 균형 기여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① 인천시민대학 사업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에 기여

- 대학의 최신·최적의 교육시설 공공재화를 활용하여 시 재정 효율성 제고
 - 인천시민대학 6개 캠퍼스(8개 대학)의 전용 공간 시설 규모 62,683㎡ 무상 확보(서울 시민대학 캠퍼스의 4.5배 규모에 해당)
 - ※ 서울시 : 13,743㎡ (7개 캠퍼스 시설 규모 6,532㎡ + 동남권 캠퍼스 건물 면적 7,211㎡)
 - 이 외 대학 도서관, 식당, 운동장, 체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효과는 매우 높음.

구분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경인여대	경인교대	한국뉴욕 주립대	유타대	한국 조지메이슨대
대학 전체 면적	221,298㎡	392,560㎡	716,917㎡	30,777㎡	186,272㎡	25,598㎡	15,800㎡	13,689㎡
시민대학공유시설규모	활용	12,781㎡	3,391㎡	31,244㎡	1,791㎡	2,631㎡	555㎡	200㎡
	소계	12,781㎡	3,391㎡	31,244㎡	1,791㎡	2,631㎡	10,845㎡	
	총계	62,683㎡						
전경								

- 대학 캠퍼스 위탁 운영에 따른 건립비, 시설 관리비 및 인건비 절감: 총 198억원
 - 서울시민대학 대비 건립비(166억원),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약 32억원) 절감

《서울시 대비 예산 절감 산출 내역》

- * (시설비)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대비 166억 원 예산 절감⁴⁾ : 토지면적 1,387.9㎡, 건물면적 : 7,211.5㎡
 - 재산평정가격(건물+부지) : 16,667백만원,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감면액: 167백만원
- * (운영비) 2022년 인천시민대학 : 3,620백만원 (사업비 2,475백만원, 인건비 24명 1,145백만원)
- * (운영비) 2022년 서울시민대학 : 6,787백만원 (사업비 3,071백만원, 인건비 88명 3,716백만원)
 - 사업비 및 인건비 3,167백만원 절감

4) 서울특별시(2021.2.5.)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2223번)

- 지자체 평생교육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책정되므로, 비용 측면에서의 수익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에 일반적으로 만족도, 지역사회 공헌,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의 비금전적 수익을 측정하여 효과성을 제시함.
- 대학 캠퍼스의 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혁신 행정으로 프로그램 비용(개발비용, 재료비용, 강사비용, 시설비용 등)이 현격히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천시민대학이 운영될 경우 비용수익비율⁵⁾이 더욱 높아져 교육적 측면에서의 투자회수효과(ROI)가 증대될 수 있음.

② 8개 대학의 시민라이프칼리지 캠퍼스 확보로 자체캠퍼스 건립 비용 및 운영비를 혁신적으로 절감

- 관련(유사) 시설 대비 건립비 및 운영비 절감

《관련(유사) 시설 건립비용 및 운영비 내역》

* 서울시 동남권 시민대학 캠퍼스 건립비용 : 166억 원

* 인천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비용 : 73억 원

* 인천 미추홀도서관 건립비용(BTL) : 214억 원

[시설관리비, 인건비 추계 별도 : 14억 원(시설관리비 7억 원, 인건비 7억 원. 15명 기준)]

-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나 자체캠퍼스 건립, 연간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시민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유사) 시설 건립비용을 인천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 비용 73억 원 수준에서 추정했을 때, 8개 대학에 캠퍼스 시설을 건립할 경우 약 584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야 가능함.

③ 인천시민대학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

- 2022년 4월 인천시민대학 출범 후 학습자 모집 결과 170%의 모집률을 보여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학습 욕구 확인
- 3개 학기(1학기, 계절 학기, 2학기) 운영결과 3,000여 명이 교육과정 참여, 다양한 대학 개방 행사를 통해 연간 5,000여 명 수혜, 84%의 높은 교육 유료율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참여성과 평생학습문화 형성에 기여

5) 비용수익비율(CBR) = $\frac{\text{프로그램 수익 (program benefits)}}{\text{프로그램 비용 (program costs)}}$

[전북 남원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신규수입원 발굴
사 례 명	수해복구에서 발생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기 관 명	전라북도 남원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재정과 양지희

〈 요 약 〉

- 2020년 남원시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관내 하천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수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
-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민간에 매각하여 세외수입 274백만원 수입
- 기존 준설토 처리방식 전환으로 보관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재해예방 + 환경보전 + 세외수입 증대 새로운 체계구축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

전라북도 남원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수해복구에서 발생 준설토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창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해복구에서 발생 준설토 매각 ○ 위치 : 남원시 관내 ○ 추진기간 : 2021. 6. ~ 9. ○ 사업내용 : 2020년 남원시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관내 하천 호우 피해 구간에 대해 항구복구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9. 10 :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5. 14 :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21. 6. 21 : 준설토 매각 계획 수립 ○ '21. 6. 21 : 준설토 매각 대응반 구성 ○ '21. 9. 24 : 준설토 매각 완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 전역에 수해피해로 대대적인 수해 복구사업 진행으로 대량 준설토 발생(기존 처리방식으로 처리 어려움) → 준설토 매각 계획 수립, 대응반을 편성(역할 분담을 명확히하여 신속한 매각 추진) ○ 매각전까지 임시야적장 사용에 따른 지속 민원발생 →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설득 및 협조 요청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토 매각으로 신규 세입 발생 → 기존 처리 폐기물 비용 절감 및 매각으로 인한 신규 세외수입 발생 ○ 수해복구로 업무의 효율적 분담 및 협력을 통한 신속한 매각 처리 →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설토 매각 처리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에 준설토 매각하여 세외수입 274백만원 수입 ○ 기존 준설토 처리방식 전환으로 보관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재해예방 + 환경보전 + 세외수입 증대 새로운 체계구축

수해복구에서 발생 준설토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창출

1. 과제 선정 내용

- 2020년 남원시에 8. 7.~ 8. 8.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은 평균 411mm로, 특히 섬진강 상류 지역인 대강면은 시간당 최대 6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하천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등 남원 관내 하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음(하천 피해현황 : 71개소/ L=37,945m)
(단위:백만원)

구분	피해내역			비고
	개소	피해액	복구액	
합계	71	9,573	47,474	
하천	국가하천	9	1,260	2,765
	지방하천	23	2,758	8,294
	소 하 천	35	2,964	5,314
	개선복구	4	2,591	31,101

<▲하천 피해 내역>

-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남원시 관내 하천 호우피해 구간에 대해 하천 항구복구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였으나 빠른 하천복구과정에서 기존 처리방식으로 처리 불가능한 대량의 준설토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
- 동시다발적인 하천 항구복구사업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다가오는 장마철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설토 매각 추진



< 노암 3통 >



< 송동면 (동양,중상,신산마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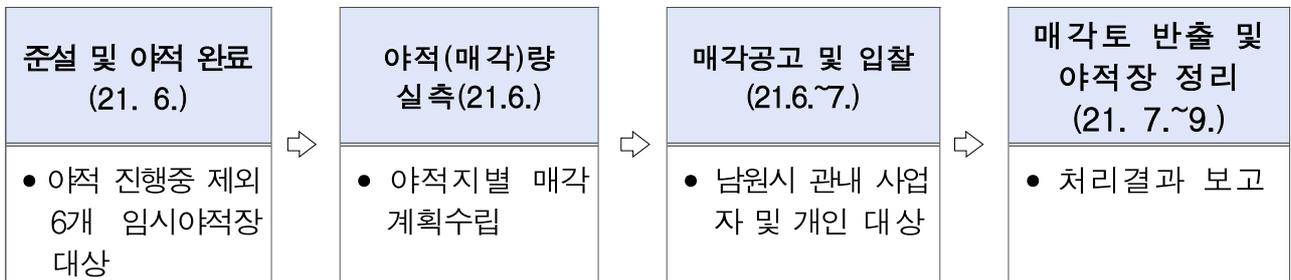
2. 문제원인 분석

- 하천복구사업이 2021년 상반기에만 17개 하천 30개소에서 진행되어 복구과정에서 대량의 준설토 발생
- 다가오는 장마철 제2차 호우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복구사업 및 준설토 처리 필요
 - 집중호우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사업 필요
- 유례없는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준설토가 대량발생하여 기존야적장 및 임시야적장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남원시의 경우 대량의 준설토 처리시설 및 전용야적장이 없어 장기보관·처리 어려움이 있으며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관하는 비용만으로 추가 비용 발생
 - 기존 남원시에서는 준설토를 협의를 통해 공공용 또는 사업장 주변 농가 성토용으로 자체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 임시야적장 사용에 따른 준설토의 적치, 건조과정에서 침출수 발생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p>금지 상신(23,900 m³)</p>	<p>사매 산단(15,500 m³)</p>
	
<p>보절 황벌(7,900 m³)</p>	<p>보절석재단지(5,300 m³)</p>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추진과정



- 남원 지방하천 복구사업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준설토를 전수 조사 실시
 - 신속한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응반을 편성하여 담당자 임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력을 부서 협력을 통해 투입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매각 및 처리를 위하여 남원시 관내 사업자 및 개인을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준설사업이 완료시기에 따라 야적장 배치 및 야적장별 순차 매각 진행

4. 장애극복

- 대응반 편성(1반 2팀 5명)



- 대상지역 : 주생비행장 등 6개 임시야적장
- 내 용 : 신속한 매각을 위한 팀별 임무와 역할 분담
 - (야적장 배치) 남원시 소유 덤프트럭 이용 준설토 운송 지원, 추가 야적장 확보 추진, 민원대응
 - (준설토 조사) 기존 적재량 조사 및 발생 예상 준설토 조사
 - (매각 추진) 지속적인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구공사 종료시기에 맞추어 매각 일정 조정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 274백만원
 - 매각량 : 120천m³
 -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온비드/ 최고가낙찰)
 - 입찰참가자격 : 남원시 관내 사업자 또는 개인
 - 매각조건 : 야적상태 매각(상차비 및 운반비 낙찰자 부담)

위 치	토사량 (m ³)	매각단가 (원/m ³)	매각금액 (천원)	계약일	완료 예정일	계약자	비고
계	120,400		274,252				
주생 중동	28,500	2,405	68,669	8.17.	11.14.	(주)아	
사매 월평	16,000	2,300	36,800	8.18.	10.16.	(유)산	
금지 상신	13,500	1,967	25,571	9.10.	10.22.	(유)산	
보절 석재	6,400	1,830	11,712	8.30.	9.17.	(유)선	
보절 황벌	5,000	2,330	11,650	8.20.	9.06.	(유)선	
이백 남계	51,000	2,350	119,850	9.03.	12.11.	김 종	

<▲준설토 매각 결과>

- 기존 준설토 처리방식 전환으로 보관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재해예방 + 환경보전 + 세외수입 증대]로 새로운 체계구축
 - 하천내 준설토 정비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사전예방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골재, 모래의 원활한 재활용수급으로 환경보전
 - 골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 호우피해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지역상황에서 관내 사업자 및 개인을 매각요건을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준설사업 내역

하천명	사업위치	사업연장 (m)	준설량 (m³)	준설토 처리 (야적장)	비고
계	30개소	12,631	162,354		
요천(국)	승사교 하류	300	7,613	주생비행장	
	광치천 합류부	270	10,193	"	
	옥률천 합류부	225	10,369	"	
대곡천	대산면 대곡리	119	233	주변 성토	토질불량
	대산면 대곡리	311	2,191	주생비행장	
	주생면 제천리	450	1,554	"	
옥율천	대산면 옥율리	250	483	"	
	대산면 운교리	194	603	"	
	대산면 옥율리	300	3,024	"	
	대산면 운교리	95	890	"	
광치천	왕정동 592-1	235	1,775	"	
풍촌천	주생면 도산리	372	3,845	금지 상신	
	금지면 입암리	578	6,374	"	
수지천	수지면 남창리	219	13,760	"	
수외천	덕과면 고정리	320	1,783	사매 산단	
매내천	사매면 관풍리	840	6,526	"	
	사매면 대신리	1,360	6,006	"	
계수천	사매면 인화리	200	1,236	"	
괴양천	덕과면 만도리	120	2,599	보절 석재단지	
	보절면 괴양리	400	4,569	주변 성토	토질불량
울 천	보절면 황별리	200	2,796	보절 황별	
진기천	보절면 괴양리	200	3,408	"	
	보절면 진기리	320	4,568	"	
갈치천	식정동 521-34	400	2,497	이백 88폐도	
	식정동 521-128	910	1,272	주변 성토	토질불량
	식정동 521-97	298	287	주변 성토	토질불량
요천(지)	산동면 부절리	590	36,751	이백 88폐도	
백암천	이백면 척문리	600	15,298	"	
강기천	이백면 내동리	1,308	5,882	주변 성토	토질불량
송대천	대강면 사석리	647	3,969	주변 성토	토질불량

■ 사례명 : 전국 첫, 직무발명 특허 적용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리 강화 및 예산 절감 달성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부산광역시 관내 주요도로 ○ 추진기간 : 2021.01. ~ 2022.10.(추진중) ○ 사 업 비 : 14.9억 ○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21, '22년)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1.22 : 지반공동(空洞) 관리기준 변경 시행(도로계획과) ○ '21.05.27 : 특허등록(제 10-2259619호) ○ '21.12.24 : 직무발명 특허 市 승계(부산시 지식재산위원회) ○ '22.01.07 : “공동(空洞)관리 매뉴얼” 관계기관 전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매뉴얼 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空洞) 확장 모니터링 연구 - 관리등급 공동의 비 굴착 복구공법 적용성 확인 연구 ▷ 연구 결과 매뉴얼 현장 적용 시 안정성 및 경제성 확인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 분석 DB 구축)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空洞)을 DB화하여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 ○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공동(空洞)의 붕괴 규모와 포장층의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함몰위험도를 정량화 ○ (위험등급별 대응 기준 수립) 고위험 공동(空洞)의 즉각 조치와 저위험 공동의 경제적 친환경 관리가 가능한 기준 수립 ○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 시행)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하고 효율적 지반공동(空洞) 관리가 가능한 매뉴얼 수립 및 적극 시행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90백만원 예산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교통체증, 소음·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타 환경문제 저감 ○ 능동적 땅꺼짐 사고 예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안전관리 예산 활용의 효율성 강화, 업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 ○ 지속가능한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타 분야 연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시설물 DB 기반 CDI 모델 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사업 수행

전국 첫, 직무발명 특허 적용한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리 강화 및 예산 절감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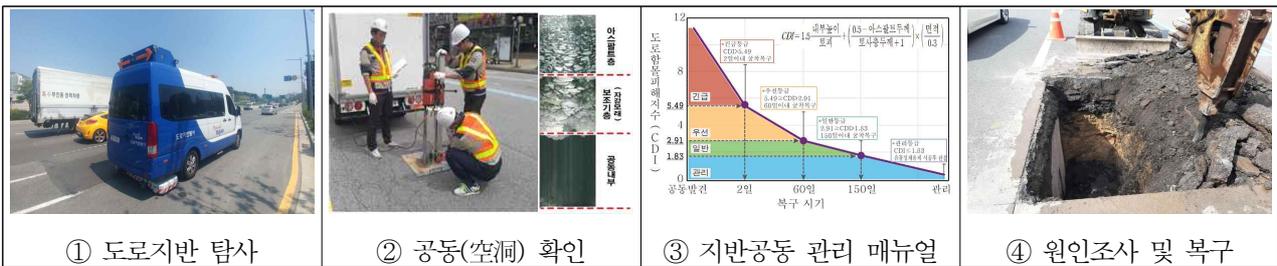
1. 과제 선정 내용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정으로,



부산시 동래구 ('16.8.28. 국제신문) 인천시 중구 ('22.8.3. 인천투데이) 경기도 성남시 ('22.8.1. 뉴스시스)

- 전국 지자체는 땅속의 비어있는 공간인 지반공동(空洞, cavity)을 미리 발견해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감시 활동을 시행 중임
- 도로 지반 탐사 후 발견된 공동(空洞)은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의 위험등급별 대응 방안에 따라 복구 조치되고 있음



① 도로지반 탐사 ② 공동(空洞) 확인 ③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 ④ 원인조사 및 복구

- 탐사 후 발견된 공동(空洞)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은 일본(2014), 서울시(2016), 국토안전관리원(2021) 등이 있으나,

일본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A급	우선보수	긴급	4시간내 즉시 복구	긴급	즉시 복구
B급	우기전 조속 완료	우선	신속한 조치계획 수립	우선	3개월 이내 복구
C급	경과 관찰	일반	우기철 이전까지 복구	일반	6개월 이내 복구
-	-	관찰	지속관찰 후 반복탐사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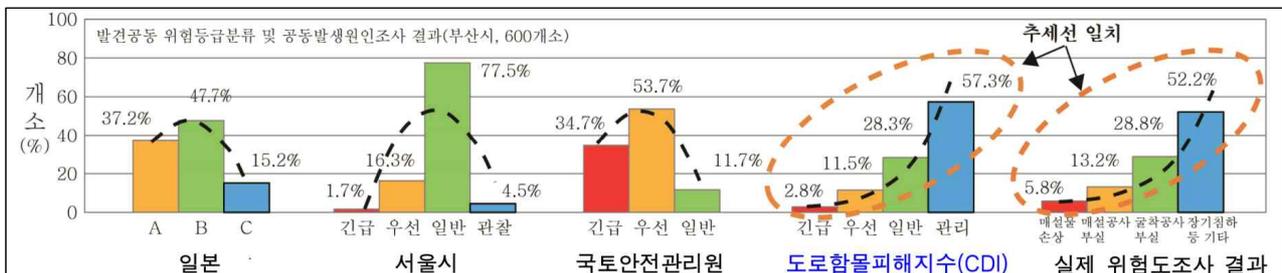
- 위험등급별 복구 시기만 정의할 뿐 각각의 위험등급별 보수·보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음

2. 문제원인 분석

-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지하의 빈 공간 크기에 비례하는데 기존의 매뉴얼들은 이러한 공동(空洞)의 규모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아 실제 위험도와 큰 차이가 있으며,
 - 고위험 공동(空洞)의 분포 비중이 높음 ⇨ 복구 예산의 효율성 저하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1조(보수·보강 등 일반)에서 보수·보강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분류 기준이 없는 실정임
 - 소규모 저위험 공동(空洞)의 굴착 복구 ⇨ 예산 낭비 및 환경문제 발생
- 그 결과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 인력 구성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개선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함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위험도 분석을 위한 DB 구축)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空洞)의 규모 특성 및 발생 이력을 DB화하여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
 - 탐사연장 4,086km, 발견 공동 1,643개소, 발생 원인조사 결과 770개소 등
-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지하 빈 공간 크기를 반영하고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고위험 공동(空洞)의 우선 조치가 가능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 ⇨ 도로함몰피해지수(CDI) 모델⁶⁾ (특허 제10-2259619호)
 - 부산시 발견 공동(空洞) DB를 활용한 CDI 모델 검증
 - ▷ 연구기간 : 2017.10 ~ 2021.12 (4년 3개월)
 - ▷ 평가대상 : 탐사 후 발견 공동(空洞) ⇨ 1,643개소 검증(4,086km)
 - ▷ 검증결과 : CDI 모델이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함



6) 도로함몰피해지수(Cave-in Damage Index) 모델이란? 공동(空洞)의 빈 공간 크기와 아스팔트 포장도로 설계 단면을 이용, 도로함몰 발생 시 붕괴 깊이와 포장층의 지지력을 동시에 평가하여 위험도를 정량화하는 모델

- (위험등급별 대응 기준 수립) 긴급 ~ 일반등급은 포장층 전단면 교체를 통한 중장기 도로안전 확보, 저위험·소규모 공동(空洞)은 「관리등급」으로 지정하여 비 굴착 복구공법을 적용

- 긴급 ~ 일반등급 : 포장층 전단면 교체 및 원인조사 ⇨ 추가침하, 포트홀 방지



- 관리등급 : 비 개착 복구를 통한 포장층 지지력 확보 ⇨ 경제작·친환경 도로관리



- (개선된 관리 매뉴얼 시행)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하고 효율적 지반공동(空洞) 관리가 가능한 매뉴얼 수립 및 적극 시행

- 지반공동 관리기준 변경 시행 보고 (도로계획과-1109, 2021.01.22)

※ CDI 모델 적용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부산시 활용 예시)

구분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관리등급	- CDI 산정 (단위: m)
분류 방법	CDI > 5.4	CDI > 2.9	CDI > 1.8	CDI ≤ 1.8	$CDI = 1.5 \frac{\text{공동내부높이}}{\text{토폴}} + \left(\frac{0.4 - \text{ASP두께}}{\text{보조기층두께} + 1} \right) \times \left(\frac{\text{공동면적}}{0.3} \right)$
복구 방안	즉시통제/ 2일 이내 복구	60일 이내 굴착복구	150일 이내 굴착복구	유동성채움재 시공후 관찰	- 공동내부에 유체의 흐름 및 위험시설물(가스배관 등) 관찰될 때 또는 기타 사유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긴급등급」으로 분류 - 「관리등급」 유동성 채움재 복구 시 0.5m³ 주입 후 유출이 지속될 경우 감독관 협의 후 「일반등급」으로 변경 - 긴급 ~ 「일반」 등급은 원인조사 수행 및 CDI 차순 정렬 후 고위험 공동 우선 조치

4. 장애극복

- 자체 개발 매뉴얼 시행 시 문제점과 비 굴착 복구공법의 중·장기적 안정성 관련한 검토의견 수립 후 해당 연구를 수행

- 공동(空洞) 확장 장기 모니터링 연구

▷ 연구기간 : 2018.05 ~ 2020.9 (2년 4개월)

- ▷ 연구목적 : 시간 경과에 따른 공동(空洞)의 확장 규모와 위험등급 변화 관찰
- 「관리등급」 공동의 비 굴착 복구공법 적용성 확인 연구
 - ▷ 연구기간 : 2018.05 ~ 2020.10
 - ▷ 연구목적 : 비 굴착 복구 후 추가 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유무 확인
- 모니터링 연구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공동(空洞)은 확장되었으나 (5cm/년) 지표침하 또는 함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안정성 확인),
- 관리등급 공동(空洞) 200개소의 비 굴착 복구 안정성 검토 결과 98.5%의 높은 시공성과를 확인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예산절감) 4.9억원 절감(1.6억/년) ⇨ 전국 162개 지자체 확대 시 예산절감 파급효과 기대(지하안전특별법 제8조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2018년~2020년 : 과거 미복구 공동 200개소에 대하여 개선 매뉴얼 적용 결과 「관리등급」 106개소 재분류 ⇨ 미복구 공동 존치에 따른 현안문제 즉시 해소
 - ▷ 예산 약 1.5억원 절감 및 땅꺼짐 사고 예방 (도로계획과-7530, '21.06.30.)
 - 2021년 탐사용역 : 공동 259개소 중 161개소 복구 ⇨ 2.4억원 절감
 - 2022년 탐사용역(진행중) : 공동 91개소 중 69개소 복구 ⇨ 1.0억원 절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해 예산절감 효과 지속 발생
- (정책개선)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하는 매뉴얼 활용으로 지역 실정에 알맞은 능동적 땅꺼짐 사고 예방체계 구축
 - 정량화된 위험도를 차순 정렬하여 같은 등급에서도 '복구 우선순위 의사결정'이 가능 ⇨ 지하안전관리 예산 활용의 효율성 강화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1조(보수·보강 등 일반)에서 보수·보강 분류 기준으로 활용 ⇨ 업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
 - ▷ 저위험소규모 공동 비굴착 공법 적용 ⇨ 예산 및 환경문제(소음먼지, 폐기물) 해결
 - 고위험(긴급~일반등급) 공동의 포장층 교체와 원인 제거로 추가 침하 포트홀 방지 ⇨ 항구 복구를 통한 중·장기적 도로안전 확보

- 특허심사를 통한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의 실용성·진보성·창의성 검증
 - ▷ 발명의 명칭 :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
 - (연계·활용)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하안전 사고 관리를 위한 개선된 매뉴얼의 적극적 연계·활용
 - 전산화된 지하시설물 DB와 CDI 위험도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지하시설물 위험인자 및 가중치 결정
 - ▷ 사업명 : 지하시설물 DB 기반 CDI 모델 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 ▷ 주요내용 :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안전 관리 역량 강화
 - ▷ 기대효과 : 지역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정량적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도로관리 실현 ⇨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정책전파 및 홍보)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 타 기관 전파 및 특허등록, 경진대회를 통한 대외 홍보
 - 2021.01.22. : 지반공동 관리기준 변경 시행 (도로계획과-1109, '21.01.22)
 - ▷ 대상기관 : 시 본청(관계 부서), 담당 구·군(사업소), 기타 관계 기관
 - ▷ 주요내용 : 자체탐사, 용역탐사, 지특법 대상 사업 수행 중 발견된 공동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
 - 2021.05.27. : 특허등록 (제 10-2259619호)
 - 2021.11.20. :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동상)
 - ▷ 국민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정책 공감도 및 우수성 검증
 - 2021.12.24. : 직무발명 특허 시 승계 결정 (제17차 부산시 지식재산위원회)
 - 2022.01.07. : 공동(空洞)관리 매뉴얼 특허등록에 따른 우수사례 전파
 -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전국 시군구 등 (도로계획과-332, '22.01.07.)
- ※ 관련 보도기사 : 부산시, 특허받은 새 매뉴얼로 '싱크홀 관리 강화' 외 23건



[울산광역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사 례 명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절감
기 관 명	울산광역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담 당 자	태화강국가정원과 강병선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화강 국가정원이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표정원의 부재로 국가정원 위상에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정원의 품격에 걸 맞는 정원 확보가 절실하였음 ○ 시의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시비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지역 기업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금 11억을 확보하여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어, 총사업비 19억원 중 해외작가와 정원디자인 설계, 식물식재 공사비 후원받아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였음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 .

울산광역시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가 명 :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네덜란드) ○ 위치/면적 : 태화강 국가정원 국화정원 일원/ 18,000m² ○ 기 간 : 2021. 1월 ~ 2022. 11월 ○ 사 업 비 : 19억원(경남은행 11억원 / 시 8억원) ○ 추진방법 : 사회공헌 기업 참여 ○ 역할분담 		
	구분	시	참여기업(BNK경남은행)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조성(토양, 배수 등) • 유지 관리 • 대외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선정 및 계약 체결 • 설계(해외작가) • 시공(대행사)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 참여기업 유치(BNK경남은행/1,000백만원) : 2020. 5월 ○ 「제13차 울산형 그린뉴딜」 세부사업 반영 : 2020. 7월 ○ 정원작가 선정 및 계약 체결(경남은행↔정원작가) : 2020. 11월 ○ 기본 설계 디자인 : 2020. 11 ~ 2021. 2월 ○ 작가일행 울산 방문(피트 아우돌프 외 2) : 2021. 9. 7. ~ 9. 9. ○ 참여기업 사업비 추가(100백만원) 확보 : 202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백만원(당초) → 1,100백만원(변경) ○ 해외 답사 및 실무 협의(네덜란드 외 2) : 2021. 11. 10. ~ 11. 18. ○ 자연주의정원 마스터플랜 완료 : 2021. 12. ○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 공사 : 2022. 5. ~ 12.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작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울산조경협회 관계자와 「2019 중국 베이징국제원예박람회」에서 '피트 아우돌프'에게 직접 만나 대한민국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아시아 최초로 그의 정원을 조성할 의향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섭외를 요구하여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음 ○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지역 기업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 관련 법상 해외작가와 직접 계약(수의계약)이 불가하여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사회공헌 사업으로 변경 후 사업 추진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시민단체인 (사)울산조경협회와 공무원의 노력으로 피트 아우돌프 정원을 아시아 최초로 국가정원에 유치하였음 ○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위해 식물식재를 시민들의 주도로 시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세계적인 공공정원으로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자 함 - 기간 : 10. 1.(토) ~ 10. 7.(일) / 7일간 - 주요내용 : 전문가 배치&시민참여 협업 식재 <table border="1" data-bbox="419 584 1425 775">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정원 전문가</th> <th>자원봉사</th> </tr> <tr> <th>해외 정원사(6명)</th> <th>국내 정원사(18명)</th> <th>시민정원사(360), 시민(300)</th> </tr> </thead> <tbody> <tr> <th>역할</th> <td>· 식재배치 검수 · 식재검수 및 감리</td> <td>· 식재구역 표시 · 식재 및 식재보완</td> <td>· 식물 하차, 운반 · 식재작업 및 관수</td> </tr> </tbody> </table>	구분	정원 전문가		자원봉사	해외 정원사(6명)	국내 정원사(18명)	시민정원사(360), 시민(300)	역할	· 식재배치 검수 · 식재검수 및 감리	· 식재구역 표시 · 식재 및 식재보완	· 식물 하차, 운반 · 식재작업 및 관수
구분	정원 전문가		자원봉사									
	해외 정원사(6명)	국내 정원사(18명)	시민정원사(360), 시민(300)									
역할	· 식재배치 검수 · 식재검수 및 감리	· 식재구역 표시 · 식재 및 식재보완	· 식물 하차, 운반 · 식재작업 및 관수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하천 구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자연형 정원으로 대표정원 조성 요구(산림청) ○ 사회공헌 기업정원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후원 유치를 통한 세계적 권위의 정원 작가가 설계한 대표정원을 조성하였음 ○ 해외작가와 정원디자인 설계, 정원 조성 등 총사업비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 등에 예산 요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 또한 시의 열악한 재정사향으로 시비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지역 기업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금 11억을 확보하여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 기업 유치로 예산 절감 11억원(당초 20억원→변경 8억원) ○(기대효과) 세계적 수준의 하천형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정원의 품격 향상 - 전 세계 자연주의정원 마니아가 찾아오는 정원 관광 명소화 기대 ※ 대표작품인 뉴욕 하이라인, 연간 500만명 방문 -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③ 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1. 사업개요

- 작 가 명 :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 정 원 명 : 자연주의정원(다섯 계절의 정원)
- 위치/면적 : 태화강 국가정원 국화정원 일원 / 18,000m²
- 기 간 : 2021. 1월 ~ 2022. 11월
- 사 업 비 : 19억 원(경남은행 11억원, 시 8억원)
- 추진방법 : 사회공헌 기업 참여 * 울산시, 지역 은행, 시민단체 협업 추진
- 역할분담

구분	울산시	참여기업(BNK경남은행)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 조성(토양, 배수 등)• 유지 관리• 대외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 선정, 계약 체결• 설계(해외작가)• 시공(대행사)

2. 문제점 및 대책

-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하천 구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자연형정원’으로 대표정원 조성이 필요
 - ※ (산림청) :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정원 조성 요구
- 태화강 국가정원이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표정원의 부재로 국가정원 위상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가정원의 품격에 걸맞은 정원 확보가 더욱 절실하였음
 - ※ 순천만 국가정원에 조성된 찰스 쟁스(Charles Jenckes)의 ‘호수정원’ 과 같은 세계적 명성의 정원 조성이 필요

⇒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자연주의정원 디자이너를 섭외하고, 작품 유치를 설득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음

해외작가와 정원디자인 설계, 정원 조성 등 총사업비 20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 예산 확보까지 어려웠음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 하였으나 지역 기업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3. 방안 마련 및 실행

- 「2019 중국 베이징국제원예박람회」 관계자 참석 : '19. 5. 25.
 - ※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자연주의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을 태화강국가정원에 조성하기 위해 피트 아우돌프에게 직접 제안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 행사」 Bart Hoes* 참석 : '19. 10. 18.
 - * '피트 아우돌프'의 설계업무 담당자
- 사회공헌 참여기업 유치(BNK경남은행 / 10억 원) : '20. 5. 21.
- 자연주의정원 조성계획 보고(태화강국가정원→ 시장님) : '21. 3. 19.
- 작가일행 울산 현장 방문(피트 아우돌프 외 2명) : '21. 9. 7. ~ 9. 9.
 - 대상지 현장 답사, 정원디자인 설계(안) 브리핑, 실무협의
- 참여기업 사업비 추가 확보(10억원→ 11억원) : '21. 8. 19.
- 해외 답사(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실무 협의 : '21. 11. 10. ~ 11. 18.
 - 피트정원 조성지 견학, 자연주의정원 기본계획(안) 세부사항 협의
- 자연주의정원 마스터플랜 완료 : '21. 12.
- 전, 루리가든 총괄 정원가 방문 : '22. 5. 6. ~ 5. 7.
 - 피트 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업무 협의
- 자연주의정원 기반 조성 공사 : '22. 5. ~ 11.
- 시민참여 식물식재 행사(시민정원사, 시민) : '22. 10. 1. ~ 10. 7.

4. 장애극복

- 관련 법상 해외작가와 직접 계약(수의계약)이 불가하여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사회공헌 사업으로 변경 후 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항 관련 수의계약에 애로가 있음
- 사업추진에 있어 네덜란드와의 시차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영상 회의 등을 통한 해외작가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태화강의 정체성*과 자연스러움을 반영하여 울산지역의 정체성 재확립
 - * 산업발달과 함께 ‘죽음의 강’이 되었던 태화강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울산의 랜드마크
- 태화강 국가정원에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작품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 세계적 수준의 하천형 자연주의정원 조성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품격 향상·위상 제고
- 전 세계 자연주의정원 마니아가 찾아오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국제적인 정원 관광 명소화*’ 기대(연간 100만명 방문 예상)
 - *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 피트 아우돌프의 대표 작품으로 매년 50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로 민관이 협업하는 네트워크 구축
- 울산의 시민정원사들이 자연주의정원 유지·관리에 봉사활동 참여 요구 쇄도

I. 추진근거

-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제13차 울산형 그린뉴딜
 - “태화강의 정체성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자연주의정원(다섯계절의정원) 조성”

II. 사업개요

- 작 가 명 :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네덜란드)
- 위치/면적 : 태화강 국가정원 국화원 일원/ 18,000㎡
- 기 간 : 2021. 1월 ~ 2022. 11월
- 사 업 비 : 19억원(경남은행 11억원/시 8억원)
- 추진방법 : 사회공헌 기업 참여
-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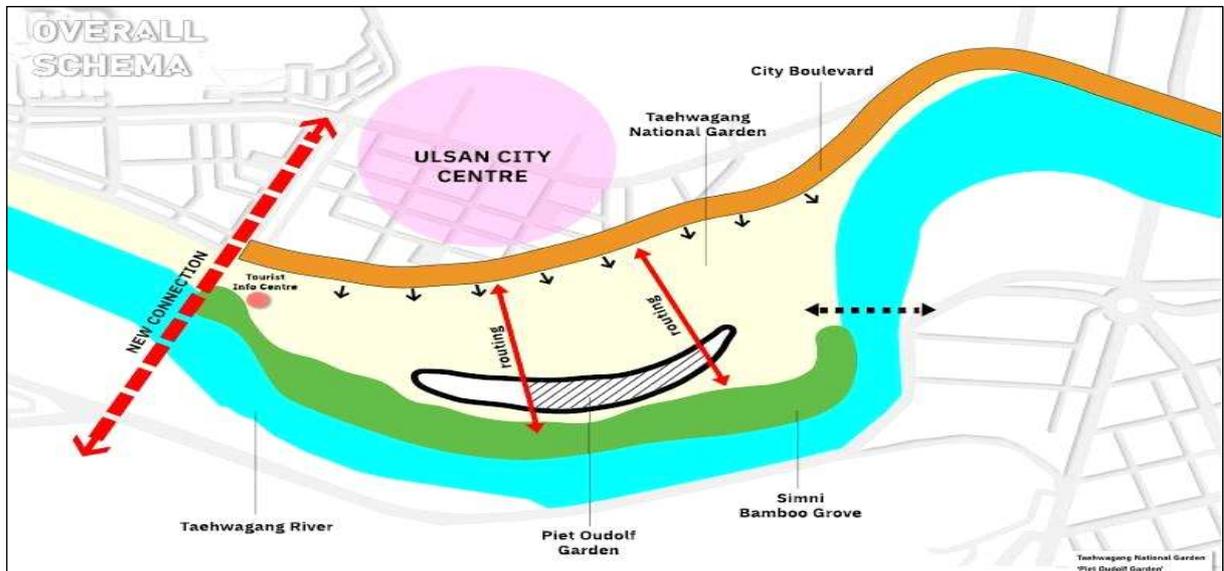
구분	시	참여기업(BNK경남은행)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조성(토양, 배수 등) • 유지 관리 • 대외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선정 및 계약 체결 • 설계(해외작가) • 시공(대행사)

III. 추진상황

- 정원작가 선정 및 계약 체결(경남은행↔국내 에이전시) : 2020. 11.
- 사회공헌 기업과 업무협약(경남은행↔시) : 2021. 4. ~ 6.
- 작가일행 울산 방문(피트 아우돌프 외 2) : 2021. 9. 7. ~ 9. 9.
- 참여기업 사업비 추가(100백만원) 확보 : 2021. 10.
- 해외 답사 및 실무 협의(네덜란드 외 2) : 2021. 11. 10. ~ 11. 18.
- 자연주의정원 마스터플랜 완료 : 2021. 12.
-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 공사 : 2022. 5. ~ 12.
- 자연주의정원 조성 완료 : 2022. 10. 21.

VI. 기본 설계(안)

- **초청 작가** : ‘피트 아우돌프’ (Piet Oudolf/1944년 네덜란드 출생)
 -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자연주의정원 디자이너
 -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정원 작품 유치(전 세계 팬덤 보유)
 - ※ 대표작 : 뉴욕 하이라인(연간 500만명 방문), 시카고 밀리니엄파크 외 다수
- **기본설계(안)** : 태화강의 자연과 조화로운 ‘다섯계절의 정원’
 -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계절마다 특색 있고 역동적인 자연 경관 연출
 - 교통 약자를 배려한 평면적 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



V. 기대효과

- 세계적 수준의 하천형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정원의 품격 향상
 - (산림청)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정원 조성 요구
- 전 세계 자연주의정원 마니아가 찾아오는 정원 관광 명소화
 - 순천만국가정원의 대표정원인 ‘호수정원(찰스 쟈스/영국)’ 수준
- 태화강 국가정원의 외부기관 평가 대응
 - 매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시 활용
-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 울산대공원, 국가정원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정원 모델 사례 홍보



1944.10.27. : 네덜란드 하를렘 출생.

1976~1981 : 하를렘 정원 디자인 사무실에 근무

1982 : 정원디자인 회사 설립

1995 : Future Plants 설립

(공공지역 식물 선택, 재배, 번식 보호 전문회사)

■ 주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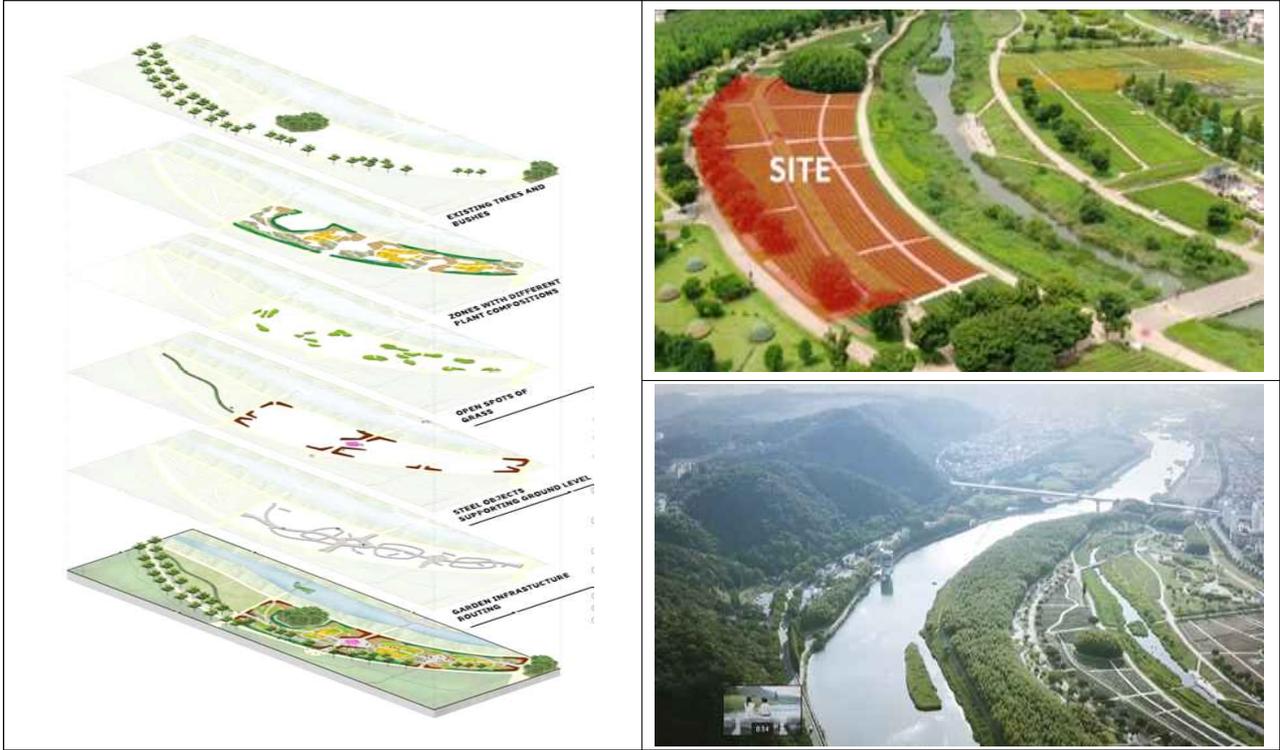
- 뉴욕 골드만 삭스 본사
- 싱거 라렌 조각 정원 (Laren, 네덜란드, 2018)
- 블린 더 호프 (2014, 네덜란드 라이 세 린)
- 하우스 & 위스 (2013, 영국, 버턴 서머셋)
- 서 펜타 인 갤러리, 실내 정원 (London, England, Peter Zumthor와 함께 2011)
- 바르셀로나 가든(2007 바르셀로나)
- 하이 라인 (2006 뉴욕)
- 토론토 식물원 입장 정원 워크 (2006 토론토)
- 트렌트 햄 이스 테이트 (Trentham Estate, 2004 스톡 온 트렌트)
- 배터리 파크 (2003 뉴욕)
- Lurie Garden, Millennium Park (2003 캐서린 구스타프슨과 함께 시카고)
- 스캠 스텐 홀 (2002-2003)
- ABN Amro Bank (2000 네덜란드)
- <후겔 랜드> (2001 네덜란드), 위슬리 가든 (2001 영국)
- Pensthorpe 자연 보호 구역에서 밀레니엄 가든(영국2000, 2008재정비)
- 컨트리 코크 가든, 아일랜드
- Kurpark Bad Driburg, 독일의 일부
- Enköping 시립 공원, 스웨덴

■ 수상 내역

- 비치 메모리얼 메달 (2002)
- 뉴욕시 공공 디자인위원회 우수상 (2004)
- 스웨덴 공원 위원들의 Dalecarlica Award (2009)
- 전문 조경 디자이너 협회 (2010)의 상 수상
- 큐 길드 명예 펠로우십 수상(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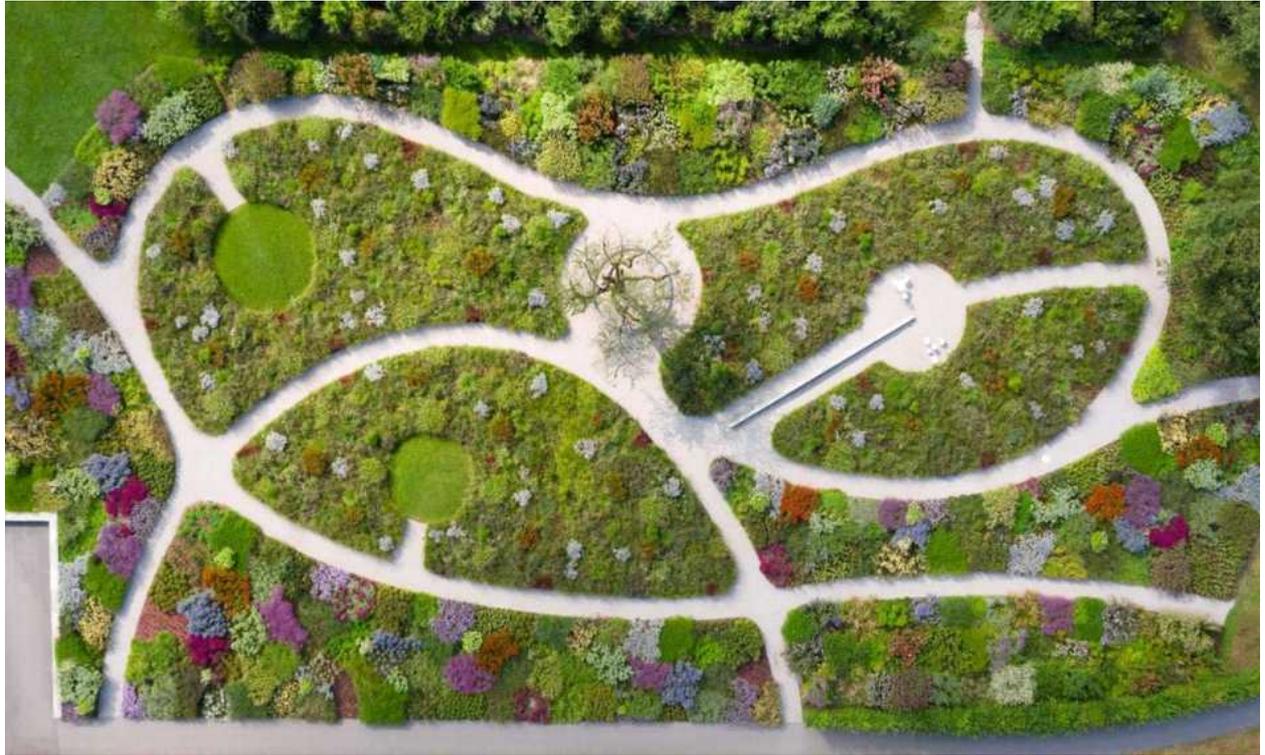
참고 3 자연주의정원 기본설계(안)

개 념 도



Master Plan





2020년 독일 바일암라인의 비트라캠퍼스에 조성된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

붙임 5 주요작품 사례

□ 테마가든

루리 정원(미국 시카고)



하이라인파크(미국 뉴욕)



Hauser and Wirth(영국)



maximilianpark(독일)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시설 ○ 추진기간 : 2020. 11. ~ 2022. 12. ○ 사 업 비 : 30억원 ○ 사업내용 :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연구개발 실증사업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11. 16. : 연구사업 MOU 체결(市, 운영사, 연구기관) ○ 2021. 9. ~ 12. : 실증사업 공사 설계 용역 ○ 2022. 3. : 수질 유예 승인 ○ 2022. 4. ~ 12. : 실증시설 공사 추진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류수질문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작성, 설계내역서 작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수질 문제 발생에 철저히 대비 ○ 실증사업에 대한 방류유예 승인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과 꾸준한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설득 ○ 3지中 1지 공사완료 후 시운전기간 송풍량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개선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곡하수처리시설의 산기장치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 교체가 필요하나 과다한 예산발생으로 단계별 교체를 검토 중, ○ 국책사업 과제중 하나인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연구사업' 관련 정보 확인 후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 예산절감과 세외수입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 시설공사비 및 자재비 17.6억원을 절감 ○ (기대효과) 고효율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8백만원 전력비 절감 기대 ○ (세외수입) 점용료 16백만원 세외수입 ○ (사회경제적효과) 하수처리시설 설비 시장 확대 유도도 국내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성장 기대

민관 협업 국책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1. 과제 선정 내용

○ (산기장치 교체) 역곡하수처리시설 산기장치 노후화로 교체 필요

- 산기장치* 노후화, 구조적 문제 등의 사유로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매비용이 발생하여 전체 산기장치 형식(봉형)교체를 검토
 - * 산기장치 : 하수처리공정에서 필요한 공기를 방출하는 설비
- 4년 6개월간 전체수량 582개 중 교체 수량 862개

구매연도	구매수량(개)	구매비용(원)
2019년	50	5,090,000
2020년	438	44,390,000
2021년	374	34,358,000
합 계	862개	83,838,000

○ (예산과다 발생) 약20억원의 예산과 수질기준 초과문제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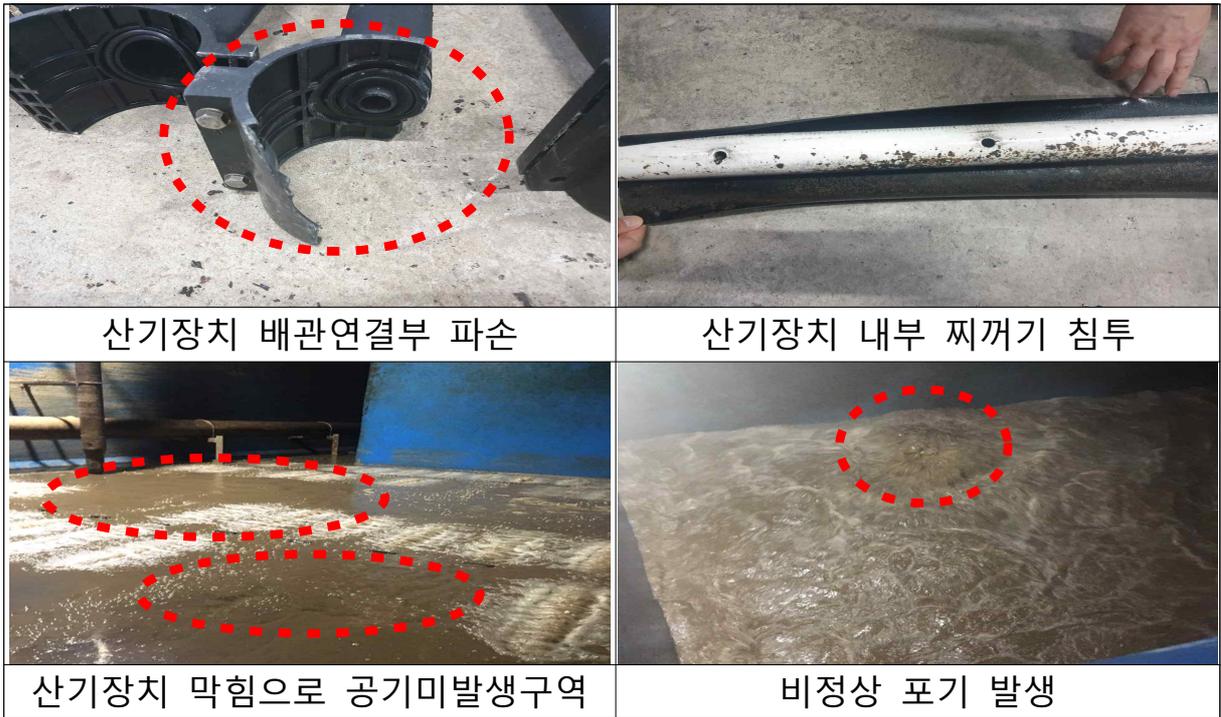
- 산기장치의 형식(봉형 산기장치), 배열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질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송풍기*, 배관 등을 함께 교체 또는 증설이 필요하여 많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 송풍기 : 하수처리공정에서 필요한 공기를 생산하는 설비
- 새로운 설비의 운전을 위해서는 시운전 기술을 가진 기관(기업)의 용역이 필요했으며, 해당 기술은 비단 하수처리시설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송풍기, 산기장치 설비분야 기술자까지 필요했음

○ (공동연구반) 민관이 협업하여 하수처리 효율 제고를 위해 연구

-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사 및 관계기관(기업)과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21년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2년에도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 3년간 대외적으로 Energy Globe Award 국제환경상을 비롯한 12개의 기관상을 수상하고 5개의 하수처리기술 특허를 취득하였음
- 공동연구반 과제로 해당 사례를 선정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수 차례의 현장 연구, 회의 등을 열었음

2. 문제원인 분석

- (산기장치) 표면 막힘 및 파손으로 생물학적 하수처리 효율 저하
 - 산기장치가 물의 부력을 받아 배관연결부가 파손되어 비정상 포기(공기를 방출) 발생하고, 파손된 배관연결부를 통해 슬러지(찌꺼기)가 유입되어 산기장치의 구멍이 막혀 생물학적 처리효율 저하
 - 생물학적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공기투입량과 약품투입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유지비가 증가함



- (산기장치 배관) 배관 내 슬러지 침투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
 - 산기장치 일부를 교체하여도 배관 등에 남아있는 찌꺼기 등이 다시 산기장치에 표면 막힘을 유발하여 산기장치의 형식 변경 및 전체 교체 전에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 (연구결과) 산기장치, 배관, 송풍기 교체 필요
 - 하수처리시설의 제일 중요 목적은 물을 깨끗이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유지보수비가 전면교체 비용보다 적어서 예산 수립 후순위로 밀리고 있지만,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된다면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제일 목적에 위배됨
 - 예산이 부족하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배관, 산기장치를 교체하고 송

풍기는 최대한 기존 것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방안 강구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국책사업 참여)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비를 교체할 수 있는 국책사업 정보를 확인 후 실증사업 참여 결정
 -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 기술 개발 사업」의 과제 중 하나인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연구사업」

※ 연구과제 개요

- (연구명)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연구사업
- (연구목적) 도심하수처리장 폭기조 수심 증가에 따른 고압터보송풍기 개발의 필요성 증가 및 초미세기포산기장치 개발을 통한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정책 지원
⇒ 더 깊은 수심에 산소를 전달하고, 산소전달효율을 높여 전력비 절감에 기여
- (연구비) 104억원(정부출연금 78, 연구기관 26)
- (연구기간) '20. 5. ~ '23. 12.(3년 8개월)
- (연구기관) (주)남원터보원(송풍기 생산업체), (주)씨투씨소재(산기장치 생산업체)

- (실증사업) 실증화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 참여내용 : 역곡하수처리시설 2단계 생물반응조 1지, 2지, 3지에 연구목적물 초미세기포산기장치 및 고압터보송풍기 설치 및 운영
 - 사업비 : 30억원*(전액 정부출연금 및 연구기관 부담)
* 송풍기, 산기장치 등 기계교체 및 공사, 시운전 전력비 등
 - 사업기간 : '22. 1. ~ '23. 12.
- (SWOT분석) 장단점 분석하여 실증화사업 추진
 - 강점과 기회점 활용하여 연구기관 협의 진행
 - 약점은 장점으로 승화하고 위협점에 대한 대비 철저

강점(Strengths) • 비교설비 : 하수처리시설 내 비교 가능한 설비(동일회사 송풍기, 초미세산기장치)를 갖추고 있음	역곡하수 처리시설	약점(Weaknesses) • 용량 : 목표 실증현장 용량(2만톤 이상)보다 적은용량(1.5만톤) ⇒ 설치비 절감 장점으로 승화
기회(Opportunity) • 설비교체 : 필수불가결하게 교체하여야할 설비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체		위협(Threat) • 개발실패 : 고효율장치 개발 실패 시 원상복구토록 협약 체결

○ (추진현황)

- 2020. 9. 9. : 연구과제 업무 협의(환경부 기획위원)
 - 연구과제 인지 및 연구 추진 계획 확인
- 2020. 9. 1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협의(이국진 전문위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과 연구과제 참여 협의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현장 방문 요청
- 2020. 9. 25. : 연구기관 현장 방문 협의
 - 역곡하수처리시설 실증대상 선정
 - (주)남원터보원(송풍기 생산업체), (주)씨투씨소재(산기장치 생산업체)
- 2020. 11. 16. : 연구사업 MOU 체결(市, 운영사, 연구기관)
- 2021. 5. :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시제품 성능 현장점검
 - 터보송풍기 풍량, 풍압, 전력효율 등(성능 실험장치 활용)
- 2021. 7. : 초미세기포산기관 시제품 성능 현장점검
 - 테스트 수조 폭기 실험(파일럿 수조 및 수심 5m수조)
- 2021. 11. 17. ~ 18. : 국가물산업슬러스터 성능시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표준조건 에너지 성능기반 평가방법 구축
 - 초미세기포 산기관 성능시험 방법 논의
- 2021. 9. ~ 12. : 실증사업 공사 설계 용역(총사업비 17.6억원)
 - 산기장체 교체 882개, 송풍기 5대 증설, 배관, 계측 및 제어장비

- 시설공사비 11.1억, 송풍기 자재비 3.4억, 산기장치 2.7억 등
- 2022. 2. : 수질 유예 요청 협의(한강유역환경청)
 - R&D 현장실증 시 방류유예 승인 사례 없어 난색
 - 부천시, 국산업환경기술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의 적극행정으로 승인
- 2022. 3. : 수질 유예 승인(한강유역환경청)
 - 22. 8. 1. ~ 9. 30.(61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기준 준수 예외
- 2022. 4. ~ 12. : 실증시설 공사 추진 중
 - 22. 10월 현재 3지 중 2지 공사 완료 ⇒ 수질·효율 매우 우수

4. 장애극복

- (수질문제) 실증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류수질문제 우려
 - 하수처리시설의 제일 목적은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므로 만약 실증사업 중에 수질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려발생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
 - ① MOU체결 단계에서 市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을 협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기함

※ 업무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약서

- 제2조 교류협력분야 ③연구기관은 부대시설에 연결 및 개선 등 기존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④연구기관은 기존설비의 운전 및 보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계획을 수립 ⑨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기존시설에 이상 및 수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중지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 및 부천시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 제10조 종료후조치 연구기관은 도심 하수처리장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과제 종료 후 도심 하수처리장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를 기부채납 하되, 성능 검증 미달성 시 부천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설치된 장비 철거 및 시설을 원상복구 한다.

- ② 설계단계에서 송풍기는 기존 송풍기에 5대를 추가하고, 산기

장치는 기존 배관을 보관하여 만약 방류수질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생물반응조 1지씩 공사를 진행하여 충분한 시운전 후 다음 공사를 진행토록 계획

- ③ 시공단계에서 방류수질은 보통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에서 운전이 되나 최대값이 간혹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류수질기준 준수예외 아래와 같이 승인 신청

구분(mg/L)		BOD	TOC	SS	T-N	T-P
법적기준		10.0	25.0	10.0	20.0	0.5
요청수질	1차*	14	-	-	-	0.9
	2차	20	-	-	-	1.2

* 공사 단계별 차수 및 기간을 구분하여 방류수질기준 준수예외 승인

○ (수질기준 유예) 실증사업에 대한 방류유예 승인 사례 전무

- 관계 지방환경관서(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자들이 사후 감사를 우려, 소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온 경향이 있어 R&D 현장실증 시 방류유예를 승인해 준 사례가 전무후무한 상황

- ① 부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기관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수질요염총량관리제 담당자 및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하여, 방류수질 준수 예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협의
- ② 한강유역환경청 요구사항인 방류수질 목표치 산정에 필요한 운영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수 차례 자료검토와 피드백을 진행
- ③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의 실증대상지역인 역곡하수처리 시설 현장 확인 시 연구 현장 피력 및 질의응답 등 적극적 현장 대응

- 그 결과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소통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류유예를 신청하고 방류수질 준수예외(2개월, 2022. 8월 ~ 9월) 아래와 같이 승인받음(2022. 3. 16.)

구분(mg/L)		BOD	TOC	SS	T-N	T-P
법적기준		10.0	25.0	10.0	20.0	0.5
요청수질	1차	14	-	-	-	0.9
	2차	20	-	-	-	1.2
협의수질	1차*	12.1	-	-	-	0.9
	2차**	17.3	-	-	-	1.2

* 1차 : 3지中 2지가 완료 후 시운전기간

* 2차 : 3지 공사 완료 후 시운전기간

○ (성과미흡) 3지中 1지 공사완료 후 시운전기간 송풍량 과다

- 공사대상이었던 생물반응조 3지中 1지를 끝내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질 기준 중 하나인 T-P(총인량) 이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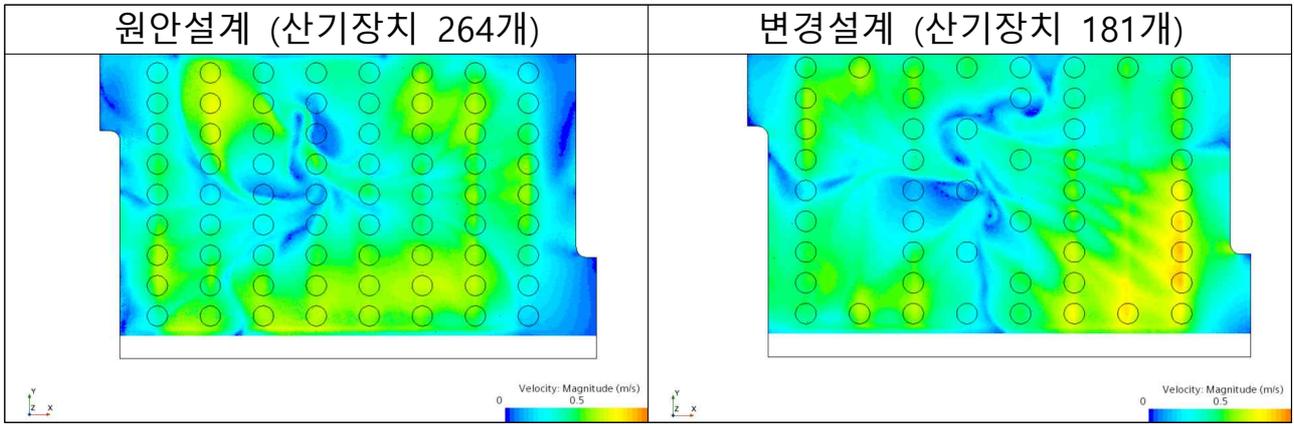
- 공사 전 생물반응조 유출 수질*의 T-P값은 0.958mg/L으로 운전 중이었으며, 실증사업 성능보증 수질은 1.6mg/L(설계기준과 동일)으로 성능보증은 일정부분 되었으나 불안정하였으며,

* 생물반응조 유출 수질은 총인처리시설을 통과 후 방류수질 0.5mg/L를 만족하게 됨

- 기존 운전수질(0.958mg/L)과 동일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송풍량이 약40m³/분이 되어야 했는데, 이는 당초 연구개발 목적인 에너지 고효율 기준에는 과다한 송풍량으로 산정되어 원인분석을 실시

① 공사를 완료한 곳의 MSL(부유물농도)가 낮게 측정되고, 그에 따른 T-P값이 높아짐. 산기장치의 개수가 너무 많아 교반 강도가 약하여 슬러지(찌꺼기)가 일부 적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분석

② 유동해석 등 실험을 통해 적정 산기장치 개수를 산정



③ 이를 토대로 재시공 하여 송풍량을 낮추어 약30%(최대38%)의 전력비 절감 효율을 볼수 있게됨

년월일	송풍기		생물반응조		하수유입	수질분석			
	송풍량 (m ³ /min)	전력 (kW)	DO (mg/l)	MLSS (mg/l)	1일 누적 (m ³)	BOD	SS	T-N	T-P
공사전	48.0	62.6	6.4	2,702	3,207	1.9	3.2	8.606	0.958
산기장치 264개	45.1	49.1	7.2	3,336	2,452	3.3	3.1	9.166	2.014
산기장치 181개	30.8	34.4	7.1	3,336	3,296	3.0	1.8	7.703	0.194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예산절감) 시설공사비 및 자재비 17.6억원을 절감
 - 산기장치 및 송풍기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였음
- (전력비절감) 연구개발 설비 전기료 1.4억원 절감
 - 연구개발 설비의 전기료를 연구기관에서 납부함에 따라 생물반응조 송풍기의 전력비 9백만원/월 절감(16개월)
- (기대효과) 고효율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8백만원 전력비 절감 기대

구분	2021년 (연간사용량)	구축 후 (연간예상량)	30% 개선 (연간절감량)	온실가스 환산 (연간배출량 감소)
2단계송풍기 연간전력 사용량(kWh)	1,226,400kWh (159,187,000원)	858,480kWh (111,431,000원)	▼367,920kWh (47,756,000원)	▼169.023tCO ₂ eq

※ 2022년 7월 산업용 평균 전력요금 129.8원/kW 적용

- (세외수입) 점용료 16백만원 세외수입
 - 연구개발 설비 인수인계 전까지는 부천시의 자산이 아니므로 연구기관이 역곡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 점용료 부과
- (사회경제적효과) 하수처리시설 설비 시장 확대 유도로 국내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성장 기대
 - 비단 부천시의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장치의 성능과 생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규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함
- (민관협업)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Win-Win



[강진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이웃지자체 물 함께쓴다 '지역상생 첫 모델' 탄생 - 예산절감 8억 원, 광역상수도 12년 단축 -
기 관 명	전라남도 강진군
담 당 자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주사보 김동한

< 요약 >

- 오지마을인 강진군 마량면 상·하분마을의 주민숙원사업(87가구 140여 명)인 광역상수도는 대구면 주민자치위원 회의 시 상분마을 주민이 제안한 "군 경계지역인 장흥군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 공급 방안"을 강진군에서 적극 검토 후 실무협의체(강진·장흥·K-water)를 구성하여 수도시설 연계
- 그 결과, 관로공사 4.1km를 단축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절감과 당초 2035년 시행할 공사를 **12년 단축하여** 주민들의 물 복지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후 반영 하고 지자체의 경계를 과감히 탈피 상생발전 토대 마련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강진군수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이웃지자체 를 함께쓴다 ‘지역상생 첫 모델’ 탄생
 - 예산절감 8억원, 광역상수도 12년 단축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 요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량면 상·하분마을의 마을상수도 수량, 수질이 불안정하여 마을주민들의 광역상수도 공급 요청 ○ 위 치 :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상분, 하분마을 ○ 추진기간 : 2021. 11. ~ 2023. 1. ○ 사 업 비 : 8억 원(상수 주관로 설치비용 2억 원) ○ 사업내용 : 강진군 상·하분마을과 군 경계지역인 장흥군 광역상수도시설을 연계하여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및 예산절감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2. :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들의 광역상수도 공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량 상분마을 이장의 군 경계지역인 장흥군 수도시설과 연계제안 ○ '20. 1. : 주민제안 검토 및 상수도시설 연계 가능성 확인 ○ '20. 1. ~ '21. 2. : 수도시설 연계 장흥군 지속 설득 ○ '21. 11. : 수도시설 연계운영 업무협약 체결(강진군·장흥군·K-water) ○ '21. 11. ~ 현재 : 광역상수도 연계 공급사업 추진('23. 1. 준공예정)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행정구역에 따른 상수도서비스 칸막이 행정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운영 주요 과정 및 사안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광역상수도 운영 중인 수자원공사와 장흥군에 지속적인 설득 - 수도시설 연계운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 수도서비스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운영 업무협약('21. 11.)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간 상생발전) 지자체 간 행정구역을 넘어 수돗물을 연계 공급하여 기관 간 장벽 제거에 견인하고 지자체 간 경계 등의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 ○ (주민참여) 주민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 검토 협의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정책 활성화 계기 마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숙원 해소) 상분·하분마을 주민들의 마을상수도 관리의 어려움과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수도 공급시기 12년 단축 (당초 2035년→변경 2023년) - 마량면 상·하분마을 87가구, 143명 광역상수도 혜택 ○ (예산절감) 8억원 예산절감 및 상수관로 4.1km단축(5.3km→1.2km)

이웃 지자체 물 함께쓰다 '지역상생 첫 모델' 탄생

1. 과제 선정 내용

- (주민 숙원) 마을상수도를 이용 중인 마량면 상분·하분 마을 주민 (87가구, 140여 명)이 3년 전(2019년 ~) 부터 광역상수도 상수관로 설치 요청 집단 민원 제기

- * 가구현황 : 상분(27가구, 40명) / 하분(60가구, 103명)
- *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2035년 반영) : 원포~하분 2.7Km, 하분~상분 2.6Km

- (사업 검토) 마량면 상분·하분마을의 수도물 공급을 위해서는 인근 마량면 원포리에서 상수관로 연결 필요
⇒ 상수관로 5.3Km / 사업비 10억 원

- (주민 제안) 마량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상분마을 이장의 군 경계지역인 장흥군 지방상수도 시설과 연계 제안

○ (추진 방향)

- 관망해석 및 실측을 통해 적정 압력 및 유량으로 공급(장흥→강진) 가능 확인
- 강진군 상분·하분 마을과 연접한 장흥군 상수도 시설과 연계 계획

① 주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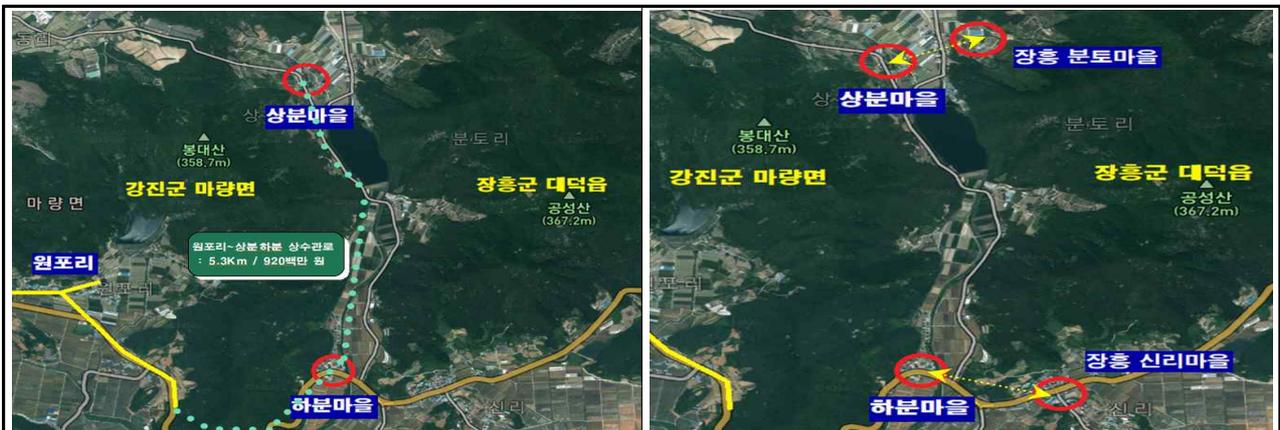
② 주민 제안 검토



③ 상수도시설 연계
가능성 확인



④ 자치단체 간
상수도 연계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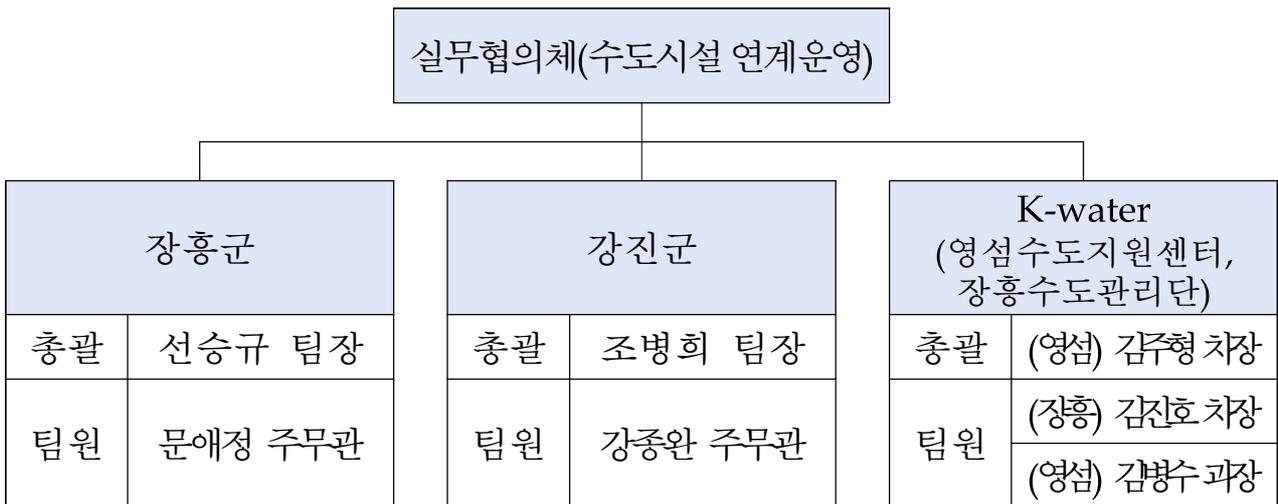


2. 문제원인 분석

- 마량 상·하분마을 마을상수도의 수량·수질 불안정
- 하천을 경계로 군 경계 연접마을인 장흥군 분토마을의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호소
 - 장흥군 대덕읍 분토, 신리마을의 광역상수도 사용 ⇨ 2013년 개통
 -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강진군 마량면 상·하분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 ⇨ 2035년 공급 계획
- ※ 마량면 원포리 ~ 상분마을 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여건이 어렵고 비용편익분석 결과 다른 지역 대비 저조하여 후 순위에 배정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광역상수도 연계운영(장흥→상·하분마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목적) 수도 연계운영 주요과정 및 사안에 대하여 상호검토 및 추진방안 논의
 - (운영) 2021. 3. ~ 10. / 정기회의(매월) 및 수시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수도시설 연계운영 주민설명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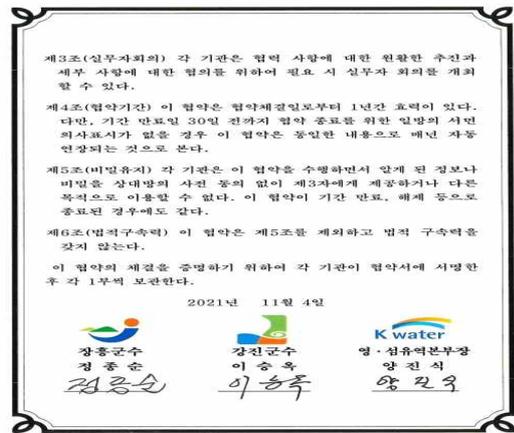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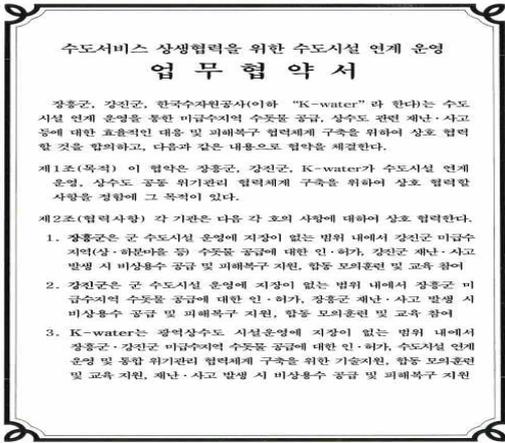
4. 장애극복

- 지자체 행정구역에 따른 상수도서비스 칸막이 행정 탈피
 - 수도연계 운영 주요과정, 행정절차 및 사후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검토 후 장흥군에 지속적인 설득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
 - ⇒ 수도시설 연계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 장흥군, K-water 업무협약 : 10회

○ 수도서비스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운영 협약

- 협약기관 : 강진군, 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영·섬지역본부)
- 협약내용 : 장흥군 상수도 관로를 이용한 강진군 (상분·하분)
수돗물 공급 등 수도시설 연계

협약식 사진 대장	언론 보도자료



수도시설 연계 운영 업무협약서

- 협약을 통한 상수관로 연결 계획(강진~장흥) : 1.2km / 2억 원
 - 대덕 신리 ~ 마량 하분 분기 : 0.9Km / 대덕 분토 ~ 마량 상분 분기 : 0.3Km
 - * 강진군 원포리 ~ 상분·하분 상수관로 연결 : 5.3km / 10억 원 소요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주민숙원 해소) 마량면 상분·하분마을 주민들의 마을상수도 관리의 어려움과 수질 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광역상수도 공급시기 12년 단축(2035년 → 2023년)
 - 마량면 상하분마을 87가구, 143명 광역상수도 혜택
- (예산절감) 8억 원 비용절감, 상수관로 4.1km 단축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 마량면 상흥리 (상분·하분마을) 상수관로 연결 - <u>주관로 5.3km / 10억 원 소요</u> ■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 : 2035년



(변경) 수도정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신리 ~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상분·하분마을) 상수관로 연결 - <u>주관로 1.2km / 2억 원 소요</u> ■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 : 2023년

○ (추진성과)

독창성 · 차별성

▶ 지자체의 문제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기존의 관행을 주민의 참신한 제안으로 해결

효과성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계기 마련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사례 발굴 토대 마련

지자체 노력도

▶ 주민 숙원사업 및 제언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자체 간 수도시설 연계

확산 가능성

▶ 지자체 간 경계 등 유사한 문제가 있는 타지자체에 바로 적용하여 추진 가능

[언론홍보]



광주MBC뉴스



아시아투데이



전남도민일보



호남매일

장흥 상수관로 이용, 강진 미급수 지역 물 공급

수도시설 연계운영 등 수도서비스 상생 협력 행정구역 경계 넘어 물 복지·나눔 모델 제시

장흥군의 상수관로 이용에 강진지역의 급수지역에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군, 한곡수자원공사와 수도서비스 상생 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운영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수도과 재설비에 의해 해당 지역 상수 부족을 해소 하는 장흥군 미급수 지역엔 대량물 상·하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간 상생 협력이 크게 기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 대머리 선다·보포 마을은 지난 상수도가 연결돼 있으나 상·하수 연결된 안정적인 상·하수 공급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갈수가 수량 부족에 수질 악화로 주민들이 불편한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번 협약으로 장흥군의 상수관로



최근 장흥군-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서비스 상생 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운영 업무협약 체결했다.

를 통해 수도관로를 공급받게 된다.

이에 대한 수도요금 등수에 대한 제과수 이불 제기도 장흥군에서는 약 7%의 감액이 예상된다.

운영수출이후, 강진군 한곡수자원공사에서는 물 순환 처리를 통해 장흥군과 대머리마을에 상생의 일환으로 이번 협력을 계기로 물 복지, 나눔, 사회적 책임 등을 약속했다.

장흥군 한곡수자원공사와 한곡수자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수도시설 연계 운영으로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장흥수수는 "물과 도시민서 물 나눔 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이웃사촌인

장흥군과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흥-한곡수 기자 room2021@

광남일보

강진군, 장흥군과 수도서비스 상생협력 체결

상분-아보마을 87가구 수도용 공급, 7억 원 예산 절감 효과

2021년 11월 09일(화) 13:42



수도서비스-상생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 운영 업무 협약식(왼쪽부터 강진군수 이상욱, 장흥군수 장흥순, 한국수자원공사 영·광·유·곡·분·부·집·합·신·문)

시사종합신문

[보성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 벤치마킹 사례는 “○○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 례 명	숲속의 도시 보성만들기, 제거 수목 활용으로 예산절감 '톡톡'
기 관 명	전라남도 보성군
담 당 자	기획예산담당관 추금란

< 요약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보성읍 주민생활권 주변에 산재된 각종 축산시설에서 유입되는 악취 문제 개선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통행량 급감으로 도로 기능이 크게 약화된 구)국도2호선 구간(2.1km)에 복합휴양공간으로서의 도시숲 조성 추진
- 타사업·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도시숲 조성에 필요한 토사 및 다양한 종류의 제거 수목 재활용으로 약 440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보성군수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숲속의 도시 보성만들기, 연계협력사업으로 예산절감 ‘톡톡’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19. ~ 2022. ○ 면 적: 3ha(연장 2.1km) ○ 위 치: 보성읍 우산사거리~장거리교차로((구)국도2호선) ○ 총사업비: 3,380백만원(국비 1,500, 군비 1,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1,496백만원), 2022년(1,884백만원) ○ 사업내용: 주민복지형 보성 도시숲 조성 1식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3. 23.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 ○ '20. 1. 2. 산림청 공모사업 확정 ○ '19. 4. ~ 8.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19. 12. ~ '20. 9.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20. 1. ~ '20. 12. 각종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21. 2. ~ '21. 2. 1차사업(아스콘·가드레일 철거, 주차·차량교통공간) ○ '21. 10. ~ 12. 2차사업(오솔길 개설, 교목 등 수목 식재(18종))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부족으로 많은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과의 대화, 이장회의, 마을회의 활용 설명 ○ 총연장 2.1km(높이 1m) 구간에 투입될 토사 구입을 위한 채취장 확보 및 인허가 절차, 많은 예산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사 활용으로 예산 절감 ○ 어린이 등 오솔길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배 피해목인 대나무 제거, 자연친화형 보호난간 설치 ○ 원시림 형태의 자연 그대로의 숲 조성을 위한 시공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자연 재료(나무뿌리, 화산석, 목재칩 등) 적극 이용 ○ 보성신역사 진출입로 구간 통행량 증가에 따른 불편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확장(0.4km)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년간 이어진 축산악취 집단민원을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으로 개선 ○ 전국 최초로 송이자갈과 마사토를 혼합·다짐한 공법으로 친환경 맨발 오솔길 개설(2.1km) ○ 사업추진 중 방문한 주변 마을·이용 주민들의 좋은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주민복지숲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평 - 동윤천 데크로드 외 주민생활권 내 또 다른 숲길 산책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읍 내 축산악취 유입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방안을 역발상으로 접근, 주민생활권 다기능 도시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주변 군민 건강휴양공간 마련으로 삶의 질 제고 기여 - 미세먼지 차단 및 악취저감, 열섬현상 저감으로 생활환경 개선 ○ 타사업·타기관과 연계한 조성사업으로 440백만원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읍 신흥동산종합개발사업 발생 토사 활용(150백만원) - 산림자원연구소 무상 분양 및 대규모 사업장 제거 수목 재 활용(140백만원) - 사업장 내 도로에 포설된 쇄골재(5,670m³)를 수집, 봉화산 임도 및 해평호수 도로에 운반, 포설(150백만원)

숲속의 도시 보성만들기, 연계협력사업으로 예산절감 '톡톡'

1. 과제 선정 내용

- 산업화된 현대사회를 겪으면서 육체적·정신적 치유 능력이 탁월한 숲(산림)을 찾는 인구 급증
 - 숲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자원이나 인간의 편익증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 면적 급감
 - 공장, 차량, 가축 등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 증가로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이상기후 발생
 - 아름다운 경관, 이상기후 대비, 국토보존, 대기정화, 보건휴양장소 제공 등 숲이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공익적기능을 인지하고 주민생활권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도시숲 조성 필요
- 미래의 도시숲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현세와 후세를 잇는 정신 문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생활권 내 녹색공간의 확충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축산악취 민원 해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까지 겸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가치도 매우 높고 지역의 안전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문제 원인 분석

- 보성읍 내 산재한 축사, 퇴비공장 등 가축분뇨를 다루는 각종 축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집단민원 수년간 지속
 - 주로 마을 내, 도로 인근에 집단으로 형성한 경우가 많고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축산악취가 확산되어 민원 증가
 - 정부의 악취저감사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행정에 의지하려는 경향
- 전남 신안~부산을 잇는 국도2호선이 1998년, 2004년에 보성 외곽으로 이전 개통됨에 따라, 구)국도2호선을 이용하는 통행량 급감

- 도로로서의 역할이 크게 저하되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용법 검토 필요
 - 주민생활권 내 방치되다시피 한 넓은 도로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삭막한 기분을 들게 함
- 축산악취,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이상기온 등에 노출되어 생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 대두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도시숲 조성 기법: 미세먼지 차단숲·저감숲의 복합 조성
- 미세먼지 저감숲 및 차단숲 등 숲 종류간의 상호 연계성 증대로 생활권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미세먼지 대응 숲의 종류》

구분	내 용
차 단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숲) 내 공기 흐름이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된 숲 ※산림(숲)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의 공간적 분리 원칙
저 감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산림(숲)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조성 ※숲의 구조적 개선과 수종별 특성을 극대화하여 적극적 저감 기능 수행
바람길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로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숲)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연결된 숲 ※숲과 나무로 구성된 공간의 연결성(네트워크) 증대로 Clean & Green Corridor로서의 기능 수행

* 출처: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안)(2018.11.)

- 조경설계기준 식재밀도
-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 교목: 표준 식재간격은 6m로 하며,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m 범위에서 식재간격 조정
 - 관목: 생활타리용 관목의 식재간격은 0.25~0.75m, 2~3줄을 표준

으로 하된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에 따라 식재간격이나 줄 숫자를 적정하게 조정

-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 차폐식재: (좁은 식재)교목 8주/100m², 소교목 12주/100m²
(넓은 식재)교목 5주/100m², 소교목 6주/100m²
- 도시공원

《도시공원 등 식재밀도 기준》 (단위: 주/m², 본/m²)

공원종류별	식재밀도				
	교목	관목	덩굴성식물	조형목	생울타리
어린이공원	0.068	0.133	0.109	0.014	0.025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0.015	0.224	0.087	0.002	0.012
근린도보권 공원	0.053	0.203	0.105	0.006	0.011
도시계획 근린공원	0.089	0.198	0.073	0.018	0.006
광역권 근린공원	0.046	0.049	0.035	0.002	0.004
체육공원	0.035	0.163	0.070	0.005	0.043
역사공원	0.055	0.043	0.048	0.005	0.013
동물원	0.051	0.091	0.001	0.000	0.010
식물원	0.264	0.486	0.192	0.010	0.010
풍치공원	0.136	0.119	0.028	0.00.	0.003
정원	0.097	0.099	0.161	0.009	0.020
기타	0.036	0.230	0.028	0.003	0.006
평균	0.082	0.170	0.078	0.006	0.014

* 출처: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KDS 34 40 10 수목식재(2016)

- 보도, 산책로변 바람길숲은 식재 간격을 넓게 하여 1열 5m이내, 저감숲은 최소 2열 이상을 감안하여 8m이상, 차단숲은 고밀도 식재를 위해 최소 10m이상 확보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유형: 공원녹지형

-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 병행 조성
- 사람이 이용하는 통로, 보도변은 바람길숲,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쪽은 차단 숲, 바람길숲과 차단숲 사이는 저감숲으로 복합화하여 미세먼지 차단의 다양한 효과 병행
- 관목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관목 식재

《수종별 식재 수량》

(단위: 본)

구분(종)	수종 및 수량	비고
교 목(9종)	메타세콰이아(500), 배롱나무(109), 향나무 등 7종(57)	
관 목(5종)	애기동백(1,267), 철쭉(470), 블루아이스(59), 사철나무(38), 화양목(30)	
초화류(5종)	맥문동(50,000), 아스타국화(20,000), 핑크물리(10,000), 무스카리(10,000), 장미(3,000)	

4. 장애극복

- 생활권 도시숲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유도
 - 사업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민선8기 선거와 맞물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로 철거 후 도시숲 조성에 대한 사업취지 인식 부족
 - 군민과의 대화(군수), 이장단회의, 마을방문 회의 등 8회에 걸쳐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 과정 진행
 - ▶ 도시권 내 숲에 대한 중요성과 축산악취 유입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필요성 설명
 - ▶ 주민 생활권 내 미세먼지 차단, 건강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다기능 숲 조성의 사업취지 및 효과 설명
- 도시숲 조성용 토사 21,000m³/36,000톤(총연장2.1km*폭10m*높이1m) 구입을 위한 채취장 확보 애로 및 인허가절차 장기간 소요
 - 사업 착수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위해 신흥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사 확보로, 토사 구입 및 운반 비용 절감 및 토사 채취를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 생략 및 사후 복구 불필요로 사업의 즉시 착수☞예산절감 150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 축산악취 저감 등 확실한 도시숲 기능을 위한 다양한 수종의 큰나무 단기간 확보 필요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무상 분양 및 군 발주 타 사업장에서 제거될 수목을 재활용하여 식재(450그루)☞예산절감 140백만원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명량다원 수해복구사업장, 지방도 선형

개량사업장, 회천 생활용수공급 배수지 시설사업장 등

- 확보수종: 뚝향나무, 흰색배롱나무, 가이스카향나무, 소나무, 매화, 감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

○ 어린이 이용객 오솔길 이탈로 안전사고 위험 우려

- 총 2.1km 오솔길 중 어린이 이용객의 이탈이 우려되는 구간(3개 구간 0.5km) 존재
- 대나무가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해달라는 인근 농가의 요청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자연친화적 보호 난간 설치에 이용→농작물 피해민원까지 해소

○ 최대한 원시림 형태의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공방법 요구

- 대나무, 나무뿌리, 목재, 화산석, 숲가꾸기 사업에서 수집된 산림 부산물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활용하여 시공
- ①대나무 어린이보호난간 및 평상 ②송이자갈과 마사토를 활용한 맨발 오솔길 조성 ③국산목재와 화산석을 이용한 오솔길 경계 및 배수로 시공 ④저수지 수몰지역 내 고사된 나무뿌리를 수거(한국 농어촌공사 협의)하여 운치있는 경관조성에 활용
- 숲가꾸기 수집 산물 활용 및 목재칩 생산하여 깔기(2,000포/20kg)
- 도시숲의 인공성은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산책하기 좋은 힐링공간으로 조성

○ 고속철도 보성신역사 좁은 진출입로 통행 불편 예상

- 고속철도 개통 후 통행량 증가로 도시숲 인근 신역사 진출입로 구간(0.4km)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장 시공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타사업·타기관과 연계한 조성사업으로 440백만원 예산절감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무상 분양 및 대규모 사업장 제거 수목을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둠

* 보성읍 신흥동산종합개발사업 발생 토사 활용(150백만원), 전라남도 산림자원

연구소 무상 분양 및 대규모 사업장 제거 수목 재활용(140백만원), 사업장 내
쇄골재의 해평호수 도로 포설(150백만원)

- 보성읍 내 축산악취 유입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방안을 역발상으로 접근, 주민생활권 다기능 도시숲 조성
- 동윤천생태하천길과 연계한 숲속 오솔길 개설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한껏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최대한 야생의 느낌을 살린 주민생활권 주변 건강휴양공간 마련으로 삶의 질 제고 기여
- 청정 보성 이미지 제고로 각종 행사, 모임 시 불거리 제공
 - 도심속 녹생공간 조성으로 미세먼지·황사 차단 및 악취저감, 여름 한낮 고온현상 완화,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 녹색띠 형성으로 녹음이 우거진 경관 연출

□ 사례명 : 국내 최초 열풍 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도입 저렴한 경주산 건조 보급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263 (열풍 건조사업장) ○ 추진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3억원 (전액국비-농촌진흥청) ○ 사업내용 :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활용 국산 건조생산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4. 17 :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공모사업 선정 ○ 2022. 5. 10 : 열풍 이용 건조생산 사업장 준공 (천북면) ○ 2022. 6. 22 : 열풍 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설치 완료 ○ 6. 22 ~ 8. 12 : 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건조시범생산 보급 ○ 2022. 8. 17 : 농식품부 브리핑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 2022. 8. 24 : 열풍 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현장 시연회 ○ 2022. 9~ : 열풍 이용 “경주산 건조” 농가보급 본격화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과 편이성이 부합하는 건조생산 사업장 부지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생산 사업장의 위치를 경주시 중심지역(천북면)에 설치하여 이용 농가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제고한 최적지 선정 ○ 열풍건조 3단계 시스템 안정화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풍 건조 3단계 시스템 제작 업체(전기, 가스, 절단기, 열풍건조기, 성형포장기)간 현장점검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스템 문제 안정화 ○ 사료작물 종류에 따라 열풍 건조 조건이 다른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작물 (사료용옥수수,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에 따라 건조에 필요한 투입량, 온도 설정, 절단 길이, 건조 시간 등에 대한 건조 생산 세부지침 마련

<p>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풍건조 건조 구입 신청 및 보급방법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분들이 건조구입 신청을 쉽게 하기 위해 경주시조사료 경영체 협의회에서 신청을 단일화 하여 받는 체계를 마련 하였음 - 건조단가는 원료재료비, 가스료, 인건비등을 분석하여 kg당 550원으로 농가보급 추진 (수입건조 대비 30%저렴) - 포장무게는 소규모 농가 및 연세드신 노령층에서도 취급이 쉽도록 10kg~15kg단위 (사료용 옥수수 건조 15kg/포, 일반건조 10kg/포)로 소포장하여 보급 - 선주문 후생산 보급방식 채택 (1개월 단위, 인건비 절감) - 건조 사업장에 농가 직접 방문 수령방식 (물류비 절감)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식품부 브리핑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개발 (국립축산과학원장 발표) - 경주시 열풍 건조사업장 : 농식품부 기자단 촬영 및 방영 ○ 사료작물 열풍 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현장 시연회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축협, 한우협회, 낙농협회, 조사료경영체 협력추진 ○ 국립축산과학원(홍보팀) 열풍건조 영상물 제작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시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홍보 영상 ○ 관련기관 및 타 시군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경상북도(축산정책과), 예천군(축산과), 연암대학교(축산학과), 타시군 농업인 등 ○ 2022 경상북도 식량산업 대혁신 들녘특구 조성포럼(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발표 : 열풍 이용 건조생산 활용 건조생산 보급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풍 이용 건조생산 작업장 설치 및 농가보급체계 구축

- 신규 일자리 2명 창출
-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 3억원 절감
- 우선공급 대상농가 : 2,700호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 축산농가 건초구입 비용 절감 (연간 16억원)
 - 수입건초 대비 30% 싼 가격으로 농가보급 사료비 절감
- 소포장 생산으로 소규모 농가 조사료 이용 확대
 - 건초제품 소포장(10kg~15kg)화로 취급 및 사용에 편리
 - 가축 급여 용이 및 허실량 최소화
- 건초 수급 안정화 : 건초생산 2원화 체계로 생산량 확대
 - 열풍이용 건초 (연중생산), 태양이용 자연건초 (5월생산)

국내 최초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도입 저렴한 “경주산 건조” 보급

1. 과제 선정 내용

- 건조(수분 20%이하로 말린 풀)생산의 중요성
 - 소가 먹는 사료 중 kg당 단가가 가장 높은 사료가 건조이다.
 - 건조는 소의 생애 중 송아지 시기 5개월(생후 10일경~생후5개월) 동안은 반드시 먹여야 건강한 송아지로 자랄 수 있고, 비육시기 10개월(생후 20개월~생후30개월)간 건조를 먹여야 단단하고 하얀 지방이 생성이 되어 고급육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 경주시 건조 수급현황
 - 경주시의 건조 소요량은 13천톤으로 금액으로는 100억원의 시장성을 갖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건초의 구입 가격이 높아(kg당 700원~800원)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문제원인 분석

- 사료작물 자연건초(태양에 말린 건조) 생산단지 조성
 - 수입건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9년~2022년까지 사업비 120백만원을 투입하여 8개소 40ha의 자연건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건조생산을 추진하였다
- 자연건초(태양에 말린 건조) 생산의 3가지 문제점
 - 작업시기 기후적 영향(5월 건조작업기 평균 강우일수 16일 이상)을 많이 받고, 작업기간이 20일 정도로 짧아(4월중순~5월초순) 생산량 저하
 - 자연건초 생산 시 건조 수확 원형 롤 형태로 만들어져 롤당 무게가



- 200kg~300kg으로 운반 및 취급시 트랙터(스키로더) 부착형 원형집계가 필요
 50두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자연건초 원형 롤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건초(수분 20%) 수확 기계화 작업비와 담근먹이(수분 70%) 수확 기계화 작업비간 차등이 없어 평균적으로 담근먹이는 100평당 1롤이 생산되는데 반해 건초는 300평당 1롤이 생산되어 자연건초 생산에 필요한 기계화 작업비의 농가 자부담이 높음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공모사업 도전
 - 2019년부터 추진한 자연건초생산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열풍 건초생산 시스템 공모 최종 선정
 - 사업비 3억원(전액 국비) : 스템 장비 3종 셋트(절단기, 건조기, 압축·포장기), 시설, 기자재 등 실물 지원
 - 국내 첫 보급사례
- 국내 최초 열풍 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도입
 -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사계절 연중 건초생산이 가능한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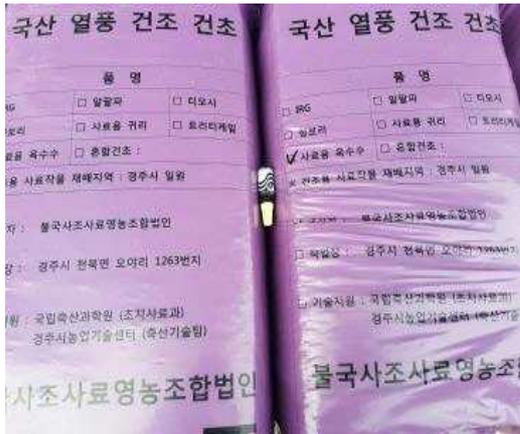


4. 장애극복

- 건초생산 사업장 부지선정 어려움 극복
 - 12개 읍·면 지역 농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의 작동 소음과 분진 발생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3번에 걸쳐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경주시 중심지역(천북면) 설치로 이용 농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 최적지 선정
- 열풍건조 3단계 시스템 작동 안정화 어려움 극복
 - 국내에서 처음 설치된 열풍(뜨거운 바람)을 이용한 건초생산 시스템이라 3단계(1.해체절단기 2.열풍건조기 3.성형·압축 포장

기)시스템 간 오작동 원인 규명 및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단계 시스템 제작 업체 간 현장 점검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스템 문제점을 안정화 하였음

- 사료작물 종류에 따라 열풍 건조 조건 상이성 어려움 극복
 - 사료작물(사료용옥수수,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별 건조에 필요한 투입량, 온도 설정, 절단길이, 건조시간 등에 대해 시험생산을 통하여 세부지침 마련
- 열풍 건조의 농가 보급 체계 어려움 극복
 - 농가 건조구입 신청을 조사료경영체협의회로 일원화 하였으며, 건조 포장 무게를 10kg~15kg으로 소포장 생산함으로써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별도의 운반장비 없이 이용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선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인건비 최소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건조사업장에 농가가 직접 방문 수령하는 보급체계를 마련함



〔경주산 건조 생산〕



〔경주산 건조 보급〕

5. 성과

- 축산농가 건초구입 비용 절감 (연간 16억원 사료비 절감)
 - 수입건초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농가 보급 및 외화절약
- “경주산 건초” 수급 안정화
 - 열풍건초 및 자연건초 2원화 생산체계 마련
- 건초 소포장(10kg~15kg) 공급으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풀 사료 이용 촉진 및 확대
 - 50두 미만 소규모 수혜농가 : 2,700호
- 농식품부 브리핑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 열풍건조기 개발 및 국내 첫 보급사례
- 사료작물 열풍 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현장 시연회 (경주시 주관)
 - 경주축협, 한우협회, 낙농협회, 조사료경영체 협력추진
- 관련기관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기술전파
 - 국립축산식품부등 관련기관 및 농업인 단체

□ 연구공모사업 선정 공문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축산과학원</p> <p>농촌진흥청</p> <p>수신 경주시장(농업기술과장) (경유)</p> <p>제목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현장 실증시험 수검</p> <p>1. 관련 :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허용부 축산환경지원과-998(2022.2.16.)</p> <p>2.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국내 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간초 및 경우분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국내 조사료 품질 관리와 건조기술 개발(AU19212022)' 과제 중점과로 있으며, 그 결과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시육기술 개발 완료 되었습니다.</p> <p>3. 개발된 시육기(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를 현장에 설치·활용하여 기존 및 현장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현장 활용 순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p> <p>5.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조용의 토기 중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현장 실증시험 수검에 적합한 토기 1종소를 수검하여 본 실증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자원개발부</p> <p>축산자원개발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주소: 경주시농업기술센터 114 전화: 041-580-6748 팩스: 041-580-6748 www.nvri.go.k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축산과학원</p> <p>농촌진흥청</p> <p>수신 경주시장(농업기술과장) (경유)</p> <p>제목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현장 실증시험 대상농가 선정 결과 및 협조 요청</p> <p>1. 관련 : 초지사료과-262(2022.3.31.),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2457(2022.4.7.)</p> <p>2.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현장 실증시험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p> <p>3.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정된 농가와의 협약 체결, 현장 데이터의 수집 등 현장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현장실증 시험 선정농가</p> <table border="1" data-bbox="877 571 1348 728"> <thead> <tr> <th rowspan="2">소재지 (사업경주소)</th> <th rowspan="2">농장주</th> <th colspan="3">농가현황</th> <th rowspan="2">시군담당자</th> </tr> <tr> <th>조사료재배 면적(ha)</th> <th>시설 (㎡)</th> <th>사육규모 (두)</th> </tr> </thead> <tbody> <tr> <td>경주시 천북면 오아리</td> <td>김○○</td> <td>150(196)</td> <td>축사 : 4,620 - 양고 : 100</td> <td>170(한우)</td> <td>김태우</td> </tr> </tbody> </table> <p>붙임 1. 농가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1부(별송). 2. 현장 실증 조사표 1부(별송), 등.</p>	소재지 (사업경주소)	농장주	농가현황			시군담당자	조사료재배 면적(ha)	시설 (㎡)	사육규모 (두)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김○○	150(196)	축사 : 4,620 - 양고 : 100	170(한우)	김태우
소재지 (사업경주소)	농장주			농가현황				시군담당자								
		조사료재배 면적(ha)	시설 (㎡)	사육규모 (두)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김○○	150(196)	축사 : 4,620 - 양고 : 100	170(한우)	김태우											
<p>공문번호: 초지사료과-362 (2022.3.31.)</p>	<p>공문번호: 초지사료과-409 (2022-4.11)</p>															

□ 건조생산 사업장 표찰



□ 열풍건초 사업장 현장 사진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사업장



경주산 건초생산 농가보급

□ 방송 및 신문보도 : MBC, TBC, YTN 등 25개 언론사 보도



열풍건초생산시스템 MBC방송



열풍건초생산시스템 TBC방송

□ 사료작물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현장 시연회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시연



열풍이용 건초제품 소개

[경산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전국 최초, 코로나19 PCR 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경산시 보건행정과 권정숙

< 요약 >

- 기존 수탁 검사의뢰 검사료 대비 자체 검사 시 **65% 예산 절감.**
- 전국 최초 코로나19 RT-PCR(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로 감염병 신속 대응.
 - 민간 검사센터의뢰 시 익일 결과 확인, 검사 건수 폭증 시 2~3일 소요, 자체 검사 실시 **음성 3시간 내, 양성 4~5시간 내 결과 확인.**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검사 지연의 해결방안으로 보건소 자체 PCR 검사로 감염병 신속 대응 코로나19 차단 기여.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경산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 최초 코로나19 PCR 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산시 남매로 158, 경산시보건소(병리검사실) ○ 추진기간 : 2021년 1월 ~ 현재 ○ 사 업 비 : 330백만원(국비 80, 도비 20, 시비 230) ○ 사업내용 : 코로나19 PCR검사 자체 실시로 감염병 조기 차단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01 : PCR 진단검사실 1차 구획 공사 ○ 2021. 05 : 중합효소연쇄반응기(PCR) 장비 구입 ○ 2021. 10 : PCR 진단검사실 2차 사무공간 분리 공사,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 2021. 11 : 전국 보건소 최초 코로나19 검사 가능 신규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지정 및 코로나19 보건소 자체 검사 실시</p>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현장 방문 결과 개선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진단검사실과 사무공간 분리 구획 공사 실시 -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론 및 현장실습으로 검사역량 강화 - 검사체계 구축 및 절차서 마련 - 검사 결과 분석 후 보고체계 마련 - 오염방지 및 내부 정도관리, 결과 오류체계 마련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PCR 검사 자체 실시로 예산 절감 효과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기준 민간 검사센터 의뢰 시 건당 71,420원 자체 검사 시 건당 25,000원으로 건당 46,420원 절감 ○ 당일 결과(음성 3시간 내, 양성 4~5시간 내) 확인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긴급 검사 대상자 : 유증상자, 밀접 접촉자, 집단시설 등 코로나19 의심자 등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신속한 결과 확인으로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 민간 검사센터 의뢰 시 대비 65% 예산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2,000건 검사 시 약 557백만원 정도 예산 절감 ○ 전국 보건소 코로나19 PCR 자체 검사 확대 분위기 조성 (타 보건소 우수사례 공유)

코로나19 PCR 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

1. 과제 선정 내용

-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의 잦은 출현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빠른 검사 결과 확인 및 비용 절감 대두
-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으며, 10개 대학과 5개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감염병 확산 위험률 매우 높음
- 기존 코로나19 검사는 민간 검사센터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여 익일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검사 건수 폭증 시 결과 확인 2~3일 소요, 감염 위험성이 높은 긴급검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 PCR 진단 검사 자체 실시

2. 문제원인 분석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실 공간 확보 필요
 - 코로나19 1급 감염병으로 일반검사실에서 검사 불가능하며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실험 가능
(‘22. 4. 25. 2급 감염병 조정)
- 장비 구입 예산 확보 필요
- 검사 인력 부족, 기존 임상병리사 2명 일반 코로나19 업무 수행
코로나19 PCR 검사 최소인력 3명
- PCR 검사 경력 전무
 - 전국 보건소 검사실 코로나19 검사 경력 전무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기존 검사실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진단검사실 공사 실

시

- 오염방지를 위해 3개(추출실, 시약제조실, 증폭실) 구획 공사
(공간 협소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
 - 추출실 : 검체 전처리 및 핵산 추출기 실행으로 RNA 추출
 - 시약제조실 : PCR 진단 시약 혼합 및 추출 시료 주입
 - 증폭실 : PCR 장비 실행 후 검사 결과 판독 및 이상 여부 확인

1차 진단검사실 3개 구획 공사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확보로 PCR 검사 장비 구입



-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채용으로 검사 인력 확보
- 임상병리사 2명 일반 코로나19 업무 병행(사례조사, 접촉자조사)

- 보건소 모든 직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주·야간, 주말 업무 병행
- PCR 진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 질병관리청과 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 질 관리 사업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교육 이수
- 코로나19 양성자 증가로 재검률도 증가하여 시약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 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예산지원은 불가능하여 질병관리청 권유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시약 지원받음

4. 장애극복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1차 현장 방문 결과 개선 권고 사항
 - PCR 진단검사실과 사무공간 분리 구획 공사 실시
 -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론 및 현장실습으로 검사역량 강화
 - 검사체계 구축 및 절차서 마련
 - 검사 결과 분석 후 보고체계 마련
 - 오염방지 및 내부 정도관리, 결과 오류체계 마련

2차 진단검사실과 사무공간분리 공사 완공



- 질병관리청과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 통과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2차 현장 방문 결과

- PCR 진단검사실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실험실 적합 판정 받음
- 전국 최초 코로나19 검사 가능 신규기관 지정으로 보건소 자체 실시를 위한 보도자료 게시 권유

<p>보건소 전국 최초 코로나19 진단검사 자체 실시</p> <p>(경산)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입력 : 2021-11-09 05:55 수정 : 2021-11-09 05:55</p> 	<p>경산시가 전국 지자체 보건소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RT-PCR검사를 실시한다.[사진=경산시 제공]</p> <p>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이달 15일부터 전국 보건소 최초로 코로나19 RT-PCR 진단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말했다.</p> <p>경산시는 위드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RT-PCR) 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도평가(검사정확성)를 통과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으로 지난 1일 지정 받았다.</p> <p>기존 코로나19 RT-PCR 진단검사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검사센터로 의뢰해 검사 다음 날 결과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긴급검사 필요시 보건소 내 RT-PCR 진단검사 시행으로 4~5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p> <p>RT-PCR 진단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로 민감도와 정확도가 뛰어나고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이도가 가장 높은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표준 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다.</p> <p>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밀접접촉자일 경우 자체 검사 실시로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RT-PCR 진단 장비는 성병(임질, 클라미디아) 등의 검사로 활용할 것"이라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p>
--	--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검사량

- PCR 검사 건수 3,872건(2021. 11. 15. ~ 2022. 09. 30. 현재)
(양성 806, 미결정 67, 음성 2,999)

○ 민간 검사센터 수수료 대비 65% 예산 절감

- 2021년 기준 민간 검사센터 의뢰 시 71,420원, 자체 검사 시 25,000원 정도로 건당 46,420원 절감
- 연간 12,000건 검사 시 약 557백만원 정도 예산 절감

○ 현재까지 전국 보건소 중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자체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단 기술 보유

- 타 보건소 자체 검사 확대 분위기 조성
 - PCR 검사 관련 선진지 견학(3개소) 및 전화 문의(20개소 이상)
 - 타 보건소에서 PCR 자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 정보공유
- 향후 PCR 장비 활용 방안
 - 신종감염병 검사 및 현재 민간 검사센터로 의뢰하는 항목 중 성병(임질, 클라미디아) 등 일반검사 장비로 활용 계획
- 신종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차단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치 있는

일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PCR 검사 진행 과정



[문경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방치 폐기물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기 관 명	경상북도 문경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문경시 관광진흥과 고인애

< 요약 >

- 방치폐기물 적지로 활용 계획이 마땅치 않았던 시유지를 활용하여 50억 규모의 tvN 드라마<환혼> 오픈세트장 유치
- 세트장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
 - 세트제작, 세트장 유지보수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제작 및 촬영 스텝의 체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오픈세트장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수입 발생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문경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방치 폐기물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590-7번지 일원 ○ 추진기간 : 2021. 05. ~ 현재 ○ 사 업 비 : 50억(민자) ○ 사업내용 : 민간자본으로 오픈세트장 건립 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후 촬영장으로 활용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2.~'21. 7.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 '21. 05. 17. : 관련부서 인허가 절차 협의 ○ '21. 05. 26. : 제작사 관계자 업무 협의 ○ '21. 08. 25. : 업무협약 체결(문경시-제작사) ○ '22. 01. 19. : tvN드라마 <환혼> 촬영 시작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 적치 폐기물 처리 후에도 활용 계획이 마땅치 않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21년간 총 3만4천평 규모의 문경새재,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여, 제작사 드라마 세트장 설치 제안 - 오픈세트장 유치를 위한 TF팀(8개부서)를 구성하여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계획이 마땅치 않던 폐기물 처리 시유지에 민간자본 50억원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 유치 ○ 공유재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 상당의 민간자본 유치 ○ 세트제작, 세트장 유지보수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50명 이상의 제작 및 촬영팀 장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촬영장 제공 및 지역 명소 노출로 지역 홍보 효과 극대화

방치된 폐기물처리장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1. 과제 선정 내용

- 폐업한 폐기물처리장이 활용계획이 마땅치 않아 방치되어 있었음
 - 폐비닐을 하루400톤 파쇄·성형하여 연료로 재가공 하던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가 2016년부터 시작 된 저유가로 인해 경영 악화로 폐기물을 적치하던 중 2018년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취소 후 폐기물 무단적치 한 것을 2019~2021년에 걸쳐 위탁처리 용역을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던 중 드라마 촬영장 부지를 물색하던 업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2. 문제원인 분석

- 사유지의 효율적 활용 미비 및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반감
 - 약 13,000m²에 달하는 사유지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장의 방치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유지 활용 방안 모색 및 민간 투자처에 적극 추천
 -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던 사유지를 활용할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촬영장 부지를 물색하던 제작사에 해당 사유지 활용을 적극 추천하였다.

4. 장애극복

- 제작사의 오픈세트장 부지 전국적 물색

- 2021년 6월 착공 가능한 13,829m²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제작사에 가온오픈세트장과 인접한 해당 부지를 추천하고, 21년간 총 3만4천평 규모의 문경새재, 가온오픈세트장을 운영한 문경시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맞춤형 현장 지원 시스템 제공 등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후보지 현장답사 끝에 최적의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최종 확정지었다.
- 인·허가에 소요되는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여부 불투명
 - 촬영장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던 초기에 제작사측이 촉박한 제작 일정과 맞지 않게 촬영장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경시에서 TF팀(8개 부서)를 구성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실제 행정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간자본유치에 성공하였다.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세트제작, 세트장 유지보수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세트제작 과정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역 근로자들과 지역의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제작 및 촬영 스텝의 체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야외세트장 준공 이후 50회 이상의 촬영으로 다수의 인원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제작사 유치 및 인기작 방영으로 지자체 홍보 효과 극대화
 - 다수의 인기작을 제작한 노하우가 있는 제작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문경시가 보유하고 있는 촬영장 및 명소 등이 다수 노출시켜 문경시의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오픈세트장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수입 발생**

- 무상사용 허가 대상 제작사 이외의 제작사가 촬영장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인기 방영작을 활용한 전시관,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람인구 유입을 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였다.

○ **문경 드라마 세트장에서 제작한 드라마 <환혼>과 연계한 지역 홍보 활동**

- 인기리에 방영 된 <환혼>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문경시의 대표 관광 상품 및 특산물 판매와 연결시킨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기획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지역 관광 상품 및 특산물을 젊은 층에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

□ 사진 자료

활용 전



활용 후



□ 언론보도 자료

'환혼' 대호국의 비밀..경상북도 문경시 폐기물 부지 [공식]

스타뉴스 김수진 / 입력 : 2022.06.28 14:00



가상의 나라 '대호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황국 '환혼' (연출 박준화/극본 홍정은 홍미란/제작 스튜디오드래곤 허이필리터) 오픈 세트장에 폐기물 부지였다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밝혔다.

스튜디오드래곤(대표이사 김영규, 김재현)은 지난해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 하내리에 방치되었던 폐기물 부지를 드라마 오픈 세트장으로 할바꿈 시켰다. 그 장소는 수 년간 방치된 폐기물이 5만톤이나 쌓여있었던 곳으로, 환혼 오픈 세트장이 간헐되며 그야말로 '상천벽 태'를 이뤘다.

지난 주 tvN과 넷플릭스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환혼'은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대호국을 배경으로,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바뀐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판타지 로맨스 황국이다. 가상의 세계가 배경이라 기존의 사극 세트장이 아닌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넓은 부지를 물색하던 중 문경시와 협약을 맺고, 세트장 착공에 들어가 11월부터 촬영이 진행됐다.

'환혼'의 미술감독은 "큰 호수를 지닌 나라 '대호국'은 신라 서라벌을 모티브로 삼았다. 현재 경주의 모습과 신라 서라벌 복원도의 모습에서 윤하가 흐르는 대호국의 기초적 형태를 잡았다"고 전하며 "그야말로 가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이나 고려 등 한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글을 적극 자용하는 등 다양한 미술적 시도를 아끼지 않았다"고 환혼 세트장 간섭도에 대한 후일담을 남긴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폐기물 부지에 '환혼'의 '대호국'이 들어선 것.

폐기물 부지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환골탈태, 잠재적인 관광 자원으로 떠오른 이번 협업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 하는 ESG 경영 사례에도 부합한다.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으로, 스튜디오드래곤은 향후 문경시와 상호 협력하여 '환혼'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tvN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kysjrnny@nntstarnews.com

※저작권재 © 리얼타임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기사주소 | <https://bit.ly/38k99Im>

□ 언론보도 자료

star 1

‘환혼’ 촬영장이 5만톤 쓰레기장이었다고? 폐기물 부지→ 오픈 세트장 환골탈태

기사입력 2022.06.28. 오전 10:26



[옛스타일 황연도 기자] 문경시의 폐기물 부지가 드라마 ‘환혼’ 오픈 세트장으로 탈바꿈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해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 하내리에 방치됐던 폐기물 부지를 드라마 오픈 세트장으로 변신 시켰다. 그 장소는 수 년간 방치된 폐기물이 5만톤이나 쌓여있었던 곳으로, 환혼 오픈 세트장이 건립되며 ‘환골탈태’했다.

□ 언론보도 자료

문경시, 인기드라마 <환혼> IP 활용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 개시!

A 조영태 기자 · 0 송민 20220704 15:30

[- 3회에 걸쳐 문경 대표 관광상품·특산물 등 판매



인기드라마 '환혼' 촬영지인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 개시. 상을 영입 할부다양 콘텐츠(방송시간) 문경시

(문경=국제뉴스) 조영태 기자 = 경북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6월 18일 첫 방송한 인기드라마 <환혼> IP를 활용하여, 네이버쇼핑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판매)를 7월 5일(화) 오후 6시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마성 오븐세트장에서 촬영한 tN 드라마 <환혼> 의 회재성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여, 문경의 대표 관광상품(가은 예고팔라, 고미열차 등)·특산물(갯사발, 오미자)을 드라마와 관련된 스토리로 꾸며 라이브커머스로 녹여낸다.

방송은 7월 5일, 12일, 19일 3회에 걸쳐 오후 6시 네이버쇼핑라이브 플랫폼(채널 channel)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본 방송 하루 전 인기 코미디언 이상준, 신기루와 함께 마성오븐세트장 등을 배경으로 제작된 스포츠 콘텐츠 영상도 같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마성 오븐세트장을 홍보하고 문경의 대표 관광지·특산품을 소개하여 향후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트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트장 내 율리마켓, 카페거리 조성 등 체험형 문화 콘텐츠 공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tN 드라마 <환혼>은 현재까지 총 6회 방영하였으며, 평균 시청률 약 5.8%로 케이블과 공편을 포함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동현 관광진흥과장은 "우리 문경에서 촬영한 tN 드라마 <환혼> 세트장을 문경의 대표 관광상품·특산물과 연결하여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문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태 기자 | yj2177@naver.com

[인천광역시 중구]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담 당 자	박준형

< 요약 >

-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60년대 후반 인천항 개발 당시 매립업체가 조성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소유자 변경 후 토지사용료 요구 등의 민원이 야기됨.
- 이런 분쟁해소를 위하여 『도로법』상 준용도로 지정을 통하여 도로관리 권원을 확보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 사유지 도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실효 내지는 보상비 집행이 불가피하였으나,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을 통하여 손실보상 예외대상로 판단하여,
- 연안동 사유지 도로 20개 노선 토지보상비 12,92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전국 지자체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좋은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단초를 마련하였음.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 우수사례 요약서〉 세출 효율화

□ 사례명 :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 향동 소2-8호선 등 20개 노선 ○ 시설규모 : 연장 3,326m, 폭원 6~8m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비 : 16,257백만원(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사 비 : 3,331백만원 - 보 상 비 : 12,926백만원(전액 절감)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 27 : 도로상 컨테이너 및 주차방해시설 설치 민원 ○ '15. 2. 9 : 연안동 공유수면매립 자료 요청(국가기록원) ○ '15. 3. 13 : 소2-5호선 도로사유지 반대 청원(244명) ○ '15. 7. 21 : “준용도로” 지정 관련 질의(국토교통부) ○ '16. 1. 11 : “준용도로” 지정 관련 법률자문(고문변호사) ○ '16. 4. 26 : 연안동 사유지도로 민원사항 조치계획 ○ '16. 5. 2 : 준용도로 공고(소2-5호선) ○ '19. 10. 1 : 2020~2024년 도로개설 추진계획(중기지방계획) ○ '20. 4. 2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보고 ○ '20. 6. 11 : 준용도로 공고(소2-4호선외 18개 노선) ○ '20. 7. 1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1. 6 : 준용도로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행정심판 청구 ○ '20. 12. 21 : 행정심판 재결(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동 공유수면매립 관련, 市 기록물실(1회), 국가기록원(2회) 방문을 통한 사유지도로 형성과정 자료 확보. ○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용료 청구에서 부담이 없어짐. ○ “준용도로” 공고는 새로운 행정행위가 되어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하여 토지 보상없이 도로관리 권원 확보.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동 사유지 도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던 중, 도로관리 측면에서 끝나지 않고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 준용도로를 공고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별도 실효고시後, 일반 도로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토지보상비 절감.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동 지역 사유지도로 20개 노선 토지보상비 12,926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타 지자체 유사사례에 좋은 선례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초 마련.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1. 과제 선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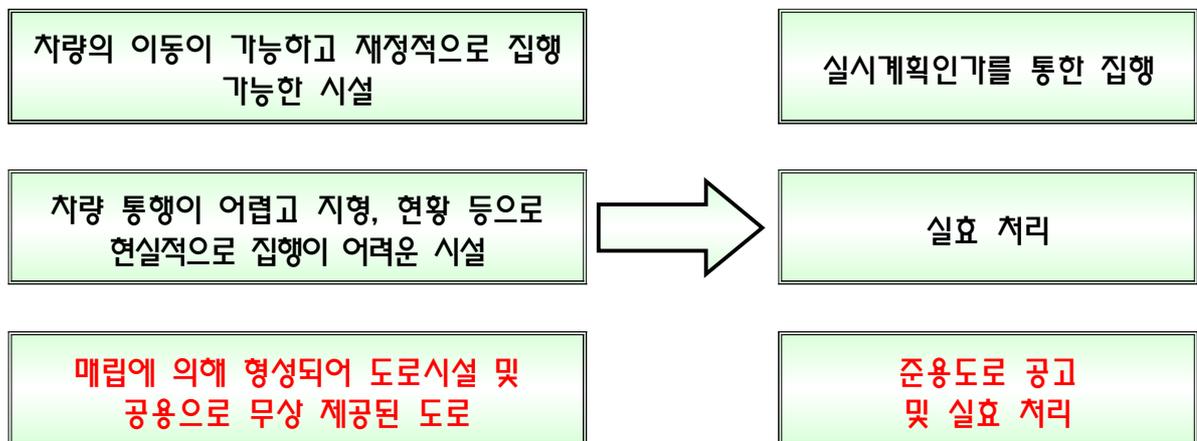
- 사유지 도로의 분쟁해소
 - 인천 중구에 위치한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60년대 후반 인천항 개발 당시 매립업체가 조성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 2015년 1월 일부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요구하며, 주차라인 조성 후 주차료 징수 등으로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켜 이에 따른 해소방안 필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절감 방안 모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며, 2000. 7. 1. 이전 결정된 시설은 2020. 7. 1. 실효됨을 규정.
 -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96. 1.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써, 2020. 7. 1. 자동 실효될 위기에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방안이 요구됨.

2. 문제원인 분석

- 사유지 도로 형성과정이 중요 Key-Point
 -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 및 현황도로는 점유 주체가 관할 행정청으로서,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 주변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는 달리 판단됨.
 - 이에 연안동 사유지 도로의 형성과정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2회 방문하여 주변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자료 확인.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유지 도로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확인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코자 하였으나, 비법정 도로인 사유지 도로는 민·형법 등에 따라야 하고, 행정법상 규율대상이 되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집행을 통한 도로법상 권원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수용이 선행되어야 하나, 연안동 일원 사유지도로 보상액이 과다하여 단기적 집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불문하고, 사유지 도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며, 사용료 청구에서 자유로운 『도로법』 상 “준용도로”의 지정 효과를 확인, 고문변호사 및 국토교통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준용도로”를 공고하여 위법행위에 적극 응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검토



-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조성 당시부터 도로로서의 형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별도의 시설공사가 필요치 않으나,
- 비법정 도로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지 않아, 분쟁 유발 시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권을 제한하고 도로점용 허가 등 관리 권원이 확보되며, 손실보상 등 토지사용료 청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준용도로” 지정이 합리적이라 판단.

4. 장애극복

- “준용도로” 지정 前 관리형태
 - “준용도로” 지정 이전에는 행정법상 규율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료 징수를 통하여 분쟁을 유발시켜, 간접적으로 행정청에 토지매입을 압박하였고,

- 직접적으로는 도로사용료 청구 민원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므로, 인천 중구청은 사유지 도로의 형성과정을 핵심 내용으로 적극 응대하여 승소함으로써, 도로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었음.

○ “준용도로” 지정 後 관리형태

- “준용도로”의 지정 효과는 ‘사권의 제한’과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 대부분 관할 행정청에 유리한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토록 행정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준용도로 공고”는 새로운 처분이 되어 손실보상 문제가 대두됨.
- 다만, “준용도로 공고”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는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정립된 사례가 없어 ‘손실보상’ 청구시 승소 여부는 자신할 수 없었으나,
- 2020. 11. 6. 해당 토지소유자가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도로 형성과정을 근거로 사용수익권이 해당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 아님을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음.
- “준용도로 공고”로 현재는 사유지 도로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도로시설물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기타 손실보상에서도 자유로워 토지보상없이 권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예산절감 내역

- 도시계획시설 집행대상 20개 노선(도로 연장 3,326m) 토지보상비 12,926백만원 전액 절감.
- 연안동 준용도로 20개 노선 집행계획[’23년은 보상비, ’24년은 공사비]

연번	노선 번호	사업규모(m)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백만원)					
		폭	연장	사업비	2020	2021	2022	2023	2024이후
소 계			3,326	16,257	0	0	0	12,926	3,331
46	항동 소2-8	8	362	2,278				1,864	414
47	항동 소2-6	8	335	2,108				1,725	383
48	소2-7	8	322	1,180				812	368
49	항동 소2-10	8	236	867				597	270
50	항동 소2-5	8	230	1,230				967	263
51	소2-4	8	185	990				778	212
52	항동 소3-10	6	249	1,216				1,002	214
53	항동 소3-7	6	173	847				699	148
54	항동 소3-8	6	156	763				629	134
55	소3-6	6	154	756				624	132
56	소3-22	6	141	711				590	121
57	항동 소3-11	6	116	565				465	100
58	소3-20	6	111	450				355	95
59	항동 소3-4	6	102	395				307	88
60	소3-2	6	89	363				287	76
61	항동 소3-3	6	89	358				282	76
62	항동 소3-9	6	87	425				350	75
63	소3-21	6	81	324				255	69
64	소3-19	6	72	288				226	62
65	소3-1	6	36	143				112	31

※ 2020~2024년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자료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0-119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항동7가 일원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185	대-5 항동7가 17-113	대2-20 항동7가 Z-222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2	5	8	국지도로	230	대-5 항동7가 58-93	대2-20 항동7가 28-130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2	6	8	국지도로	335	대2-19 항동7가 58-6	대-8 항동7가 58-96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2	7	8	국지도로	322	대2-20 항동7가 58-70	대-5 항동7가 58-54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2	8	8	국지도로	362	대2-20 항동7가 58-84	대-5 항동7가 58-77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2	10	8	국지도로	236	대-5 항동7가 65-7	소3-23 항동7가 65-1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36	대-15 항동7가 27-126	소3-19 항동7가 Z-196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89	소2-5 항동7가 27-211	소2-4 항동7가 Z-231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89	소2-5 항동7가 27-222	소2-4 항동7가 Z-132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02	대-5 항동7가 87-6	소3-22 항동7가 87-15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54	대-8 항동7가 85-3	소2-10 항동7가 85-30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173	대-8 항동7가 85-7	소2-10 항동7가 85-47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156	대-5 항동7가 85-22	소2-10 항동7가 85-42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87	소3-10 항동7가 85-38	소2-10 항동7가 85-38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249	대-5 항동7가 85-10	소3-23 항동7가 85-50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11	6	국지도로	116	대-5 항동7가 85-15	소3-6 항동7가 85-52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19	6	국지도로	72	소2-4 항동7가 27-199	소3-1 항동7가 Z-196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20	6	국지도로	111	대-5 항동7가 Z-91	소3-3 항동7가 Z-215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81	대-5 항동7가 27-207	소3-3 항동7가 Z-215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폐지	소로	3	22	6	국지도로	141	대-5 항동7가 87-1	대-8 항동7가 87-15	일반도로	인고제1996.3호 1996. 01. 10.	실효

[서천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서천형 주민참여예산"과 어우러지는 "서천형 예산효율화"
기 관 명	충청남도 서천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기획감사실 정래훈

< 요약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서천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 읍면 자치계획형(공모형, 일반형), 군민제안(일반형, 청년주도형), 신규시책심의
- 서천형 예산효율화 운영
 - 경상경비 예산요구액 대비 20%감면(80%편성) 및 10% 유보액 감배정을 통한 예산절감효율 극대화, 지방보조금 자부담 의무편성 항목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전원을 서천군 예산지킴이 위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노력(2023년 여성 장애인, 여성 사회복지전문가 위촉)
 - 주민참여예산 읍면자치계획형 추진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참여형 감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교육을 통한 전 군민 감시역량강화
- 주민참여예산 신규시책 예산편성 심의를 통한 군민 맞춤형 시책 발굴
- 서천군 알기쉬운 예산백서 제작 - 예산&예산낭비·보조금낭비신고센터 홍보
- 전 국민 참여예산편성 추진
 -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2,382명) - 온오프라인 동시 시행
 -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사업 심의를 위한 온라인 전국민 투표 시행(1,806명 참여)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12.

서 천 군 수 김 기 응 (관인)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귀 하

□ 사례명 : "서천형 주민참여예산"과 어우러지는 "서천형 예산효율화"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3. 1. ~ 2023. 12. (매해 추진 중) ○ 2023년 서천형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table border="1" data-bbox="416 360 1423 510"> <thead> <tr> <th rowspan="2">공모유형</th> <th colspan="3">군민제안</th> <th colspan="3">읍면자치계획형</th> <th rowspan="2">신규시책심의</th> </tr> <tr> <th>총계</th> <th>일반공모</th> <th>청년주도</th> <th>총계</th> <th>공모형</th> <th>일반형</th> </tr> </thead> <tbody> <tr> <td>공모규모 (단위:억원)</td> <td>17</td> <td>12</td> <td>5</td> <td>18</td> <td>5</td> <td>13</td> <td>2023년 신규시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양한 계층 구성노력 ※ 2023년 신규위촉(2인): 여성 장애인, 여성 사회복지전문가 ○ 예산효율화 추진현황 - 계획적 절감운용(경상경비 20% 의무절감+예산유보액0%설정) : 55억원 절감 - 보조금 지원사업 의무적 자부담 도입 : 24억원 절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 도 통보분 대비 75% 편성 등 ○ 군민 예산감시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지킴이 위촉 - 주민참여예산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 추진 모니터링 추진("22.9.) ○ 전국민 예산편성참여 추진현황 -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 2,382여명(온오프라인) -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사업 : 1,806명(온라인) 	공모유형	군민제안			읍면자치계획형			신규시책심의	총계	일반공모	청년주도	총계	공모형	일반형	공모규모 (단위:억원)	17	12	5	18	5	13	2023년 신규시책
공모유형	군민제안			읍면자치계획형			신규시책심의																
	총계	일반공모	청년주도	총계	공모형	일반형																	
공모규모 (단위:억원)	17	12	5	18	5	13	2023년 신규시책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1. 4. 2022년 서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지킴이 운영계획(군수 결재) ○ '22. 1. 11. 2022년 서천군 예산효율화 추진계획(군수결재) ○ '22. 4. 27. 2022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보고(군수 권한대행 결재) ○ '22. 5. 3. 2022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및 원안가결 ○ '22. 9. ~ 10. 2023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심의(4~6차회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으로 보고받는 주민참여예산 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필요 - 읍면자치계획형(일반형, 공모형) 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상황 평가를 통한 세밀한 점검 추진) ○ 공무원(민간보조금담당자)+예산지킴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 경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요구액 대비 20% 감면 + 10% 감배정을 통한 예산효율화 극대화 - 지방보조금 자부담 설정 의무편성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 전국민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추진 - 신규시책 예산편성 심의를 통한 군민 맞춤형 시책 발굴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2,382명) -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사업 온라인 전국민 투표시행(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 알기쉬운예산백서 제작을 통한 예산알리기 & 보조금·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립(주민 눈높이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주민만족도 ↑)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상경비 절감(55억원)을 통한 사업(시설사업, 보조사업 등)예산 편성 추진 ○ 전국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통한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추진 ○ 재정분권에 발맞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예산감시 역량강화 지속 추진 																						

"서천형 주민참여예산"과 어우러지는 "서천형 예산효율화"

1. 과제 선정 내용

- 서천군 예산 7천억원('22년 제2회추경) 돌파에 따른 예산 편성 ~ 집행까지 주민시각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살펴나가는 모니터링 필요
 - ※ 2018년 당초예산 3,986억원, 2022년 제2회 추경 7,120억원 1.8배 증
- 예산 증가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및 지방보조금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확대 및 관심으로 참여위원들의 예산 감시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

2. 문제원인 분석

- 재정분권에 따른 예산규모의 급격한 증가 및 공무원 정원 증가 따른 인건비 증가로 각종 경상경비 증대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지속적 증가

(단위:천원)	총 계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2-01)	행사운영비 (203-01)	국내여비 (202-01)
2018년 당초	20,602,564	10,168,026	7,047,954	1,821,241	1,565,343
2022년 당초	24,894,817	10,274,167	9,785,064	3,848,654	986,932
증가율	17.24%	1.03%	27.97%	52.68%	△58.61%

- 지방보조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관리실태 및 부정수급 문제점 지속적으로 제기

(단위:천원)	총 계	사회복지법 정운영비보 조 (307-10)	민간단체법 정운영비보 조 (307-03)	사회복지사 업보조 (307-11)	민간경상사 업보조 (307-02)	민간행사사 업보조 (307-04)	민간자본사 업보조 (자체재원) (402-01)
2018년 당초	37,603,431	11,781,971	1,097,812	3,158,650	15,173,461	2,417,282	3,974,255
2022년 당초	45,488,979	15,143,523	1,483,920	7,268,469	16,302,537	2,149,150	3,141,380
증가율	17.34%	22.20%	26.02%	56.54%	6.93%	△12.48%	△26.51%

3. 방안 마련 및 실행

- 2020년 찾아가는 세미나(2020.9.25.)에서 지방보조금 자부담 설정 등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 2020.9.25.(금) 14:00 ~ 17:10 찾아가는 세미나(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개최)
 - * 재정분권과 연계한 서천군 자주재원 확충방안
 - * 지방보조금 사업 자부담 설정 등 관리방안
 - * 부동산관련 지방 세제의 최근 동향



서천군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서천=서천군 제공

[서천]서천군은 지난 25일 '서천군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학계 교수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재정분권과 연계한 서천군 자주재원 확충 방안 △지방보조금 사업 자부담 설정 등 관리 방안 등을 세부주제로 진행했다.

한국지방재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수비세를 인상, 복지사업 정부-지방 간 기능 재배분, 보통교부세를 조정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순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자치단체 간 중립의 규모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충북대학교 윤태섭 교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의무화 부정부수립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공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세입예산 확충 및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 다.

노익래 교수는 "아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서천군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건실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저변에 지속 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을 기자

<저작권자>①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병을 byee000@daummail.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실태 조사결과 일정부분 자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식 부정수급 근절에 도움(74.2%), 자부담 의무화 방식(사업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방안(38.05%))

- 2021년부터 자체보조금에 대해 사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추진
 - * 307-03(자부담율 자율결정), 307-02(0~65%), 307-04(0~20%), 402-01(0~60%)
- 각종 경상경비 증대에 따른 20+10 예산절감추진
 - 경상적 경비 20% 의무적 절감 편성(요구액 80% 편성) + 예산유보액 10% 설정

서천 공동체 개발 지원	50,440	56,440	△6,000
201 일반운영비	50,440	56,440	△6,000
미 사무관리비	50,440	56,440	△6,000
○의회운영자료 제작 15,000원+60부+6회+80%	4,320		
○군정홍보 책자 발간 15,000원+500부+80%	6,000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10,000,000원+1회+80%	8,000		
○서천 공동체 홍보신문광고 12,000,000원+1회+80%	9,600		
○서천 공동체 조성 관련 워크숍 강사수당 (130,000원+80,000원)*3명*4회	2,520		
○서천군 전략사업 관리 워크숍 운영 5,000,000원+4회+80%	16,000		
○민선8기 공약목표관리제 운영 5,000,000원+1식+80%	4,000		

세부/편성목/동계목/이월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기배정액	원인행위액	배정잔액
☐ 총계	456,984	476,984	461,790	380,188	15,194
☐ 예산의 편성과 운용	274,550	294,550	287,599	232,197	6,951
☐ 201 일반운영비	65,340	85,340	78,806	76,747	6,534
☐ 201-01 사무관리비	65,340	85,340	78,806	76,747	6,534
☐ 당해예산	65,340	65,340	58,806	56,747	6,534
☐ 명시이월예산	0	20,000	20,000	20,000	0
☐ 202 예비	4,170	4,170	3,753	3,753	417
☐ 202-01 국내여비	4,170	4,170	3,753	3,753	417
☐ 당해예산	4,170	4,170	3,753	3,753	417

※ 2021년 51억원, 2022년 55억원 절감 → 군민을 위한 복지예산&사업예산 환원

문서번호	기획감사실-495
등록일자	2022. 01. 11.
결재일자	2022. 01. 11.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감사실	부군수	군수	결
정태훈	구재정	정태훈	김성관	노박래	재
협조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신현경 류아름 김성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2년 서천군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

■ ① (계획적 절감 재정 운용: 20+10 예산절감 추진) 6,659,558천원 절감
- 경상적 경비 20% 의무적 절감 평정(요구액 80% 편성)
+ 예산유보액 10% 설정(부서별 유보액 총량제 운영)

■ ② (보통교부세 자체절감 노력재정분석과 연계한 강력한 세출 기준 관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등 기존 경비 한도액 준수
-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위탁금 최소화 운영
- 보조금 지원사업 의무적 자부담 비율 도입: 2,362,070천원 절감
- 3년 연속 지속된 보조금 지원사업 일괄제 운영
- 자체절감 노력도 및 통계 지표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관리방안 마련

서천군(기획감사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2년 서천군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

1. 2022년 중점 추진 방향

■ ① (계획적 절감 재정 운용: 20+10 예산절감 추진) 6,659,558천원 절감
- 경상적 경비 20% 의무적 절감 평정(요구액 80% 편성)
+ 예산유보액 10% 설정(부서별 유보액 총량제 운영)

■ ② (보통교부세 자체절감 노력재정분석과 연계한 강력한 세출 기준 관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등 기존 경비 한도액 준수
- 행사·축제성 경비 사전심사의 및 민간위탁금 최소화 운영
- 보조금 지원사업 의무적 자부담 비율 도입: 2,362,070천원 절감
- 3년 연속 지속된 보조금 지원사업 일괄제 운영
- 자체절감 노력도 및 통계 지표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관리방안 마련

○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어우러지는 “서천형 예산효율화 추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지킴이로 위촉하여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읍면자치계획형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매년 9월 추진)

5. 보도자료

주민 참여예산 모니터링 사업은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제1차사업 집행 모니터링 실시

서천군 예산지킴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16일 읍면 지역 계획을 참여예산제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했다.

읍면 지역계획을 참여예산제인 1차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지킴이 1차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모니터링은 읍면지역에서 1차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지킴이 1차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천군 예산지킴이, 사업현장 점검

22개 사업현장을 점검한 예산지킴이 위원회는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예산지킴이 위원회는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천군 예산지킴이 군민의 시각에서 현장 점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1차사업 집행 모니터링 실시

서천군 예산지킴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16일 읍면 지역 계획을 참여예산제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했다.

읍면 지역계획을 참여예산제인 1차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지킴이 1차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지킴이, 사업현장 점검

22개 사업현장을 점검한 예산지킴이 위원회는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예산지킴이 위원회는 예산지킴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노력(다양한 분야의 예산감시)
 - 무분별한 예산수반되는 신규시책 주민 눈높이 검토를 통한 군민맞춤형 시책 발굴(평가를 통해 70점이상 사업 편성, 미만 사업 삭감)
 - 공무원(민간보조금) +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종 사업) 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추진
- 군민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한 전국민 예산 설문조사 추진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2,382명) 추진
 - ※ 온(군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및 오프라인 조사 추진



서 천 군

수신 내부결재 (결유)
제목 2023년 예산편성 방향 수립을 위한 범군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1. 기획감사실-6011(2022.04.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서천군 예산 편성 방향 수립을 위한 분야별 범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목적: '2023. 서천군 미래를 여는 예산 편성 방향 수립,
나. 조사기간: 2022. 4. 25.(월) - 5. 31.(월)
다. 참여인원: 2,382명(온라인 244명, 오프라인 2,138명)
라. 조사방법: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서면조사) 병행 시행
마. 조사내용: 11개 분야별 우선 투자 사업 순위 선정 등
바. 전년 대비 개선사항
1) 다양한 군민 의견 반영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 설문조사 대상 추가 : (2021년) 2,278명 → (2022년) 2,382명
2) 군민 안사 선하를 알아보고자 분야별 토기 사업 동일하게 유지
사. 분야별 1순위 사업 내역

분야명	세부사업	특표율
O1 일반관광경영	인구 증가 정책 추진(청년 지원 정책, 저출산 대책 포함)	54.3%
O2 관광질서 및 안전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행복학습센터, 중학교육센터 운영 등)	46.4%
O3 교육	세류항 관광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H/W) 개발	31.2%
O4 문화 및 관광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처리	29.9%
O5 환경	아동 보육(학대 예방) 및 청소년 복지 지원	50.8%
O6 사회복지	맞춤형 방문요양관리 및 예방접종 확대	29.9%
O7 보건		34.3%

분야명	세부사업	특표율
O8 농림해양수산	고품질·친환경·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가공산업 등)	28.5%
O9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29.1%
10 교통 및 유통	공공주차장 확충 및 청정차 개설, 불법 주차차 단속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5.7%
11 국토 및 지역개발	기개화 전략로, 농로포장, 흙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	37.9%

붙임 2023년 서천군 예산 편성 방향 수립 범군민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주무관	협조관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영예순	부군수	김정광
김주	김재훈 2022. 8. 24. 녹취		김희진	김희순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9229		김수			
주 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기획감사실					www.seochon.go.kr
전화번호 041-950-4007	팩스번호 041-950-4277 / katirne23@korea.kr					/ 미공개(5)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합니다. 개인정보는 아님 국적이 달라지면 반드시 바뀌셔야					

-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사업 편성심의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추진(1,806명)
- ※ 온(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시행



서 천 군

수신 내부결재 (결유)
제목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2023년 군민 제안공모 사업 온라인 사전 투표 계획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2023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라 2023년 군민 제안공모 사업에 대한 온라인 사전 투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운영방법: 국민선문고 국민생각함·광화로 1번가 연계 사전 투표 시행
2. 투표기간: 8. 29.(월) - 9. 18.(일) / 21일간
3. 투표대상: 군민 제안공모 사업 63건
4. 투표방법: 63건의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 1건 선택
5. 결과방법: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 30명 반영
6. 민선년도: 투표 참여자 대상 20명 선정, 5천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증정

붙임 2023년 군민 제안공모 사업 온라인 사전 투표 계획 1부, 끝.

주무관	협조관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영예순
김주	김재훈 2022. 8. 24. 녹취		김희진	김희순
시행	기획감사실-12651		김수	
주 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www.seochon.go.kr
전화번호 041-950-4007	팩스번호 041-950-4277 / katirne23@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합니다			



서 천 군

수신 내부결재 (결유)
제목 2023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군민 제안공모 사업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 보고
1. 기획감사실-12651(2022.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23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군민 제안공모 사업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운영방법: 국민생각함+ON국민소통 연계 사전 투표 시행
나. 투표기간: 2022. 8. 29.(월) - 2022. 9. 18.(일) / 21일간
다. 참여인원: 1,806명(ON국민소통 831명, 국민생각함 975명)
라. 투표방법: 63건의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 1건 선택
마. 결과방법: 30명 선정 기준 순위별 0.25점씩 차등 적용

붙임 1. 2023년 주민참여예산 군민 제안공모 사업 가점 부여 검토 내역 1부,
2. 2023년 주민참여예산 군민 제안공모 사업 온라인투표 참여자 의견 1부, 끝.

주무관	협조관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영예순
김주	김재훈 2022. 8. 24. 녹취		김희진	김희순
시행	기획감사실-14212		김수	
주 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www.seochon.go.kr
전화번호 041-950-4007	팩스번호 041-950-4277 / katirne23@korea.kr			/ 미공개(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합니다			

- 매년 신규시책 검토시 주민의 눈높이에서 검토 필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시책 평가를 통한 신규시책 편성 검토
- 보조금+사업 추진 감시 역량 부족
 - 공무원 :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시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관리역량교육 추진(상,하반기 2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연 1회)
 - 주민자치위원회 :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읍면별 6회)
- 서천군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세입,세출,보조금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개최 2020년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를 통한 민간보조금 관련 자부담을 설정 의견 검토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서천형 주민참여예산 확립
 - 군민제안사업(일반형, 청년주도형), 읍면자치계획형참여예산사업(일반형, 공모형), 신규시책 예산편성 심의
 - ※ 주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만족도 ↑
- 매년 증가하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사업 재투자 추진
 - 20% 절감액 : 각종 군민을 위한 SOC사업 등으로 투자
 - 10% 유보액 : 정리추경 채용사용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차년도 투자
 - 2021년 50억원 / 2022년 55억원 절감효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지킴이로 위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계각층 위촉 노력
 - ※ 2022년 신규위촉 : 여성장애인, 여성사회복지전문가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예산편성액 + 민간보조금 지속 증가에 따른 매년 2천만원 이상 투자하여 민간 역량강화 추진
- 전국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통한 군민맞춤형 예산편성 추진
 - 2023년 예산편성 온오프라인 2,400여명 참여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1,800여명 참여

[충청남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전국최초)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활용으로 20억이상 예산절감 - 예산 줄이고, 활용 높이고, 도민 서비스 품질은 향상 -
기 관 명	충청남도 본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데이터정책관 신형섭

< 요약 >

- (문제점) 기존 도, 시·군의 민간데이터 구매는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비용 과다** 및 **일회성 활용으로 자원 낭비 요인 발생**
 - 시군별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및 재정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 어려움
 - (추진방안) 도에서 시군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공동구매로 시군 예산부담을 줄이고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에 탑재하여 시군과 연계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과 협업분석 과제 수행 등 활용체계 마련
 - (성과) 4개분야 48종 개별구매시 27.7억원(추정액) - 공동구매 비용 7.5억원
 ⇒ 20억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 α (데이터의 가치)
- ※ 타지자체로 확산시 국가차원의 예산 절감효과 기대



보령시
전산팀장

"2천만원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성과 체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수의계약 수준의
 용역사업 추진, 결과물 **만족 최대**, 앞으로도 적극 활용 예정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충청남도지사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최초)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활용으로
20억이상 예산 절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개별적·산발적으로 구매중인 민간데이터를 비용대비 효율성있는 구매방안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22. 4. ~ 12. ○ 사 업 비 : 9억원(최종낙찰금액 7.5억원) ○ 사업내용 : 4개분야 48종 민간데이터 구매(유동인구 16, 카드소비 22, 신용부채정보 9, 내비게이션 이동 1) 및 시군 연계 등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2. : 지역빅데이터허브사업공모시(행안부) 최초의견수렴 ○ '21. 7. : 도-시군 데이터 협의회 개최 2차 의견수렴 ○ '21. 12. : 시군별 동의 및 예산확보 ○ '22. 2. : 데이터협의회 개최 구매범위 등 협의 완료 ○ '22. 4. ~ : 사업자 선정 완료, 데이터 탑재 및 연계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데이터 요구사항 다양, 재정여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포털 운영중인 시군의 데이터 요구는 대부분 수용 - 분담금을 도와 시군이 3:7로 분담하고, 시군은 기본비용 + 인구(50%)/면적(50%) 비율로 균등과 차등을 혼합하여 분담금 산출 - 도-시군간 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조율 ○ 개별구매시 시군 예산만으로는 구매 불가능한 데이터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 4개 분야 48종, ('23년도)4개 분야 52종으로 확대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 예산을 분담하여 사업추진(도에서 총괄) ○ 데이터포털 운영 시군은 도 데이터포털과 연계 처리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협업과제(대표관광지, 축제) 분석 추진 ○ 민간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도내 공공기관까지 사용 범위 확대(충남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관광재단 등) * 데이터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구매시 27.5억원 소요 대비 실구매 비용을 제외한 2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 α(데이터의 가치) ○ '21. 9월말 기준 도·시군·공공기관 등에 32건 데이터 제공으로 데이터 활용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농촌공간구조 분석 활용 - (타당성조사) 서산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분석 연구 - (모니터링)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경제위기 진단 등 활용

[전국최초]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활용으로 20억원이상 예산 절감

- 예산은 줄이고, 활용도 높이고, 도민 서비스 품질은 향상 -

1. 과제 선정 내용

<강점기회전략>

道 데이터포털 '올담' 을 중심으로 시군구매요구를 충족하게 민간데이터를 제공하고 공동활용방안을 제시

- (강점) 지역빅데이터 허브 사업(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이용 방안으로 道데이터포털을 통해 민간데이터 공동 활용 가능
- (약점) 민간데이터의 구매 경험이 적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역량 부족
- (위기) 공공·행정 데이터만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않음
- (기회) 데이터포털 운영중인 논산의 민간데이터 구매내역을 중심으로 시군 활용 확대 기회(천안, 아산, 서산, 금산 등 포털 개발)

2. 문제원인 분석

일회성 활용 민간데이터 구매의 자원 낭비 요인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 및 의회 동의(이해/설득) 문제

- 개별적·산발적인 데이터의 구매로 비용과다 및 일회성 활용으로 자원 낭비 요인 발생
-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정책활용 분석을 위해 도와 15개 시군 별 민간데이터 구매할 경우 상당한 예산(15억원)이 소요
-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는 시군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필요성은 공감하나 축적가능한 시스템이 없고, 예산이 수반될 경우 의회에서 예산 확보 어려움

3. 방안 마련 및 실행

①사전조율 → ②시군동의 → ③道 총괄추진 → ④연계활용 → ⑤체계유지

- 15개 시군 및 민간데이터 보유업체와 사전 업무 조율
 - 15개 시군별 데이터 구매 여부(동의) 및 데이터셋 사전 확인
 - 민간데이터 보유업체와 15개 시군 사용 및 공공기관까지 사용범위 확대 협약 체결
- '도-시군 데이터 협의회'에서 도와 시군간 분담률 협의(9억원 기준)
 - 도와 시군간은 3:7로 예산 분담 협의
 -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정액으로 일부 균등 분담

※ 시군간 차등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액을 '22년 5백만원 → '23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근거 : 2023년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추진 계획)

 - 시군별 인구분담금(50%)와 면적분담금(50%)로 하여 나머지 분담금을 차등 분담
- 협의자료를 종합하여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추진 계획' 마련 시군 배포('21. 8.)
 - 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취지, 효과성, 활용성 등 다양한 내용 포함하여 시군 의회 설득 노력 → 15개 시군 공동구매 동의 완료('21. 12.)
- 도에서 총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22. 4.)
 - 4개분야 48종으로 9억원 예산대비 7.5억원(낙찰)에 '22년도 사업 추진
 - 데이터 표준화 작업 및 15개 시군별로 데이터 구분 작업 실시
- 도-15개시군-공공기관과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협업과제 분석 추진
 - 1차 워크숍('21. 4.), 2차 워크숍('21. 6.)을 통해 15개 시군별 주요 관광지 분석과 축제(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분석 추진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내 민간데이터 탑재 및 시군 연계('22. 9.)
 - 플랫폼이 있는 시군(천안, 아산, 서산, 논산)은 DB연계, 플랫폼에 없는

시군은 '올담'에서 민간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올담' 대민서비스 페이지에서 일부 민간데이터 통계자료 제공

○ 도-사업수행업체-민간데이터제공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SKT실시간 유동인구 페이지 '올담'에 게시 및 활용

-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 7. 16. ~ 8. 15.), 계룡세계군문화축제('22. 10. 7. ~ 23.) 기간 조직위 및 해당 시군에 일단위 방문인구 제공

<민간데이터 주요 활용 실적>

- ▲ (공모사업)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농촌공간구조 분석 활용(유동인구)
→ 아산, 서산, 부여, 예산 4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200억원(5년간) 확보**
- ▲ (타당성 조사) 서산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분석 연구용역(유입인구)
※ 전국 → 제주공항 방문 유입인구(서산공항 반경 100km)를 통해 서산공항 수요확인
- ▲ (모니터링) 경제동향 분석센터 경제위기 진단 등 활용(카드소비, 신용정보 등)
- ▲ (분석활용) 교통사고 분석, 자영업자 분석, 상권분석, 시·군별 관광 축제 분석 등 다수

4. 장애극복

**공동구매시 균등 + 차등분담을 적용하여 시군별 예산 부담 경감
도-시군간 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장애 극복 노력**

○ 시군별 데이터 요구사항 다양, 재정여건 상이함에 따라 조율 어려움

- 도-시군간 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21년도 3회, '22년도 3회 개최하여 데이터 요구 사항(추가 데이터 제공 및 DB연계), 예산분담률(균등분담과 차등분담 적용), 잔여예산 처리 방안(시군에 반납처리) 등 도-시군간 정보 공유 및 의견조율

○ 도내 실과,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데이터 무상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 충청남도 민간데이터 제공 및 활용 가이드 라인 마련('22. 4.)

- 민간데이터 활용 독려 및 분기별 민간데이터 제공 내역 알림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예산절감 + 도·시군·공공기관 활용 + 협업체계 마련 + 타시도 확산

- 민간데이터 공동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 20억원 이상
 - 27.7억원중 민간데이터 구매 비용 7.5억원 제외한 금액
 - ※ 산출식 : 도 2.7억원 + 15억원(15개시군×1억원) + 10억원(21개 공공기관×0.5억원)
- ※ '22년 조달청나라장터 민간데이터 구매 내역 참고('22. 1. ~ 9.)
 - 광역단위 : **최저_대전(1.5억원, 2종), 최고_경기(3억원, 36종)**
 - 시군단위 : **최저_경북 영천(55백만원 2종), 최고_충북 충주(143백만원 5종)**
 - * 종수와 단가는 데이터셋에 포함된 속성과 타 과업의 포함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구매로 **4개분야**(^①통신기반유동인구, ^②카드소비, ^③신용/부채, ^④내비게이션이동) **48종의 다양한 데이터셋 구매**(타 지자체 비교시 활용도↑)
 - 플랫폼이 있는 4개 시군 데이터 연계로 시군 활용 활성화
 - 천안, 아산, 서산, 논산의 경우 1개월 주기로 데이터 전송
 - * 충남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광재단 등 공공기관 활용 확대(협약)
 - 15개 시군별 주요 관광지 분석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축제 분석으로 협업분석 체계 마련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군-공공기관(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관광재단)간 협업과제로 수행
 - 타 기관(광역시도 중심)으로의 확산 가능성
 -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시군 전체를 묶는 방향(데이터셋 조율 어려움) 보다는 일부를 묶어 공동구매 추진 및 확대하는 방향 가능
 - * 인천광역시 벤치마킹('22. 5.) 협조, 타지자체에서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등 벤치마킹시 협조 예정
 - '23년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계획 수립('22. 9.) 지속적인 예산절감 및 활용체계 성과 창출 예정

<민간데이터 제공 내역('22. 9월말 기준)>

연 번	요청기관(부서)	요청일	공동활용 데이터	이용 목적
1	충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	4. 22.	유동인구 4종	서산 공항 수요 분석 활용
2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 원(융합콘텐츠본부)	5. 9.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충남관광지 유동인구 분석
3	서산시(시민공동체과)	5. 12.	유동인구 3종	인근지역 행정동단위 연계구조 분 석
4	아산시(농정과)	5. 13.	유동인구 5종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5	부여군(자치행정과)	5. 13.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부여군 빅데이터 분석 사업
6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5. 17.	신용정보 1종, 카드소비 1종	소상공인 현황 및 소득, 부채 관련 분석
7	당진시(공동체새마을과)	5. 18.	유동인구 6종	당진시 농촌공간 구상 및 우선 생활권 분석
8	공주시(감사정보담당관)	5. 20.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공주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9	논산시(전략사업실)	6. 15.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논산시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 활용
10	금산군(기획조정실)	6. 15.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금산군 빅데이터 분석 시 이용
11	청양군(행정지원과)	6. 15.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청양군 빅데이터 분석 사업 이용 (유동인구 분석)
12	보령시(홍보미디어실)	6. 15.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보령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이용 (관광축제 분석)
13	예산군(총무과)	6. 16.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예산군 주요 관광지 빅데이터 분 석
14	태안군(행정지원과)	6. 16.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태안군 빅데이터 분석 이용 (관광지, 축제 등)
15	서산시(정보통신과)	6. 16.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서산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이용 (유동인구 분석)
16	충청남도(데이터정책관)	6. 16.	카드소비 22종, 유동인구 2종	상권 및 일자리 분야 분석
17	아산시(미래전략과)	6. 22.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아산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이용 (유동인구 분석)
18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6. 23.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당진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19	충남도청(데이터정책관)	6. 24.	유동인구 12종, 카드소비 3종, 내비게이션 1종	관광지 협업과제 분석
20	충청남도 관광재단(관광마케팅실)	6. 28.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충청남도 관광동향보고서 작성시 참고자료 이용

연 번	요청기관(부서)	요청일	공동활용 데이터	이용 목적
21	천안시(농업정책과)	7. 12.	유동인구 16종, 카드소비 10종, 신용정보 4종, 내비게이션 1종, 기타 천안시 카 드소비 2종	천안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22	공주시(감사정보담당관)	7. 19.	유동인구 4종, 카드소비 3종	공주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이용 (석장리구석기축제 관련)
23	당진시(기획예산담당관)	8. 30.	유동인구 16종	당진시 데이터 분석 사업
24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8. 30.	유동인구 3종, 카드소비 22종	지역계획 분석지표의 기초데이터 로 활용
25	당진시(기획예산담당관)	8. 31.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당진시 상권 분석
26	충남도청(데이터정책관)	9. 2.	내비게이션 1종	Tmap데이터 활용 이동현황 시각 화
27	홍성군(홍보전산담당관)	9. 13.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2022년 홍성군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누리집 구축
28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융합컨텐츠본부)	9. 14.	민간데이터 48 종 전체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29	공주시(감사정보담당관)	9. 19.	유동인구 16종, 카드소비 22종	공주시 전통시장 유동인구 및 매 출 분석
3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총괄지원본부)	9. 30.	유동인구 9종, 카드소비 8종, 신용정보 5종, 내비게이션 1종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방문 객 산출
31	백제문화재단 (연출홍보과)	9. 30.	유동인구 16종, 카드소비 22종	제68회 백제문화제 행사 평가
32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9. 30.	카드소비 1종	소상공인 현황 분석

[전남 순천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겉으론 “무소유” 알고보니 “풀소유” - 사해행위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징수과 / 세무7급 최하영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처분으로 무자력의 상태가 되어 체납처분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매뉴얼화) 마련 ○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58여억원을 찾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로 처분된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통해 정리 보류되기 쉬운 지방세 체납액 298백만원 징수뿐만 아니라 83% 승소율 거양으로 징수행정의 전문성 강화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5.

순 천 시 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겉으로 “무소유” 알고보니 “풀소유”
 -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여력이 있었음에도 재산은닉으로 지방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통한 체납세 징수 ○ 추진기간: 2020. 7. ~ 현재(6건 소송 / 승소율 83%) ○ 사업내용: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 징수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7. ~ : 사해행위 분석·실태 조사(체납자 96명) ○ 2020.9. ~ 2022. 5.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6건) ○ 2021.11 ~ 2022. 9. : 소송 진행 결과(승소 5건, 진행 1건)
③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 체납세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의 시의성 있는 과세자료 확인 불가능한바 사해행위 판단의 어려움 →소장 제출 후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세무서 자료 확인 ○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소장 작성 등 새로운 업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연구모임 “Unsung Hero” 운영, 소장 공동작성 - 직접 분석 및 소송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로 비용 절감
④ 우수사례 내용	<p>사례1)소송 제기 자체가 징수 ... 소송 제기 후 자진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제출 후 3개월 내 상호 합의 후 자진 납부하여 소 취하 - 분석만 잘한다면 소 제기 후 소송 진행 없이 징수 가능 사례 <p>사례2)소송 승소 후 소유권 원상회복 없이 “상생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원상회복 후 강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시 체납자 부담 비용증가 등으로 체납세 자진 납부 - 체납자 & 순천시 상생의 방법 강구하여 징수 <p>사례3)소송 승소 후 소유권 원상회복하여 체납처분, 강제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진행(변론 3회, 조정 1회) - 승소 판결 후 재산 명의 원상회복,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고질 체납세 298백만원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 조세 정의 및 신뢰 세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성실납세 풍토조성 ○ 소송 업무 매뉴얼 정착 및 징수행정 고도화(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해행위 취소소송 업무수행 매뉴얼 체계화 및 전파

겉으로 “무소유” 알고보니 “풀소유”

-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

1. 과제 선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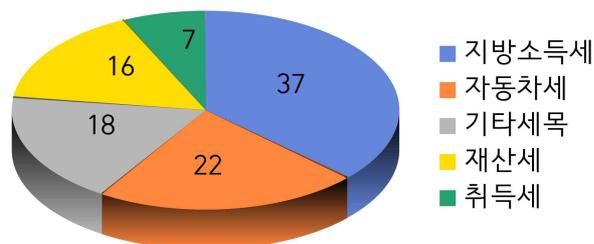
- 조세 회피 의도가 분명한 재산의 은닉행위(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재산 명의 이전)에 대한 강력한 추적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
-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처분으로 무자력의 상태가 되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 방안 마련

‘사해 행위(詐害行爲)’ -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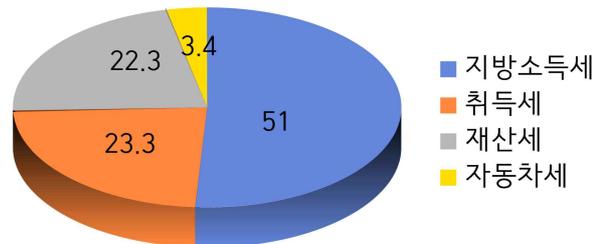
2. 문제원인 분석

- 최근 체납액의 큰 비중(37%)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며, 이 경우 폐업, 부도, 부동산 양도로 과세물건 부존재. 이로 인해 징수 불가능으로 정리 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 국세 부과 이후 납세자는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 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지방세 부과 前 재산은닉 사례 증가

2021년 세목별체납비율(전국)



2021년 세목별정리보류비율(순천시)



- 지방소득세의 경우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이 강해 납부율 저조

재산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통해 놓칠 수 있었던 지방세 체납징수

3. 방안 마련 및 실행

가. 고액 체납자 사해행위 분석·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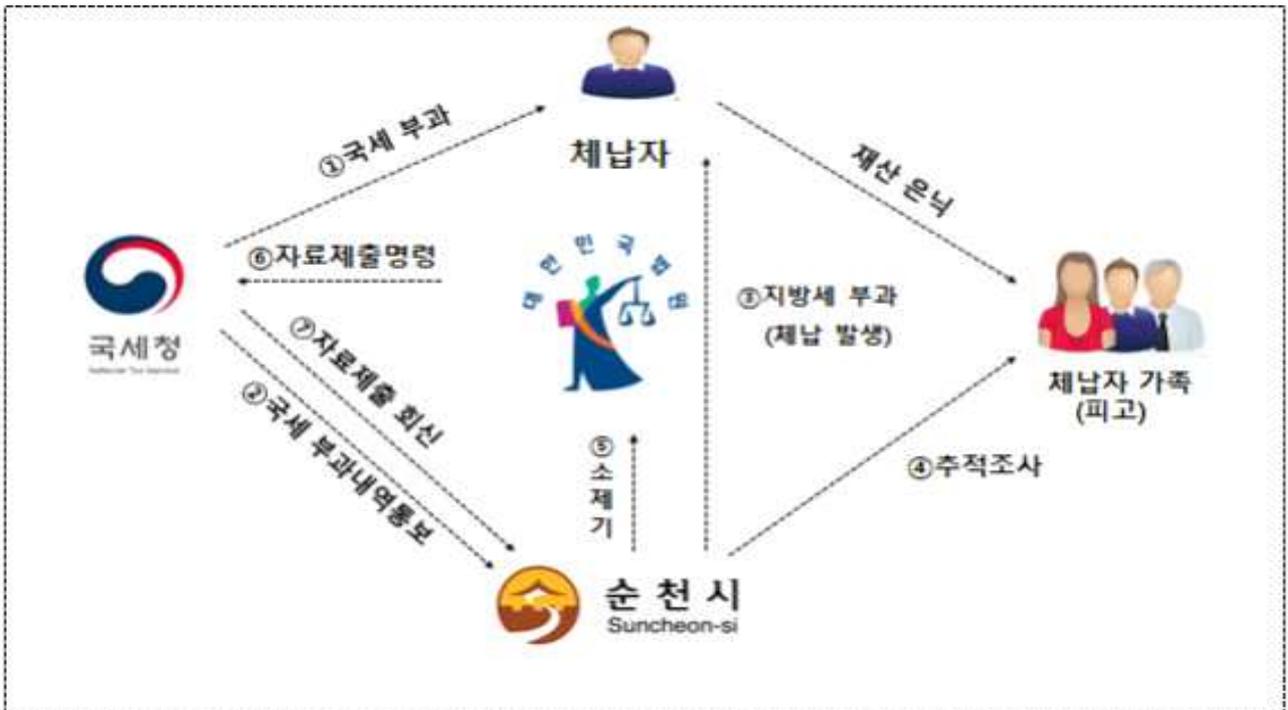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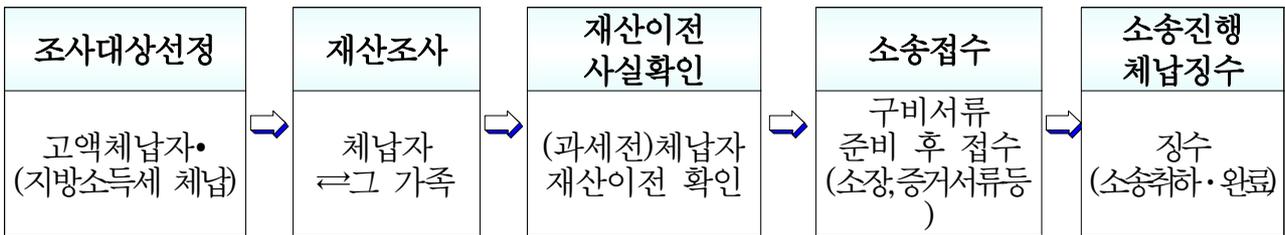
- 체납자 96명에 대하여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재산 은닉자'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나.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추진절차

○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

-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 ②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 ③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 ④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함(채무자의 악의)

○ 사해행위 선결요건 조사 및 업무 흐름도



다. 소송별 징수사례

사례 1 소송 제기 자체가 징수 ... 소송 제기 후 자진 납부

- 체납자 S는 지방소득세 부과이전에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배우자와 형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현황) 2018년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0건, 181백만원 체납
 - (추진사항)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수차례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결국 소송내용을 인정하고 가액배상 및 공매를 통해 소송가액(72백만원) 전액 징수하고 소 취하
- 체납자 K는 지방소득세 부과이전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현황) 2021년 1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4건, 54백만원 체납
 - (추진사항) 소송진행중 체납자 K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국세관련 또 다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에 부담을 가지고 판결 확정 전 체납세 전액(54백만원) 납부하여 소 취하

사례 2 소송 승소 후 소유권 원상회복 없이 “상생 징수”

-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부과 이전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차량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현황) 2021년 1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3건, 78백만원 체납
 - (추진사항) 2022년 5월 원고승소 후 원상회복 없이 78백만원 자진납부
- 체납자 D씨는 지방소득세 부과 이전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동거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현황) 2021년 1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4건, 58백만원 체납
- (추진사항) 2022년 7월 원고승소 후 원상회복 없이 58백만원 자진납부

사례 3 소송 승소 후 소유권 원상회복하여 체납처분 강제징수

- 체납자 L은 지방소득세 부과이전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상속재산협의 분할로 본인의 지분을 동생에게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현황) 2017년 7~8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2건, 36백만원 체납
- (추진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시 채무집행 보전을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가압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은 체납자 동생으로부터 가액 배상(3백만원)을 받았고 자동차는 소유권 원상회복 후 공매 매각하여 체납세 징수(8백만원)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판결에 따른 소송가액 배상이 이행되지 않아 가압류를 근거로 강제경매 개시 후 체납세 25백만원 징수

4. 장애극복

- 소송 증빙자료 확보 어려움 ⇒ 사해행위 취소소송별 징수 매뉴얼화
 - 고액 체납세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의 상세한 소득세 과세자료(부과사유, 소득발생처, 과세예고 통지일 등) 확인이 불가능해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구분하는 민법 법률가 못지 않는 전문성 요구
 - 소장 제출 후 법원의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을 통해 세무서 자료 확인
- 패소에 대한 부담감 및 업무 가중 ⇒ 적극행정, 연구모임으로 공동 대응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체납자 재산에 대한 소송 제기로 인해

- 패소 등 부담감 증가 및 새로운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 가중
- ⇒ 소송 대응 연구모임 “Unsung Hero” 을 통한 법규 연찬 및 사례 연구 분석으로 대상자 소송 사안별 대응 논리개발, 공동소장 작성 등
- 소장 작성 時 (시)고문변호사 자문 후 법원 제출 →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 ⇒ 패소에 따른 감사와 징계 압박의 심리적 불안감을 적극 행정으로 해소

5. 성과 및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체납세 298백만원 징수 / 83% 승소율 거양
 - 고액·고질 체납세에 대해서 전문가를 뛰어넘는 민법과 지방세법을 활용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 조세정의 실현
 - 조세 회피를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
- 시효정지 효력 발생
 -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기간은 소멸시효 “정지” 기간으로 재산은닉자 징수권에 대한 시효연장 효과
- 소송 업무수행 매뉴얼 정착
 - 소송 업무수행을 위한 소장 작성 방법 및 사례 정착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소송 진행 및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등 징수기법의 고도화
 - 승소사례별 시사점 및 노하우 정리, 타 지자체(목포시 등)에 전파
- 지방세외수입분야까지 적용대상 확대
 - H씨는 과태료 등 65건, 세외수입 15백만원 체납된 상태로 지방세 체납과 병행하여 사행행위 취소소송(체납자 상속지분 포기) 추진 중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 지방세 연구 10월호 기고
 - 언론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홍보 : 여수MBC(2022.4.8.) 등 65건
 -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 전파 시 230억 재정 효과

순천시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강력 법적 대응

순천시는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5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5명의 체납은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로 총 4억 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퍼센트가 부과된다.

시는 소송에서 수익자로 이전한 부동산 등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를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청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지방소득세 3100만 원이 추징될 것을 알고 미리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 후 자동차 공매로 1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은 경매 중이다.

체납자 B는 종합소득세 탈루로 지방소득세 약 2억 원이 부과되기 전에 배우자와 형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했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소 청구액 3200만 원을 납부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수원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기 관 명	경기도 수원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수원시 경제정책국 징수과 체납추적팀 정현식
< 요약 >	
<p>○ 부동산 셰이크업(SHAKE UP)⁷⁾을 통한 체납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u>대위 임의경매를 통해 체납액 285백만원 징수완료</u> - 실익 없는 부동산 등기 권리 적극 재분석하여 허위 등재 및 소멸시효 완료된 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 제기로 승소 후 공매 진행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수원시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7) 기존 것을 흔들어 큰 변화를 주다. 바로 잡다.

□ 사례명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대손상각(정리보류)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 및 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효한 채권확보가 시급함.
② 추진 경과	○ 근저당권 채권부 대위에 의한 (임의)경매 실행 - 2005.08.22. 근저당권부 채권압류(권선구청) - 2021.05.11. 수원지방법원 경매계 방문하여 경매 담당자 면담 - 2021.05.12. 수원지방법원(대위)임의경매신청서 접수 - 2022.03.02. 낙찰허가결정 낙찰가(449,990,000원) - 2022.04.19. 284,900,710원 배당 완료 ○ 허위통정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및 공매 실시 - 2022.06.13.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제기 - 2022.09.01. 원고 승소(수원시) - 2022.10. 공매진행 중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근저당권 채권부 대위에 의한 (임의)경매 실행 - 근저당권자(체납자)가 장기간(10년이상) 경매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근저당권자 대위하여 (임의)경매 실행 ○ 허위통정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후 공매 실시 - 근저당권 상속인들에게 피담보채무 존재 및 시효종단 주장 요청 - 수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 공매 진행
④ 우수사례 내용	○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위 임의 경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 및 소수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서면으로 주장, 궁극적으로 경매 접수 매각되어 체납액 285백만원 전액 징수 - <u>우리는 체납자의 근저당권 채권부를 압류함으로써 (임의)경매를 실행한 전국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음</u> ○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및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제기 - 소송비용 발생 등 원고 승소시 비용부담 안내로 상속인들 압박하여 무변론 확정 판결로 승소
⑤ 성과	○ 부동산 웨이크업(SHAKE UP)을 통한 체납징수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대위 임의경매를 통해 체납액 285백만원 징수한 전국최초사례 - 실익 없는 부동산 등기 권리 적극 재분석하여 허위 등재 및 소멸시효 완료된 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 제기로 승소 후 공매 진행 (예상 징수세액 9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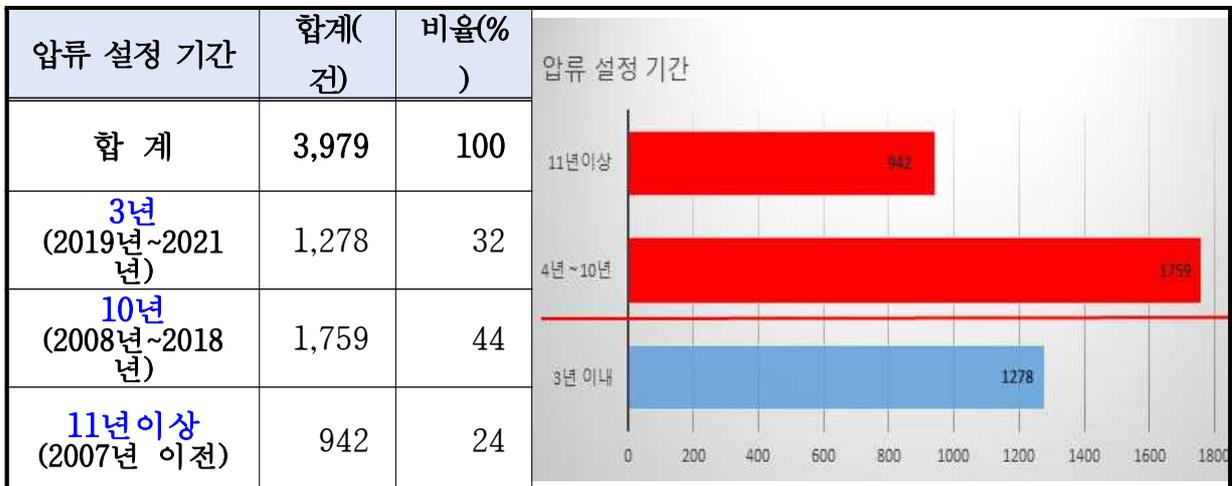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 부동산 셰이크업(SHAKE-UP⁸⁾)을 통한 징수 사례-

1. 과제 선정 내용

- 대손상각(정리보류)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 및 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효한 채권확보가 시급함.

2. 문제원인 분석

- 부동산 압류 현황 (2022. 4. 현재)



-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 되어 있는 압류부동산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 허위로 부동산에 선등기 된 근저당, 가압류 등의 말소 실익여부 등 적극적으로 권리관계 분석 및 사실관계를 원점에 재검토 하고 채납자의 타인에 대한 부동산 권리 등을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 대위 경매 등으로 부동산의 셰이크업을 통해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新징수기법으로 채납세액 충당 필요

8) 기존 것을 흔들어 큰 변화를 주다, 바로 잡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근저당권 채권부 대위에 의한 (임의)경매 실행

- 채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조사

- ▶ 근저당권설정일 : 2004.11.23. ※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 300백만원
-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일 : 2005.08.18.(수원시)
- ▶ 근저당권자(채납자) : 김순* /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겸 소유자) : 신춘*

- 부동산 소재지 현장 실태 조사 및 소유자 등 방문 면담 실시



-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 모두 10년이상 지나도록 근저당권 말소 이행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채납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자 대위권 진술최고서 제출 의뢰

- 우리 시는 모든 국민 생활복합체, 수원시민의 미래가 됩니다. -

수 원 시
유연시티수원

수신 (경유)
제목 **채권자 대위권 행사 알림** '근저당권 (대위) 경매 실행, 및 진술최고서 제출 의뢰

귀 닥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2021.3.17.현재, 김○작님의 수원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금액은 금284,900,710원이며, 우리시는 귀하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 금300,000,000원)을 2005.8.22.압류 하였습니다.

즉, 우리시는 귀하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자이며, 귀하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이자 이해관계인입니다.

▶ 채납내역 및 압류대상

채 납 자	채납액(원)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소유자 겸 제3채무자	비고
김 ○ 작	284,900,71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채권최고액 : 금300,000,000원 •채무자 : 신○원(제3채무자) •근저당권자 : 채납자 김○작 •수원지방법원 화성동기소 •2014.11.23.집수 제131928호	2005.8.22.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1. 2004.11.18자 귀하께서는 채무자(신○원)와 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하고, 2004.11.23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수원시는 귀하의 우리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원인으로 귀하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5.8.22자 압류하게 됩니다.

3. 수원시가 귀하로부터 채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시가 압류한 근저당권을 귀하를 대위(신)에서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귀하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우리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가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청 정수과 지방세 과장님 조모과 신병민 (☎ 021-339-2100)로 문의하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고

- 우리 시는 모든 국민 생활복합체, 수원시민의 미래가 됩니다. -

수 원 시
유연시티수원

수신 (경유)
제목 **채권압류 통지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제출 의뢰**

1. 우리 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제38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채권 압류**를 통지합니다.

3. **통지서 송달 후 채납자에게 근저당관련 채권최고액 지급시 무효**가 되며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납내역 및 압류대상

채 납 자	채납액(원)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소유자 겸 제3채무자	비고
김 ○ 작	284,900,71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채권최고액 : 금300,000,000원 •채무자 : 신○원(제3채무자) •근저당권자 : 채납자 김○작 •수원지방법원 화성동기소 •2014.11.23.집수 제131928호	2005.8.22.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나. 입금계좌명 : 기업은행(287-065868-97-535 예금주 : 수원시 김○작)

다. 아울러 불입과 같이 귀하께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규정에 의거 **진술최고서 제출을 의뢰하오니 이 문서를 송달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청 정수과 지방세과장님 조모과 이병래

- 우리시는 채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근저당권부 압류 채권으로 지방세징수법 제51조②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②항에 근거하여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 한편 해당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들은 소극적임을 표명한다 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 없다 하였음
- 그러나 수원시는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위 임의 경매에 대하여 적극적 법률 검토 및 소수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서면으로 주장. 채납액 징수의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를 이끌어 냄

- ▶ 2021.05.11. 대위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 ▶ 2021.05.12. 임의경매 개시결정
- ▶ 2021.07.26. 배당요구종기일
- ▶ 2022.03.02. 낙찰 ※ 낙찰금액 : 449백만원
- ▶ 2022.04.19. 배분 ※ 배분(총당)금액 : 285백만원

- 법원 배당 1순위로 수원시 채권금액 285백만원 전액 배분.

수 원 지 방 법 원
배 당 표

사 건 2021타경4788 부동산임의경매 (경매3계)

배 당 할 금 액	금	450,020,549	
매 각 대 금	금	449,990,000	
명 세	지연이자 및 질차비용	금	0
	전경매보증금	금	0
	매각대금이자	금	30,549
	항고보증금	금	0
집 행 비 용	금	4,443,132	
실제배당할 금액	금	445,577,417	
매각부동산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redacted]		
채 권 자	[redacted]		
채 권 금	136,109,850	8,690,140	88,026,210
이 자	148,790,860	6,513,640	64,291,500
금 비 용	0	0	0
액 계	284,900,710	15,203,780	152,317,710
배 당 순 위	1	1	1
이 유	근저당권자 (2004.11.23. 제131928호)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수원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2005.8.22. 제107157호)	근저당권자 (2004.11.23. 제131928호)에 대하여 화성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2013.4.9. 제54359호)	근저당권자 (2004.11.23. 제131928호)에 대하여 동화성세부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2012.11.2. 제160508호)
채 권 최 고 액	300,000,000	15,203,780	152,317,710
배 당 액	284,900,710	1,371,015	13,728,275
잔 여 액	160,676,707	159,305,692	145,577,417
배 당 비 율	100 %	9.02 %	9.02 %
공 탁 번 호 (공 탁 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2-1

○ 허위통정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및 공매 실시

- 세무서 선압류로 공매 실익이 없어 장기간 담보되어 있는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하여 세무서보다 우선순위 확보 하였으나 선등기 되어있는 근저당권의 해결 방안 검토
- 압류부동산 등기 내역

- ▶ 2008.12.09.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자 성정*, 채권최고액 100백만원)
- ▶ **2008.12.09.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자 이정*,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 ▶ 2011.09.02. 수원세무서 압류
- ▶ 2011.10.17. 수원시 압류
- ▶ **2021.04.05. 수원시 납세담보 설정**

-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체납자와 면담하였으나 성정*의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정*의 근저당권은 부동산 보존을 위한 허위로 경료한 계약임을 진술
- 근저당권자 상속인들에게 근저당권 관련 소명자료 일체 요구

<p style="text-align: center;">수 원 시 유안사태수원</p> <p>수신 (경유) 제목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김○배)</p> <p>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p> <p>2. 수원시에 「미○숙」님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 체납관련 자료를 조사 및 부동산 공매처분 중(물건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63-2) 특수관계인의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이 확인되어 홍이○전남의 상속인 김○배님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거 아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2022.2.25(금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강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div> <p>3. 또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p> <p>*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할 시에는 법원,세무서 등에 통보 및 소송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선생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소송비용은 근저당권자 피고 부담)</p> <p>□ 소명대상물건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근저당권부 채권지 홍이○전) (소명자료 제출서류 : 근저당 설정 서류 일체, 거래등장 장금이제내역 등)</p> <p>□ 문의사항 : 수원시청 징수과 체납추진팀 담당자 교관세 ☎031-228-2737 연락주시며</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원 시 유안사태수원</p> <p>수신 (경유) 제목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김○선)</p> <p>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p> <p>2. 수원시에 「미○숙」님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 체납관련 자료를 조사 및 부동산 공매처분 중(물건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63-2) 특수관계인의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이 확인되어 홍이○전남의 상속인 김○선님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거 아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2022.2.25(화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강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div> <p>3. 또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p> <p>* 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할 시에는 법원,세무서 등에 통보 및 소송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선생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소송비용은 근저당권자 피고 부담)</p> <p>□ 소명대상물건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근저당권부 채권지 홍이○전) (소명자료 제출서류 : 근저당 설정 서류 일체, 거래등장 장금이제내역 등)</p> <p>□ 문의사항 : 수원시청 징수과 체납추진팀 담당자 교관세 ☎031-228-2737 연락주시며</p>
---	--

- 근저당권자 상속인들 폐문부재 및 일부송달 상태이나 답변 없음
- 2022년 5월 수원지방법원 근저당 말소요청 소송제기
- 피고들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에 대해 압박을 느끼며 **무변론으로**

소송 승소(2022년 9월)

- 2022년 10월 현재 공매 진행 중. 체납액 90백만원 배분 예상.

4. 장애극복

<근저당권 채권부 대위에 의한 (임의)경매 실행>

- 조세채권자는 압류한 재산(부동산, 차량, 동산)을 공매에 의한 처분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구 분	경 매	공 매
매각기관	법 원	지방자치단체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징수법
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압 류

- 체납자의 부동산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압류로 인한 대위 공매는 불가 확인. 임의경매로 처분 가능여부 법률적 검토 【민사집행법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수원지방법원 방문 상담 및 변호사 자문
 - 근저당권 압류로 대위에 의한 임의경매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소수의 판사만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의견 제시
 - 그러나 우리시는 소수 전문가 의견 및 법률을 토대로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서면으로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경매접수 매각되어 체납액 285백만원 전액 징수하였음.
 - 우리시는 체납자의 근저당권 채권부를 압류함으로써 (임의)경매를 실행한 전국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음

<허위통정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승소 및 공매 >

-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이 상속협의도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로서 상속인들에게 피담보채무의 존재 및 시효중단 주장을 요청코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폐문 부재 등 대부분 답변 없음
-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및 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제기
- 소송비용 발생 등 원고 승소시 비용부담 안내로 상속인들 압박하여 무변론 확정 판결로 승소

5. 성과

○ 부동산 셰이크업(SHAKE UP)을 통한 체납징수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대위 임의경매를 통해 체납액 285백만원 징수한 전국최초 사례
- 실익 없는 부동산 등기 권리 적극 재분석하여 허위 등재 및 소멸시효 완료된 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 제기로 승소 후 공매

<p>연합뉴스 2022년 04월 25일 (월) 지역</p> <p>수원시, 체납자가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 경매 해 체납액 징수 시 "대위경매로 체납세 징수한 사례는 전국 처음"</p>  <p>수원시, 체납자가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 경매해 체납액 징수 시 "대위경매로 체납세 징수한 사례는 전국 처음"</p> <p>(수원=연합뉴스) 최중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체납자 대신 경매에 부쳐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p>	<p>OBSNEWS 2022년 04월 25일 (월) 종합</p> <p>수원시, '전국 첫' 지방세 체납자 근저당권 경매 체납금 환수</p> <p>이정현</p> <p>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대위 경매해 체납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p> <p>근저당권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p> <p>수원시는 앞으로 체납자가 설정한 저당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실시해, 압류와 추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p> <p>이정현 ijh@obs.co.kr</p> <p>2022년 04월 26일 (화) 종합 03면</p> <p>기호일보</p> <p>수원시, 고액 체납자 꼼수에 '한방' 부동산 근저당권 대위 경매로 징수</p> <p>지방세 체납 후 본인 채권 확보 위해 담 등을 거쳐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p>
---	--

[경상북도 구미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옵션 추적조사 - 모르쇠 일관에...1,138세대 전수조사까지 -
기 관 명	경상북도 구미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구미시청 세정과 조근호

< 요약 >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별도옵션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경우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별도옵션에 대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또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며 과세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7.

구 미 시 장 (관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 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세무조사

□ 사례명 :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옵션 추적조사
- 모르쇠 일판에...1,138세대 전수조사까지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의 아파트의 경우 단순히 주거공간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 ○ 동일한 아파트구조를 탈피하고자하는 수분양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옵션이 설치되며, ○ 기업의 경우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
②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법원판례에 또 다시 패소하는 등 아파트 별도옵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 별도옵션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법인이 별도계약을 함으로 시행사 장부에 미확인으로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되어 누락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③ 별도옵션 추정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아파트 별도옵션에 대한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업체라는 주장으로 서류를 미제출하여 수분양자 1,138세대 신고자료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과표 1,873백만원/추징세액 86백만원 ○ B아파트 별도옵션에 대한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아파트 세무조사 과정을 인지하고 별도옵션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과표 4,583백만원/추징세액 166백만원
④ 주요쟁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구조부 취득자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주체구조부와 취득시기가 동일한 점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주체구조부와 일체의 공사 ○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용승인일 전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⑤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누락세원 발굴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 ○ 전문적인 세무조사 팀의 운영으로 조사기법연구 및 기획조사 등으로 전문성 강화가 필요 ○ 다양한 조사기법의 공유로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공평과세 구현

아~몰라!! 조세회피 • 대형시공사의 틈새수익창출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옵션 추적조사
- 모르쇠 일관에...1,138세대 전수조사까지 -

1. 개요

1. 추진배경 및 착안사항

○ 아파트의 시대별 변천사

-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정부주도하의 공급자중심의 1세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2세대 아파트는 사용자 중심, 3세대 아파트는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4세대아파트는 최첨단 시설이 도입되는 최첨단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단순히 주거공간의 개념이었던 아파트가 최근에는 단순히 주거의 공간을 넘어선 주거, 여가, 취미, 상권 등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시설까지 도입이 되고 있으며 추후에는 더욱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아파트옵션 변천사 & 다양화 원인

- 아파트가 시대별로 변화함에 따라 옵션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옵션설치가 없던 1세대 아파트부터 단순한 베란다 확장부터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구를 비롯하여 최근 4세대아파트에는 알파룸, 베타룸, 바닥재, 아트월 등 정말 다양한 옵션이 생겨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다양한 옵션이 생겨날 것입니다.
- 이러한 옵션의 변화는 최근 동일한 아파트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수분양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것으로 신축아파트의 옵션품목이 정말 다양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옵션의 다양화를 통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계속되는 별도옵션에 대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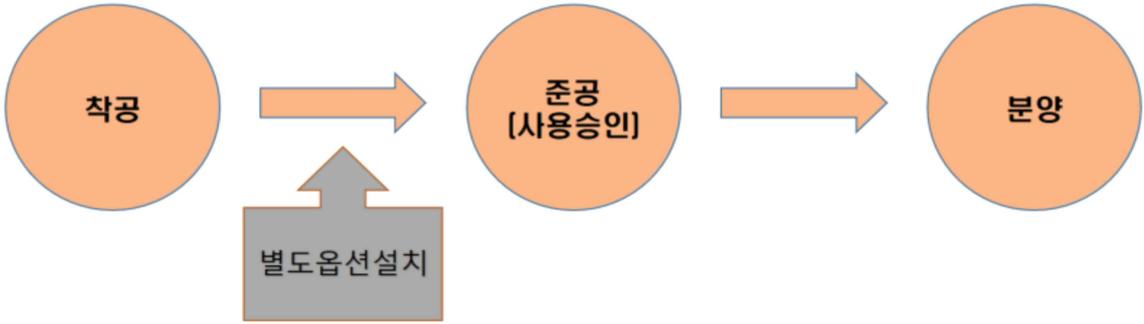
- 최근 대법원판례 2020두32937(2020.05.14.)를 살펴보면 지방세 개정이후에도 패소를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별도옵션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의 계약, 시공 등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원인과 과세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파악하며, 해당 사례를 공유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별도옵션에 대한 누락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II. 별도유상옵션 추정사례 및 조사기법

1. 별도옵션 조세회피방법

- 최근 세무조사한 아파트의 경우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의 사업약정서 작성시 별도옵션에 대한 권한을 시공사에 부여하여, 별도옵션 시공시 시공사에서 직접 계약하여 시공을 하거나 시공사의 계열회사, 자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나 시행사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근거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토지형 관리신탁의 경우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자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장부를 위주로 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별도옵선품목을 별도계약하는 이유는 시행사의 경우 책임시공을 하는 대형시공사를 유치해야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시공사는 별도옵션 품목을 시행사를 통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자체계약을 하거나 시공사에서 별도의 업체(자회사, 계열회사)를 선정하여 이윤추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유상음선 시공과정



⇒ 효과

- 기본시공을 하지 않고 별도음선품목을 설치에 따른 재료비 절감
- 시공사 또는 관계회사(자회사, 계열회사)의 별도계약으로 기업이익의 극대화
- 고급음선품목을 별도로 계약함으로 기본분양가를 낮추는 효과

2. 별도음선 조사사례 및 확인방법

○ 조사사례

- 최근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3개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조사한 결과 2개의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대형시공사에서 시공하였고 별도음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 별도음선에 대해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누락된 2개 아파트의 별도음선을 누락한 아파트를 살펴본 결과 신탁사, 시행사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으며, 시공사에서 수분양자와 별도계약을 하여 직접시공을 하거나 시공사의 관계회사(자회사, 계열사)에서 별도계약을 하여 시공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대형시공사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80여개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해당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인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사례>

구분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대상선정	2021년 정기조사대상	2022년 특별조사대상 (세무조사신청법인)	2021년 정기조사대상
사용승인일	2017년 7월	2021년 4월	2020년 5월
세대수	1,138세대	975세대	526세대
세무조사 실시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2월
별도옵션 계약방법	별도계약	별도계약	도급금액변경
별도옵션 신고여부	부	부	여
신고금액	205,843백만원	197,774백만원	111,653백만원
추징과표	1,873백만원	4,583백만원	-
추징세액	86백만원	166백만원	-
시공사	㈜OO건설(동일시공사)		㈜OO엔지니어링

○ 확인 방법(III. 주요 쟁점사항 및 추정근거에서 상세설명)

- 아파트 별도옵션품목 확인방법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별도옵션품목 확인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옵션 계약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옵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인터넷 매체(블로그 등) 및 홍보물을 통해서도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별도옵션품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아파트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확인해보면 별도옵션품목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옵션 추정방법

○ 누락사실의 발견 & 과세자료 미제출

- 해당 아파트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신탁사 및 시행사의 장부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별도옵션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 2017년 준공된 A아파트의 경우 신탁사 및 시행사에서 별

도읍선품목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법인이라고 주장을 하며, 관련 서류를 본적도 없어 서류제출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여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 과세자료 확보(**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 별도읍선 시공법인을 조사한 결과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이라는 주장으로 별도읍선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별도읍선 시공법인은 흡수합병, 상호변경 등으로 법인의 변경이 발생한 상태로 과세자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으로 과세근거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수분양자의 취득세 신고서류에 별도읍선에 대하여 법인에서 발급받은 계약서 및 잔금납부영수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1,138세대 전수조사 결과 총 310세대의 별도업체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산출 후 세무조사결과 통보하였습니다.

III. 주요 쟁점사항 및 추징근거

1. [쟁점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별도읍선이 취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 세무조사결과 통보한 별도읍선의 경우에는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를 보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빌트인(built-in)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의 정의는 ‘집이나 사무실 따위에 필요한 각종기기나 가구 따위를 건물에

내장하는 것을 말함' 으로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별도옵션의 경우 소유권 변동 시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고 건물의 벽과 바닥에 고정,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및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별도옵션의 경우 재사용이 어렵고 별도옵션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상승하며 아파트 매도 시 미설치 가구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쟁점별도옵션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주체구조부인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2. [쟁점2.] 취득시기(주체구조부와 일체의 공사?)

(근거1)입주자모집공고문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별도옵션에 대한 품목 및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 후에는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사용승인 전 시공으로 주체구조부와 일체의 공사라는 이유)

(근거2)모델하우스 내부에서 홍보 및 계약

- 별도옵션에 대한 홍보는 전분주택 내부인테리어에 설치 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한 해당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계약과정 및 홍보과정에도 주체구조부인 아파트공사와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3)시공시점 및 시공법인과 시공사의 관계

- 해당법인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별도옵션 시공법인을 확인한 결과 최초 OO서비스(주)에서 (주)OO빌로 흡수합병 되었고, 이후 법인명이 자OOOO디(주)로 상호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공사와 동일 계열사이며 시공사가 지배기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확인>

이러한 법인의 관계를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행사의 도급을 받는 시공사인 00건설(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일체의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수분양자의 경우 옵션품목에 대해서 설치유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시공사에서 선정된 업체가 아닌 타업체에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해당 별도옵션 공사의 경우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일체의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4) 별도옵션 잔금납부기한

- 쟁점아파트와 별도옵션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잔금일은 거의 동일하며, 별도옵션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지급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지정일 전에 중도금 및 잔금(연체료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쟁점유상 옵션의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하며 주체구조부의 공사완료 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구조부의 공사와 쟁점유상옵션의 공사는 동시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쟁점3.]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근거1)별도옵션의 계약발생 및 확정시점

-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쟁점유상옵션의 경우 취득시점인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발생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정시기 이후 계약의 변경이 불가하고 과세표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2)사용승인일 이전 별도옵션 설치완료

-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전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사전점검일에 별도옵션품목이 설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블로그, 인터넷카페, 입주민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점검일에 별도옵션품목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일 이전 설치완료 자료(입주민 홈페이지, 네00 블로그 등을 통한 자료 확보)
- 취득일 : 2017년 7월초 - 입주자사전점검일 : 2017년 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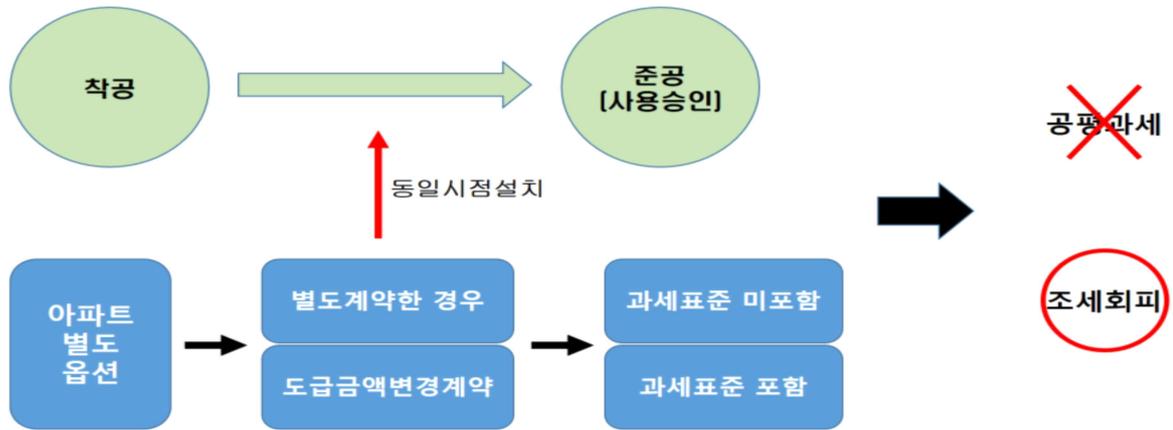


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설치 안할 경우 주방선반적용



(근거3)공평과세원칙에 위배, 조세회피수단

- 별도옵션에 대해서 수분양자와 별도계약을 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가 된다면 도급공사계약변경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과의 공평과세의 원칙이 위배될 것이며, 이러한 계약방법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이전에 별도옵션품목들이 계약·시공되었지만 원시취득자의 과세표준에는 제외가 되고 수분양자들의 과세표준에만 포함이 된다면 기업에만 조세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됩니다.

4. [쟁점4.]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8호가 2019.12.31. 신설은 별도 옵션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적용요령은 종전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별도옵션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였던 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역시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주요쟁점 검토결과

○ 주요쟁점사항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도옵션의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자

이며,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이전에 일체의 공사로 시공·설치 되었으며, 해당 별도옵션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맺음말

-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숨은세원발굴의 일원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세금추징이 목적이 아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적 세무지도의 개념으로 예방차원의 세무조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 법인의 경우 지방세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지방세 전문팀을 신설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조사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 연구·지원TF의 필요성이 더욱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V. 참고자료

- [참고 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행정안전부)
- [참고 2] 2022년 지방세 실무(김의효 저)
- [참고 3] 한국지방세연구원(www.olta.re.kr)
- [참고 4] 블로그 및 홈페이지

〈① 참가신청서〉

[강남구]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사 례 명	'중과배제'도 감면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1조 원 세수가 보여요.
기 관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 당 자	세무1과 이지영
〈 요약 〉	
<p>○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조항이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부동산을 취득시 지특법 (§180조의2)상 '중과배제'와 지특법상 '감면'을 모두 적용받은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지특법 §180 본문)해야 할 것이며</p> <p>○ 중과배제가 지특법상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배제로 줄어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으로 보아 37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회사 둘 다 감면 적용 불가(중과배제와 감면) : 7억 원 - 직접 미사용 시 추징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 : 370억 원 ii) 재산세(분리과세→종합·별도합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추징 -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질의 중) 등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4.

강 남 구 청 장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종과배제도 감면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1조 원 세수가 보여요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사업 : ‘종과배제’도 감면입니다. ○ 추진기간 : 2019.6.4. ~ 현재 ○ 관련법률 : 지특법 §2·§178·§180 및 §180조의2 ○ 사업내용 : 명목회사¹⁰⁾에 대한 취득세 세원발굴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5.30 : 현물출자로 147억원 감면신청(납부하고자 하는 세액 75억원) - 종과배제조항만 적용하고 감면(75%)없이 일반세율로 납부(196억원) ○ ‘19.07.11 : 경정청구 - 부동산리츠 종과배제 조항은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과배제 후 감면 가능 ○ ‘19.08.30 : 청구인 서울시 질의회신 결과 제출 - 강남구의 의견과는 달리 납세자 의견이 맞다는 서울시 혁신자료 제출 ○ ‘19.09.18 : 경정청구 불채택 → ‘19.10.15 : 이의신청(‘20.02.19 기각) ○ ‘19.10.18 : 종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대상인지 여부 질의(행안부) - 부동산리츠 종과배제 조항과 법인가간 현물출자 조항 동시적용은 중복감면에 해당하므로 양 규정 중 높은 감면세율만 적용함이 타당 ○ ‘20.04.28 : 심판청구 → ‘21.03.29 : 기각 ○ ‘22.02.11 : 행정소송(강남구 승소) → ‘22.10.27 : 2심(선고일) ○ ‘22.04.05 : 6개 명목회사 370억 원 취득세원 발굴 결과보고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법인은 ‘종과배제가 감면이다’라는 강남구의 경정청구 불채택을 무력화 시키고자 서울시로부터 질의회신(강남구와 반대의견)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강남구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 행안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수신처 : 서울시 포함) ○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와 강남구를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과배제가 지특법상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함에 따라 종과배제로 줄어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누락세원 세원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회사 둘 다 감면 적용 불가(종과배제와 감면) - 직접 미사용 시 추정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정 ii) 재산세(분리과세→별도합세, 종합합산) 추정 -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질의 중) 등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2.01.03. ~ 04.30. ○ 추정세액 : 377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중복감면 : 7억 원 ii) 취득일~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미사용 : 276억 원 iii)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94억 원

<③ 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나 이하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을 한 후 5년 안에 대도시 내의 매매 및 임대용 건물이나 토지를 거래했을 시에는 취득세는 종과세율이 8%이고 종과배제시에는 4%가 적용
- 10)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 즉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말하며, 사업장 등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중과배제도 감면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1조 원 세수가 보여요.

1. 과제 선정 내용

- 명목회사가 부동산 취득시 중과배제¹¹⁾ 규정을 감면¹²⁾으로 볼것인가?
- 중과배제 규정을 감면으로 본다면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는 추정 가능한가?

2. 추진 성과

- 추진기간 : 2022.01.03. ~ 04.30.
- 추정세액 : 377억 원(사건과 관련 : 196억 원 미포함)
 - i) 중복 감면 : 7억 원
 - ii) 취득일~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미사용 : 276억 원
 - iii)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94억 원

3. 사건 개요

- 물 건 지 : ○○동 △△△번지 (토지 11,319.3㎡, 건물 67,629.62㎡)
- 납 세 자 : ○○○○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소송금액 : 취득세 14,753백만 원 (19,671백만원 중 75% 경정청구)
- 쟁송사유 및 행정법원 결정내용 (강남구 승소)

<납세자 주장 및 쟁점>

①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과 ②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세율 ‘**배제**’ 동시 적용 요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제3항, 동법제180조의2 제1항)

<우리구 의견 및 법원판단>

중과세 세율 ‘**배제**’ 도 ‘**감면**’ 으로 규정하여 동시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동법제180조)

- 그간 진행 및 대응사항

11) 과밀억제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된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율(8%)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저율의 표준세율(4%)을 적용 (지특법 180조의2 PFV등 부동산 투자회사)

12) 사전적 의미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으로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교통 등 공익성,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지원 등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하여 주는 것 (지특법 제6조~ 92조의 3 등)

- 2019.5.30. : 현물출자로 취득세 147억 원 감면신청
 - ① 납세자 :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 : 75억 원
(취득세 등 50억원, 감면농특세 25억 원)
 - ② 강남구 : 196억 원(취득가액 4,276억 원× 일반세율 4.6%)
 - 부동산리츠에 대한 중과배제조항만 적용하고 감면(75%) 없이 일반세율로 납부

【취득 당시 신고 내용 등】

구분	취득과표	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최초신고 (상당 후)	427,631,698,291	4%	17,105,267,930	855,263,390	1,710,526,790	19,671,058,110
납세자주장	현물출자 감면	75%	12,828,950,950	641,447,550	1,282,895,100	14,753,293,600
	정당세액	25%	4,276,316,980	213,815,840	427,631,690	4,917,764,510
	감면농특세			2,565,790,180		2,565,790,180
				2,779,606,020		7,483,554,690
구분	취득과표	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이의신청 결정	427,631,698,291	8%	34,210,535,860	3,421,053,580	6,842,107,170	44,473,696,610
	현물출자 감면	75%	25,657,901,900	2,565,790,190	5,131,580,380	33,355,272,470
	정당세액	25%	8,552,633,960	213,815,840	1,282,895,090	10,049,344,890
	감면농특세 추가고지			5,131,580,370		5,131,580,370
				5,345,396,210		15,180,925,260
소송가액	차액		4,276,316,980	2,565,790,190	855,263,400	7,697,370,570

- 2019.07.11. : 납세자 경정청구(중과세율배제 규정과 쟁점감면 적용)
 - 청구 내용 -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은 감면조항이 아니므로 중복감면 가능함
- 2019.08.30. : 납세자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자료 제출
 - 회신 내용 - 강남구의 의견과는 달리 납세자 의견이 맞다는 서울시 회신자료 제출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은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배제 후 감면 가능”
- 2019.09.18. : 경정청구 불채택(서울시 질의회신 결과 이유 없다고 판단)
- 2019.10.15. : 이의신청서 제출
- 2019.10.18. : 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대상인지 여부 질의(행안부)
 - 회신 내용 - 강남구의 의견이 타당함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과 법인간 현물출자 조항 동시적용은 중복감면에 해당하므로 양 규정 중 높은 감면세율만 적용함이 타당”
- 2020.02.19. : 서울시에서 이의신청 “기각”
- 2020.04.28. : 조세심판청구(“21.03.29. 기각)
- 2021.06.28. : 소송접수
- 2022.02.11. : 강남구 판단 인용 ⇨ 승소판결(2심 진행 중)

4. 장애 극복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본문에서 각 호의 유형별 감면을 적용할 때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배제 규정이며, 동 조항이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중과배제 규정이 삭제된 것은 중복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중과배제가 감면이다」라는 강남구 의견을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해야 할 것임.

- 청구 법인은 ‘중과배제가 감면이다’라는 강남구의 경정청구 불채택을 무력화 시키고자 서울시로부터 질의회신(강남구와 반대의견)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강남구에서는 조세정의를 실현과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 행안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수신처 : 서울시 포함)
-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와 강남구를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이 미치는 영향

1 명목회사 등 중복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가능

- 추진결과 : 7억 원(○○피에프브이)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중복감면(지특법상 중과배제도 “감면”으로 봄)에 따라
 - PFV13)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지특법(§180의2)상 ‘중과배제’와 지특법상 ‘감면’을 모두 적용받은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180 본문) 나머지 감면부분은 추징

13)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 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페이퍼 컴퍼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지1267, 2021.03.29.)

2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

- 추진 결과 : 370억 원
- PFV 등 중과배제가 지특법상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배제로 줄어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기대효과

- 지방세법 분법 개정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사법부에서 최초 판단
- 실무적용 기준 확립하여 지방세정 전반 과급효과
- 향후 지방세법 개정 시 반영 근거 확보

[기관명]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토지 95%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적기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기 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행정지원국 세무1과 김종찬

< 요약 >

- 지역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설립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종료 이후 수개월 내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기에 따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건물 준공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전·후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사업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간접비용의 누락여부에 대한 조사와 준공 이후 건물분 취득세 신고 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성실납부 유도가 필요함
- 또한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장전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399백만원, 부곡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499백만원을 추징함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토지 95%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의 핵심은 사업부지인 토지의 취득에 있음 ○ 대규모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비용 이외에도 각종 금융비용, 용역비 등 간접비용이 발생 ○ 준공 이후 수개월 내 해산되는 조합의 특수성으로 사후 검증이 어렵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누락세원 발생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곡동 지역주택조합 사례: 2018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사업계획승인, 2017년 준공, 2018년 해산 및 폐업 ▶ 조합해산 등 취득세 적정여부 사후 검증 불가 ○ 관내 지역주택조합 중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합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조사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전동 지역주택조합, 부곡동 지역주택조합 2건 선정 ▶ 사업계획승인일(장전동: 21.7.28. / 부곡동: 22.4.29.) 전·후 조사대상 선정, 조사실시(장전동-구 조사, 부곡동-시 조사)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이후 그 다음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수개월 이내에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하기 어려움 ▶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를 분석하여 사업계획승인 전·후, 준공 이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핵심인 부지 매입 관련 취득 비용의 누락 여부를 조사 ○ 토지 취득 직·간접비용 증빙자료 확보 및 집단민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에 대비 ▶ 토지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차례 조합을 방문하고 조세심판원 유사사례 및 지방세법을 근거로 조합장 및 경리담당자에게 설명 ▶ 준공 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기타비용 사전 협의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에 대한 호감도 상승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에서 유를 창조: 추정세액 0원에서 39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부곡동 지역주택조합 세무조사 당시 조합이 해산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절차에 대한 연구 ○ 세무조사 적정 시점 포착: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 준공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설립 이후 사업부지 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5%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시점(사업계획승인신청)에 지역주택사업의 핵심이 되는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점 전·후에 조사를 착수하여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검증 실시 ○ 토지 관련 취득비용에 대한 검증 강화: 주택법 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검증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주택법 개정으로 3차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 장부 등 확보 ○ 민원·소송을 대비한 철저한 증빙자료 수집, 유사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전화 문답 등을 병행하여 취득 관련 간접비용에 대한 조합 측 반박 논리를 대법원, 조세심판원 사례를 통해 설득 및 이해 ▶ 준공 이후 건물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사전 협의 절차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에 대한 호감도 상승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전동 지역주택조합: 구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46건 399백만원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대금 변경신고분(지체보상금 등) 20건 36백만원 ▪ 매매대금 과소신고분(기타소득처리 등) 25건 95백만원 ▪ 사업부지(256건) 취득 간접비용 과소신고 1건 268백만원 ▶ 세무지도 수정신고분 취득세 등 10건 14백만원 신고납부 ○ 부곡동 지역주택조합: 시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1건 499백만원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542건) 취득 간접비용 과소신고 1건 499백만원

토지 95%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1. 과제 선정 내용

-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핵심은 사업부지인 토지 확보로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다양한 간접비용이 발생한다.
-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목적인 공동주택 등 준공 후 수개월 내 해산되는 조합의 특수성으로 사후 검증이 어렵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누락세원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전 적절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접비용이 포함된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검증과 준공 이후 건물분 원시취득에 대한 신고 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2. 문제원인 분석

- 부곡동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사업계획승인, 2017년 준공, 2018년 해산·폐업되어 세무조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
- 위의 사례처럼 건물 준공 이후 그 다음해에 취득금액을 원인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누락·탈루세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준공 이후가 아닌 사업계획의 승인일 전·후로 하여 실시하고, 지역주택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이 누락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4. 장애극복 및 우수사례

- 부곡동 지역주택조합처럼 준공 이후에 조합 해산 등으로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5%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대지 소유권 95% 확보 시점 전·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사업부지 대지 소유권 95% 확보 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인데 해당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시 주택법 18조에 따라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으로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경우에 수 개월 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 1건 금정구 자체 조사, 1건 부산시 본청 조사 의뢰(취득금액기준)
-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주택법 개정(2020.1.23.)에 따라 주택조합의 경우 회계감사를 3차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 등 자료를 요구하였다.
- 장부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택조합의 신탁회사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입금 후 각종 비용에 사용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외에도 사업부지목록대장, 토지매매계약서, 각종 업무·용역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접비용이 누락, 매매대금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조합에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 사례를 보여주며 이해시키고 설득하였고, 준공 이후

건물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기타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의 호감도를 높였다.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장전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금정구 세무조사 결과,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 간접비용(사업부지매입용역비, 조합원모집용역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컨설팅비,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양도소득세대납분 등) 과소신고 1건 268백만원, 매매대금 변경신고분 20건 36백만원, 매매대금 과소신고분 25건 95백만원 등 **총 46건 399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세무지도에 따라 조사일 이후에 매매대금 변경분 관련 **10건 14백만원**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였다.
- 그 외 부곡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부산 본청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 결과 토지용역비 등 간접비용 과소신고분 **499백만원**을 추징하였다.
- 두 사례로 살펴본 결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취득 간접비에 대한 과소신고 사례가 빈번함을 알 수 있고, **조합별 추징세액이 4억원 ~ 5억원에 달하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를 파악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한다면 숨은 누락세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2022년 2분기 기준 금정구의 지역주택조합은 7개로 조합별 추징세액 4.5억원¹⁴⁾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추계하면 31.5억원,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89개소를 기준으로 401억원이 산정된다.
- 이를 전국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평균 45개소¹⁵⁾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총 17개 지역에 조합별 추징세액 4.5억원으로 산정해보면 3,442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주택조합의 수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공개된 정보만을 기준으로 추계하였고, 조금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된다면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14) 금정구 소재 부곡동, 장전동 지역주택조합 추징세액 평균 금액

15) 부산 89개소, 인천 51개소, 서울 40개소, 울산 37개소 중 가장 많은 자치단체와 가장 적은 자치단체 제외 평균

[기관명]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전국최초) 회생법인 증거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
기 관 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2과 김경희

< 요약 >

2015.12.29.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의 「지방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로 인한 회생법인 자본증가관련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누락에 대해 그 원인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였고, 누락된 등록면허세 341백만원을 추징하여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과세 시스템 개선 마련 및 전국 지자체로의 사례 전파의 시초가 되었다.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4 .

사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최초)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개기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숨은 세원 발굴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추진기간 : '22. 1. ~ '22. 7. ○ 추진내용 :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 조사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1. ~ : 유관기관(법원) 사전조사 및 등록면허세 누락 원인과 개선 방안 연구 ○ '22. 4. ~ :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조사 계획 수립 ○ '22. 4. ~ : 관내 회생법인 전수 조사 및 미신고 법인 추출 ○ '22. 7. ~ : 등록면허세 추징 및 조사결과 보고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의 어려움을 법원의 회생통보 활용으로 대안 마련 ○ 「지방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상이한 등록면허세 비과세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자문 및 사례 연구 ○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촉탁등기자료 통보 누락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방안 마련 협의 중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회생통보에 착안하여 회생대장 데이터 활용 및 조사로 회생법인 증자등기관련 등록면허세 341백만원 세입 발굴 ○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 개선 요청으로 지속적 세입확보 ○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촉탁등기자료 연계 시 신속한 과세 프로세스 도출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하구 8개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341백만원 추징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시 500억 이상 세입증대 예상 ○ 법원의 비과세 관행 개선 및 과세 대상 인식 제고 ○ 기존 시스템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안) 마련으로 등록면허세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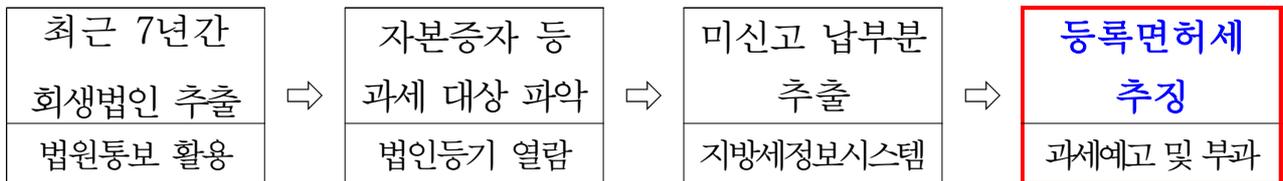
[전국최초]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

1. 과제선정 내용

□ 선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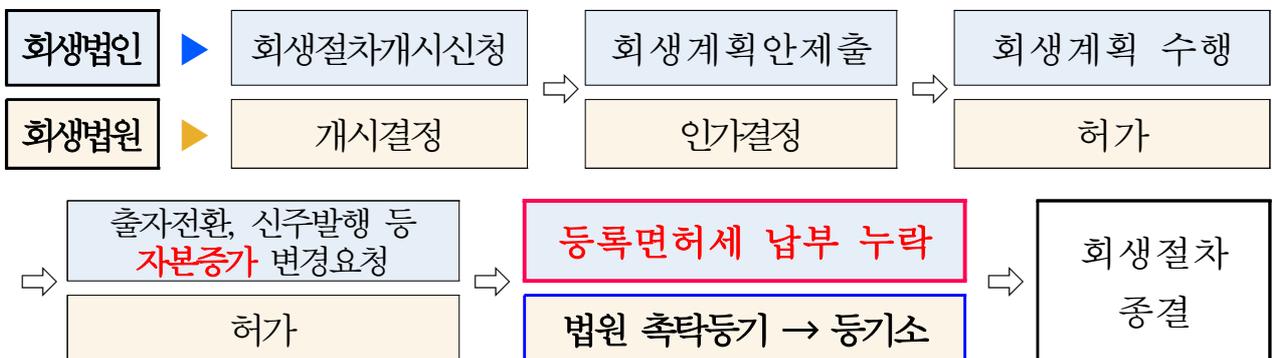
- 최근 많은 법인들이 법원의 인가를 통한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 회생과 관련하여 2015.12.29.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을 회사정리 ‘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개정하였으나,
- 법원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로 **회생법인 자본증가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 과제내용 : 누락된 등록면허세 추징



2. 문제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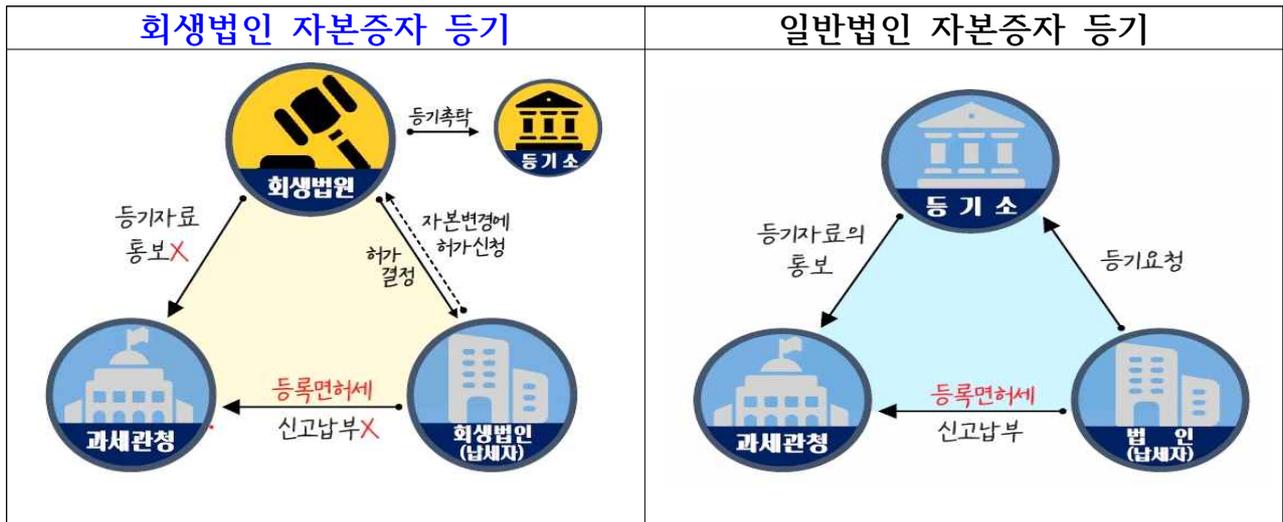
□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촉탁등기 과정



※ 회생 “절차” 등기에 관해서는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세원파악의 어려움 : 등기자료 통보 누락

지방세법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기축탁자료는 현재 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법원 등기축탁 시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 생략으로 세원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법원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지방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잘못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등록면허세가 누락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파산 2부

(법) 제 39,000호
株式会社 南清 南清
2018-12-31 09:39 접수
등기2계

치	정	등기축탁서	입	교	합	각종통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귀하

사 건 2017회합 0000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00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의 총액, 발행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축탁합니다.
 등기 원 인 과 2018. 12. 21.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결정 및 2018. 12. 21. 자본변경
 그 연 월 일 에 대한 허가 결정
 등 기 목 적 별지 기재와 같은 자본의 총액 및 발행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규칙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4조의 의하여 면제
-----------------	--

※ 법원방문 및 등기축탁서 열람 요청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법원 방문 및 조사계획 수립**

- 부산지방법원 방문으로 등기촉탁서 관련 자료열람을 통해 회생법인의 자본증자 등기 등록면허세 누락 원인이 법원의 등기촉탁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세 면제 적용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 이에 자본증자에 관한 법원촉탁 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구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등록면허세 누락이 존재함을 파악하게 되었고,
- 행정안전부 자문과 과거 태백시청 등록면허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승소 판례(2016구합51526) 등을 참고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 **행정안전부 자문 : 2016년 시행 개정 지방세 적용요령**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정비 (법 제26조제2항제1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등록 또는 면허</u> 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u><단서 신설></u>	제26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좌동 1 . ----- ----- <u>등기 또는 등록</u> <u>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u>

(개정)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

< 적용요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과의 관계

채무자 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적용 불필요

⇒ 「채무자회생법」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4. 장애극복

□ 법원 회생 통보 활용으로 “방안을 찾아내다!”

-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촉탁등기관 관련 자료 통보 누락 및 세원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에게 통보의무가 있음에 착안하여 체납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생대장을 이용해 최근 7년간 회생 법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법인등기 자료 열람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대사 작업을 통해 누락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 법원의 회생통보를 체납정리 활용에 그치지 않고 파생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로 시야를 확대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꾸준한 회생대장 관리 덕분에 누락된 세원을 찾아올 수 있었다.

□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촉탁등기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비과세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된다.
- 따라서 법원 방문 및 등록면허세 협조 공문발송으로 잘못된 비과세 관행에 대해 개선요청을 하였다.

□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한 촉탁등기자료 연계

기존 등기자료 통보에서 누락된 부분을 시스템 요청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정착이 되면 촉탁등기관 관련 비과세 등기대상에 대한 세원파악에 더 용이해질 것이다.

[인천 계양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체납·징수관리 강화
사 례 명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2과 김경나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체납자 및 분납 미이행자에 대한 예금압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압류 대상 기준을 체납액 70만원으로 낮추고, 예금압류 대상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추진 ○ 예금압류 대상자 납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압류 예고문발송 : 2021. 3. 16.~현재까지 1,897건/ 351,687천원 징수 - 예금압류 : 2021. 4. 9.~현재까지 3,378건/ 915,598천원 징수 ○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시함으로써 고액체납징수 및 세입증대에 기여함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1. 3월 ~ 현재 ○ 대 상 : 세외수입(자동차과태료 등) 체납자 ○ 추진내용 : 고질적·상습적 세외수입 체납자 및 분납 미이행자에 대한 예금 압류 실시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3월 ~ 현재 :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 (70만원이상 체납자, 분납미이행자) ○ '21. 4월 ~ 현재 : 예금압류 실시 ○ '21. 5월 ~ 현재 : 예금 압류자에 대한 추심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부동산 압류는 사실상 압류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음 ☞ 체감가능한 강력한 압류가 필요함에 따라 예금압류 실시 ○ 분납확약 후 분납을 미이행하는 체납자가 많아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분납 미이행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 및 실시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압류 예고문 발송 대상자를 체납액 7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압류 대상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넓히는 등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 고질적·상습적 체납에 대해 주거대 은행의 예금을 압류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주지시킴 ○ 분납 미이행시 예금압류를 함으로써 분납 확약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압류 예고문발송 - 2021. 3. 16.~현재까지 1,897건/ 351,687천원 징수 ○ 예금압류 - 2021. 4. 9.~현재까지 3,378건/ 915,598천원 징수 ※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 과제 선정 내용

-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와 납부의지를 상실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필요
-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및 분납 미이행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납세의지를 고취시키고, 분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함

2. 문제원인 분석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장 많은 압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동산 등의 압류는 실제 징수로 실현되기까지는 매각 시점까지 체납처분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자동차·부동산 압류에 한정된 체납자들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징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방안 필요
- 세외수입 체납자 중 현재 분납 약속한 체납자가 2022년 4월말 기준 1,025명인 것에 비해 실제로 성실히 분할납부 (2022년 3회 이상 납부 이행) 하는 체납자는 202명으로 약 20%에 그침
 - ⇒ 분납확약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독려 문자를 보내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납을 체납처분 유예의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장기 분납자의 납부의지 해이 등 사후관리 방법에 한계가 존재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예금 압류 대상자 확대 실시

- 대상자 선정 시 체납액 기준을 낮춰 7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분납미이행자 등을 예금압류 예고 대상자로 선정 (고액체납자 중 성실 분할납부 이행자 제외)
- 기존 제1금융권 예금 위주로 압류 실시하던 것에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예금을 조희, 압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극대화

○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

※ 예금압류 실시 프로세스



▷ 예금압류 현황

(단위: 명, 건, 천원)

구 분	대상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비 고
합 계	2,083	16,844	5,045,335	
2019년	319	1,779	607,972	
2020년	848	4,868	1,692,264	
2021년	873	8,663	2,419,547	2021년 이후 예금압류 확대 실시
2022년 7월	973	9,223	2,406,977	

※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서로 88 (계산동)
 총괄동 귀하 (본인계봉요항)
 21002

총괄동·귀하 예금 및 증권계좌 압류 예고문

◆ 항상 계양구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현재 아래와 같이 계양구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어 본 압류예고문을 보내드리오니 **2021. 8. 31.일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채재·부과공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부득이 귀하 소유의 **예금 및 증권계좌를** 압류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 8.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금액은 2021년 8월 10일 기준 계양구 세외수입 체납이오니 사실과 다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신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고지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0. 신용카드 결제 : 구청방문 및 <http://etax.incheon.go.kr/> 접속후 납부
 0. 전 자 납 부 : <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세외수입 납부

현재 체납내역 (단위 : 권, 원)

성명	총괄동	주민등록번호	431125-*****
대표과목	건 수	금 액	압류 예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강제금	3	144,209,000	증권계좌 및 은행예금

문의전화 : 세무2과 세외수입팀 ☎ 032)450-5265

※ *최근 6월 이내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소인처리종으로 체납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2021-08-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공인생략

4. 장애극복

-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 압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경우 교부청구 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뿐 아니라 체납자가 인식하기에도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까지는 단지 서류상의 처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실상 압류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음

⇒ 체납자가 체감 가능한 강력한 체납징수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70만 원 이상 체납자 전원에 대하여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제1금융권 뿐 만아니라 제2금융권 까지 예금압류의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누락되는 채권을 최소화함

○ 분납확약 후 분납을 미이행 하면서도 분납확약을 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유예하는 등 분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 분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분납 미이행 체납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압류 조치

5. 성 과

1)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납세의지 고취

○ 자동차·부동산 등 사실상 압류에만 그친 체납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하여 납세의지를 고취시킴

○ 세외수입 70만 원 이상 체납자 전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및 예금압류를 실행함으로써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 분납 확약을 했더라도 분납 미 이행 시 압류됨을 인지시킴으로써 성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함

2) 예금압류 예고 및 압류를 통한 징수 성과

○ 예금압류 대상자 납부실적

-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단위: 명, 건, 천원)

기 간	대상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 계	5,355	54,392	9,330,132	1,897	351,687
2021년 1월~12월	3,004	29,717	7,753,375	951	212,308
2022년 1월~7월	2,351	24,675	1,576,757	946	139,379

- 예금압류

(단위: 명, 건, 천원)

기 간	대상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 계	1,846	17,886	4,826,524	3,378	915,598
2021년 1월~12월	873	8,663	2,419,547	2,323	717,317
2022년 1월~7월	973	9,223	2,406,977	1,055	198,281

3) 고질체납자의 분납확약 및 납부 사례

○ 체납자 송**은 2020년 이후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부과, 체납되어 수차례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소유 토지를 압류하였음에도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고 고액의 체납을 방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2021년 6월 제2금융권 압류예고문 발송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분납확약을 받아내었고 이후 매월 500만원 씩 분할로 납부하고 있음

○ 체납자 박**는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총 6건, 9,902,000원이 체납되어 수차례 체납독려를 통해 분납약속을 받았으나 성실히 납부하

지 않아 체납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예금압류 예고문을 통해 느슨해진 납부의지를 제고하여 매월 50만원 씩 분납 확약 하였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조치 할 것임을 강조, 현재 꾸준히 납부하고 있음

[울산 울주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체납·징수관리 강화
사 례 명	위탁자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2과 배보람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의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존재하여 재산조회 시 조회되지 않고 신탁법에 따라 체납처분 진행하지 못했음을 발견함.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부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체납처분 가능함을 확인. ○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체납자)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 및 소멸시효 중단 ○ 압류실적: 7건, 36백만원 / 징수실적: 1건, 34백만원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위탁자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2월: 고액채납자 중 결손(정리보류→시효소멸) 대상자 검토 ○ '22년 2월: 지방세정보프로그램 토지건물조회[1517]화면 이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 ○ '22년 2월: 고액채납자의 수익금·배당금 압류 및 압류통지 ○ '22년 5월: 전체 채납자(채납액 30만원 이상, 압류건수 2건 미만) 관내 신탁재산 조회 ○ '22년 5월~7월: 전체 채납자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실시 ○ '22년 8월: 지방세정보프로그램 채납자 전국 재산조회[6115]통해서 전국 신탁재산 추출 중 ○ '22년 8월: 총 채납액 36,107,270원 중 34,046,000원 징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부동산)은 채납처분 할 수 없으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채납처분 가능함을 확인. ○ 신탁계약의 대부분은 위·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금 및 배당금 추심청구시 금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여 추후 수탁자→위탁자로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 채납액 납부 후 이뤄지도록 하였음.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수익금과 배당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를 압류함으로써 세금회피 방지 ○ 무재산 결손(시효소멸)방지 및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 ○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함으로써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매매차익 등은 선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정산 후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익금·배당금 추심청구 시 금원이 없어도 압류해지 할 필요 없음. ○ 신탁수익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한 결과 총 채납액 36백만원 중 34백만원 징수
⑤ 성과	○ 재산조회시(등기부상 소유자 조회) 확인하기 어려운 신탁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 있었으나, 채납자(위탁자)의 신탁채권 압류를 통해 채납액 징수 및 납세의무 소멸 방지와 신탁재산 조회 방법 제시

위탁자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1. 과제 선정 내용

고액채납자 결손(정리보류→시효소멸) 대상자 검토 중 신탁재산은 재산조회 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채납자인 위탁자의 재산으로 조회되지 못하고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16)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 진행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는 체납처분 할 수 있어 신탁재산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로 체납액 징수 및 납세의무 소멸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세외수입 채납자의 신탁재산 체납처분 과정의 한계점에 대해 짚어본 다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문제 원인 분석

세외수입 채납자의 신탁재산 체납처분 과정 중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아래와 같다.

가. 신탁재산 압류의 한계

(1)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 진행할 수 없음

나.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한계

(1)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채납자재산조회(0329)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지만, 채납자의 재산이 연계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음.

(2) 따라서 부동산자료의 경우 토지정보과에서 자료요청 하여 받아 오는데, 등기부상 소유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니 신탁 물건의 경우 재산조회가 되지 않음.

16) 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제극복 및 실행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탁재산 체납처분 과정 중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해결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신탁재산 압류의 한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인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

○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금과 배당금

- (1) 신탁재산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수익자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으면 됨. 대부분은 우선수익자가 위·수탁자가 아닌 제삼자로 설정되어 있어 압류 후 추심 시 금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수익자에게 수익이 다 돌아가고 난 뒤 위탁자에게 금원이 발생할 수 있음.
- (2)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 정산할 때,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함으로 현재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금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류 해지할 필요 없음.

○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 신탁재산은 신탁 기간 내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으로 신탁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신탁기간 만료 시 체납자(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추후 수탁자→위탁자로 소유권 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지처리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할 것을 추천함.

<공문>

사람이 희망한 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처록 **세외수입 채납자 수익금 또는 배당금 압류 건의(홍-표)**

세외수입 채납자의 재건확보 및 채납의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 (채납처분), 지방행정징재처분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압류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압류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채납자의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채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압류대상 : 홍 (661101-1*****)
2. 채 납 액 : 1건/ 611,000원

붙임: 압류대상자(홍) 1부, 갈.

사람이 희망한 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처록 **세외수입 채납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건의(홍-표)**

세외수입 채납자의 재건확보 및 채납의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 (채납처분), 지방행정징재처분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압류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압류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채납자의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채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압류대상 : 홍 (661101-1*****)
2. 채 납 액 : 1건/ 611,000원

붙임: 압류대상자(홍) 1부, 갈.

압류 통지서

채납자	주소 (영합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번호 (영합소)	우	주민등록번호 (영합,외국인등록번호)	661101-1			
압류 대상의 표시 (제원)	울산 울주 삼복면 산전리 201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사유	채납채무의 이행	압류해제 조건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외수입금 내용								
과기연도	납부기한	과제연도	채외수입금	가산금	공납이자	합계	과목	비고
2020	2021-01-31	0000	900,000	111,000	0	611,000	상기관리명하한과대표	
계			900,000	111,000	0	611,000	총납수 : 1	
채납채무액						0		
합 계						611,000		

압류 통지서

채납자	주소 (영합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번호 (영합소)	우	주민등록번호 (영합,외국인등록번호)	661101-1			
압류 대상의 표시 (제원)	울산 울주 삼복면 산전리 201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사유	채납채무의 이행	압류해제 조건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외수입금 내용								
과기연도	납부기한	과제연도	채외수입금	가산금	공납이자	합계	과목	비고
2020	2021-01-31	0000	900,000	111,000	0	611,000	상기관리명하한과대표	
계			900,000	111,000	0	611,000	총납수 : 1	
채납채무액						0		
합 계						611,000		

나.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한계
신탁재산을 세외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정보

시스템의 활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 시행

○ 관내 신탁물건 조회

- (1) 지방세정보시스템 토지건물조회[1517]메뉴*17) 활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 시행
- (2)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세외수입 체납만 있는 대상자도 조회 가능

○ 전국 신탁물건 조회

- (1) 지방세정보시스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6115]메뉴 활용하여 전국 신탁재산 조회 시행
- (2) 지방세 체납이 있고 세외수입체납도 있는 대상자만 조회 가능
- (3) 신탁물건이 화면상에 바로 표시되지 않아 조회된 부동산 등기부에 들어가서 신탁물건유무를 파악해야 함

4. 개선 제안

현재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체납자의 재산 중 연계되어 조회되는 것은 급여 정도인데 급여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와 연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프로그램에서 받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세외수입체납액만 있는 체납자의 경우 급여정보조회가 되지 않는 등의 체납자 재산조회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 (1) 기존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지원단에 개선요청 결과 현재 차세대 시스템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개선지원 할 수 없고 차세대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것과 문의 사항은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문의하라고 함.
-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문의 결과 차세대시스템에서 체납자 재산 조회 기능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자료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함. (22년 9~10월 중 결정 예정)

17) 조회조건: 조건→건물자료조회☑, 토지자료조회☑, 엑셀 임시자료→10납세자/소유자→수탁자 존재→1존재

[세종 본청]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 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체납·징수 관리 강화
사 례 명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함께! 영치는 스마트하게!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자치분권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담당 전미옥

< 요약 >

- **(세입증대)**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통합관리 후 업무의 효율성과 세수증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의 변화가 필요. 이에 빅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기관 간(시-경찰청)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과태료 합동 영치 정례화, 다양한 차량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업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관련 효율적·체계적 체납징수 관리로 '22년 상반기 목표액 대비 123% 초과 징수**

- **(파급효과)** 대부분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또한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 부족으로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차량 관련 과태료 함께 징수하고 업무 공유를 통해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 등 실질적인 장애인요인에 대한 극복사례 등을 제시하고 전국 타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방식 등을 전국 타 자치단체에 확산·공유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됨.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세종특별자치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서식〉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 체납·징수관리 강화

□ 사례명 :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함께!** 영치는 **스마트하게!**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경찰청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므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나갈 새로운 업무방식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 ○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 공유를 통한 복잡하고 다양한 차량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업무 기반 마련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2~4 교통사업 특별회계 인계·인수, 통합징수 추진 ○ '21. 5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추진을 위한 모바일 영치폰 추가 구입 ○ '21. 12 체납차량 영치 빅데이터 분석과제 공모(스마트도시과) ○ '22. 2~5 기관간 협업 영치를 위한 실무담당자 회의(3회) ○ '22. 3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 '22. 4~8 경찰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담당자 합동 영치반 편성 및 영치활동 추진 ○ '22. 6 빅데이터 모델링 및 결과분석 도출
③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1) 시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 정례화 및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확산 ○ (장애2) 한정된 시간에 영치 단속 장소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 등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 업무의 비효율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통한 업무 방식 개선 ○ (장애3)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매우 다양한 민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주체가 달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서에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등 업무매뉴얼 작성·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기법을 공유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 통합적 안내로 불편함 해소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경찰청 협업체계 구축으로 市 세입증대에 기여 ○ 체납 차량 영치 빅데이터 분석 과제 공모 및 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납 차량의 영치 효율화 ② 업무방식 개선 ○ 각 기관별 차량 관련 과태료 업무 매뉴얼 작성·공유를 통한 통합적 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① 민원편의 제공 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③ 함께해결하는 업무기반 마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市 세입증대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업 통합관리 후 50% 초과 징수(5.6억→8.4억) - '22년 상반기 목표 대비 123% 초과 징수(3.8억→4.7억) ○ (확산성) 체납 차량 영치 효율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차량 관련 과태료 합동 영치 정례화를 통한 징수인력 해소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체납 차량의 효율적 영치 활동 추진 - 자동차 관련 민원 통합적 안내로 민원편의 제공, 향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민원을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장기적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합시스템 개발을 통해 원스톱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우수사례가 되기를 기대 ○ (지속성) 매년 차량 관련 체납 차량의 효율적 영치 활동 지속적 적용 가능

〈③우수사례 기술서〉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함께!영치는 스마트 하게!

1. 과제 선정 내용

-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통합관리 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전년 대비 50% 초과 징수*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

※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이관 후 '21년 전년대비 50% 초과 징수(5.6억→8.6억)

※ '22년 상반기 목표액 대비 123% 초과 징수(3.8억→4.7억)

- 시와 경찰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성격이 비슷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나갈 필요성에 함께 공감

* 시청(주정차,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경찰서(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차량 밀집 지역(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등 무작위로 선택, 주1회 이상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방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
- 이에, 한정된 시간에 번호판 영치 단속실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업무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부서(지능형도시과,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찰청과의 협업 추진하였으며,
-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차량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업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문제원인 분석

- (체납액 지속적 증가) 시와 경찰청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속적 증가에 따라 차량 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 필요

<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21	'22
세 종 특 별 자 치 시	68	69	69	69
세 종 경 찰 청	24	29	31	32

- (징수 전담인력 부족) 체납의 대부분이 과태료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낮은 실정임.

연도별 이월액 및 징수현황

('21.12. 31.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체납액	체납징수액	징수율
'21년	2,817	844	30.0
'20년	2,602	561	21.6
'19년	2,379	365	15.3
'18년	2,007	353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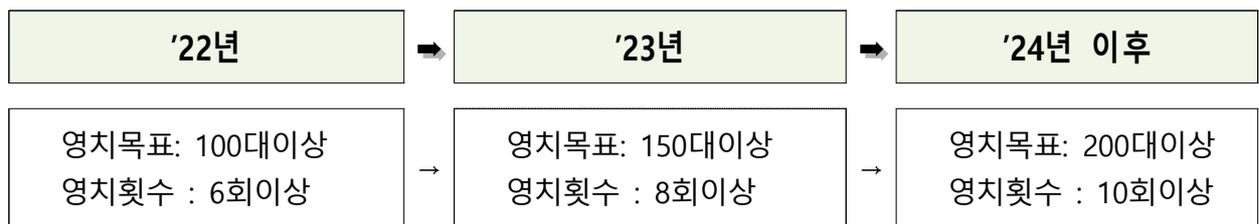
The chart displays the following data points for collection rates: '18년 (17.6%), '19년 (15.3%), '20년 (21.6%), '21년 (30.0%).

- (업무의 비효율성 존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차량 밀집 지역(주차장, 대형아파트 단지) 무작위로 선택, 주1회 이상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나 한정된 시간에 단속실적을 최대화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미흡)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매우 다양한 민원 중에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주체가 달라 관련 과태료에 대해 문의하거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시민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 해결 노력 미흡

3. 방안 마련 및 실행

①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는 함께!**

- (각 기관의 의견 수렴)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통합관리 후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실무담당자들의 사전 논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
- (실무 담당자 회의) 시-경찰청 간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동영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 (1차) 합동 영치를 위한 목적, 일정, 홍보방안, 업무매뉴얼 공유 등 논의
 - (2차) 법령 연찬, 장비공유, 단속 인력 등 시기 논의
 - (3차) 음주단속 합동 영치 활동 전개 및 홍보 추진을 위한 사전 논의
- (합동영치 정례화) 경찰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 영치반 편성 및 영치 활동 정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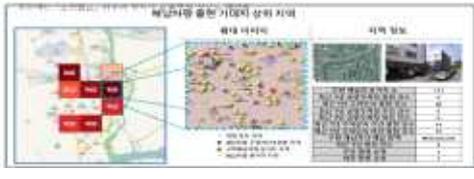


- (음주단속 병행 합동 영치)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각 기관이 협업, 대대적인 영치 활동 전개 및 자진 납부 홍보 추진

② 체납 차량 영치는 **스마트하게!**

- (빅데이터 분석과제 공모 및 결과도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특성 분석 및 주정차 등 단속자료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치 활동 추진을 위한 분석과제 공모(지능형도시과, '21. 12.)
 - 빅데이터 최종 선정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22.3.)
 - 체납 차량 특성 분석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및 현장에서 영치 활동 시 집중 영치 추진('22.4.~)

〈빅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결과〉

구 분	분석자료	구 분	분석자료
분 석 모 델 링		상승·고 액 체납 자 동 차 분 포 액	
영 우 지 상 정 세 보		고액체납 자 동 차 특 분 성 석	

③ 함께 해결하는 업무기반 마련

- (통합적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각 기관별 과태료 관련 통합적인 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차량 관련 과태료 업무 매뉴얼 작성·공유 등 상호 벤치마킹 및 기법 공유
 - 각 기관별 업무매뉴얼 작성·배포하여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민원 안내 서비스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 ☞ 현재 통합 안내 시스템이 없어 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나, 향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4. 장애극복

- ① (영치 인력 부족 극복) 실질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인력이 부족함에도 시와 경찰청은 업무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 음주단속 시 병행 영치 등 협업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였음.
- ② (업무방식의 효율적 개선)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체납 차량의 행동 특성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공모 및 결과를 도출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통하여 번호판 우선 영치 장소 선정 등 업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음.

- ③ (통합적 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시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징수 절차가 유사하고,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작성·공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제도 등 매뉴얼을 숙지하여 시민들에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더 정확한 민원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음.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이월 체납액 이관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 현황

(표준세외수입시스템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	담당부서	연도별	과 년 도 이월체납액	징 수 액		체납액대비 징 수 율
					증가율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원관리과	2022 (22.7.기준)	2,291	473		11.9%
		2021	2,817	844	33.5%	30.0%
	교통정책과	2020	2,602	561	34.9%	21.6%
		2019	2,379	365	3.3%	15.3%
		2018	2,007	353	-	17.6%

※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이관 후 '21년 전년대비 50% 초과 징수(5.6억→8.6억)

※ '22년 상반기 목표액 대비 123% 초과 징수(3.8억→4.7억)

- (영치활동 정례화) 기관 간(시-경찰청) 차량 관련 과태료 합동 영치 정례화를 통한 징수인력 해소
- (체납 차량 영치 효율 극대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효율적 영치 활동 추진 및 업무 방식 개선
- (함께 해결하는 업무기반 마련) 시-경찰청 협업을 통해 다양한 차량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업무 기반을 마련 및 시민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 장기적 기관 간 업무 장벽을 넘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 운영하여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가 되기를 기대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신규수입원 발굴
사 례 명	LH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임성경 주무관

< 요약 >

-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 LH 무상귀속 구유일반재산 유상전환 소송
 - 2017. 7.20. 민사 소 제기(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소가 : 5,216,268,750원(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금 반환)
- 제1심 선고 : 2019. 6. 5. 송파구 90% 승소(피고 변제 금전공탁 5,135,223,584원)
 - 총 26필지 일괄무상귀속약정체결로 민법137조 적용, 일반재산화 행정행위등 인정 일괄무효
 - 9필지 792㎡ 채무부존재 확인, 17필지 7,110㎡ 부당이득금 반환
- 제2심 선고 : 2021. 1.26. 송파구 60% 승소(4,091,531,740원) ※ 2019. 6.24 LH 항소
 - 1심적용 민법137조 하나의 법률행위 미대상판단, 필지별 세밀자료 부족으로 패소 확정적
 - 다수의 관련기관 자문 및 확인, 당시 필지별사진자료 낱낱 재검증, 유사 언론 기사자료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 발굴 총력수집 소명실시, 법원인정 노력으로 승소
 - 5필지 745㎡ 채무부존재 확인(매각 대상), 9.6필지 4,779㎡ 부당이득금 반환
- 상고심 선고 : 2021. 1.26. 원·피고 기각, 제2심 판결 확정 송파구 승소
- 세입조치 완료 : 2021. 9.27.(4,091,531,740원)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서식〉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 신규수입원 발굴

□ 사례명 : LH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건 명 : 소유권 말소등기 민사 소 제기 ○ 사건대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 소 가 : 5,216,268,750원 ○ 소 결 과 : 대법원 송파구승소 확정, 4,091,531,740원 신규세입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7.20 : 소 제기(송파구) ○ '19. 6. 5 : 제1심 선고, 송파구 90% 승소 ○ '19. 6.24 : 항소 제기(한국토지주택공사-송파구 쌍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6필지에 대한 필지별 추가 및 세부입증 자료, 당시 관련직원 사실확인서 제출 등 다수 세밀자료 석명 명령 ○ '21. 1.26 : 항소심 선고, 송파구 60% 승소 ○ '21. 6.24 : 상고심 선고, 기각(제2심 확정 송파구 승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심 재판부의 각 필지별 개별협의를 따라 약정한 법률행위도 그 전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일체로 보아 일괄무상귀속 약정이 체결된 필지들의 용도폐지 등 일반재산화한 행정행위를 인정, 민법 제137조 적용 일괄 무효로 관시하였으나, ○ 제2심 재판부는 제1심 판단을 인정치 않고 필지 개별사항으로 다르게 판단하여, 필지별 현황, 이용실태. 관련공부 등 세밀한 확인으로 유무상 기준의 재결정을 위해 필지별 상세한 자료 추가 등 다수의 석명 명령이 계속되어 명확한 옛 공부자료 추가확보 애로에 따른 거의 패소 확정적이라는 변호측 의견에, ○ 밤낮으로 다수의 관련기관 자문 및 확인, 당시 재산의 필지별 현황사진 낱낱이 재검증, 당시의 언론 유사기사 보도자료 확인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발굴 총력수집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구유재산의 정당한 가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최상으로 추가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의심했던 상당부분을 증거인정 한다는 결심을 갖도록 하여 승소에 이르게 하였음.
④ 우수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에 구유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괄로 약정체결하여 무상귀속한 재산 중 일반재산(26필지)을 확인하여, ○ 소유권말소등기 소를 제기하며 그 가치를 되찾고자 추진하였고, 소 진행 중에 구청의 행정행위를 일괄 인정한 1심에서의 선고를 2심에서는 인정치 않고 다르게 세밀히 보는게 정당하다며, 행정청에 더 명확하게 개개별로 세세한 상세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석명 명령을 계속해 이행이 어려운 실정에 부딪혀 변호측에서 조차 거의 패소를 단정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으나, ○ 포기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고 사고를 넓혀 청내의 한정된 자료 외에 다수의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확인을 해나가면서 기존자료도 낱알이 재검증하고 당시의 위례신도시에 대한 인접 국방부토지 등 다른기관도 관련된 약정체결관계 기사 보도자료 등을 촘촘히 열람하는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가 자료를 밤낮으로 총력 수집하는 등, 구유일반재산의 정당한 가치 회복을 위하고 구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감으로써, ○ 결국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LH를 상대로 하여 40억9천만여원 이라는 거액을, 찾아나서서 강제 징수하여 세입조치하며 구 신규세원 발굴확보에 큰 성공을 거두었음.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091,531,740원 신규 세외수입 징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8.30. 채무부존재토지 5필지 745m³ 매각금 659,222,500 - '22. 9.27. 부당이득금반환 9.6필지 4,779m³ 공탁금 3,432,309,240

내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공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1. 과제 선정 내용

- 송파구·성남시·하남시의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하여 위례신도시로 조성하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공유재산에 대한 유·무상귀속협의 약정계약을 2009~2011년 3차에 걸쳐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 LH가 유상귀속 중 22필지에 대한 지목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면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시 지목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무상귀속된 토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가치를 회복하고 정당한 계약으로 바로잡기 위해 소를 통해 추진하였고, 시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성과를 이루어 내고자 불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해낸 사고의 다각화와 체계화 및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승소 종국을 이끌어 구 재정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고 LH엔 경종을 울린 훌륭한 사례임

2. 문제원인 분석

- 국가 주요사업인 위례신도시 조성의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와 공유재산을 유·무상 귀속 약정체결한 후 시행되었음에 있어,
 - 쌍방 검토하여 약정체결하고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약정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신뢰를 갖고 추진했던 국가사업이라 완료된 후 기존 약정 부당 소송 제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LH에서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상호약정한 사항을 깨면서 미리 준비된 자료로 소 제기를 한 반면에, 구에서는 약정체결 후 국가사업 원활한 추진과 적정 진행에만 중점을 두고 만일의 사태 발생 대비 태세를 일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구 재정 부담이 크게 지워지게 되어, 공유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걱정성을 찾게 되었음

3. 방안 마련 및 실행

- LH에 무상귀속한 구유지 지목 일체 확인 실시
 - 총 26필지 7,902m³ 잡종지, 전 등의 지목 일반재산 확인
 - 해당 필지에 대한 자료 확보 후 향후 추진사항 지휘계통 보고
 - LH 피고로 민사 소 제기(변호 협력)

4. 장애극복

- 승소 예상외의 장애요인 발생 및 극복
 - 제1심에서 필지들 전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일괄 무상귀속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체로 보며 사업승인일 이전에(2008. 8. 5)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 등 구의 행정행위 및 자료 인정 등으로 민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약정일체를 무효 판결함으로써 승소하였으나,
 - 제2심에서 제1심 적용 민법 제137조의 “하나의 법률행위” 판단부분을 각 토지마다의 개별 협의사항이라 다르게 판단하며, 구에 필지별 현황, 이용실태, 관련공부 등을 세밀히 확인 후 유·무상 기준여부를 각 필지별로 재결정하겠다고, 2008년 당시의 상세현황에 대한 석명 명령을 계속하여 오래전의 보유중인 관계 상세 사실입증 추가 자료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변호인측에서도 크게 불리함을 인지 패소 단정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었는바,
 - 소 제기 취지와 다르게 얻지는 못하고 소정의 소송비용 외에는 잃을게 없는 실정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고 사고를 넓혀, 청내의 한정된 자료에다 다수의 관련공공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나가면서, 기존자료도 낱알이 재검증과 당시의 위례신도시에 대한 인접 국방부토지 등 타기관 관련 약정체결관계 기사 보도자료 등도 촘촘히 열람하는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가자료를 밤낮으로 총력 수집 최선을 다한 증거자료 확보 최대한 제출로 승소를 이끌어 내었음.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총 4,091,531,740원 신규 세외수입 징수 완료
 - '22. 8.30. 채무부존재 토지 5필지 745m³ 매각금 659,222,500원
 - '22. 9.27. 부당이득금반환 9.6필지 4,779m³ 공탁금 3,432,309,240원
- 신규세원 발굴 징수로 재정안정에 큰 기여 및 우수사례 전파

[경기 용인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신규 수입원 발굴
사 례 명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증대 UP!
기 관 명	용인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재산관리과 시유재산발굴팀장 이용석
< 요 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에서는 타·시군에는 없는 시유재산발굴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숨어있는 시유재산을 되찾아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시킴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세입증대와 세원누수 및 이중 보상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음 ○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잘못 지급되었던 국유지 매입대금 32억을 환급받아 세입증대된 사례1.와 사업 잔여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33억 상당의 세입증대를 거둔 사례2. 	

(031-324-3838, 010-5203-1714)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

경기도 용인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 신규수입원 발굴

□ 사례명 :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증대 UP!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p>○ 배경 :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도로 등)으로 보상되었거나 무상귀속 되었어야할 재산이 누락되어 방치된채 현재까지 前 소유자로 남아있는 재산이 다수 존재하여 <u>숨어있는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되찾고 이를 통해 세입증대, 세원누수 및 이중 보상 방지 필요성</u> (누락재산은 대부분 시·군에도 존재)</p> <p>○ 시유재산발굴 전담팀 신설·운영 : 2020. 01. ~ 현재</p> <p>- 발굴실적 : 503필지, 27만㎡(축구장 38개 규모), 81억원(공시지가)</p> <p>○ (사례1.) 적극적 시유재산발굴</p> <p>- 19년전 국유지 무상귀속 서류 찾아내 재협의 결과 기지급한 국유지 매입대금 32억 환급받아 세입증대 및 세원누수 방지 (사례2.) 업무처리 개선 :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하여 세입증대</p> <table border="1" data-bbox="448 936 1377 1149"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존</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 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누락 재산만 소유권확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업무 ⊕ 잔여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 33억 상당 토지 추가로 기부채납받아 세입증대 UP!</td> </tr> </table>	기 존	⇒	개 선	누락 재산만 소유권확보	기존업무 ⊕ 잔여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 33억 상당 토지 추가로 기부채납받아 세입증대 UP!
기 존	⇒	개 선				
누락 재산만 소유권확보		기존업무 ⊕ 잔여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 33억 상당 토지 추가로 기부채납받아 세입증대 UP!				
② 추진 경과 (사례1.) ----- (사례2.)	<p>○ '21.12. : 국유지 매매계약 및 지급(1필지, 3,584㎡, 32억)</p> <p>○ '22.01.~04 : 누락된 무상귀속 발굴 및 협의(용인시 →한국자산관리공사)</p> <p>○ '22.06. : 기지급한 토지매입비(32억) 환급 및 무상귀속 완료</p> <p>-----</p> <p>○ '21.10~'22.01. : 사업시행자 만나 잔여토지의 기부채납 유도</p> <p>○ '22.02. : 추가 기부채납 완료(10필지, 1,542㎡, 33억)</p>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p>○ 장애 - 누락되어 숨어있는 시유재산은 길게는 수 십년전 경우가 많아 자료발굴이 매우 어렵고 정리할 전담조직 없음</p> <p>○ 극복 -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하여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 전담</p>					
④ 우수사례 내용	<p>○ 숨은 시유재산발굴로 기지급한 토지매입비 환급받은 사례</p> <p>○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의무사항인 무상귀속 이외에 추가로 사업시행자의 잔여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은 사례</p>					
⑤ 성과	<p>○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65억 이상의 세입증대·세원누수 방지 (사례1.) 32억 환급 완료 (기지급한 토지매입비 환급 및 무상귀속) (사례2.) 33억 이상의 토지 기부채납 완료 (향후 토지매입비↑)</p> <p>※ 발굴실적(981억)은 사례와 같은 직접적인 세입증대와 이중 보상방지 등 장기적으로도 재정확충 및 세원누수 방지효과 매우 큼</p>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증대 up!

1. 과제 선정 내용

- (추진배경)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도로 등) 등으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관리청(용인시)으로 무상귀속 되었어야할 시유재산 (토지 등)이 누락된채 장기간 방치되어 현재까지 前 소유자로 남아 있는 재산이 다수 존재 확인* (대부분의 시·군에도 존재)

*2019년 용인시 예방감사로 확인

- (문제점) 누락된 재산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중보상은 물론 제3자에게 매매, 재산에 압류설정 등 여러 문제점 발생되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예상됨

- (해결방안)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숨어있는 시유 재산을 되찾아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킴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세입증대와 세원누수 및 이중 보상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음

- (발굴실적) 총 503필지, 면적으로는 축구장 38개 규모(27만㎡)의 재산을 찾아 소유권이전 하였고, 재산가치는 약 981억원임

이중 올해 세입증대가 두들어진 사례 2건을 과제로 선정함

- 사례1. : 적극적인 시유재산발굴로 잘못 지급된 국유지 매입대금 32억을 환급받아 세입증대 및 세원누수 방지 사례
- 사례2. : 업무처리 개선으로 33억 이상의 토지를 추가 기부채납 받아 세입증대된 사례

2. 문제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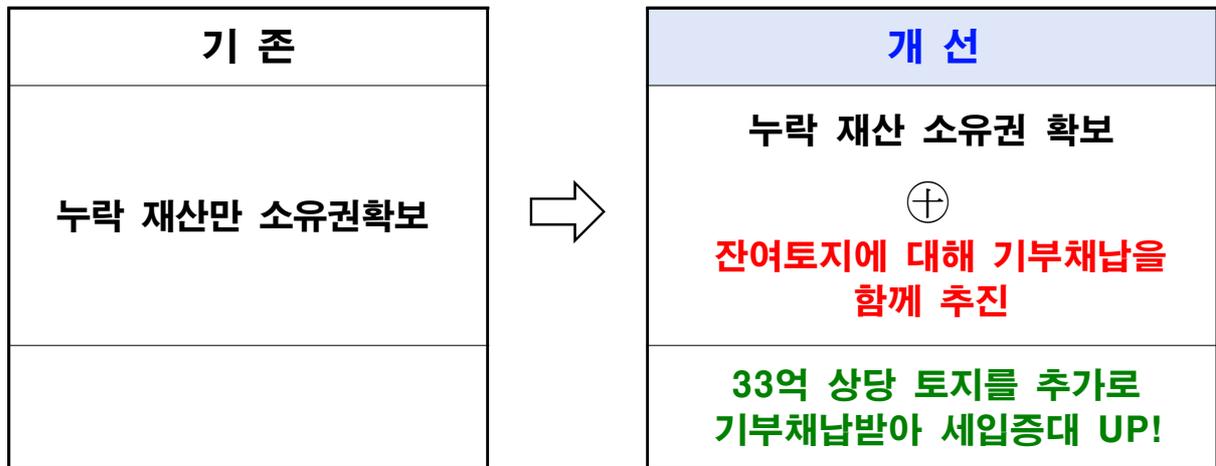
- 시유재산의 누락은 과거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의 업무 실수가 주된 원인이며 최근보다 오래된 사업의 경우 누락비율이 더 많음 대부분의 시·군에도 누락된 재산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를 정리할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누락된 채 길게는 수십년간 방치된 상태였고 누락재산을 발견해도 정리할 의지부족
- 빠른 시일내에 누락된 시유재산을 정리할 전담팀 필요
- 누락된 시유재산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입증대와 이중보상, 세원누수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팀 신설*·운영하여 세입증대 추진
*2020년 1월 신설
- (업무처리 개선으로 세입증대 추진)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단순히 누락재산만 소유권 확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업무와 누락토지 인근의 사업시행자의 사업 잔여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

[업무처리 개선]

(사례2. 관련)



-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

4. 장애극복

- 사례1.은 20여년(2003년도) 지난 사업이고 이미 국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거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을 것임
하지만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한달간 수 십차례 지하 종합문서고와 기록물 시스템을 오가며 수 천페이지의 분량의 과거 문서들을 찾은 결과 어렵게 과거 무상귀속 서류를 찾아냈음
하지만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상태라 쉽게 환급해주지 않아 수차례 설명 및 자료제시 등을 통해 기지급한 32억 환급받음
전담팀이 없었다면 묻혀버릴 뻔한 예산을 환급받은 좋은 사례임
- 사례2.는 30여년(1995년도) 지난 사업인지라 당시 사업시행자를 만나 과거 무상귀속 조건 이행 및 추가 기부채납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처음엔 거부감이 많던 사업시행자(토지주)도 몇번 만남을 거듭하며 자세히 설명한 결과 이해시킬 수 있게 되어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사업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기부
채납(33억)을 받을 수 있었음

업무처리 개선을 통한 세입증대의 좋은 사례임

5. 주요 성과

○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 실적은 503필지, 269,405㎡, 981억원

▣ 사례와 같이 시유재산발굴로 65억원 세입증대 및 세원누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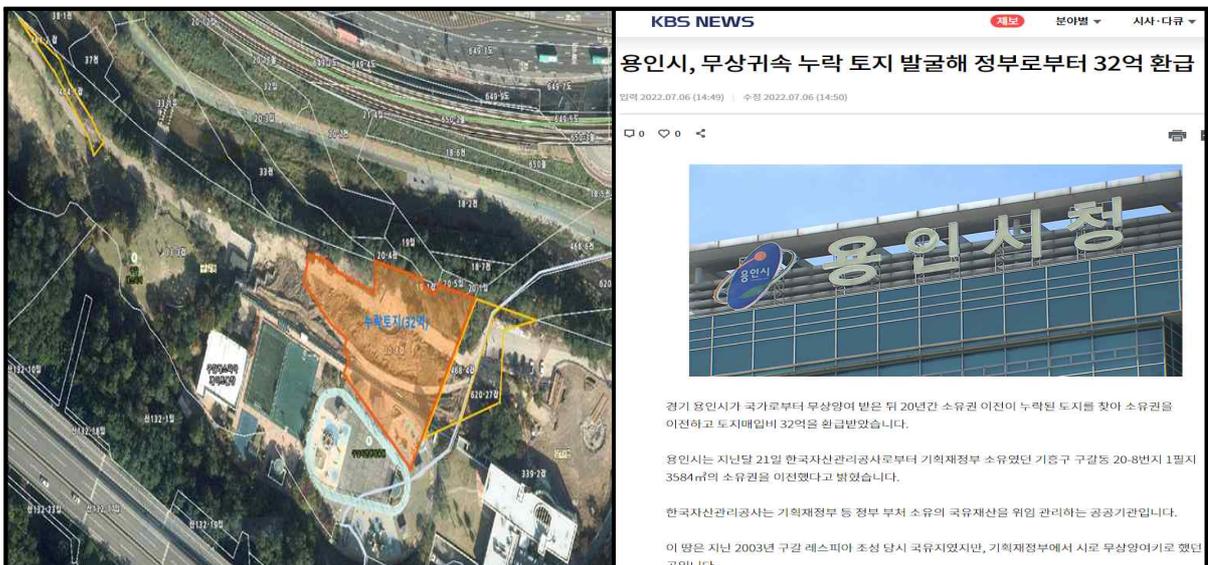
【사례1.】 토지매입비 환급(32억)	【사례2.】 추가 기부채납(33억)
세입증대, 세원누수 방지	세입증대

【사례1.】 무상귀속문서 찾아 토지매입비(보상금) 32억 환급

- 2003년도 당시 무상귀속 문서를 찾아내 기 지급된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고 무상귀속 완료
-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 1필지, 3,584㎡, 32억
- 기지급한 토지매입비 : 32억 환급으로 세입증대 및 재정확충

[위치도]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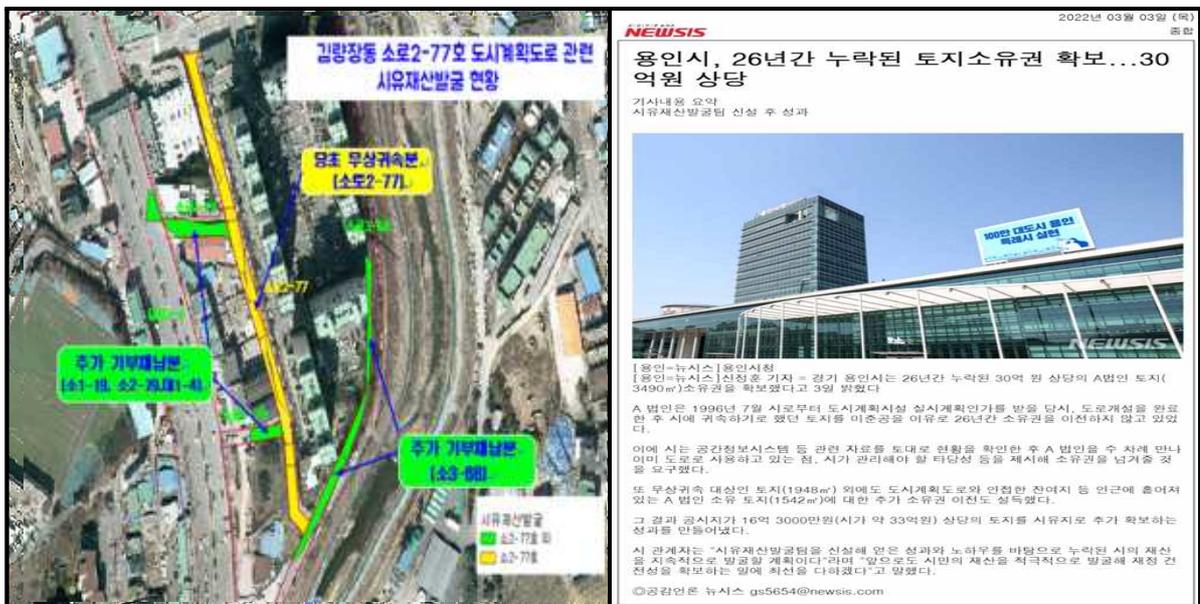


【사례2.】 업무처리 개선으로 33억 상당의 토지 추가 기부채납

- ‘95년도 당시 누락된 무상귀속 토지(도면의 노란색 부분)를 찾아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인근에 사업시행자(토지주)의 잔여토지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의무사항인 무상귀속 이행과 더불어 잔여토지(도면의 녹색 부분)의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하여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은 성과임
- 기부채납토지 소유권 이전 : 10필지 1,542㎡, 33억 상당
- 기부채납받은 부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로서 향후 사업시행시 용인시에서 매입(보상) 해야할 토지로 향후 보상가는 33억 이상이 예상

〔위치도〕

〔언론보도〕



○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 사업 분석

▷ (효과성)

-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은 소유권을 되찾는 동시에 발표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세입증대와 재정확충 효과 있으며,
- 장기적으로도 향후 발생가능한 이중 보상지출, 제3자매매, 압류설정

-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간접적인 세입증대와 세원누수 방지 효과
- 시유재산을 되찾기 위한 불필요한 소송 등 행정낭비를 사전에 예방

▷ (지자체 확산 가능성)

- 누락된 시유재산은 대부분의 시·군에 존재하므로 확산 가능성 높고 세입증대 효과도 있어 확산 가능성 높음

▷ (개선 노력도)

- 타 시·군에 없는 시유재산발굴 전담팀 신설·운영
- 세입증대를 위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 운영

▷ (결과 지속성)

-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3~4년간 전담팀 운영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입증대 효과가 많고 장기적으로는 세원누수 방지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지속성은 매우 좋음

[대전 동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세외수입 운영 혁신
사 례 명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동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토지정보과 유혜진

〈 요약 〉

-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함.
 - 조정금 부과액에 대한 부담으로 면적변동을 수반하는 협의에 민원 다수 발생
 - 지적재조사 효과를 이해시켜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안 필요
- 내 용
 - 드론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3차원 지형모형을 활용한 사업효과 안내
 -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 제시 및 합의점 도출
- 추진결과
 - 조정금 부과에 따른 세입 증대 및 민원·분쟁 유발요인 해소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서식〉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 세외수입 운영 혁신

□ 사례명 :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2지구(153필지) ○ 추진기간 : 2020. 1. ~ 2022. 3. ○ 사 업 비 : 50,293천 원 / 국비100% ○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지적 불부합지 정리)경계 협의 진행에 따른 경계 결정 및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한 조정금 부과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01.: 실시계획 수립 ○ 2020. 05.: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 제작 /대전시 지원 ○ 2020. 07. ~ 2021. 3.: 경계설정 협의 실시 ○ 2021. 03.: 무인비행장치(드론) 자체 운영 실시 ○ 2021. 10.: 경계 확정 및 사업완료 ○ 2022. 03: 면적증감 필지 조정금 산정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와 현황 경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면적 변동을 수반하는 경계 협의 진행률이 낮음 → 드론 정사영상을 연속지적도에 접합하여 경계 협의 시, 시각적 추가 자료로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도움 ○ 드론 정사영상 구축을 위한 예산 소요 문제 → 대전광역시 드론 정사영상 제작 추진 계획을 활용한 비예산 추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조사지구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 제작 및 변경 예정 지적도 중첩 영상 구축 ○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 제시 → 면적변동 토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최종 경계결정 → 합의 결정에 따른 조정금 부담 완화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면적증가 토지 조정금 부과 → 440백만원 ○ 2021년 대비 조정금 징수결정액 → 4배 증가 ○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추진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 → 1,050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1. 과제 선정 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경계 조정에 따라 면적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및 지급하여야 함
- 경계 협의 단계에서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사업효과 설명을 통하여 면적 증가를 수반한 경계 결정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조정금 부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자 방안을 제시함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란?

-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금액
-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2. 문제원인 분석

□ 장애요인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경계 조정 및 확정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전 예측이 어려움 → 경계 확정 이후에는 경계변동 불가
- 토지소유자는 기존 지적 경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적재조사 효과 및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계 협의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경계 협의 단계에서 면적 변동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 변동 및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 민원 발생을 야기함

▣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토지소유자 참여 단계)



▣ 경계설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의견제출 포함) / 최근5년내 사업

지구명	효평1지구	세천1지구	세천2지구	비룡1지구	비고
조 이 의 신청	11건	0건	3건	4건	
경 계 설 정 의 신청	2건	3건	5건	5건	

- 조정금 이의신청 사례 / 토지소유자 이○○

: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논두렁 비탈 부분인데 토지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며, 조정금도 농지 수용가격과 달리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 경계 협의 당시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나 조정금 부과 후 이의신청 제출한 것으로 협의 단계에 지적재조사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전달 필요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업개요

- (사업명) 비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기 간) 2020. 2. ~ 2022. 3.
- (대 상) 비룡동 16-1번지 일원 153필지, 131천m²

□ 개선방안

-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 활용
 -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통해 정형화된 변경(예정) 연속지적도를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과 중첩
 - 경계협의 단계에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시각적 추가 자료로 활용하여 개별 토지의 정형화된 지적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 구축



※연속지적도 및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예시자료

○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 제시 및 합의 진행

→ 맹지 해소 가능성 판단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 제시

→ 경계 설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조정금 부과 아닌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금 부담 완화

경계설정 제시 비교 중첩영상	
종전 지적	변경(예정) 지적
	
종전 지적	변경(예정) 지적
	

4. 장애극복

○ 기존 자원 활용

- (무인비행장치 정사영상)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자체 보유·운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드론 정사영상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경계 협의 단계를 포함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 비예산 추진

참고자료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정사영상 제작 추진 계획

□ 결 제 요 지

□ 추진배경
○ 일정한 조차 수량 후 측량장치의 고해상도 정사영상의 확보 분석을 통한 세호사 측량장치의 정확성여 제지 및 신속한 사업수진 필요.

□ 추진개요
○ (수진 기간) 2020. 5월 - 7월
○ (수진 대상) 정구, 광구, 대곡구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8) 번호

바콘망

사업지구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내용
정구	정구정사영상제작사업	정사영상	2020. 5월 - 7월	정구	정구정사영상제작
광구	광구정사영상제작사업	정사영상	2020. 5월 - 7월	광구	광구정사영상제작
대곡구	대곡구정사영상제작사업	정사영상	2020. 5월 - 7월	대곡구	대곡구정사영상제작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합리적인 경계협의 방안 도출

- 합의점을 도출하여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부담 완화
-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한 경계 협의 담당자의 행정력 제고
- 경계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접수민원 대폭 감소

▣ 지적재조사사업 민원(이의신청) 건수

지 구 명	효평1지구	세천1지구	세천2지구	비룡1지구	비룡2지구	비고
조 정 금 이 의 신 청	11건	0건	3건	4건	0건	
경 계 설 정 이 의 신 청	2건	3건	5건	5건	0건	

○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

- 2022년 면적증가 토지 조정금 총 부과액 / 약 440백만원(20건)
- 2021년 대비 조정금 징수결정액 / 4배 상승
-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추진에 따른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 / 약 1,050백만원

▣ 면적증가 조정금 부과액

(단위: 천 원)

구분	총 부과액	부과 대상(명)	1인 평균 부과액	비고
삼괴 지구	247,956	28	8,856	평균 9,171천 원
삼괴2지구	18,511	5	3,702	
소호1지구	237,038	49	4,838	
효평1지구	307,308	52	5,910	
세천1지구	660,209	37	17,843	
세천2지구	761,511	51	14,932	
비룡1지구	105,485	13	8,114	
비룡2지구	432,714	20	21,636	

○ 지적재조사 효과 극대화

- 명확한 데이터 추출을 통한 사업 완료 효과 수치화
-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향화로 재산세 및 대부료 등 지방재정 세입 증대 효과

구분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비고
2020년 이후 (개선 후)	80%	82%	13%	
2015년 ~ 2019년 (개선 전)	56%	81%	6%	

[대구 동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 신규수입원 발굴
사 례 명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 찾아오다
기 관 명	대구광역시 동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2과 손영준, 권문경

〈 요약 〉

- 민원인이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수용과 보상을 다년간 계속 요구
-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여부 확인이 불분명, 보상을 위한 도시관리변경계획 수립
- 보상 없이 도로가 건설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수기 작성된 과거 보상금지불 대장 일체를 전산화한 결과, 1968년에 보상금 70%정도 지급된 미불토지임을 확인
- 현재가액(약1억5천만원)의 보상 없이는 절대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인을 여러 차례 만나 사실 설명과 구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며 합의 도출
- 잃을 뻔한 구청 땅을 찾아, 보상비·설계비 등 2억 6천만원의 재정지출 절감
- 유사한 토지가 더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로 지속적인 조사 실시 계획
- 재산을 지키고 지출을 방지하는 것도 수입이라는 발상전환으로 지방재정 확충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9.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 찾아오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795-3,4 (572.0㎡) ○ 추진기간 : 2015. 2월 ~ ○ 사 업 비 : 해당없음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보상금지불대장을 전산화하여 토지 보상내역을 정리 - 숨겨진 구청 땅을 회복하고 보상 관련 민원을 해결 - 보상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발생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2. ~ '16. 8. 둔산동 도로부지 보상요구 민원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장 수기작성되어 과거의 보상사실여부 확인 불가 ○ '18. 5. 둔산동 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착수 ○ '18. 6. 2018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 완료 ○ '19. 1. ~ 2. 유관기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 폭발물 제한구역으로 사업시행 불가 ○ '21 과거보상대장 상세DB구축 실시 ○ '22. 2. 상세DB자료 중심으로 보상내역 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년에 보상금 70% 정도 지급된 미불용지임을 확인 ○ '22 3, ~ 5.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한 보상협의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자문 결과, 점유시효취득 또는 당시 가액기준으로 잔금지급 시 등기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2 8. 구청 소유로의 명의이전을 소유자와 협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토지에 대한 증빙자료 발견 및 추적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고 및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민원인과의 갈등을 여러 차례 설득으로 극적 합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권이전소송'으로 구청 소유로의 명의이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과의 극적으로 합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보상민원 제기 시 상세DB를 통해 적극 대응 가능 ○ 숨겨진 구청 땅을 되찾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절감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의 자세로 과거보상내역을 전산화한 결과, 1억5천만원 상당의 구청 땅을 찾고, 5천만원의 용역비 지출 절감 ○ 이후 전산화된 보상금지불대장 및 보상민원을 검토하여, 2건의 미불용지를 더 확인하고, 6천만원 상당을 구청 땅을 추가로 찾음 ○ 유사한 사례의 토지가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소중한 재산을 찾아 지방재정발전을 도모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 찾아오다

1. 과제 선정 내용

○ 개요

- 개인의 사유지를 공공필요에 따라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규정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수용법」)을 제정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 동안 괄목상대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과거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 적법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도로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요구

- 둔산동에 위치한 도로부지(둔산동 795-3, 795-4)도 과거에 명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유자는 현재 소유한 둔산동 일대 토지가 오래 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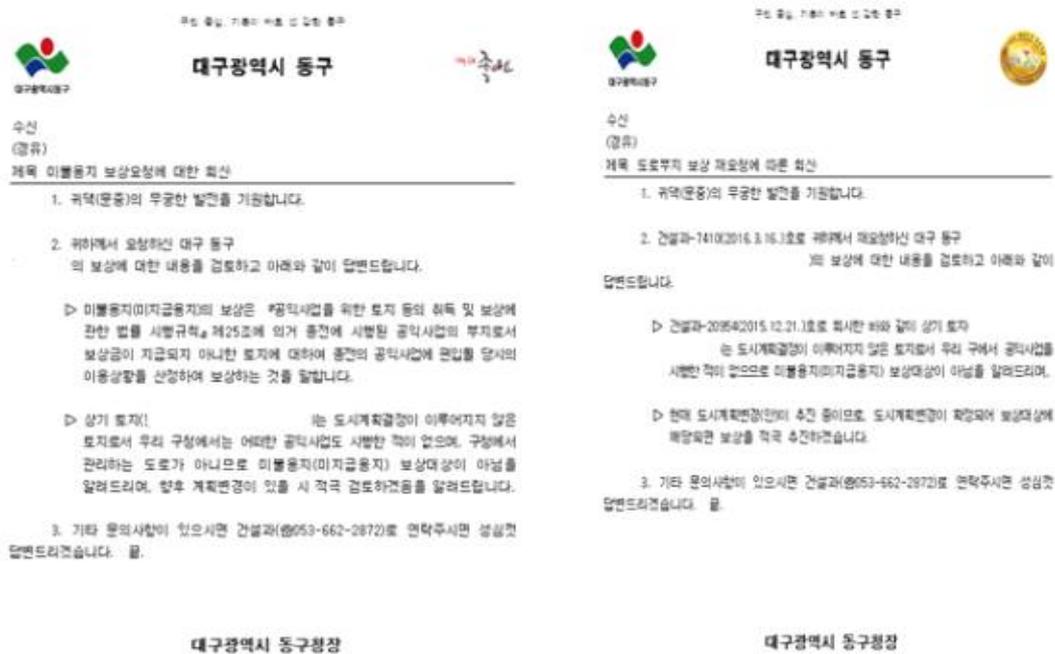
2. 문제원인 분석

○ 도로부지 보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집행 계획' 수립

- 소유자가 주장한 둔산동 일대 토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어서 공익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협의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구간이 도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아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필지가 있었다. 보상 요구를 제기한 토지도 후자에 해당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5년부터 제기된 지속적인 보상 요구를 해결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을 도시계획선과 일치시키기 위해, 2018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19] 보상민원 회신



○ 사업 시행과 중단

- 우리 구청은 현 사업을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8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계약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 지역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유관(군사)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필요했다.

그러나 대상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폭발물 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후 수차례 해당 군사 기관(공군 11전투비행단)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도로 보상업무를 위한 DB구축 및 보상내역 재조사

- 사업이 중단된 이후, 최근 다시 보상민원이 접수되어(22.2월) 검토하던 중에 해당 부지가 왜 정상적인 보상 절차 없이 도로로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림 220] 과거 보상금지불대장



그래서 우리 구청은 정확한 보상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보상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과거보상대장은 보상내역과 관련된 정보(지번, 지목, 보상액,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수령자 도장, 등기상황 등)들을 수기로 기록한 후, 스캔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캔해둔 보상자료로는 과거 데이터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담당자가 보상민원을 답변할 시 과거 자료를 다시 찾아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누적된 기록물(1960년~2003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시작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해 세부내역에 대한 항목별 검색이 가능해졌고, 과거 보상내역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데이터 추적 과정에서 우리 구청은 둔산동 도로 부지에 대한 숨겨진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바로 둔산동 부지의 보상금 내역을 찾아낸 것이다.

협의를 되지 않을 시에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 소유자에게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현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현소유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으로 점유를 승계하였을 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승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을 받았다.

또한, 미지급금의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과거 판결에 따르면, 당시 가액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장애극복

○ 과거 증빙자료 발견의 어려움

- 1960년대부터의 보상자료를 추적하려면 50여년전의 보상지급 관련 공문 및 보상금 지급대장 등의 서류를 찾아보아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시스템과 문서고를 탐색하여 스캔누락본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스캔한 자료는 색인 검색이 불가능하여 해당 필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 지역에 대한 스캔파일을 일일이 확인해서 해당 번지를 찾아야만 했다. 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민원인과의 갈등과 극적인 협의

- 민원인은 그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과거 자료를 추적해본 결과 실제로는 70% 보상이 이루어지고 30% 잔금만 남아있는 채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필지가 공익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었을 뿐, 선조가 보상금을 일부 수령한 적이 있었고, 당시 가액으로 보상금을 정산하면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구청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을 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보상금 지급 내역과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이성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가하고자 노력했다. 현재가액(약 1억 5천만원)의 보상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민원인을 여러 차례 만나 구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우리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소유자와의 극적인 협의를 이끌어내었다.

현재는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성과

○ 적극행정, 구청 땅 찾기의 불씨를 지피다.

- 우리 구청은 적극 행정의 자세로 과거보상대장을 정리하고 전산화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 결과 해묵은 보상 민원을 해결하여 1억 5천 상당의 구청 땅을 찾아오고 용역비 5천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표 1] 가감정 평가 내역

의뢰일 : 2022.3.29.						
연 번	지 번	면 적	감 정 단 가		결 정 액	
			A감정평가법인	B감정평가법인	단 가	금 액
1	둔산동 795-3	152㎡	250,000원	260,000원	255,000원	38,760,000원
2	둔산동 795-4	420㎡	250,000원	270,000원	260,000원	109,200,000원
					합 계	147,960,000원

○ 기대효과

- 전산화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구청은 최근에 둔산동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구청 땅(송정동 272-2, 신암동 694-110)을 더 확인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그 결과 6천만원의 자주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DB구축된 보상지급대장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미정산된 토지를 정리하여 숨겨진 더 많은 구청 땅을 찾고, 과도한 보상비와 용역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미불용지 보상현황

연번	지 번	면 적	감 정 단 가	보상내역	자주 재정 확보
1	송정동272-2	139㎡	52,820,000원	잔금 112,250원 (298,850원 중 186,600원 지급확인)	약 5,270만원
2	신암동694-110	5㎡	8,000,000원	잔금 3,500원 (152,500원 중 149,000원 지급확인)	약 790만원
				합 계	약 6,000만원

○ 유사한 보상민원 대응가능

- 기존의 보상대장을 상세DB한 결과, 세부내역에 대한 항목별 검색(지번, 지목, 소유자성명 등)이 가능해졌다. 향후 유사한 보상 민원이 제기될 때 적시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파급효과

- 전국 지자체의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지구, 도로편입지구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DB구축된 보상대장은 전국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지출과 사업비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에게 받는 금융적 수입도 중요하지만, 보유 중인 재산을 잘 지켜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재정 관리 능력도 지방 내정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세외수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정신, 이러한 적극 행정의 실천은 지방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안동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전국 최초!! 지방정부 주도,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중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기 관 명	경상북도 안동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하성우 안동시 기획예산실 권준철

< 요약 >

- 추진기간 : 2021. 1. ~ 2030. 12. (10년간)
- 사 업 비 : 10년, 1,000억원(전액 시비)
 - 2021년 예산액 : 63억원[사업완료], 2022년 예산액 : 75억원[사업진행중]
- 사업주체 : 안동시, 안동대학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외 5개 기관, 지역기업
- 주요내용
 - “협업기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기구 구성
 - 지역특화산업(농식품, 바이오·백신, 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차별화된 안동형 프로젝트 추진
- 2021년 성과 : 기업 및 창업지원 144개소,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154명,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63명, 청년 일자리창출(취·창업) 77명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안동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 최초!! 지방정부 주도,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중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1. 1. ~ ‘30. 12.(10년간) *준비기간 제외 ○ 사 업 비 : 10년간, 1,000억원(잠정) ※ 21년 예산액 : 63억원, 22년 예산액 75억원 ○ 사업주체 : 안동시, 지역대학, 지역기업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유출방지 및 지방소멸을 넘어 상생발전 시대의 초석 -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창출 -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04. : 지역 산·학·연·관 간담회 수시 개최 ○ ‘20. 05. : 안동형 일자리창출 모델 발굴보고회 개최 ○ ‘21. 02. : 안동형 일자리프로젝트 협약 체결 ○ ‘21. 03. : 안동형일자리사업단 설치 및 본격 운영 ○ ‘22. 현재 : 1차년도 사업 종료 및 2차년도 사업 진행 중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체간 프로젝트에 관한 시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발굴 추진 단계부터 협업기구인 사업단 구성까지 사업 주체 모두 참여하여 이해관계 중재 ○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의회 부정적 견해 팽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예산 원안가결”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기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기구 구성 ○ 6대 혁신전략을 통해 체계적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산업(농식품, 바이오·백신, 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차별화된 안동형 프로젝트 추진 ○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2021년) 사업추진 성과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창업지원 : 144개소 -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154명 -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 63명 - 청년 일자리창출(취·창업) : 77명

**“전국 최초!! 지방정부 주도,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중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1. 과제 선정 내용

○ 추진배경

① 지역·사회적 특성

- 경북도청 소재지 및 경북북부지역중심도시로 최적지임
- 제조업·혁신산업 활성화 부족으로 청년 유출 심각
- 관내 지역기업은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 ⇨ 일자리부족

⇒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발전 모델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 심화**

② 환경적 특성

- 국내 최대 바이오·백신산업의 메카
-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 문체부 선정 관광거점도시사업 추진 / 다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통문화도시

⇒ **농식품, 바이오·백신,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이므로
재도약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환경적 기반임**

○ 사업명 :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지역주력 산업(농식품, 바이오·백신, 문화관광)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AI, 블록체인 등) 접목을 통해 선도형 지역 일자리모델 창출

○ 추진기간 : 2020. 04. ~ 2030. 12. [준비기간 포함]

(사업추진 : 2021. 01. ~ 2030. 12. “10년간”)

○ 사업비 : 1,000억원(잠정) “**전액 지방비(시비)**”

※ 2021년(1차년) 사업비 : 63억원(완료) / 2022년 사업비(2차년) : 75억원(추진중)

○ 사업주체 : 안동시, 안동대학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외 5개 기관

지역기업

○ 주요내용

-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간 *협업 형태인 안동형일자리 추진 기구 구성(*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통한 프로젝트 총괄

*지방정부-지역대학 협업 : 안동시, 안동대 직원 사업단에 파견

- 사업추진 :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대학 주도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방식

⇒ 6대 혁신전략 수립을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연차별 사업 종료 후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성과평가 검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

○ 기대효과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을 넘어 상생발전 시대의 초석이 되는 선도 모델 제시

-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2. 문제원인 분석

○ 문제점 #1 지역의 고민이 심화

- 인구 감소 : 16만명 붕괴 ⇨ **지역소멸 위기**
- 고용률(15 ~ 64세) 감소 : 65.3%(2018년) → 65.1%(2019년) → 63.2%(2020년)
⇨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
- 청년고용률(15 ~ 29세) 감소 : 32.9%(2018년) → 30.6%(2019년) → 27.9%(2020년)
⇨ **지역기업 구인의 어려움 ↑, 청년은 지역 구직의 어려움 ↑**

○ 문제점 #2 복합요인이 동반된 위기 가중

- 제조업 위기 가중 : 제조업 붕괴 ⊕ 일자리 쓰나미 ⊕ 총 인구 감소
- 지방위기 가중 : 청년·여성 탈출 ⊕ 지역 대학 붕괴 ⊕ 중소기업 도산
⇨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

○ 문제점 #3 “위기를 기회로” 인식의 대전환 시급

- 강도만 다를 뿐 모든 지방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인식 팽배
-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 마련 부족
⇨ **위기 요인 ⊕ 지역 강점 ⇨ 안동 大도약의 기회 : “인식 대전환을 통한 위기탈출 방안 마련 시급”**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모델 발굴

⇨ 전국 최초 지방정부가 주도, 대학이 중심, 지역 중소기업을 강·소 기업화하여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일자리모델 발굴

- 필요성
 - 코로나19시대 이후 기존 산업구조가 4차산업혁명 신산업구조로 재편됨에 따른 일자리 쓰나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정규직, 평생직장의 의미 소멸로 프로젝트형 고용 형태)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특화산업에 신산업기술(AI, 블록체인 등)을 접목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필수

● 추진경과

- 2020. 04. : 지역 산·학·연·관 간담회 수시 개최
 - ☞ 안동시, 상공회의소, 지역 3개 대학교, 대구경북연구원 간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방안 지속 논의
- 2020. 05. : 안동형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보고회 개최
 - ☞ 지역정치권, 상공계, 지역학계, 연구계 등 각 계 대표들이 모여 안동형 일자리 모델 제시
- 2020. 09. : 4차산업혁명기반산업 발전위원회 출범
 - ☞ 안동형 일자리모델 추진 최고 전략기능을 담당하는 전략위원회 출범을 통해 철저한 평가 검증을 거쳐 일자리모델 추진
- 2021. 02. : 안동형 일자리프로젝트 협약 체결
- 2021. 03. : 안동형일자리사업단 설치 및 본격 운영
- 2022. 현재 : 1차년도 사업 종료 및 2차년도 사업 진행 중

● 각 주체별 역할

- 안 동 시 : 사업추진 예산지원 ※ 10년간 1,000억원(잠정) 규모
- 지역대학(3개소) : 인력양성, 기업 기술 및 창업지원
- 지역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등) : 국책사업 연계 인턴십, 인턴십 연계 취업 실시

○ 발굴모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 목표』 수립

- 기본방향 : 지역(안동)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 안동형일자리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지방대학 주도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식

⇒ **안동의 강점인 지역전략산업(^①농식품 소재산업, ^②바이오·백신 산업, ^③문화·관광산업)을 대학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채용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지원이 핵심인 모델임**

● **6대 혁신전략**을 통해 체계적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전개

① 대학 혁신, ② 중소기업 혁신, ③ 고교연계 혁신, ④ 창업 혁신, ⑤ 특별인턴 혁신, ⑥ 미취업자 및 실업자 혁신

● 명확한 목표설정(정성적, 정량적)으로 기대효과 제고

① **정성적 목표**

- 지역전략산업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AI, 블록체인 등) 접목을 통해 선도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 산학관 유기적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시대 생명컬쳐 신산업 벨트 창출

② **정량적 목표**

- 2030년 인구 30만 규모의 AI첨단 생명컬쳐 신산업도시 구축
- 2030년까지 인력양성 10,000명, 중소기업 육성 최소 100개, 청년 벤처 100개 이상, 중견기업 창출 최소 20개, 기업 매출성장 평균 5% 증가로 목표 설정

● 추진방향

- **지역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3중 교육안정망 구축(고교-대학-재직자)
-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한 차별화된 안동형 프로젝트** 추진
- 기존사업(대마특구, 관광거점사업 등) 연계를 통한 시너지 증가
- 지역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화 및 4차산업혁명분야 중심의 양질의 핵심 일자리창출

○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기구 구성



※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구성

- 개소일 : 2021. 3. 16.
- 위 치 : 안동대 내 지역산학협력관
- 구 성 : 15명(단장1, 센터장 5, 팀원 9)
- 역 할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운영 지침정비, 프로젝트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등



○ 센터별 프로젝트 추진(실행) 주요내용 *2021, 2022년도 추진내역

① **AI 융합교육센터** *예산액 : '21년도 1,028백만원, '22년도 898백만원

- 추진목표 :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I융합 인재양성과 산업 지원
- 주요 추진사업
 - 지역 고교·대학 연계 AI융합 교육사업
 - 지역산업 연계 AI융합 플랫폼형 교육사업
 - 휴머노이드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기초SW CaEx (Camp Exhibition) 사업
 - AI & ABC(지역특화산업) 연계형역량강화 연구지원사업

② **창업커뮤니티센터** *예산액 : '21년도 1,015백만원, '22년도 1,772백만원

- 추진목표 : 지속가능한 기업육성 및 창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 주요 추진사업
 - 창업 생태계구축 :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 BETA 페스티벌 개최
 - 학생창업 육성사업 : 창업 동아리 지원 등 학생창업 분위기 조성
 - 창업기업 지원사업 : 창업 첫걸음, 창업 성장지원, 창업인력 지원,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등
 -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

③ 스마트팜 농식품소재센터 *예산액 : '21년도 920백만원, '22년도 1,105백만원

- 추진목표 : 스마트 팜 현장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및 지역 신산업 육성
- 주요 추진사업
 - 스마트팜 기업혁신 R&BD 지원사업
 - 스마트팜 개방혁신센터 지원사업
 - 한국형 스마트팜 개방혁신센터 구축사업
 -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고부가제품화 지원사업

④ 바이오·백신 센터 *예산액 : '21년도 946백만원, '22년도 1,286백만원

- 추진목표 : 백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기관 연계 활력화 사업 추진
- 주요 추진사업
 - 백신융합 플랫폼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 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 고도화사업
 - 경북백신클러스터 R&BD 활성화 사업
 - 친환경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⑤ 문화·관광 센터 *예산액 : '21년도 329백만원, '22년도 400백만원

- 추진목표 : 지역 문화기업 정착과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
- 주요 추진사업
 - 안동형 1인 크리에이터산업 육성사업
 - 기업 유치형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및 육성사업

4. 장애극복

-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지역기업 간의 프로젝트에 관한 시각 차이
⇒ 프로젝트 발굴 추진 단계부터 협업기구인 안동형일자리사업단 구성

까지 주체(지방정부, 대학, 기업)가 모두 참여하여 이해관계 중재

- '20. 4. ~ 9. : 안동형일자리 프로젝트 모델 발굴 참여
- '21. 2. : 안동형일자리 상호협력 MOU 체결
- '21. 3. : 안동형일자리사업단 구성 및 개소

(안동시, 대학 직원 파견 및 기업 연구원 참여 등)

- 프로젝트 발굴 초기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안) 승인권을 가진 지방시의회의 부정적 견해 팽배 ⇒ 장애 해소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 '20. 05. 안동형일자리 발굴보고회 개최
- '20. 05.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동선언문 선포
- '20. 11. 예산편성 및 의회대응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 '21. 11.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개최
- (매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 프로젝트에 관한 적극적인 소명

⇒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통해 초기 부정적 분위기에서 대(大) 도약의 기회라는 긍정적 분위기로 변화 : 사업 예산(안) 원안 가결**

5. 성과

* 자료출처 : 2021년 안동형일자리사업 성과보고회(21.11.29.)

부 서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실적(개소, 명)							
				기업		교육	인턴		취·창업		
				기존	창업		취업	취업	취업	창업	
계			6,321,200	68	76	154	63	30	66	11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수행			4,446,200	57	76	104	60	30	66	9	
일자리 경제과	소 계		1,944,400	33	76		59	30	36	7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운영		208,000							4	
	창업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40,000		60						
	창업자 수요기반 지원사업		120,000	10							
	BETA 페스티벌 개최		180,000								
	학생창업 지원사업		60,000		10						1
	창업 첫걸음 사업		108,000	2	6					15	6
	창업성장 지원 사업		307,000	5						13	
	창업닥터 운영		200,000							4	
	지역기업 인턴십 사업		721,400	16			59	30			
특 자 유치과	소 계		946,000	3			1		7		
	백신 R&D 연구		300,000	2					6		
	백신관련 유치기업 인턴십		50,000				1				
	백신 연구기관 및 기업 실습 지원		96,000								
	공동활용 및 현장교육 R&BD 인프라 구축		200,000								
	안동백신 인프라와 연계 백신기술 개발		300,000	1					1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특화 인프라 지원		-	-							-
유 특 제작과	소 계		920,000	9					8		
	작물Pn측정기		150,000								
	IoT 기상장비, 드론 및 센서		100,000								
	빅데이터 서버		150,000								
	SOIC구축		-	-							-
	스마트팜 ICT업체 지원		100,000	2					4		
	스마트팜 센서업체 지원		100,000	2					2		
	신규 안동 이전업체 지원		100,000	2					1		
	정책목적형 지원 연구		120,000	1							
	스마트팜 혁신업체 지원		100,000	2					1		
농산물소재 이용업체 지원		-	-							-	
전통 문화 예술과	소 계		329,000	12					15	2	
	안동형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		80,000	2						2	
	기업 유치형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및 육성		249,000	10					15		
평 생 교육과	소 계		306,800			104					
	지역산업 연계 AI융합교육사업		306,800			104					
안동시 수행			1,875,000	11		50	3			2	
일자리 경제과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운영		200,000							1	
특 자 유치과	중소기업 ICT융합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		500,000	3			3				
유 특 제작과	노지대마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235,000								
전통문화 예술과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400,000	8							
평 생 교육과	바이오백신 인력양성 사업		370,000			39				1	
	스마트팜 인력양성 사업		170,000			11					

※ 성과 요약 : 기업 및 창업지원 : 144개소,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154명,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 63명, 청년 일자리창출 : 취·창업 77명

[영주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후생복지물 “영주사랑복지물” 구축
기 관 명	경상북도 영주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영주시 유통지원과 김지연(054-639-3963, 010-9449-8254)

< 요약 >

- 영주시민을 위한 교통, 휴가, 문화, 복지 등 130개 620만 온라인 복지콘텐츠 제공
- 지역 우수 제품(농축특산품, 일반 제조가공품)의 **영주시 전용관인 “영주 꽃고을관”**을 통해 관내 기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제공
- 민·관·기업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상생” 도모
- 현재 21개 업체 200여개 상품 입점 및 판매중
- 영주시 우수 농특산물, 시책, 관광자원의 집합적 홍보역할 수행

위와 같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10. .

영주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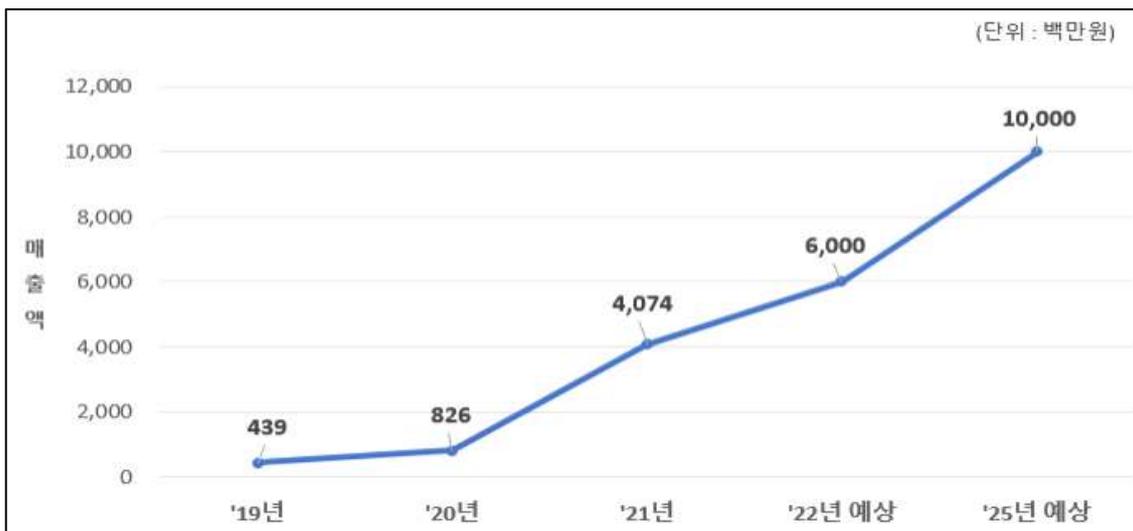
□ 사례명 :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후생복지물 “영주사랑복지물” 구축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온라인(https://yjlove.togetherwel.co.kr) ○ 추진기간 : 2022. 4월 ~ (계속)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0%, 프로모션 할인지원금) ○ 사업내용 :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영주시민,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온라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11. ~ 22. 3. : 복지물 구축에 따른 대내외 업무협의 ○ '22. 3. 25. : 영주시↔(주)KT↔이제너두(주) 업무협약 체결 ○ '22. 4. 1. : 영주사랑복지물 오픈 ○ '22. 4. 25. : 영주시 전용관 “영주 꽃고을관” 오픈 ○ '22. 4. ~ 5. : 영주사랑복지물 입점 및 사업설명회 개최(2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판매방식에 국한되어 온라인 취약계층이었던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입점설명회를 통하여 기술적 한계 극복 ○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제너두(주), (주)KT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구성된 폐쇄적복지물 플랫폼 이용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대형 쇼핑몰 사이트 판매수수료(15~40%이상) 대비 최저수수료 적용 ○ 폐쇄적복지물에서만 제공되었던 620만개의 후생복지콘텐츠를 영주시민에게도 제공 ○ 찾아가는 입점설명회를 통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 우수 농축특산품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업체 부담비용 0)
⑤ 성과	<p>○ 시스템 구축비용, 프로모션비용 등 총 500백만원 예산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민을 위한 전방위적 후생복지물 구축 ○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농축특산물의 집합적 홍보역할 수행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후생복지몰 “영주사랑복지몰” 구축

1. 과제 선정 내용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감염 우려심리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이 증가됨
-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4,000만 시대에 스마트콘텐츠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 콘텐츠 제공 필요성 제기
-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임직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폐쇄적 복지몰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하여 차별없는 고품질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축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의 괄목할만한 성장 경험을 통하여 농축특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 우수 제조공산품까지 온라인 판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표 1] 영주장날 쇼핑몰 최근 3년간 실적 및 향후 3년간 예상매출액

2. 문제원인 분석

- (전통시장) 영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은 13개(인삼시장

- 4개소, 재래시장 9개소)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매출감소 및 사기저하 등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함
- 코로나19로 악화된 시장상황을 온라인 판로 확장을 통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소상공인) 타 대형 쇼핑몰 사이트 입점·판매 시 판매수수료는 15~35%로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이 크고 입점 절차가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음
 - ESG경영정책¹⁸⁾을 펼치는 후생복지사이트 관리 기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함
 - (시스템구축) 제조공산품 온라인 유통을 위한 새로운 사이트 구축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함
 - 기존 폐쇄적복지몰 플랫폼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율을 목표로 함
 - (영주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복지서비스(교통, 건강, 교육, 여가, 쇼핑 등)를 여러 계통을 통하여 확인하고 선택하여야 함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던 종합 온라인 후생복지사이트를 시민에게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18)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환경적 활동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은 경영정책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업목표

- 정량적 목표 : (상반기) 입점업체 20개소 모집
- 정성적 목표
 - 영주시민을 위한 종합 후생복지사이트 구축 및 복지서비스 향상
 - 영주시 우수 농축특산물 및 관내 기업의 온라인 판로 제공
 - 지역 관광 및 축제 자원 종합적 홍보

○ 시스템 구축

- 「영주사랑복지몰」 구성에 필요한 외부 전문 업체 용역 시, 과도한 비용 발생(시스템 구축비 약 5억원)으로 기존 시스템 활용 필요
- ESG경영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몰 운영사 업무협약('22. 3. 25.)
- 기존 후생복지몰 사이트 플랫폼을 적용하여 구축비용 절감
- 「영주사랑복지몰」 오픈 : 2022. 4. 1.

○ 온라인 판로 확보

- 이제너두(주)사에서 운영하는 복지몰사이트 '투게더웰'의 1,500여개의 고객사 후생복지몰 화면에 영주시 전용관인 '영주꽃고을관' 노출 및 판매
- 업무협약을 통한 낮은 수수료율 적용

○ 영주시 우수 농축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진행

- '영주 꽃고을관'에 입점한 영주시 제품의 라이브쇼핑 방송을 통해 관내 농축특산물 매출을 증대시킴
- 라이브커머스 구매자에게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입장권을 증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축제자원 홍보역할을 수행함

○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입장권 판매처

- 성공적인 지역 축제 개최를 위하여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입장권 판매처 팝업을 띄워 홍보하는 등 기업과 지역상생 도모

4. 장애극복

- 기술적 한계 극복
 -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두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현장 입점신청 및 상담 진행('22. 4. 29. / '22. 5. 20.)
 - 주로 고령층의 IT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점설명회를 통하여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함
 -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게는 영주 장날 입점 시 신청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현함
- 예산절감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과도한 비용을 ESG경영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함

5. 성과

- 정량적 목표 성과

구 분	입점업체	비 고
계 획	20개소	상반기 기준
추진실적	21개소	
계획대비 추진실적	105%	

- 정성적 목표 성과
 - 「영주사랑복지몰」 운영 한달만에 영주시민 1,300여명이 가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만족도가 향상됨

- 영주시 전용관'영주 꽃고을관'운영을 통하여 전국 1,500여개의 기업 임직원 복지몰 노출을 통하여 영주시 우수 농축특산물 매출이 증대됨
-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입장권 사은품 증정 및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 축제 홍보
-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소비자 유통비용을 절감함

